93300
9 788997 257096
ISBN 978-89-97257-09-6

값 20,000원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동아일보 공동연구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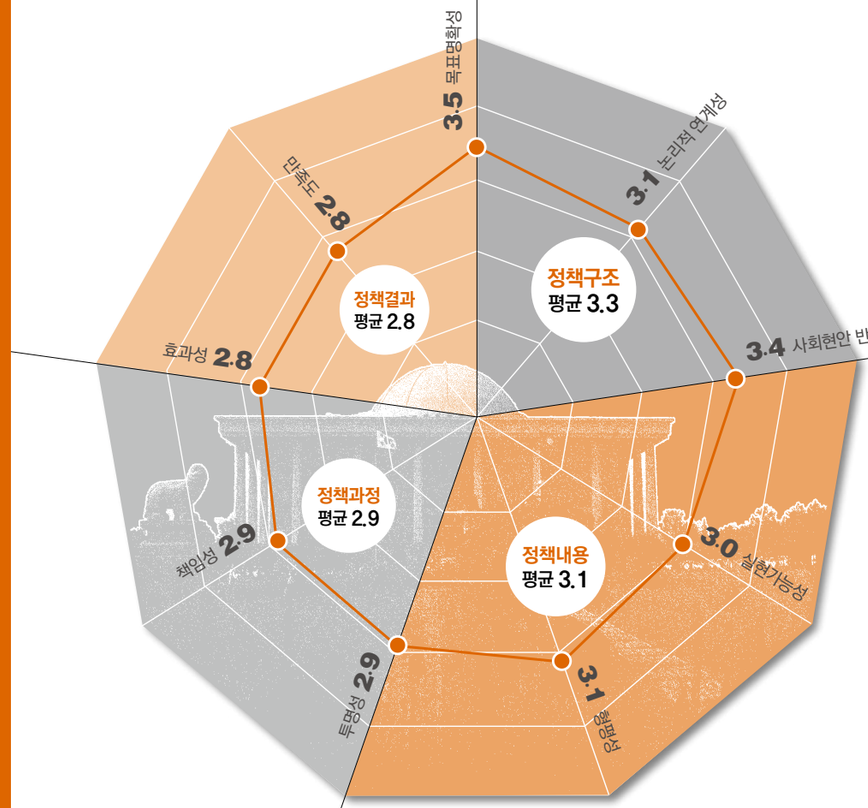
동아E&D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동아일보 공동연구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동아E&D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동아일보 공동연구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동아일보 공동연구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동아일보 공동연구 /
지은이: 최진욱, 구교준, 이응균, 최흥석, 윤견수, 김두래, 최상옥, 김선혁, 임현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 서울 : 동아E&D, 2016
p. ; cm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97257-09-6 93300 : ₩20000
한국 행정[韓國行政]
정책 평가[政策評價]
351.11-KDC6
352.3-DDC23 CIP2016003952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6003952)

참여 저자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평가책임)
구교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책 분야 총괄)
이응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책 분야)
최흥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복지정책 분야 총괄)
윤견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복지정책 분야)
김두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문화정책 분야 총괄)
최상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문화정책 분야)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교안보정책 분야 총괄)
임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교안보정책 분야)

여론조사 수행기관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동아E&D

contents

제 1 장 서론 012

1. 정책평가의 목적 014
2. 정책평가 방법과 대상 016

제 2 장 정책평가 방법론 018

1. 평가지표와 의미 020
   1) 평가영역 1: 정책의 구조 020
   2) 평가영역 2: 정책의 내용 020
   3) 평가영역 3: 정책의 과정 021
   4) 평가영역 4: 정책의 결과 021
   5) 기타 영역 022
2. 최종 평가지표 선정 과정 022
3.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023
   1) 평가대상 정책 선정 과정 023
   2) 평가대상 정책 025

제 3 장 평가대상 정책의 개요 034

1. 경제정책 분야 036
   1)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기획재정부) 036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기획재정부) 036
   3)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환경부) 037
   4) 부동산시장 정상화(국토교통부) 037
   5)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공정거래위원회) 038
   6) 서민금융지원 강화(금융위원회) 039
   7) 에너지 신산업 육성(산업통상자원부) 040
   8) 국내 산업의 피해우려가 큰 초대형 글로벌 M&A 적극 대응(공정거래위원회) 040
   9)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관세청) 041
   10)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단말기유통법 안착)(방송통신위원회) 042
2. 사회복지정책 분야 043
   1) 금연종합대책(보건복지부) 043
   2)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금융감독원) 043
   3)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정책(보건복지부) 044
   4)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보건복지부) 045
   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보건복지부) 046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보건복지부) 047
   7) 노동개혁(고용노동부) 048
   8)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여성가족부) 048
   9) 국민인재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인사혁신처) 049
   10) 지방재정 개혁(행정자치부) 050
3. 교육문화정책 분야 050
   1) 초등돌봄교실(교육부) 050
   2) 누리과정(교육부) 051
   3)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방송통신위원회) 052
   4) 어린이·청소년 급식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 053
   5) 다문화가족 지원(여성가족부) 054
   6) 자유학기제 확산(교육부) 055
   7) 도시숲 조성(산림청) 056
   8) 대학구조개혁(교육부) 056
   9) 문화가 있는 날(문화체육관광부) 057
   10)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교육부) 058
4. 외교안보정책 분야 059
   1)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국방부) 059
   2)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외교부) 059
   3)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통일부) 060
   4) 방위사업 혁신 추진(방위사업청) 060
   5)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외교부) 061
   6) 한국형 미사일 체계 및 킬체인 구축사업(국방부) 061
   7)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병무청) 062
   8)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외교부) 062
   9)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통일부) 063
   10)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외교부) 063

제 4 장 분야별 정책평가 064
1. 경제정책 분야 066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066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087
3) 평가결과 종합 113
2. 사회복지정책 분야 120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120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146
3) 평가결과 종합 172
3. 교육문화정책 분야 180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180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201
3) 평가결과 종합 224
4. 외교안보정책 분야 231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231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257
3) 평가결과 종합 286

제 5 장 정책, 삶의 질 그리고 정부신뢰의 관계 294
1.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사회신뢰에 대한 인식 296
2. 정부정책지지도와 정부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296
3. 정부신뢰도와 사회신뢰도와의 관계 300
4. 정부정책지지도, 정부신뢰도, 사회신뢰도 간의 인과관계 301

제 6 장 정책평가 결과 종합 및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302
1. 정책평가 결과 종합 304
2.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제언 307
1) 경제정책 분야 307
2) 사회복지정책 분야 309
3) 교육문화정책 분야 313
4) 외교안보정책 분야 315

참고문헌 318

표목차

[표 2-1] 경제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023
[표 2-2] 사회복지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024
[표 2-3] 교육문화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024
[표 2-4] 외교안보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025
[표 2-5]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경제정책 분야 031
[표 2-6]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사회복지정책 분야 032
[표 2-7]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교육문화정책 분야 032
[표 2-8]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외교안보정책 분야 033
[표 3-1] 2014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051
[표 3-2] 3-5세 누리과정 변화과정 052
[표 3-3] 3-5세 누리과정 월 지원 금액(매월) 052
[표 3-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현황 053
[표 3-5] 다문화가족정책의 주요 정책과제 054
[표 3-6] 2015년도 도시숲 조성 사업량 및 예산 056
[표 3-7] 등급구분 기준 및 학교 수 및 정원감축 비율 057
[표 3-8] 대학·전문대학 특성화분야 핵심 정책 058
[표 3-9]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정책 예산 059
[표 5-1]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정부신뢰·사회신뢰의 기초통계 296
[표 5-2] 정부정책지지도 교차분석 결과 297
[표 5-3] 정부신뢰도 교차분석 결과 298
[표 5-4] 사회신뢰도 교차분석 결과 299
[표 5-5] 정부신뢰도와 사회신뢰도 간의 상관관계 300
[표 5-6] 정부정책지지도가 정부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301
[표 5-7] 정부신뢰도가 사회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301
[표 6-1] 40개 정책평가 결과 305

그림 목차

[그림 2-1] 경제정책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026
[그림 2-2] 사회복지정책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027
[그림 2-3] 교육문화정책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028
[그림 2-4] 외교안보정책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030
[그림 3-1]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예시) 055
[그림 4-1] 경제정책 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066
[그림 4-2]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067
[그림 4-3]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068
[그림 4-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069
[그림 4-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070
[그림 4-6]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071

[그림 4-7]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072
[그림 4-8] 부동산시장 정상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073
[그림 4-9] 부동산시장 정상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074
[그림 4-10]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075
[그림 4-11]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076
[그림 4-12] 서민금융지원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077
[그림 4-13] 서민금융지원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078
[그림 4-14] 에너지 신산업 육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079
[그림 4-15] 에너지 신산업 육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080
[그림 4-16] 국내 산업의 피해우려가 큰 초대형 글로벌 M&A 적극 대응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081
[그림 4-17] 국내 산업의 피해우려가 큰 초대형 글로벌 M&A 적극 대응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082
[그림 4-18]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083
[그림 4-19]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084
[그림 4-20]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단말기유통법 안착)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085
[그림 4-21]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단말기유통법 안착)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086
[그림 4-22]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087
[그림 4-23]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089
[그림 4-2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090
[그림 4-2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092
[그림 4-26]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092
[그림 4-27]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094
[그림 4-28]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095
[그림 4-29]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097
[그림 4-30]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097
[그림 4-31]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100
[그림 4-32] 서민금융지원 강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100
[그림 4-33] 서민금융지원 강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102
[그림 4-34]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102
[그림 4-35]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105
[그림 4-36] 국내 산업의 피해우려가 큰 초대형 글로벌 M&A 적극 대응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105
[그림 4-37] 국내 산업의 피해우려가 큰 초대형 글로벌 M&A 적극 대응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107
[그림 4-38]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107
[그림 4-39]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109
[그림 4-40]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단말기유통법 안착)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110
[그림 4-41]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단말기유통법 안착)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112
[그림 4-42]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113
[그림 4-43]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항목별 115
[그림 4-44]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영역별 119
[그림 4-45] 사회복지정책 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121
[그림 4-46] 금연종합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22
[그림 4-47] 금연종합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24
[그림 4-48]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24
[그림 4-49]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26
[그림 4-50]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27
[그림 4-51]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29
[그림 4-52]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29
[그림 4-53]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31
[그림 4-5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32
[그림 4-5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34
[그림 4-5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34
[그림 4-5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36
[그림 4-58] 노동개혁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37
[그림 4-59] 노동개혁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39
[그림 4-60]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39
[그림 4-61]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41
[그림 4-62]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42
[그림 4-63]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44
[그림 4-64] 지방재정 개혁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44
[그림 4-65] 지방재정 개혁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46
[그림 4-66] 금연종합대책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147
[그림 4-67] 금연종합대책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149
[그림 4-68]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150
[그림 4-69]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152
[그림 4-70]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정책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152
[그림 4-71]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정책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154
[그림 4-72]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155
[그림 4-73]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157
[그림 4-7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157
[그림 4-7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159
[그림 4-7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160
[그림 4-7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162
[그림 4-78] 노동개혁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162
[그림 4-79] 노동개혁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165
[그림 4-80]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165
[그림 4-81]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167
[그림 4-82]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167
[그림 4-83]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169
[그림 4-84] 지방재정 개혁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170
[그림 4-85] 지방재정 개혁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172
[그림 4-86]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172
[그림 4-87]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항목별 175
[그림 4-88]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영역별 178
[그림 4-89] 교육문화정책 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180
[그림 4-90] 초등돌봄교실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81
[그림 4-91] 초등돌봄교실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82
[그림 4-92] 누리과정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83
[그림 4-93] 누리과정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84
[그림 4-94]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85

[그림 4-95]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86
[그림 4-96] 어린이·청소년 급식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87
[그림 4-97] 어린이·청소년 급식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88
[그림 4-98] 다문화가족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89
[그림 4-99] 다문화가족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90
[그림 4-100] 자유학기제 확산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91
[그림 4-101] 자유학기제 확산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92
[그림 4-102] 도시숲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93
[그림 4-103] 도시숲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94
[그림 4-104] 대학구조개혁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95
[그림 4-105] 대학구조개혁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96
[그림 4-106] 문화가 있는 날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97
[그림 4-107] 문화가 있는 날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98
[그림 4-108]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199
[그림 4-109]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00
[그림 4-110] 초등돌봄교실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201
[그림 4-111] 초등돌봄교실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03
[그림 4-112] 누리과정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203
[그림 4-113] 누리과정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05
[그림 4-114]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205
[그림 4-115]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07
[그림 4-116] 어린이·청소년 급식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208
[그림 4-117] 어린이·청소년 급식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10
[그림 4-118] 다문화가족 지원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210
[그림 4-119] 다문화가족 지원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12
[그림 4-120] 자유학기제 확산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212
[그림 4-121] 자유학기제 확산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14
[그림 4-122] 도시숲 조성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215
[그림 4-123] 도시숲 조성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17
[그림 4-124] 대학구조개혁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217
[그림 4-125] 대학구조개혁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19
[그림 4-126] 문화가 있는 날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219
[그림 4-127] 문화가 있는 날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21
[그림 4-128]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222
[그림 4-129]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24
[그림 4-130]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224
[그림 4-131]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항목별 226
[그림 4-132]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영역별 229
[그림 4-133] 외교안보정책 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231
[그림 4-134]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32
[그림 4-135]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34
[그림 4-136]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35
[그림 4-137]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37
[그림 4-138]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38
[그림 4-139]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40
[그림 4-140] 방위사업 혁신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41
[그림 4-141] 방위사업 혁신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43
[그림 4-142]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43
[그림 4-143]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45
[그림 4-144] 한국형 미사일체계 및 킬체인 구축사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45
[그림 4-145] 한국형 미사일체계 및 킬체인 구축 사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47
[그림 4-146]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설문조사 결과:설문항목별 248
[그림 4-147]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50
[그림 4-148]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50
[그림 4-149]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52
[그림 4-150]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52
[그림 4-151]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54
[그림 4-15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255
[그림 4-153]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57
[그림 4-154]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259
[그림 4-155]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조성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61
[그림 4-156]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261
[그림 4-157]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64
[그림 4-158]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264
[그림 4-159]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67
[그림 4-160] 방위사업 혁신 추진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268
[그림 4-161] 방위사업 혁신 추진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70
[그림 4-162]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270
[그림 4-163]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73
[그림 4-164] 한국형 미사일체계 및 킬체인 구축사업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273
[그림 4-165] 한국형 미사일체계 및 킬체인 구축 사업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75
[그림 4-166]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성평가 결과:설문항목별 276
[그림 4-167]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78
[그림 4-168]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278
[그림 4-169]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81
[그림 4-170]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281
[그림 4-171]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83
[그림 4-17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283
[그림 4-173]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86
[그림 4-174]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286
[그림 4-175]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항목별 288
[그림 4-176]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영역별 291
[그림 6-1] 4대 정책 분야별 종합 평균 304
[그림 6-2] 40개 정책 평균 비교 305
[그림 6-3] 40개 정책 평가지표별 점수 결과 306

01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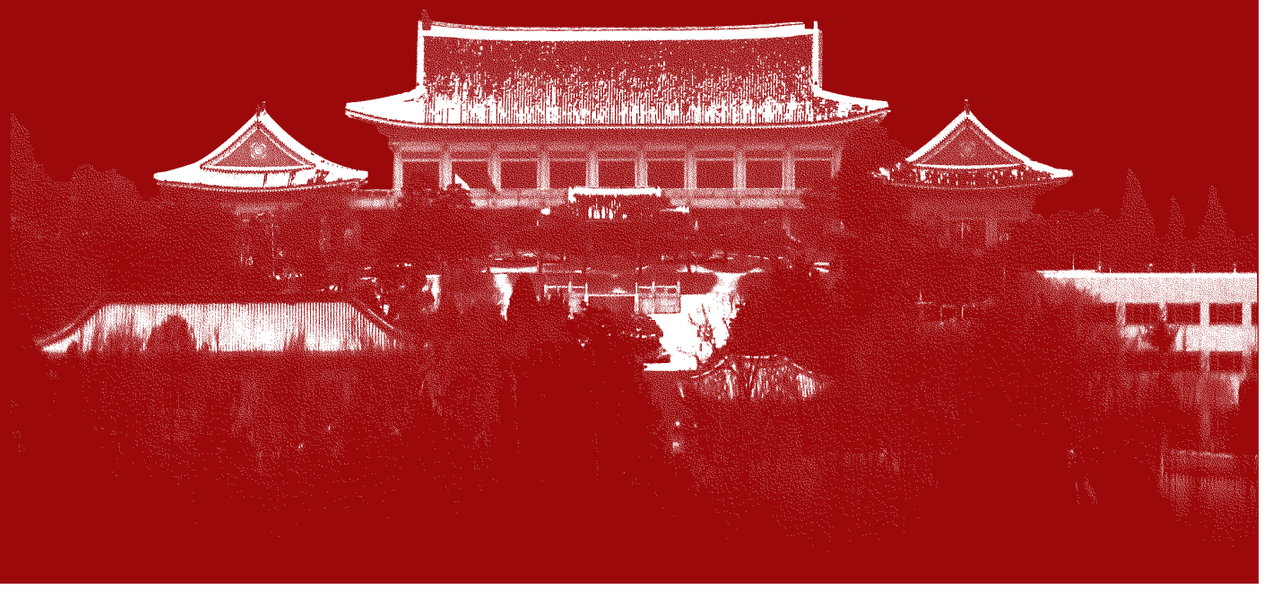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2015년 정부정책을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교육문화정책, 외교안보정책의 4대 분야로 구분하여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를 평가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평가는 정부의 정책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보고서는 정책평가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확인하고, 평가결과를 통해 정부정책 질의 개선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평가에는 삶의 질과 신뢰에 대한 인식이 정부정책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었다.

1 | 정책평가의 목적 014

2 | 정책평가 방법과 대상 016

정책평가 방법과 대상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의 정책평가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정책평가와 차별화된다. 첫째는 평가방법으로 기존의 정책평가 대부분이 국민인식조사(perception-based survey)에 기반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이 보고서의 평가방법은 정책전문가와 정책의 최종수혜자인 국민의 균형 잡힌 평가와 함께 이번 정책평가에 참여한 교수진들의 정성평가를 더해 평가의 타당성(reliability)과 신뢰성(validity)을 높이기 위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두 번째는 평가대상과 관련되어 특정 정책영역에 한정한 기존의 정책평가와는 달리 이 평가에서는 정부의 정책영역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의 포괄성을 높였다.



1. 정책평가의 목적

최근 세계 경제가 여러 이유로 인해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도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리스에서 촉발된 세계 금융 위기, 유로존과 일본의 더딘 경기 회복 그리고 테러의 위협 증가로 인해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경제성장 동력의 상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고용침체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적인 주체는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부문이지만 경제 활성화에 있어 정부의 역할 또한 작지 않다. 정부는 재정정책, 규제개혁, 고용정책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침체된 시장과 불확실한 경제에 대응하고 있다. 정책을 통한 정부의 개입이 적시에 최적의 수단을 동원한다면 한국 사회와 경제가 당면한 제반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정책의 방향과 과정, 그리고 수단이 잘못된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편 지난 반세기 이상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된 것에 비해 사회 계층에 따라 사회적 박탈감과 빈곤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진입한 것에 비해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보장은 충분하지 않아 아직 한국 사회를 온전한 복지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복지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효과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경제성장과 복지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두 개의 수레바퀴로 자리 잡고 있어 어느 한 바퀴만으로는 사회가 지탱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복지국가가 비단 정부의 노력만으로 구현되기는 어려우나, 이를 위한 1차적인 책임은 여전히 정부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출증가율이 가장 가파른 정책 분야가 사회복지 영역이라는 점이 복지국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를 위해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붓고 있음에도 의도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재정투입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잘못된 정책판단과 정책수단에서 기인한 것인지 혹은 정책의 관리가 허술해서 효과가 낮은 것인지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오늘날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을 논의할 때 교육을 빼놓을 수 없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자원은 인적자원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은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정책과제가 교육에 관한 정책이다. 정부는 유아교육에서부터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관한 거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대상과 수단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시장과 수요자들의 반응에 따라 정부의 교육정책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교육에 달려있다고 볼 때, 특히 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내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힘은 그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문화적으로 존경받는 것은 아니다. 문화에는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민들의 가치와 행동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문화의 힘을 논함에 있어 산업적 관점의 접근과 함께 국민들이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행복을 느끼는지와 같은 본질적 관점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심에 대한 정부의 해석은 아직 상당 부분 경제적이고 산업적 관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를 사회적 행동양식의 총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문화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을 안고 있다. 더불어 4대 강국의 첨예한 실리외교의 틈에 놓여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여건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갖는 의미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가볍지 않다. 전통적으로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의 영역에 속해 있다. 견실한 외교안보를 갖추지 못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수도 없고, 사회 모든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방산비리는 안보의 관점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과연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2015년 정부정책을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교육문화정책, 외교안보정책의 4대 분야로 구분하여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를 평가한 것이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여 의도한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정책의 설계부터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정책집행과 환류 전반에 걸친 전략적이고 치밀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정책이 집행되기 이전부터 집행되는 과정 동안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동반되어야 하고, 이 같은 결과가 정책담당 부처에 올바르게 환류되어야 정책의 오류와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객관적·과학적·체계적 정책평가는 정부 정책의 공과(功過)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성(responsibility)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가져다준다.

대한민국 정책평가는 정부의 정책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보고서는 정책평가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확인하고, 평가결과를 통해 정부정책 질의 개선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는 2014년에 이은 두 번째 보고서이다. 2015년 정책평가는 지난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가 개발한 정책평가 모형을 토대로 2015년에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였다. 평가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평가대상 정책은 작년과 다르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는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국민들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였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자산이 중요하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평가에는 삶의 질과 신뢰에 대한 인식이 정부정책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었다.

2. 정책평가 방법과 대상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의 정책평가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정책평가와 차별화된다. 첫째는 평가방법으로 기존의 정책평가 대부분이 국민인식조사(perception-based survey)에 기반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이 보고서의 평가방법은 정책전문가와 정책의 최종수혜자인 국민의 균형 잡힌 평가와 함께 이번 정책평가에 참여한 교수진들의 정성평가를 더해 평가의 타당성(reliability)과 신뢰성(validity)을 높이기 위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두 번째는 평가대상과 관련되어 특정 정책영역에 한정한 기존의 정책평가와는 달리 이 평가에서는 정부의 정책영역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의 포괄성을 높였다.

구체적인 정책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은 8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책영역의 구분이다. 평가에 참여한 교수진들의 논의를 통하여 평가대상 정책 분야를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교육문화정책 그리고 외교안보정책과 같은 4개 분야로 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4개 정책 분야별로 평가에 포함되는 정책목록의 선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를 통해 부처를 대표하는 정책을 요청하여 취합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평가에 참여한 교수들이 부처에서 받은 정책목록에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중요한 정책이 누락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을 추가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분야별로 정리된 정책목록을 일반국민 600명(정책 분야별 150명)과 정책전문가 80(정책 분야별 20명)명을 포함하여 총 680명을 대상으로 정책의 영향력, 정책시행의 시급성을 물어 순위를 확인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는 네 번째 단계의 결과와 정책의 중요도 등에 대한 평가 참여교수들의 판단을 통하여 각 분야별 정책 10개를 선정하였다.

여섯 번째 단계는 선정된 4개 분야 40개 정책에 대하여 일반국민 2,000명(정책 분야별 500명)과 정책전문가 200명(정책 분야별 50명)을 포함한 총 2,200명을 대상으로 4개의 평가영역(정책의 구조, 정책의 내용, 정책의 과정, 정책의 결과)에서 총 9개의 세부설문항목을 질문하여 40개 정책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출하였다. 본격적인 9개 항목에 대한 설문에 앞서 해당 정책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을 하였고, 이 질문을 통해 정책을 알지 못하는 개인에 대한 설문을 중단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다.

일곱 번째 단계는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동일한 9개 세부평가항목을 사용하여 평가에 참여한 교수들이 정책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근거로 정성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여덟 번째 단계는 설문조사(일반국민, 정책전문가) 결과와 교수들의 정성평가를 일반국민 설문결과 30%, 정책전문가 설문결과 35%, 교수 정성평가결과 35%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40개 정책에 대한 최종 점수를 산출하였다.

2015년 정책평가 설문조사에는 개별정책에 대한 설문항목 이외에 국민들 삶에 대한 정책의 기여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 등을 묻는 설문항목을 추가하여 정책에 대한 평가,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도의 관계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02

제2장 정책평가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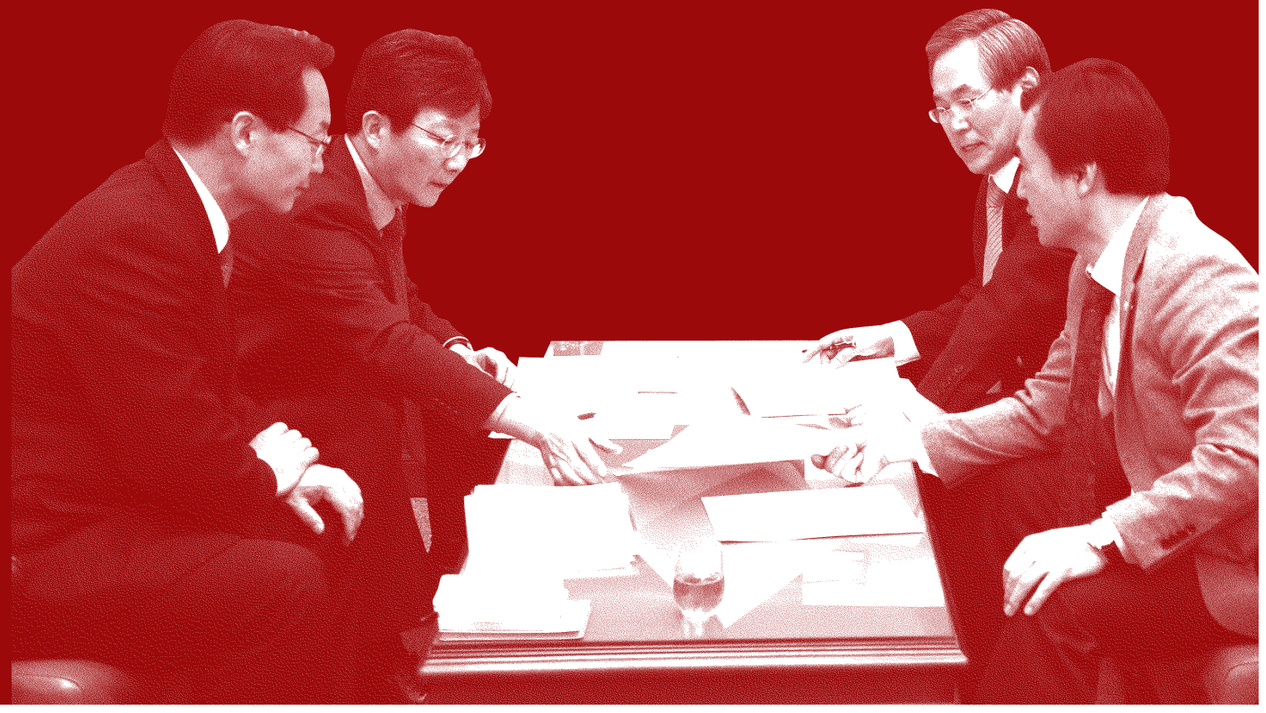
2015년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는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특명성,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만족도의 9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규모의 적정성, 정부에 대한 신뢰,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삶의 질 등에 대한 질문을 설문조사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이들 요인의 수준에 따라 분야별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도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1 | 평가지표와 의미 020
2 | 최종 평가지표 선정 과정 022
3 |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023

평가대상 정책 선정 과정

설문조사를 통한 1차 선정과 전문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한 2차 선정

선정된 분야별 각 20개씩의 정책을 가지고 일반인 600명과 전문가 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인지도, 영향력, 우선시행 여부를 물었는데, 인지도는 “선생님께서는 다음 정책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향력은 “선생님께서는 이 정책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시행 여부는 “선생님께서는 이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각각 제기하였다. 순위가 결정된 분야별 20개 정책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2차로 10개의 정책을 선정하였다. 분야별 각 10개씩 총 40개의 정책이 평가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1. 평가지표와 의미

1) 평가영역 1: 정책의 구조

가)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정책목표가 누가 보기에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로 정의할 수 있다. 정책목표의 명확성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특히 1)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타임라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3) 복수의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목표 간 일관성이 있는지의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나)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은 수단으로서의 정책과 정책목표 간에 원인과 결과로서 뚜렷한 논리적 연계성이 존재하는가로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는 제시된 정책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논리적 연결이 뚜렷하게 존재하는지를 평가한다.

2) 평가영역 2: 정책의 내용

가)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는 대상 정책이 현재 거시적인 국가/사회의 목표(social goal) 및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경제정책의 경우 경제성장이나 경제민주화,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양극화해소 등 우리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책문제와 관련된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인 증거들이 수집, 분석되고 그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나)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제도, 자원, 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정책을 원래 의도한 대로 실현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1) 정책의 필요성과 목표에 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타당해야 하고(재정적 실현가능성), 2) 정책의 필요성과 목표에 비해서 소요되는 인력과 인프라가 타당해야 하며(행정적 실현가능성), 3) 정책의 법적근거가 충실히 마련되어야 한다(법/제도적 실현가능성).

다) 정책의 형평성

정책은 기본적으로 공정해야 하며, 정책의 형평성은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특정 집단이 피해를 입거나 혜택을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정책이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과도한 혜택을 주거나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되며, 정책으로 인해서 특정 집단이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혜택을 누려서도 안 된다.

3) 평가영역 3: 정책의 과정

가)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은 정책과정(입안 및 집행)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얼마나 보장되고 그러한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되는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정책의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지 혹은 정책의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누구나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이란 정책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필요한 경우 환류를 통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1) 정책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져 있어야 하고, 2) 정책이 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3)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주기적인 환류를 통해 궤도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4) 평가영역 4: 정책의 결과

가)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따라서 정책이 원래 의도한 대로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혹은 정책이 고유의 목표뿐 아니라 연관목표의 달성에 기여하였는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나)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는 정책에 대하여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정책의 과정과 성과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심상을 반영하는 평가로 이루어진다.

5) 기타 영역

2015년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는 이 밖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규모의 적정성, 정부에 대한 신뢰,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삶의 질 등에 대한 질문을 설문조사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이들 요인의 수준에 따라 분야별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도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2. 최종 평가지표 선정 과정

대부분의 기존 교과서는 정책평가를 주로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는 효과성의 개념, 즉 정책의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한다(Bingham, 2002). 그러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인과관계의 틀(정책개입 → 정책효과)에서 효과성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정책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평면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안을 반영하는 정책이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단순히 효과성 기준으로 낮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정책평가는 정책이 가지는 다면적 성격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책평가 관련 문헌에서 정책의 결과 이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가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과와 함께 가장 자주 언급된 좋은 정책의 기준은 과정이다. 즉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의도한 결과를 가져 온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는 의미이다.

본 연구진은 학계의 이러한 평가 기준이 정책 자체에 대한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정책의 과정과 결과에 평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정책 자체는 이미 제대로 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가정에 밑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지난해(2014년) 평가에서 4회에 걸친 평가지표 팀 회의와 2회의 전체 연구진 회의를 거쳐 정책의 과정과 결과 이외에 정책의 목표가 얼마나 명확하고 목표와 정책대안 간에 논리적 연계성이 얼마나 뚜렷한가와 같은 정책의 구조적 측면과 정책이 사회현안을 반영하고 있는지, 실현가능한지,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같은 정책의 내용적 측면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이들 영역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1) 정책목표의 명확성,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3) 사회현안 반영도, 4) 정책의 실현가능성, 5) 정책의 형평성, 6) 정책의 특명성, 7) 정책의 책임성, 8) 정책의 효과성, 9) 정책의 만족도의 9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올해의 평가에서도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라는 네 가지 큰 영역을 대상으로 앞에서 제시한 9개의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이에 더해 추가적인 분석을 위하여 재정규모의 적정성, 정부에 대한 신뢰,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삶의 질 등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최종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3.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1) 평가대상 정책 선정 과정

본 연구진은 평가의 대상이 될 정책들을 선정함에 있어 크게 세 가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평가대상 정책을 적절하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담보된 샘플링(sampling)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개별 '정책'의 조작적 정의(定義)에 따라 평가 대상 정책 목록의 구성이 결정되므로 예컨대 근거 법령의 존재(신규 입법 혹은 개정), 예산 편성의 단위(項 혹은 目), 관할권의 확립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대상은 '정책'이지 '정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본 과제는 정부의 평가가 아니라 개별 정책의 평가이다. 따라서 복수(複數)의 정부에 걸쳐 있는 연속적 정책도 존재할 수 있고, 반면에 동일 정부에서도 상이한 (혹은 상충적인) 복수의 정책이 존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에 유념하여 평가 대상이 될 정책의 예비 선정을 2단계에 걸쳐 실시하였다. 우선 제1단계에서는 해당 정부 부처와 동아일보가 제공한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망라적 목록(exhaustive list)을 만들었다. 해당 정부 부처는 동아일보의 요청에 따라 정책의 목록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 특히 관련된 법령이 있을 경우 해당 부처는 이를 언급하였다. 아울러 동아일보의 해당 부처 출입기자가 검토의견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마련된 망라적 목록을 가지고 연구진 전문가 집단 검토 FGD(Focused Group Discussion)를 통해 취합된 정책들 중에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각 20개의 정책을 선별하였다. 전문가 집단 검토 시 고려된 요인들은 정책 목표 및 추진일정의 유무, 소요 예산의 규모, 전담 인원의 크기, 근거 법령의 존부(存否) 등이다.

[표 2-1] 경제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2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산업의 피해우려가 큰 초대형 글로벌 M&A 적극 대응
3		관세청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불법·불량·위해 수입물품 차단
4		관세청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5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정상화
6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7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 강화
8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10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의 6차산업화
11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 본격화
12		미래창조과학부	국가 R&D 혁신
13		방송통신위원회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단말기유통법 안착)
14		산업통상자원부	노후 산업단지 혁신
1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신산업 육성
16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신속제품화 지원(바이오마중물 사업)

17	경제	중소기업청	기술창업 활성화
18		중소기업청	기술 유망기업 발굴 지원
19		해양수산부	마리나 육성
20		해양수산부	해양에너지 시범사업 개시

[표 2-2] 사회복지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사회복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2		고용노동부	세대간 상생 고용
3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		경찰청	보복·난폭운전 등 고질적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5		국민안전처	지역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구축·공개
6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가안전대진단
7		국민안전처	민·관 협력을 통한 구호물류체계 개선
8		국민안전처	소방차 길 터주기
9		국민안전처	소소심 교육(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10		국민안전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중국어선 단속
11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12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13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14		보건복지부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
15		보건복지부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행복카드) 출시
16		보건복지부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정책
17		보건복지부	금연종합대책 추진
18		여성가족부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19		인사혁신처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20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개혁

[표 2-3] 교육문화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교육문화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NCS 통한 능력중심사회 전환
2		교육부	자유학기제 확산
3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4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5		교육부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
6		교육부	누리과정
7		국가보훈처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
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9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설립
10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11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창업생태계 조성
1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13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진흥
14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 활성화
1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16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 활성화
17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
18	교육문화	산림청	도시숲 조성
19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청소년 급식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2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표 2-4] 외교안보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외교안보	국방부	한국형 미사일체계(KAMD) 및 킬체인 구축 사업
2		국방부	안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조성
3		국방부	국방개혁(2014~2030)
4		국방부	화생 분야 및 우주·사이버 한미 공조강화
5		방위사업청	방위력 개선사업의 성공적 수행
6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혁신 추진
7		방위사업청	성과중심 민·군 기술협력 추진
8		병무청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한 『맞춤특기병제』 운영
9		병무청	산업기능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10		외교부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11		외교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12		외교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13		외교부	한반도 분단 고통 완화를 위한 WHO, UNICEF 등과 국제협력 증진
14		외교부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15		외교부	한반도 클럽 활성화 등 통일 외교 네트워크 확충
16		통일부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
17		통일부	남북 주민간 동질성 강화
18		통일부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19		통일부	통일문화적 접근을 통한 통일공감대 제고
20		통일부	통일준비 내실화를 위한 통일교육 강화

2) 평가대상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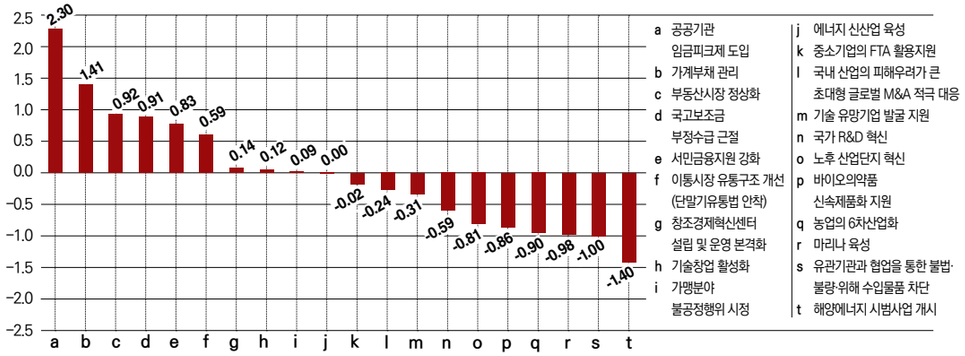
가) 설문조사를 통한 1차 선정 결과

위에서 언급한 제2단계 FGD를 통해 선정된 분야별 각 20개씩의 정책을 가지고 일반인 600명과 전문가 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인지도, 영향력, 우선시행 여부를 물었는데, 인지도는 “선생님께서는 다음 정책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향력은 “선생님께서는 이 정책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시행 여부는 “선생님께서는 이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각각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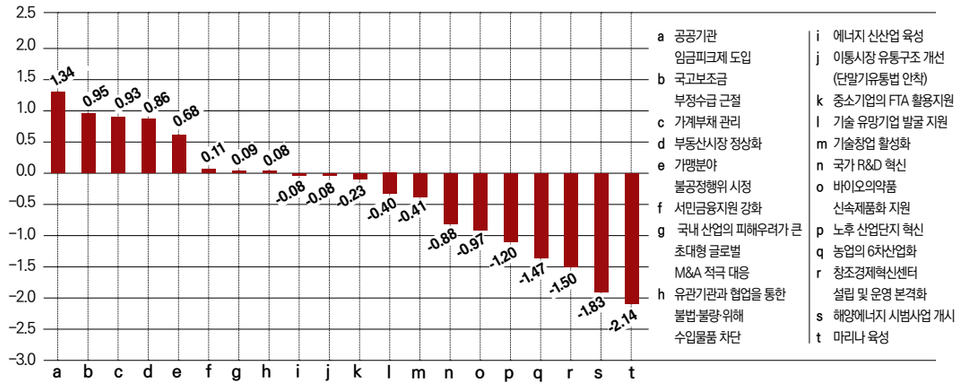
설문조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원점수를 표준점수화하고, 이를 다시 가중평균 하여(전문가 60%, 일반인 40%) 점수화한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20개 정책의 순위를 파악하였다.

[그림 2-1] 경제정책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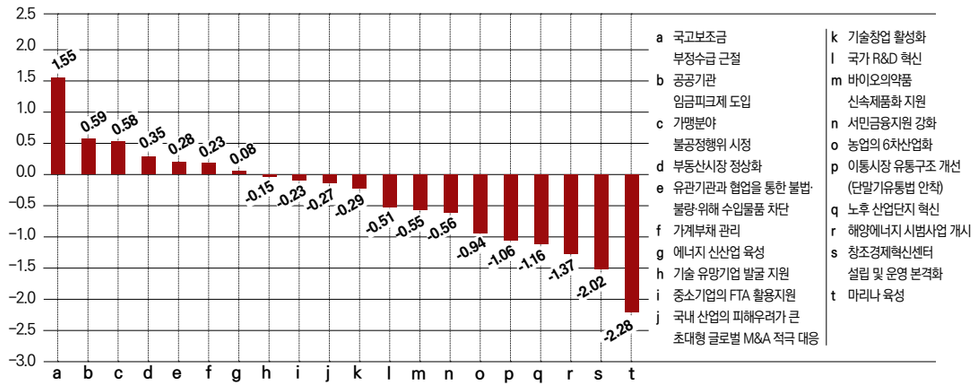
경제정책 분야 :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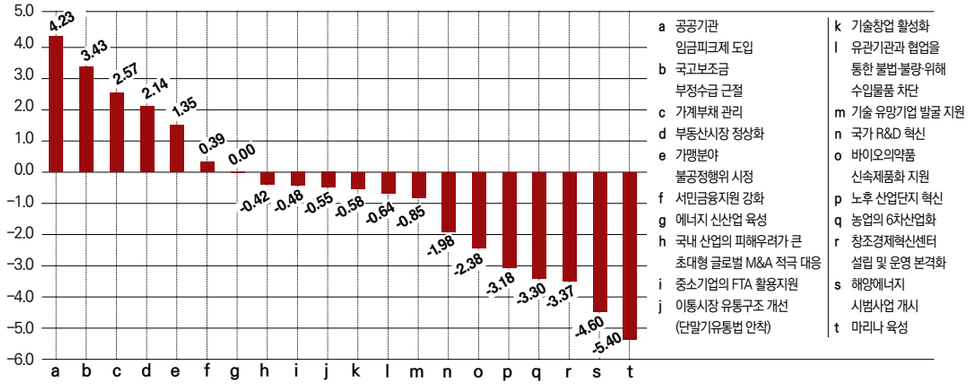
경제정책 분야 : 영향력



경제정책 분야 : 우선시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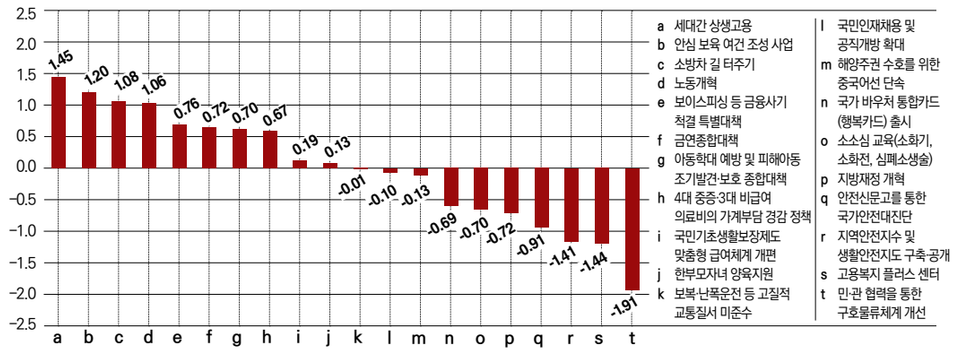


경제정책 분야 : 합산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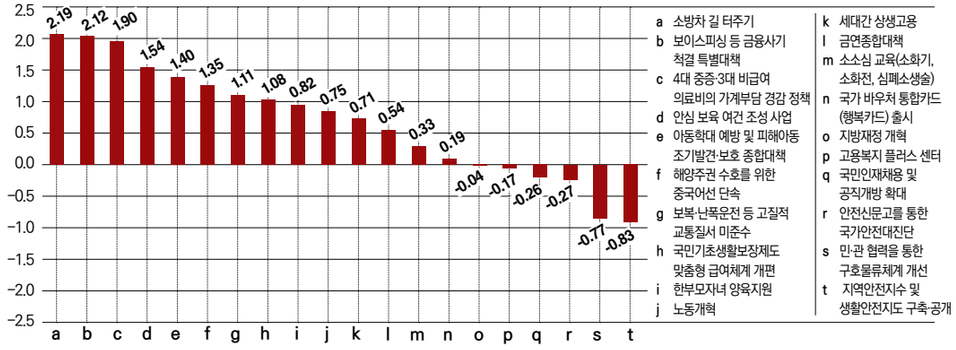


[그림 2-2] 사회복지정책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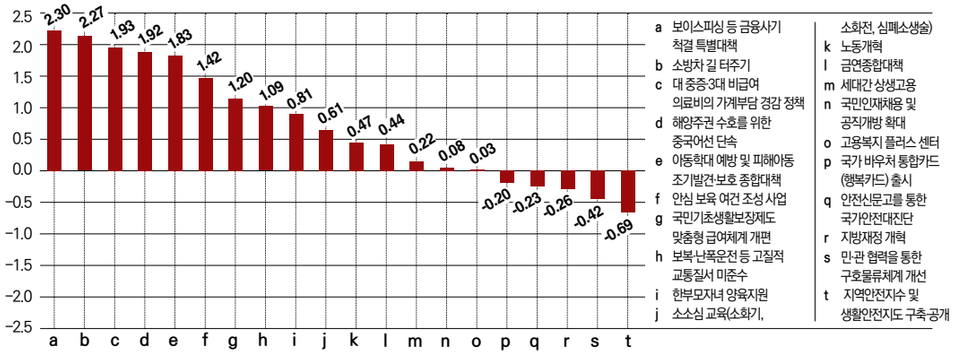
사회복지 분야 :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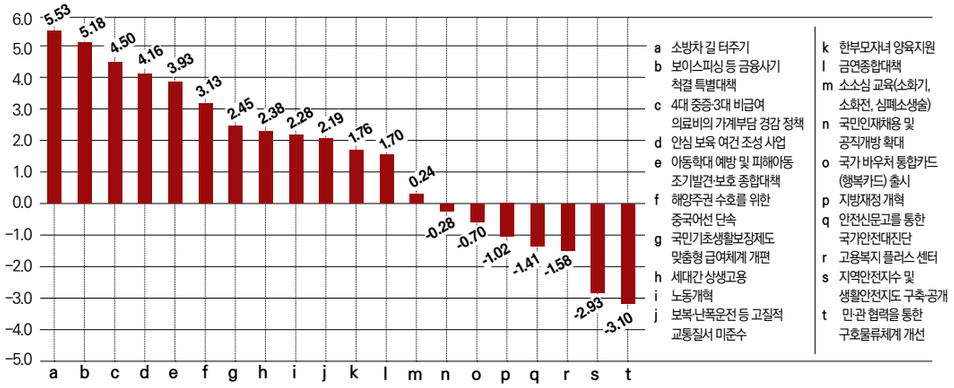
사회복지 분야 : 영향력



사회복지 분야 : 우선시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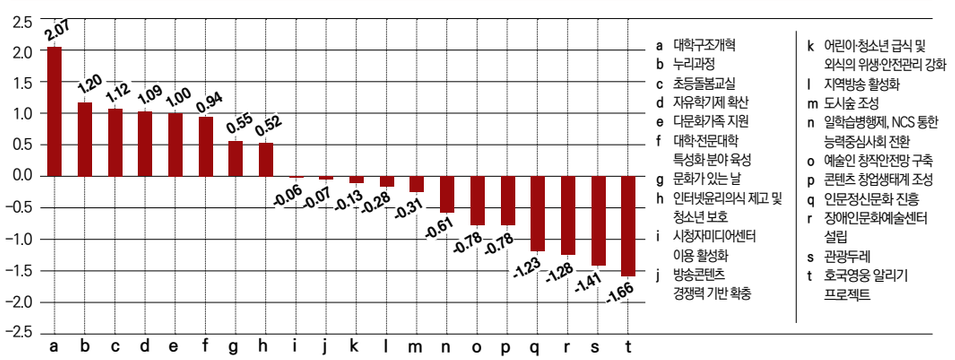


사회복지 분야 : 합산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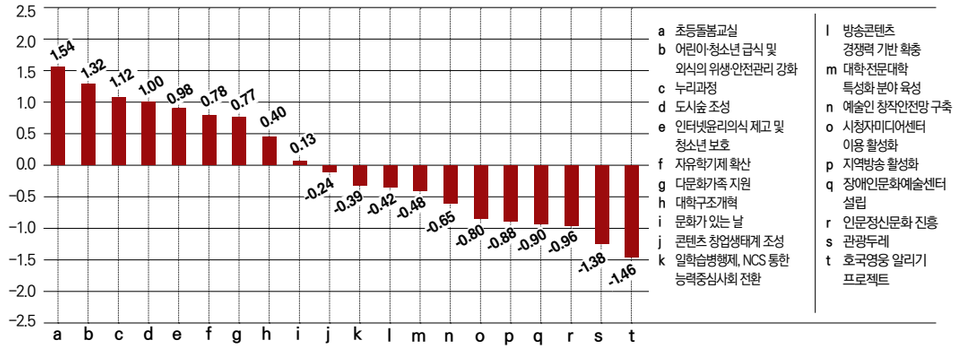


[그림 2-3] 교육문화정책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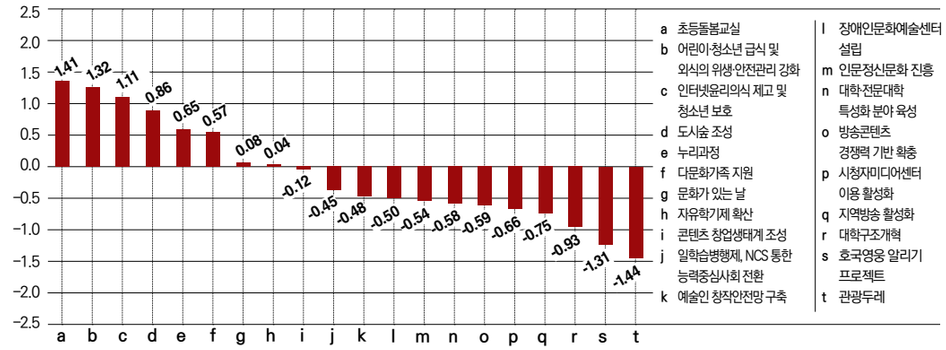
교육문화 분야 :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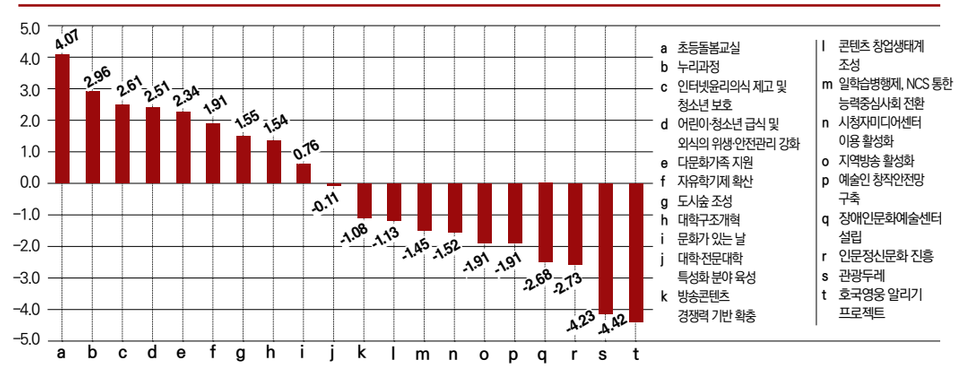
교육문화 분야 : 영향력



교육문화 분야 : 우선시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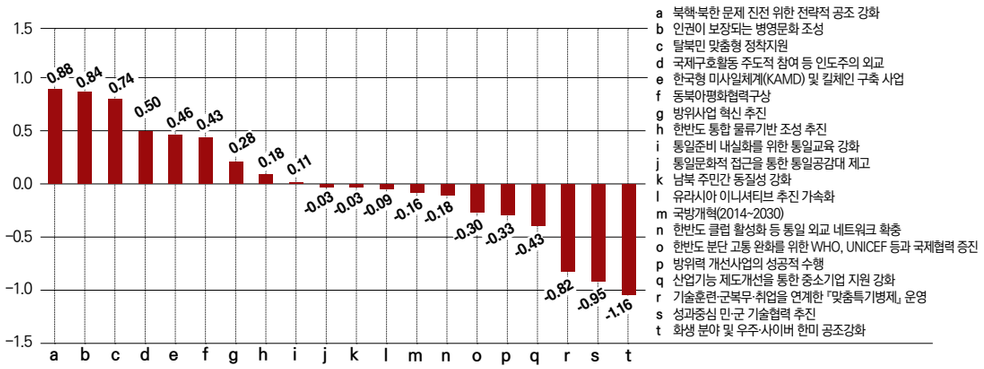


교육문화 분야 : 합산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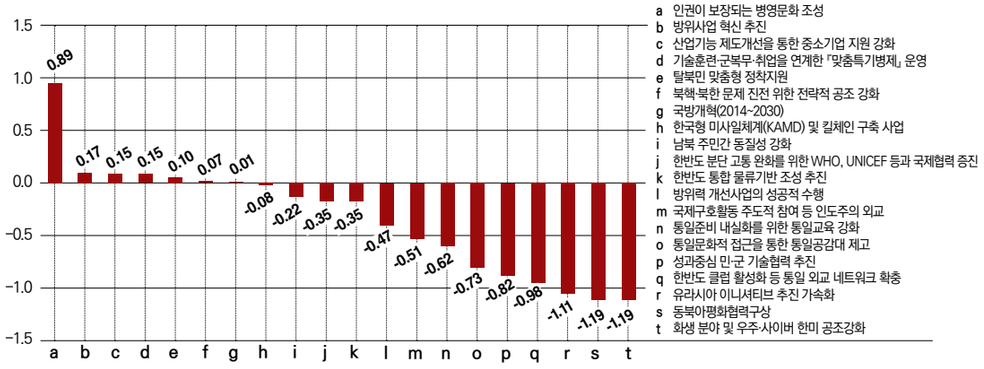


[그림 2-4] 외교안보정책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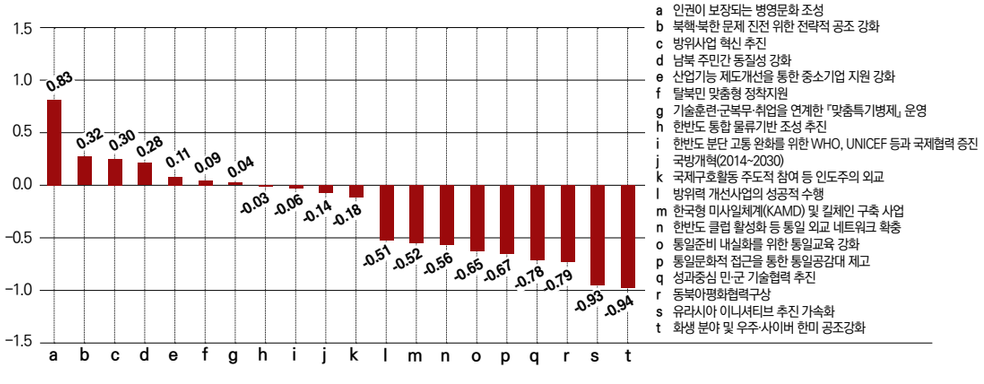
외교안보 분야 :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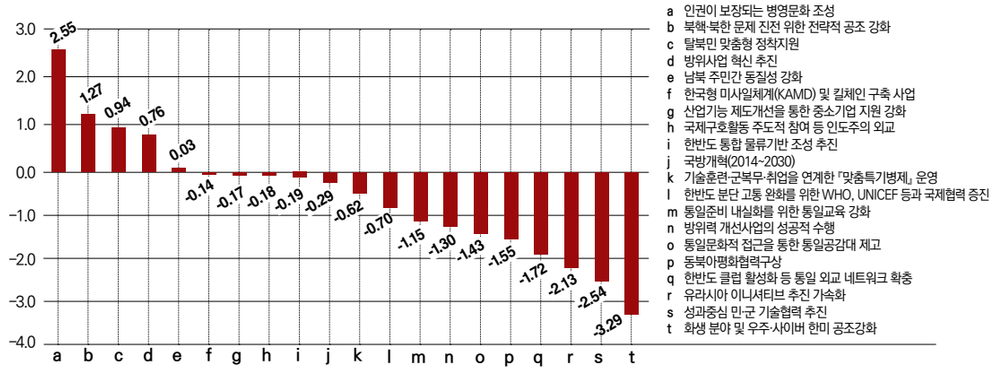
외교안보 분야 : 영향력



외교안보 분야 : 우선시행 여부



외교안보 분야 : 합산점수



나) 전문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한 2차 선정 결과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순위가 결정된 분야별 20개 정책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2차로 최종 10개의 정책을 선정하였다. 각 분야에서 선정된 정책 10개의 목록과 그 선정 근거는 각각 아래와 같다.

[표 2-5]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경제정책 분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경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2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3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4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산업의 피해우려가 큰 초대형 글로벌 M&A 적극 대응
5		관세청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6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정상화
7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 강화
8		방송통신위원회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단말기유통법 안착)
9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신산업 육성
10		환경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선정 근거

경제정책팀은 1차 설문조사 결과의 순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10개 평가대상 정책 중 9개를 상위 10위 순위 내의 정책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연구진 회의를 통해 정책의 내용이 안심전환대출로 한정된 가계부채관리 정책을 제외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2020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추가하였다.

[표 2-6]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사회복지정책 분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사회복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2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3		보건복지부	금연종합대책
4		보건복지부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정책
5		보건복지부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
6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7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8		여성가족부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9		인사혁신처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10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개혁

선정 근거

사회복지정책 분야의 경우 최종 평가대상 10개 정책 선정에 있어 1차 평가결과 상위 점수를 받은 10개 정책 중 세대간 상생 고용 정책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중국어선 단속 정책을 제외하였다. 세대간 상생 고용 정책은 노동시장 개혁 정책의 하위 프로그램이며,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중국어선 단속 정책의 경우 나름대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다른 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문제의 규모가 작다는 연구진의 판단에 의거하여 두 정책을 제외하였다. 연구진 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10개 정책에는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책과 지방재정 개혁 정책이 포함되었다.

[표 2-7]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교육문화정책 분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교육문화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2		교육부	누리과정
3		교육부	자유학기제 확산
4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5		교육부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
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7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
8		산림청	도시숲 조성
9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청소년 급식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1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선정 근거

교육문화팀은 1차 설문조사 결과의 순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10개 평가대상 정책 전체를 설문조사 상위 10개 정책으로 선정하였다.

[표 2-8]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외교안보정책 분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외교안보	국방부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조성
2		국방부	한국형 미사일체계(KAMD) 및 킬체인 구축 사업
3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혁신 추진
4		병무청	산업기능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강화
5		외교부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6		외교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7		외교부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8		외교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9		통일부	탈북민 맞춤형 정착 지원
10		통일부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

선정 근거

외교안보정책 분야의 경우 최종 평가대상 10개 정책 선정에 있어 1차 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10개 정책 중 남북주민 간 동질성 강화 정책과 국방개혁(2014-2030) 정책이 제외되었다. 최종 평가대상 10개 정책에 추가된 정책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정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정책이다. 두 가지 정책이 최종 선정된 이유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평가의 의의가 높다는 데 있었다. 또한 앞의 두 가지 정책이 최종 평가대상 정책에서 제외된 이유는 정책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다른 평가대상 정책의 추진내용들을 포함하는 내용이어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절차와 과정, 기준과 근거에 따라 분야별 각 10개씩 총 40개의 정책이 평가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03

제3장 평가대상 정책의 개요

평가대상 정책 분야 : 경제정책 / 사회복지정책 / 교육문화정책 / 외교안보정책
분야별 각 10개씩 총 40개의 정책이 평가 대상으로 최종 선정

1 | 경제정책분야 036
2 | 사회복지정책분야 043
3 | 교육문화정책분야 050
4 | 외교안보정책분야 059

경제정책 분야 연구진 회의를 통해 정책의 내용이 안심전환대출로 한정된 가계부채관리 정책을 제외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2020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추가하였다.

사회복지정책 분야 연구진 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10개 정책에는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책과 지방재정구조개혁 정책이 포함되었다. 1차 평가결과 상위 점수를 받은 10개 정책 중 세대간 상생 고용 정책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중국어선 단속 정책은 제외하였다.

교육문화정책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의 순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10개 평가대상 정책 전체를 설문조사 상위 10개 정책으로 선정하였다.

외교안보정책 분야 최종 평가대상 10개 정책에 추가된 정책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정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정책이다. 남북주민 간 동질성 강화 정책과 국방개혁(2014-2030) 정책은 제외되었다.

1. 경제정책 분야

1)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기획재정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양비용의 부담의 완화 및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로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년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저해하고, 이와 같은 투자 저해는 직접적으로 청년실업문제의 악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청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도입되었다. 기본 아이디어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고령 근로자 인건비를 재원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의 민간 기업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선도적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자 하며, 2015년 내에 전 공공기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11월 현재, 313개의 공공기관 (통폐합이 예정된 3개 기관 제외)중 91.7%인 287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정부는 이렇게 절감한 재원을 바탕으로 2016년 4,211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임금조정기간은 각 공공기관의 환경에 따라 적용되며 평균 2.5년으로 퇴직 2~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공공기관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균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에는 82.6%, 2년차에는 76.2%, 3년차에는 70.1% 수준의 임금지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기업으로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1,080만원을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바탕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채용 인원 당 연간 540만 원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민간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 활동은 2015년 11월 현재 30대 그룹 계열사 378곳 중 62%인 235곳에 적용되고 있다.[1)]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도입한 정책이다. 근거법령은 보조금법이다. 2014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14. 12.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을 개정할 예정에 있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훈령을 제정('16. 4월)할 계획이다. 그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2015년 88.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기획재정부, 2015)[2)] 보조금법 개정을 통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통해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등 그간 부족했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본 정책의 수혜집단은 세금을 내는 전 국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정책은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고보조금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17년 상반기 예상)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BPR/ISP) 용역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구축,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등 강화,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감독 및 벌칙 강화, 집행점검 강화 등 사후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본 정책의 성과결과로는 보조사업 평가하여 사업규모 및 부정지급 환수 조치 등이 있다. 우선 보조사업 평가를 살펴보면 2014년에 1,828개의 보조사업(세부사업 기준) 중 32개 부처, 1,422개 사업(44.9조원, 전체사업의 85.4%)을 평가한 결과, 사업수를 약 10%(140개), 사업규모를 약 1.8조원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같은 평가결과는 2016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통한 보조금 환수조치로는 2015년 상반기 중 농식품부 등 13개 부처에서 338개 보조사업을 점검하여 보조금 부정지급 등 117건을 적발하고, 약 4.1억원을 환수조치 하였고 이는 본 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다.[3)]

3)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환경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당사국총회 결과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교토의정서 체제가 종료되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없이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들은 2020년 이후의 자발적인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정책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2014년 2월 이후 정부는 몇 가지 감축안을 두고 논의를 해 왔으며, 2030년 배출전망치(BAU) 8억 51백만 톤에서 37%를 감축한 5억 36백만 톤으로 목표배출량을 설정하여 2015년 6월 말에 UN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목표 설정과 함께 정부가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포함시킨 정책의 세부 지원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내 감축분은 25.7%로 설정하고, 나머지 11.3%는 해외 감축분으로 달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둘째, 산업부문의 감축률을 12%로 한정하였다. 셋째, 산업부문의 낮은 감축률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증가될 수 있는 수송, 건물 등 비(非)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감축지원 방안을 수립하였다.[4)]

4) 부동산시장 정상화(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에 그 목표가 있다. 특히 가격 상

1) 이 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에 두어 작성하였음.
2) 기획재정부(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 2015. 6.
3) 이 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에 두어 작성하였음.
4) 이 평가를 위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에 두어 작성하였음.

승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2013년에는 4.1대책, 2014년 9.1대책 등 8번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는 2015년에 재건축 연한 완화 등 재정비 규제 법령개정('15.1월)과 청약가점제 지자체 자율 전환('15.2월 개정, '17.1월 시행)이라는 두 가지 정책과제를 중점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정책을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였는데 재건축 연한 완화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과 관련한 법령 개정이고, 청약 제도 개선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다(국토교통부, 2014a, 2014b)[5][6]. 본 정책의 수혜집단으로는 재건축 연한 완화 등 재정비 규제를 현 시장상황에 맞게 일제 정비함에 따른 재건축 주택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뽑을 수 있다. 또한 청약가점제를 지자체 자율로 전환하는 등 지나치게 복잡한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청약제도 이용자 및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도 정책 수혜집단에 속한다. 본 정책과 관련한 의견수렴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청약 제도 개선의 경우 2014년 9월에 공청회 등을 거쳐 정책을 확정하였다(관계부처 합동 보고서-국토부·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 2014)[7]. 주택거래 규제 완화의 경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하여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국토교통부, 2014b). 국토부는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 2014b). 본 정책의 성과에 대하여 국토부는 주택거래량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주택거래량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012년에 통계집계('06년) 이후 최저치('12년 73.5만 건)를 기록했으나, 불과 2년 만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여 2014년에는 8년 만에 최고치(100.5만 건)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7월 기준 거래량이 72.1만 건으로 작년보다도 31%가 증가하는 등 주택거래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본 정책의 목표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에 있다는 측면에서 성과로 볼 수 있다.[8]

5)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공정거래위원회)

본 정책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소위 '갑-을 문화'의 폐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접근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법, 제도의 정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2월 14일 가맹사업법 및 동시행령 개정, 시행을 통해 1)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2) 24시간 영업 강요금지, 3) 매장 리뉴얼 강요금지 및 가맹본부에 의한 리뉴얼 시 20%~40% 정도의 비용분담을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2014년 8월 14일부로 가맹계약시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및 영업지역 내에는 추가 가맹점 및 직영점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가맹본부에 의한 가맹점주의 영업권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1)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 제정 보급('14.2.28.), 2)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개정('14.3.11.), 3)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고시 제정('14.6.26.), 4) 표준가맹계약서(3종)를 개정하였다('14.10.30).

두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점감시업종을 선정하여 현장직권조사를 통해 가맹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행위를 강화하고 있다.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주요 업종 총 9개 가맹본부(12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6월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불공정행위 시정조치가 53.6%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세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적 정보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적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법제화하고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가맹점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주의 피해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불공정행위 분쟁조정사례, 심의결과, 정책소식 등을 이메일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정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항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홍보 리플렛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의 적실성과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기적인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5개 권역별로 가맹점주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도의 운영실태 및 국민체감도를 정기적으로(상, 하반기 2회)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을 위해 소요되는 총 예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9억 4천 9백만 원이다.[9]

6) 서민금융지원 강화(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 강화 정책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로, 2013년 정책이 시작되었다. 본 정책의 목표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와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그리고 서민의 자활과 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이다(금융위원회, 2015)[10]. 근거 법령은 대부업법과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다. 서민금융의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대부업법을 개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대부업법 상의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하여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서민 대상 원스톱 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법인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 2015). 본 정책의 수혜집단은 채무연체자와 고금리 대부업을 활용한 서민들이며,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이다. 본 정책의 수립과정에 있어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하고, 수요자 실태조사('15.4월, 금융硏) 등을 실시하였다(금융위원회, 2015).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금융권 협의 및 당정협의(6.23) 등을 거쳐 서민금융 지원 강화

5) 국토교통부(2014a), 보도자료 2014. 9. 3/ 배포일시 2014. 9. 3
6) 국토교통부(2014b), 보도자료 2014. 9. 19 / 배포일시 2014. 9. 18
7) 관계부처 합동 보고서-국토부·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2014), 보도자료 2014. 9. 1 / 배포일시 2014. 8. 31
8) 이 평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에 두어 작성하였음.
9) 이 평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에 두어 작성하였음.
10) 금융위원회(2015), 보도자료 2015.6.23 / 배포일시 2015.6.23

를 위한 3대 정책방향 및 7대 핵심과제를 마련하였다(금융위원회, 2015). 구체적으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마련(6.23)을 위하여 2015년 말 종료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연장하고, 서민금융상품의 공급규모를 확대(연 4.5조원→연 5.7조원)하였다. 특히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를 5%p 인하(34.9%→29.9%)였으며, 성실상환자 대상 지원 확대와 서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하였다. 그에 따라 2018년까지 신규로 총 270만 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금융 공급이 가능하며,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인하로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70만 명은 4,600억 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18년까지 총 62만 명의 채무연체자의 재기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위의 결과는 본 정책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금융위원회, 2015)[11].

7) 에너지 신산업 육성(산업통상자원부)

본 정책은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분야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탄소 배출은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에너지 산업의 경우 국제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이에 더불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7월 '에너지 신산업 정책단'을 출범하고 전기자동차, 수요자원 거래시장, 에너지 자립섬, 에너지저장장치(ESS),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등의 8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5년 11월에는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발표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에너지 신산업 4대 분야와 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프로슈머 분야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ICT 기술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다양한 유형의 신산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저탄소 발전 분야로 국내 발전의 저탄소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 효율화, 차세대 전력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이 포함된다. 셋째, 전기자동차 분야로 순수 전기차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기차 연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친환경 공정 분야로 제조 공장의 효율 향상, 온실가스 대체 공정으로의 전환, 버려지는 미활용열 사용 등의 신개념 산업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민간 투자 촉진, 수출 산업화 등의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 정책 추진을 위해 2016년 예산안 기준으로 정부는 R&D 4,400억 원, 융자 6,500억 원, 보급 1,950억 원 등 총 1조 2,890억 원의 투자를 할 계획이다[12].

8) 국내 산업의 피해우려가 큰 초대형 글로벌 M&A 적극 대응(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에 영향이 큰 글로벌 M&A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이러한 글로벌 M&A로부터 비롯된 국내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피해가 예측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M&A로 특정 산업분야에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경우 이 산업분야에서 부품 및 제조장비 조달을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분야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주무부처로 글로벌 M&A에 대한 적극 대응이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의 근거 법령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이며, 일반적 기업결합 신고요건을 갖추고 국내매출액 200억원 이상인 회사 간의 M&A를 국내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신고를 바탕으로 해당 M&A의 반경쟁적 효과를 분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측될 경우 M&A 심사보고서를 통해 당사회사의 M&A 철회를 유도하는 것을 정책의 대강으로 삼고 있다.

M&A 심사보고서는 주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정방안(사업부문별 자산매각, 판매금지청구 제한 등)을 명시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때 M&A가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심사과정에서 간담회, 시정방안 의견수렴 등 국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하며, 국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심사공조도 추진하고 있다[13].

9)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관세청)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정책의 주무조직은 관세청이다. 정책실명제에 따른 정책사업명은 '공익관세사 제도 등을 통한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컨설팅'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줄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정책'으로 칭한다. 본 정책은 국정과제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에 따라 2015년에 시행되었으며, 본격적인 FTA 교역시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FTA 활용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5년 「YES FTA 차이나센터」내에 공익관세사를 배치하는 등 2015년 3월 16일 이후 전국세관에 공익관세사 95명을 배치 및 운영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정책 수혜집단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기업으로 볼 수 있다. 본 정책은 설명회 등을 통해 FTA를 활용하는 기업담당자들의 고충 및 정책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관세청, 2015)[14]. 또한 FTA와 관련하여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중 FTA 제대로 알기」 퀴즈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관세청 홈페이지, 2015년 11월 3일 검색)[15]. 이처럼 FTA 활용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세관방문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지원항목을 제시하면, 첫째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FTA 컨설팅 사업, YES FTA 상담버스 및 공익관세사 운영 등 맞춤형 기업지원을 추진한 것이다.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 인천본부, 청주, 광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FTA 관련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였다(관세청, 2015)[16]. 특히 공익관세사의 경우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한국관세

11) 이 평가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에 두어 작성하였음.
12) 이 평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에 두어 작성하였음.
13) 이 평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에 두어 작성하였음.
14) 관세청(2015a), 보도자료 2015. 5. 29 / 배포일시 2015. 5. 29
15) 관세청 홈페이지 자료 참조, 2015년 11월 3일 검색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15821&bbsId=BBSMSTR_1209&nttId=223

사회와의 협업으로 비영리 상담서비스를 운영('15.3.16 이후 전국세관 95명 배치□운영)하였다. 둘째, FTA 활용에 필수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하여 인력과 자금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을 보급 및 확대하였다. 그에 따라 2015년 7월 기준으로 총 12,751개 기업이 FTA-PASS를 사용하는 성과를 보였다. 나아가 원산지관리사 등 FTA 전문 인력과 기업 간 고용 매칭을 실시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를 지원하였다.[17]

10)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단말기유통법 안착)(방송통신위원회)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 정책의 주무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이고, 본 정책의 경우 단말기유통법 안착이라는 보조 정책명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언론 및 국민들에게는 보통 단통법으로 불린다. 본 정책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해당 법 역시 약칭으로 단말기유통법이라고 불린다. 정부는 2014년도에 단말기유통법을 제정(2014. 5. 28)하고, 관련 시행령 및 고시를 제정(2014. 9. 24)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단통법을 시행하였다(2014. 10. 1). 2014년도에는 단통법을 시행하는데 주력했다면, 2015년도에는 단통법을 안착시키는데 주력하고 있고, 관련 예산으로는 2015년 기준 16억 1300만 원이 책정되었다. 단통법의 정책목표는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통신업체가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에 따라 본 정책의 수혜집단은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 시장투명성 향상에 따른 이통시장의 통신업체와 단말기 이용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단말기 이용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통신사의 통신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의 안착을 위해 정부는 단통법 관련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이통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관련 사업자의 자율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등 사회적인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이통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이통사·제조사 CEO간담회' 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자리를 마련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미래부, 2014)[18] [19].

16) 다양한 지역에 대한 참고문헌은 아래와 같다.
- 관세청(2015a), 보도자료 2015. 5. 29 / 배포일시 2015. 5. 29
- 관세청(2015b), 보도자료 2015. 7. 29 / 배포일시 2015. 7. 29
- 관세청(2015c), 보도자료 2015. 10. 29 / 배포일시 2015. 10. 29
- 관세청(2015d), 보도자료 2015. 10. 27 / 배포일시 2015. 10. 27
- 관세청(2015e), 보도자료(작성일) 2015. 10. 21 / 배포일시 2015. 10. 21
- 관세청(2015f), 보도자료 2015. 10. 20 / 배포일시 2015. 10. 20

17) 이 평가를 위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에 두어 작성하였음.
18) 방송통신위원회·미래부(2014),보도자료 2014. 10. 17 / 배포일시 2014. 10. 17
19) 이 평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에 두어 작성하였음.

2. 사회복지정책 분야

1) 금연종합대책(보건복지부)

금연종합대책은 흡연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의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43.7% [20]에 이르고 흡연에 따른 연간 사망자 수가 5만 8천명에 달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9월 11일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세부 내용으로는 담뱃값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의 도입, 담뱃값에 경고그림 부착 및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 금지 계획 추진, 금연을 위한 치료비 지원 및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마련, 금연광고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로 낮추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며, 특히 청소년이 가격인상에 보다 민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 시작 자체를 억제하고 금연 효과가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연종합대책을 위해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의 정책 추진을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을 통해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을 인상함으로써 2015년 1월 1일자로 담뱃값을 인상하였다. 그러나 당시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을 그림으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하였고, 2015년 11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폐암 등 흡연과 연관된 질병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의 경고 그림·문구를 넣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2016.12.23. 시행)에 따라, 구체적인 경고그림의 사진 등 표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하도록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경고그림 시행일은 2016년 12월 23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또는 같은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연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금연사업 예산은 2014년 113억 원에서 2015년(안) 1,52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안)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등 흡연예방사업이 24억 원에서 519억 원으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가 8억 원에서 49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외에 장기흡연자 단기금연캠프 사업을 신설하여 120억 원을,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128억 원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집행 예산은 1,475억 원이며, 2016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1315억 원으로 약 11%(160억 원) 삭감 편성되었다.

2)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금융감독원)

2014년 4월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특히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명명하여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특별대책 추진의 배경에는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20)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3.

해 대포통장 근절대책(2012년 11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2013년 9월) 등을 통한 다각적 조치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피싱사기 피해가 2012년 1,154억 원에서 2013년 1,365억, 2014년 2,16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은 대포통장을 근절하여 범죄자금의 이동루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극대화하여 사기범의 피해금 인출을 차단하며, 국민들의 금융사기에 대한 예방 인식의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2015년 4월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신속지급정지제도와 대포통장 신고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한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5월에는 지연인출제도 확대시행을 독려하여, 300만 원 이상 이체시 인출 지연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하고, 기준금액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조정(9월)하였다. 6월에는 장기미사용계좌 CD/ATM 인출한도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를 공동운영하며 금융사기와 관련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으며, 7월에는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통해 국민참여형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의 실시 이후 금융사기 피해액은 2014년 하반기 월평균 337억 원에서 2015년 상반기 261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 7~8월에는 19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피해자금 인출 지연 조치 등에 힘입어 최초 피해금 대비 환급금액 비율이 대폭 개선되어 2014년 하반기 17.7%에서 2015년 상반기 30.7%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액(순피해액)도 2014년 하반기 277억 원에서 2015년 상반기 181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피싱사기의 경우 2015년 7~8월 기간 중 환급금액 비율이 2014년 하반기 20%에서 2015년 상반기 35.1%를 넘어 45.7%까지 개선된 점을 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다.[21]

3)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정책(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소득계층·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 전 생(生)에 걸친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중 하나로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을 의미하는 4대 중증에 대한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200여개 항목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4,200억 원 경감시키는 것과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 완화를 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수가를 15~5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2015년 8월부터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기존 80%에서 2/3 수준(67%)만 둘 수 있도록 축소하여 2,000억 원 이상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33%로 낮추어 비선택의사를 대폭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일반병상을 2015년 9월부터 70% 이상으로 확대하여 상급병실료의 환자부담금을 500억 원 이상 경감하고,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서울을 제외한 지방 중소병원(종합병원 이하)을 대상으로 100개까지 확대하여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1.8조원, 2016년 2.4조원, 2017년 2.6조원의 의료비 경감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은 4대 중증질환과 임플란트, 틀니확대시행, 3대비급여 등을 포괄하는 보장성 강화 예산의 경우 2014년 2,761억 원에서 2015년 2,282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 확대로 1인당 진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원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진료비 예산은 2014년 4조 4,366억 원에서 2015년 4조 5,334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4)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보건복지부)

보육서비스 지원을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닌 핵심적인 사회정책으로 인지한 정부는 2013년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6대 세부정책과제 중 하나로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을 제시하였다.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루어지며 공급자 중심의 양적 확충보다는 수요자인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부모의 선택권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두고, 부모와 아동의 행복한 안심 보육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과 수요자·공급자·정부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상호 소통과 공감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양질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 사업은 보육인력의 역량 지원 강화 및 처우 개선,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 제공,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3개의 세부과제로 진행된다. 먼저 보육인력의 역량 지원 강화 및 처우 개선은 우수인력의 현장이탈 및 보육서비스 질 저하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에 기반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별로 엄격한 자격 관리 및 전문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現) 체계에서 결격 사유, 자격 취득 등 요건을 강화하고, 보수교육 체계 개편 및 중장기적으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은 연령별 프로그램의 낮은 활용도와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간 편차 및 관리 미흡으로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및 무상 보육의 체감도 저해라는 문제점에 기반하여 마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 프로그램의 맞춤형 개발·보급, 운영 여건, 사후 컨설팅 등 단계별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보육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채용 강화 및 기관 특성·원장 철학에 맞는 운영 자율성을 동시에 부여하는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세 번째,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은 어린이집의 안전, 급식위생 및 아동학대·차량사고 등에 따른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및 노후 어린이집 시설개선 지

21) 금융감독원 2015.9.14. 보도자료,

원을 확대하고, 안심 등·하원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시설·행위자 처벌 및 상담·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도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단계적 확대(2013년 37개소에서 2017년 전국으로 확대) 및 불량식자재 차단을 위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의 단계적 적용을 추진하고, 현장 상담·지도 및 부모·지역사회의 참여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정책의 세부 사업들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만 근로환경 개선 및 금여 인상 등의 처우 현실화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보육 프로그램의 맞춤형 개발·보급, 운영여건, 컨설팅 등 단계별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조부처로 참여하며,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단계적 확대 및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의 단계적 적용 사업은 식약청 소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액의 경우 2014년에는 1,356억 원, 2015년에는 1,52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대체교사 지원액으로는 2014년 40억 원, 2015년 43억 원이 편성되었다.

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보건복지부)

지난 10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판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2014년 2월 28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책 시행을 위해 2014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여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며, 보건복지부(간사부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참여한다.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은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고의무자 개개인에게 신고의무 고지 체계 구축 및 주기적 환기를 통한 신고 활성화, 「아동복지법」 상 의무 규정의 이행 관리 강화, 신고의무자 2인 이상의 직장은 연1회 1시간 이상 직장 교육 및 시군구·교육청에 교육 실적 보고 의무화, 신고범위의 확대 및 신고 불이행 과태료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 사건처리를 위한 공동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공조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아동학대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두 번째,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학대 피해아동 상담·치료 및 보호를 강화하며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을 위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방안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 재학대 방지 및 가정 기능 회복을 위한 사회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한다. 세 번째,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연령별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 교육과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방법 교육, 사법기관·중앙부처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일반국민에 대한 아동학대 홍보·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2014년 기준으로, 가족교육 46만 명, 가족상담 25만 명, 보육교직원·학부모 온라인 교육에 6만 명이 참여하였다.

2015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488억 원(국고 252억 원, 지방비 236억 원) 확보함으로써 관련 인프라를 보강하였다. 국고 예산 252억 원은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95억 원과 기재부 소관의 복권기금 57억 원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재학대방지 가족기능 강화, 쉼터 심리치료사 파견, 학대피해아동쉼터(1개소) 운영 등에 15억 원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56개소) 지원을 위해 150억 원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 30억 원이 배정되었다. 복권기금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에 각각 28억 원, 29억 원이 배정되어 운영 중이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보건복지부)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빈곤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소득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지원되던 모든 급여가 중단되어 일을 통한 자립 유인이 떨어지고,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엄격한 소득·재산기준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2015년 1월 복지부 내에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을 발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편에 착수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2012년 12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공약이 발표되었다. 2013년 5월 관계부처(국토부·교육부 등)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기획단 운영을 통해 개편방안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2013년 12월 「주거급여법」이 제정되어 2014년 7월에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2014년 12월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 시행되고 있다.

맞춤형 급여 개편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기존의 최저생계비에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전환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과 연동하며,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으로 전환하고, 급여 간 연계·통합 강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며,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추가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여 보장수준의 현실화를 이루고, 수급자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소득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 영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편을 기반으로 2015년 7월 총 131만 명에게 첫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도 개편 전 40만 7천 원에서 4만 9천 원 가량 증가한 45만 6천 원으로 증가하였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은 2014년 88,245억 원에서 2015년 94,557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2014년 2조 5,240억 원에서 2015년 2조 6,988억 원으로, 주거급여는 7,285억 원에서 1조 1,073억 원으로, 교육급여는 1,111억 원에서 1,353억 원으로, 의료급여는 4조 4,366억 원에서 4조 5,33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예산(안)은 89,566억 원이다.

7) 노동개혁(고용노동부)

정부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낙관적이지 않은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관련부처 합동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6월 17일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 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청·장년 간 상생고용 방안은 미래세대(청년)와 기성세대(중·장년)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등 선도와 민간 확산 지원, 청년 고용 확대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추진된다. 세부 과제로는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마련하여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 확대, 인문계 전공자를 위한 취업촉진 방안 및 해외취업 강화 방안 마련·추진,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이 있다.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원청의 상생협력 노력 유도, 공정거래관행 정착, 공공조달의 역할 강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제고하여 청년들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에 출연 시 세제지원하며, 원청이 하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하청기업·협력업체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경우 세제 및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6월 「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법적근거(제86조의2)를 마련하였으며,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규-비정규직간 격차가 심화되고 취약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의 제·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여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고 상생을 촉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동개혁의 현장 안착을 위해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지도·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노사정 대화 등 노사 파트너십 활성화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세대 간 상생 고용과 청년(15~34세) 정규직 신규 채용 지원을 위해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규모는 2016년 619억 원으로 순증가, 임금피크제 지원 예산은 2015년 320억 원에서 2016년 521억 원으로, 고용창출지원사업(정규직전환지원금)을 위해서는 2015년 196억 원에서 2016년 144억 원으로 축소 배정되었다.

8)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별·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아동양육비는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되며, 추가 아동양육비의 경우 조손가족 및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월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에게 지급되며, 가구당 월 5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시·군·구청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지원예산은 2014년도 515억 6천 4백만 원에서 2015년 724억 4천 2백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도 계획 산출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양육비 66,960백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1,080백만 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4,175백만 원, 생계비(생활보조금) 132백만 원, 금융정보조회 명의인 우편통보 요금 95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9) 국민인재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2015년 정부혁신을 위한 인사혁신의 세부 추진정책으로, 국민인재를 공직에 적극 초빙하고, 공무원(국민의 인재)도 민간 등에 진출하여 쌍방 교류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해당 정책은 전직급 국민인재 경력채용제도의 도입, '스펙초월' 국민인재의 열린 채용 여건 조성, 다양한 국가인재 적극 발굴, 장애인·지역인재 등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공무원의 민간분야·국제기구 등의 진출 확대, 채용시험 개선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공단에 전문가 스카웃을 위해 채용절차 생략을 현재 가등급(실장급)에서 나등급(국장급)까지 확대하며, 임기를 5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편하고, 2017년까지 5급 이하 공채·경채 신규채용 비율을 5:5로 조정하며,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선발단위 및 채용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 2014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120명으로, 2013년 96명, 2012년 103명, 2011년 91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 주관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외에 6급 이하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정보화 자격증 등 불필요한 스펙을 가산점에서 제외하며, 장애인 공채 구분모집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 경채 직위를 30개 이상 발굴하고 있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7·9급 선발로까지 확대하고, 2015년부터 지방인재채용 목표제를 7급 공채에도 적용하였으며, 9급 공채에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비율을 현행 1%에서 2%로 확대하였다. 또한 국익기여 직위 중심으로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 진출 확대를 위해 성과와 연계한 진출기회 학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한국사' 가점제를 실시하고자 하고 있다.

10) 지방재정 개혁(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구조 합리화를 통한 지방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 개혁의 내용은 크게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재정정보 공개 강화, 지방공기

업 혁신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은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고자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교부세를 더 지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을 현재 20%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의 사회복지 반영 비중을 25%에서 35%로 확대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낙후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을 추가하고,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촉진하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확대 및 법령위반 과다지출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운용 실태를 공개하고, 2016년까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재정 정보를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해 구조개혁, 제도개혁, 부채감축의 3가지 축으로 개혁활동이 이루어진다. 구조개혁은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경제 위축기능 감축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도개혁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부실공기업 청산요건 절차를 마련하며, 사업실명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추진된다. 부채감축은 사업의 구조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을 통해 지방공사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데, 특히 26개 중점관리 대상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매년 10%씩 감축하여 2015년 140%, 2016년 130%, 2017년 120%를 그 목표로 한다.

3. 교육문화정책 분야

1)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사업의 주무부처는 교육부이며 방과후학교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12년 10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오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학생 등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22시까지 저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4년부터는 초등 1~2학년의 희망하는 모든 학생과 2013년에 초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던 3~6학년 희망학생들까지 수용하기 위해 초등 돌봄 교실 추가 설치 및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은 2013년 5,784교, 7,395실, 약 16만 명의 참여에서 2014년 5,938교, 10,966실, 약 22만1천명 참여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운영내실화를 위해 매일 1개 이상의 특기·적성프로그램 무상제공, 운영단가 전년대비 25% 상향, 학년별 특성 및 학교별 여건에 따른 운영의 다양화 등을 추진하였다(교육부, 2014. 12. 19).

[표 3-1] 2014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구분	오후 돌봄			저녁 돌봄		
	학교 (개)	교실(실)	이용학생(명)	학교 (개)	교실(실)	이용학생(명)
서울	556	1,356	27,737	480	499	3,593
부산	299	525	10,497	149	162	1,860
대구	213	441	7,958	34	34	308
인천	249	474	8,953	202	205	1,289
광주	149	327	6,344	17	17	186
대전	146	343	7,133	55	61	759
울산	120	223	5,161	88	88	588
세종	26	61	919	9	9	53
경기	1,193	2,678	60,764	331	372	5,620
강원	357	460	8,885	61	63	718
충북	259	346	8,195	69	84	840
충남	421	550	12,301	67	73	635
전북	411	680	13,992	97	113	1,822
전남	417	661	10,727	121	123	1,399
경북	492	640	12,739	63	63	624
경남	499	770	16,989	76	79	1,014
제주	103	167	3,572	17	18	187
계	5,308	9,765	202,305	1,843	1,966	20,294

자료: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추가설치 및 운영내실화 추진 (2014. 4. 9.)

2) 누리과정(교육부)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정책은 생애출발단계부터 균등한 교육·보육 제공 및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으로 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본 정책을 주관한다. 정책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유아단계부터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는 것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국·공립유치원 1인당 월 6만 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월 22만 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예산은 7조 6,688억 원(누적)으로 상당한 수준이며, 최근 누리과정 소요재원의 부담을 둘러싸고 시도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갈등을 보이

고 있기 때문에 소요 재원 확보와 같은 대처를 통해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누리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월 지원 금액이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리과정의 지원 대상이 '11년도에는 소득하위 70%로 국한되었으나,'13년도는 전 계층(100%)로 확대되었다. 또한 월 지원금액도 '12년도와 '13년도에는 연령별로 차이를 두어 지원하였으나,'14년도부터는 차등 없이 지원함과 동시에 지원금액도 '13년도 22만 원에서 '14년도 24만원,'15년도 27만원, 그리고 '16년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표 3-2] 3-5세 누리과정 변화과정

구분	2011년	2012년(현행)	2013년
지원대상	만 3, 4, 5세 : 소득하위 70%	만 5세 : 전 계층으로 확대 만 3, 4세 : 소득하위 70%	만 3, 4, 5세: 전 계층으로 확대(100%)
교육□ 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	만 5세 : 5세 누리과정 만 3, 4세 : 3, 4세 교육과정	만 3, 4, 5세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지원단가	국공립유치원(월 5, 9만 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 4, 5세 : 월 17.7만 원) (만 3세 : 월 19.7만 원)	국공립유치원(현행 유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 5세 월 20만 원) (만 4세 월 17.7만 원) (만 3세 월 19.7만 원)	국공립유치원(현행 유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 3~5세 월 22만원) *연차적 인상 : 2016년 까지 월 30만
재원 부담	유아학비/보육료로 이원화 (단, 지원범위 및 단가는 동일)	교육청 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 *2012년 : 만 5세, 2013~2014년 : 만 3, 4세 일부, 2015년 이후 : 만 3~5세 전부 부담	
관리 체제	유치원 (교과부) 어린이집 (복지부)	이원화 체제 유지	

자료: 교육부, 누리과정안내 팜플렛: 누리과정 무엇일까요? 2012. 9.

[표 3-3] 3-5세 누리과정 월 지원 금액(매월)

연령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만5세	20만 원	22만 원(↑2만 원)	24만 원(↑2만 원)	27만 원(↑3만 원)	30만 원(↑3만 원)
만4세	17.7만 원	22만 원(↑4.3만 원)			
만3세	19.7만 원	22만 원(↑2.3만 원)			

자료: 교육부, 누리과정안내 팜플렛: 누리과정 무엇일까요? 2012. 9.

3)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의 불법유해 정보, 명예훼손 등의 권익 침해, 사이버 폭력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권익보호의 균형을 위하여 게시글에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을 인정하고 온라인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로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 강화로서 국가기밀, 선정적, 폭력적 정보 등에 대하여 수시 심의 및 모니터링 강화, 포털에서 불법적 게시글에 대한 자율협력 시스템의 대상 확대, 해외 포털사 및 SNS 사업자의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협력 추진을 포함한다. 셋째로 인터넷상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웹하드 사업자의 청소년 가입자 음란물 차단 의무화에 따른 이행 점검 강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교육, 상담프로그램 개발, 불법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및 스마트 안심드림 서비스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인터넷윤리 교육확대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학생들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습관 정착을 돕는 방과 후 학교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교육콘텐츠 제작 및 보급, 교육용 다큐멘터리 및 공익광고 제작, 인터넷윤리대전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5. 4. 29).

4) 어린이·청소년 급식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어린이와 청소년의 급식 및 외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1차('10~'12년), 제2차('13~'15년)에 이어 금년에는 제3차('16~'18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학교 주변에서 놀이시설 및 학원 밀집가로 확대하고 저가·저품질 원료 사용업체에 대한 주기적 위생 점검, 고열량·저영양 식품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심확보를 위한 안전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1년 12개소에서 2015년 190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까지 포함하여 총 3,500개소 26만 명의 어린이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 및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학교급식 식중독관리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자율적 외식 위생·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주방문화 개선사업과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시도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평가 발표하고 있다.

[표 3-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현황

구분 / 연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9
센터 설치수 (개소)	540	12 (누계)	10 (22)	66 (88)	54 (142)	48 (190)	50 (240)	120 (540)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개소)	47,755	900 (누계)	1,044 (1,944)	3,452 (5,396)	7,007 (12,403)	3,117 (15,520)	4,100 (19,620)	14,395 (47,755)
수혜 대상 아동수	141만 명	7만 명	12만 명	30만 명	52만 명	71만 명	89만 명	141만 명
예산 (백만 원)		1,935	2,961	13,459	24,023	30,848	50,195	112,00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어린이급식안전관리 현황(2015)

5) 다문화가족 지원(여성가족부)

활기찬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자녀세대의 학교생활 적응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대한 기본 관점을 정립하고, 법·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다(여성가족부, 2012).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을 위해 주요 상대국과의 결혼 시 상대국의 제도·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아리랑TV에 다언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장기적으로 기존 방송국의 특정 시간대를 구매하여 케이블 다문화방송을 추진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학생이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 사전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학교를 전국적으로 운영('12년 26개소→'13년 24개소 추가 총 50개소)한다.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사증 심사 시 초청자의 실질적 피초청자 부양가능 여부 심사 등 국제결혼 사증심사를 강화하고,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 교육을 강화하고, 맞벌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및 결혼이민자 한 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가족차원의 서비스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인종·문화 등 차별에 대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일반 국민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며, 다문화가족의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다문화가족 분포, 중·장기센터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기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 가족, 유학생 가족 등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족에 대하여는 가족상담·자녀발달지원 등을 다문화가족 수준으로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보편성·효율성을 확대한다. 아래 표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주요 정책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 3-5] 다문화가족정책의 주요 정책과제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1-1.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1-2.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2-1.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2. 한국어능력 향상 2-3.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2-4.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2-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3-1.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3-2.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3-3. 소외계층 지원 강화 3-4. 피해자 보호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4-1.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4-2. 직업교육훈련 지원 4-3.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4-4.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5-1. 인종·문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5-2.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5-3.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5-4.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5-5. 다문화가족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정책추진체계 정비	6-1.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6-2.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6-3.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자료: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요약 자료, 2012

6) 자유학기제 확산(교육부)

자유학기제 확산 정책은 학생들이 끼와 잠재력을 발현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서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13년 2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같은 해 4월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42개를 지정하면서 시범운영이 시작되어 2014년 811개교(25%), 2015년 2,551개교(80%)로 확대되었다. 교육부는 2015년 8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교육부 2015a)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거쳐 2016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단위 학교에서는 1~2학년 중의 한 학기를 자율적으로 자유학기제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유학기의 오전에서는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으로 교실 수업을 혁신하여 운영하고, 오후에는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이러한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탐색, 학생선택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예술 · 체육 중점의 4개 모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학기당 170시간(주당 10시간) 이상은 이러한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하며, 학교의 목표와 특성에 따라 각 활동을 적절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2015년까지 체험처 58,882개, 체험 프로그램 102,507개를 확보하였으며, 모든 교육지원청(177개)에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15. 8. 7.)

[그림 3-1]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예시)

진로탐색 중점 모형
(편성) 기본교과(65%) + 진로(15%) + 기타(20%)
(운영) 진로탐색활동* 위주의 자율과정 편성

* 진로검사, 초청강연,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현장체험, 직업리서치, 모의창업 등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
(편성) 기본교과(57%) + 선택(23%) + 기타(20%)
(운영) 선택형 프로그램* 위주의 자율과정 편성

* 창조적인 글쓰기, 한국의 예술 발견하기, 미디어와 통신, 학교잡지 출판하기, 드라마와 문화, 녹색학교 만들기 등

동아리활동 중점 모형
(편성) 기본교과(65%) + 동아리(15%) + 기타(20%)
(운영) 동아리활동* 위주의 자율과정 편성

* 문예토론, 라인댄스, 벽화제작, 과학실험, 웹툰 제작, UCC 제작, 천체관측, 연극, 오케스트라 등

예술·체육 중점 모형
(편성) 기본교과(66%) + 예·체(15%) + 기타(19%)
(운영) 예술·체육활동* 위주의 자율과정 편성

* 국악, 무용, 만화, 사진, 디자인, 축구·농구·배구·배드민턴, 스포츠리그 등

자료: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 2013. 5. 28

7) 도시숲 조성(산림청)

도시숲이 체험 및 교육의 장소가 되도록 나무와 꽃 등으로 자연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시숲 내 시설물 유지 관리를 강화하여 도시숲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행정 추진하고자 산림청에서 도시녹화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확대하고자 하는 도시숲 조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정책사업 내용으로는 생활권에 도시숲을 확충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색쌈지숲 138개소(78㏊)를 조성하는데 13,604백만 원 투자하고, 산림공원 22개소(131㏊)에 6,421백만 원, 그리고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에 64개소(76㏊) 10,041백만 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도시녹화운동을 확산함과 동시에 도시숲 조성 예산 확대 및 집행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도 도시숲 조성 사업량 및 예산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6] 2015년도 도시숲 조성 사업량 및 예산

(단위: 천원)

사업별	개소	사업량	합계	국비	지방비
계	224	284.74	59,959,000	30,066,000	29,893,000
녹색쌈지숲	138	77.83	27,035,000	13,604,000	13,431,000
산림 공원	22	131.25	12,842,000	6,421,000	6,421,000
생활환경숲	64	75.65	20,082,000	10,041,000	10,041,000

자료: 산림청, 2015년도 도시숲경관 사업계획 자료. 2015

8) 대학구조개혁(교육부)

교육부는 2015년 8월 31일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14.1)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정량,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결과 및 개혁 조치의 취지는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개혁이며,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정 규율을 적용하고 기능 전환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되 평가결과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 등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 질 제고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학사구조 개편 등 질적 구조개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특징이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총점에 따른 비율(하위 20% 내외) 및 대학 간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룹 1과 그룹 2로 구분한 다음, 그룹 1 내에서는 95점 이상은 A 등급, 90점 이상은 B 등급, 90점 미만은 C 등급으로 구분하였고, 그룹 2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 등급, 70점미만을 E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아래의 표는 등급구분 기분 및 학교 수와 구조개혁 평가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차등적으로 정원감축 비율이 권고된 것을 정리한 것이다.

[표 3-7] 등급구분 기준 및 학교 수 및 정원감축 비율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별도 조치*	평가제외
학교 수	일반	34교	56교	36교	26교	6교	5교	29교
	전문	14교	26교	58교	27교	7교	3교	2교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평가제외	
학교 수	일반	자율감축	4%	7%	10%	15%	7%	
	전문		3%	5%	7%	10%	5%	

자료: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자료. 2015b

9) 문화가 있는 날(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1월 29일에 '문화가 있는 날' 첫 시행을 하며 전국에서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을 활짝 열고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로 정해진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융성의 원년인 지난해 문화융성위원회와 문체부가 발표한('13. 10. 25.)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의 핵심 사업으로서 국민 모두가 쉽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야간개방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날이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며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에는 유료로 운영 중이던 국·공·사립 전시 관람시설은 물론 많은 국민이 즐기는 영화, 프로스포츠와 관람료가 다소 부담이 되던 공연프로그램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도서관은 야간개방도 실시하여 온 가족이 함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문화가 있는 날'의 1월 첫 시행을 맞아 국민과 함께 문화융성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적극 동참한다. 사립 박물관·미술관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융성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대중문화 비즈니스 영역인 영화 상영관, 프로스포츠 등도 이날만큼은 수익성보다 국민들의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해 과감히 참여한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시행 이후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졌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연합뉴스, 2015.10.19).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주관 하에 2012년 8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3년간 생성된 블로그, 트위터,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 2천 6백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1년간 문화시설에 대한 총 언급량은 420만 7천 73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시설별로는 영화관 49%, 박물관 29%, 문화재 14%, 공연장 13%, 도서관 8%, 미술관 7% 등 순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시행에 따른 이용률이나 관심 증가는 상대적으로 영화와 공연, 전시 쪽에 집중되고 있으며, 박물관, 도서관 등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문화융성위원회와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분야별 시설과 혜택 등의 안내를 위해 한국문화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문화포털' 사이트 내에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10)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교육부)

교육부가 산업구조·기술 고도화에 부응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직업인 양성할 비전을 가지고 전문대학이 핵심 전문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할 목표로 대학·전문대학 특성화분야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적인 정책추진 과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의 강점분야에 부합하는 특성화를 선택하여 대학의 자율성장 역량기반 구축 및 구조개혁 유도하는 것으로 지역산업·환경과 대학의 강점에 따라 차별화된 전문대학을 육성하여, 세방화(glocalization)시대 지역사회와 세계에 기여하는 세계적 수준 또는 지역 명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 또한 현장중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직무수행 완성도가 높은 현장 중심형 인재 양성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NCS 교육과정을 통해 산업체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차별성을 확보한다. 산업기술 고도화와 다양한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전문대학 학제를 확충하고 평생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대학 수업연한·학위과정을 다양화하고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의 설립·운영을 통해 핵심 전문직업인 및 명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성인 중심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일과 학습이 연계된 실무중심의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전문대학 수업연한·학위과정 다양화,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운영,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전문대학생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핵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표 3-8] 대학·전문대학 특성화분야 핵심 정책

핵심과제	주요특징	목 표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 대학별·학과별 강점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 창조경제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 특성화 모형 : 대학단위, 복합분야, 프로그램, 평생직업교육	•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력 • 연간 15만명씩 양성 * 총 100교 육성 (취업률 61% → 80% 이상)
수업연한 다양화	• NCS 기반 및 산업수요에 따라 수업연한을 1~4년까지 다양화 – 조기입직을 촉진하고 재직자 계속교육을 위한 선순환 직업교육 체제 확충	• 지식기반산업에서 요구하는 핵심 전문직업인 양성 체제 구축
산업기술 명장 대학원	• 산업분야명장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특수대학원 설치 – 숙련 기능인력·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을 명장으로 육성 – 마이스터고 졸업자들의 고숙련 기술습득을 위한 계속교육 기회 확대	• 고숙련 기술인력 • 연간 100명 양성 * 4대 권역별 1교씩 총 4교 설치
평생직업 교육대학	• 일부 전문대학을 성인중심의 실무형 평생직업교육 체제로 전환 – 비학위과정과 학위과정으로 통합 운영 – 교육대상은 재직자, 퇴직자, 실업자, 창업희망자 등 성인학습자 중심	• 산업체 수요 맞춤형 전문직업인 • 연간 3만명 양성 * 시도별 1교씩 육성(16교)

자료: 교육부, 전문대학 육성방안 자료, 2013

4. 외교안보정책 분야

1)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국방부)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 정책의 주무부처는 국방부로 인사기획과와 병영정책과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06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신뢰받는 선진 병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군내 복무 부적응자 및 자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2014년 22사·28사 사고에 의해 군에 대한 심각한 신뢰저하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더욱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책의 세부 목표로는 장병 군복무 적응 지원체계의 강화와 군 복무의욕 고취 및 악성사고 예방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제의 운영, 인성검사 실시, 비전캠프 및 그린캠프의 실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치 개선, 자살예방 교관화 교육, 장병사기 및 부대정신 측정 등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전 장병 및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까지 이 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총 903억 원으로 매년 110~1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2015년을 시작으로 예산액이 증가하였다. 2016년 이후에도 꾸준한 예산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표 3-9]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정책 예산

예산년도	예산 (원)
2015년	130억
2016년	153억
2017년	170억
2018년	177억
2019년	182억

출처: 국방부 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2)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외교부)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책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에서 집행하는 정책으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주변국들과의 전략적인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책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정부와 공조대상인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의 주변국들이지만, 외교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정책효과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일반 국민 전체라고 할 수 있다. 북핵 문제는 1993년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지난 20여 년간 진전과 후퇴를 거듭해 온 문제이다. 특히, 2013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북

한 핵위협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주변국들과의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 수준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정책이 시행되었다. 외교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주변국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북핵 문제 협의를 지원하고, 북한 핵문제 대처 및 비핵화 이행검증 사업을 위해 정부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약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3)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통일부)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정책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탈북민에 대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의료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을 통일 미래의 역군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탈북민들에게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복지, 교육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물적·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상에 맞게 개정하여 조금씩 다른 제도를 추가·수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적 지원은 기본적으로 초기 정착금, 주거지원금, 고용지원금, 생계급여, 연금, 학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1세대 당 1-2명의 정착도우미를 지정하여 초기 정착지원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등을 배정하는 등의 인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정책의 수혜자는 탈북민과 그 가족들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들을 돕기 위해 2015년에도 통일부 전체 예산의 54% 정도인 약 1240억 원을 배정하였다.

4) 방위사업 혁신 추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혁신 추진 정책은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에서 집행하는 정책으로, 방위사업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4년 11월, 연일 계속된 비리 적발로 방위사업청장은 '반부패혁신 메시지'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의해 정책이 시작되었다. 정책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방위사업청 및 비리업자이지만 방위사업은 국민의 안보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효과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국민 일반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와 전문화를 위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방위사업법』 제5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과 방위사업청의 내부 훈령인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정책의 시행 이후 부당 비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무기중개상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의 구체적인 개정 또한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방위사업 반부패 혁신추진단의 구성, 부패처벌의 강화, 정보공개의 강화를 정책 추진 초기의 세부목표로 발표한 이후 국무조정실,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방위사업비리 근절과 예방을 위한 구체적 정책들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방사청 직속 방위사업감독관의 신설, 감사인력 확충을 위한 감사2담당관의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 및 기타 세부 정책들이 추가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정책의 내용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는 별도로 2014년 11월 방위사업 정부합동수사단이 구성되어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감사 또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5)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외교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정책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에서 집행하는 정책으로, 동북아 국가 간 연성안보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Trustpolitik)'의 일환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후 순위로 미루고 공통 관심분야의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2014년 10월 제1차 정부 간 협의회를 개최하여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도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후 양·다자 정상 및 고위급 외교를 통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재난관리, 마약, 보건, 환경, 사이버스페이스 등 주요 협력 의제별로 구체적 협력 사업을 진행하였다. 정부 간 협의회 외에도 2014년 7월 한-NATO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세미나, 9월 한-EU 공동세미나, 그리고 10월 동북아평화협력포럼 등 국제 정부-민간 합동 세미나를 다수 개최하여 민간전문가들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협력 가능 분야와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15년에도 NATO, EU, OSCE, ASEAN 등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제2차 동북아 평화협력 회의에는 기존에 비해 참여국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6) 한국형 미사일 체계 및 킬체인 구축사업(국방부)

한국형 미사일 체계(KAMD) 및 킬체인(Kill Chain) 구축사업 정책의 주무부처는 국방부 전력정책관과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으로, 킬체인 사업은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한국형 미사일 체계는 날아오는 미사일의 탄두가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또는 미사일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구비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성공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발성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예산의 규모만큼 정부의 핵심 안보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책의 수혜자는 국민 일반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 시행을 위해 2015년에는 9,300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최근 2016년 예산으로 1조 5,000억 원의 투입이 결정되었다. 또한 2023년까지 계속될 사업에 대하여 총 16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에 있다.

7)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책의 주무부처는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로 2011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존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운영에서 대학이상 학력자가 복무자의 70% 정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이들이 복무만료 후 학업을 위해 퇴사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인력을 제공하는 것에 차질이 생기고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고학력자의 병역이행 수단화로 이용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 현장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는 것과 복무만료 후 지속근무가 가능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위주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와 산학연계 취업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하고 이들 졸업생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편입시키는 내용의 정책으로서 2013년 5월에는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1,048명, 2013년에는 1,801명, 2014년에는 3,530명, 2015년에는 3,498명의 기간산업체 현역 인원을 배정하여 배정인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근거법령으로 『병역법』 제36조를 들 수 있으나, 2014년 12월, 동법 제36조 제4항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및 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에 있어서의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정책의 수혜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된 해당 학력의 졸업자라고 할 수 있다.

8)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외교부)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정책은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국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인명구호 및 재난구호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정책은 『한국국제협력단법』,『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기반으로 범정부 차원의 긴급구호체제를 구축하였다. 상술하면 긴급구호체제에서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하고, 국방부는 긴급구호 인력 및 물품의 수송을 지원하며, 행정자치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보건복지부는 피해국에 파견할 의료지원팀의 선발과 구성, 부상자의 치료 및 해외긴급구호대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국토교통부는 구호인력과 구호물품 수송을 위한 수송수단을 지원하며, 국민안전처는 탐색구조팀의 구성 및 해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은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과 관련한 행정사항, 피해국 현지 구호본부의 설치 및 해외 긴급구호 지원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정책의 시행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부터 예산이 증가하여 약 300억 원에 달하였고, 2015년에는 네팔 지진과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미리 편성된 307억 원에서 96억이 증가한 40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9)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통일부)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 정책의 주무부처는 남북경협과로 이 정책은 남북·유라시아 지역 내 물류망을 구축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재개하고, 경원선을 복원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올해 4월부터 관계부처에서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 플랜'의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5·24 조치 이후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중단된 상태가 지속된 가운데 2013년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추진관련 한-러 사업자간 MOU가 체결되어 2014년 2차에 걸쳐 현지 실사가 진행되었고, 2014년 11월에는 나진-포항 간 석탄 운송이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올해 8월에는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기공식이 개최되어 정책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정책은 크게 남북 단절 구간 복원, 북한 교통 인프라 현대화, 그리고 남북 교통인프라 통합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력 사업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10)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외교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정책은 외교부 유라시아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2013년 서울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구상을 처음으로 제안한 이후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란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만들고, 유라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직·간접적인 개방 압력을 가하게 함으로써 통일의 초석을 닦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라시아 대륙과 끊어진 물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물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륙', 유라시아인들의 창의성과 산업·기술·문화가 융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창조의 대륙', 유라시아 시대의 경제통상과 문화교류를 막는 안보위협을 해결할 '평화의 대륙'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라시아 대륙과 끊어진 물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하나의 대륙'의 축과 연관된 사업만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구상 수준에 멈춰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2015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약 2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04

제4장 분야별 정책평가

10개 정책의 평균은 3.0점으로 전반적으로 3점 내외의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단통법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불공정행위 시정 간에는 0.5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작년의 평가와 비교할 때 그 차이는 줄었으나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과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 간에 눈에 뜨일 정도의 체감 상 차이가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과 그렇지 못한 정책의 특성을 살펴보면 최근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책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1 | 경제정책분야 066
2 | 사회복지정책분야 120
3 | 교육문화정책분야 180
4 | 외교안보정책분야 231

정책평가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일반국민, 정책전문가) 결과와 교수들의 정성평가를 일반국민 설문결과 30%, 정책전문가 설문결과 35%, 교수 정성평가결과 35%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40개 정책에 대한 최종 점수를 산출하였다. 2015년 정책평가 설문조사에는 개별정책에 대한 설문항목 이외에 국민들 삶에 대한 정책의 기여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 등을 묻는 설문항목을 추가하여 정책에 대한 평가,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도의 관계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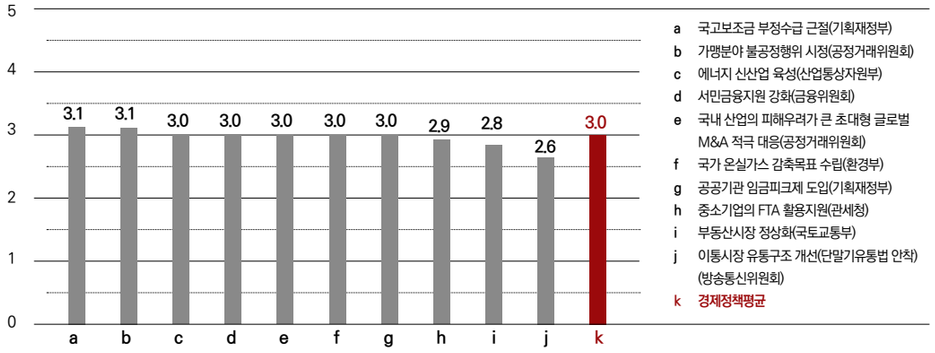
1. 경제정책 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결과 종합

[그림 4-1]은 경제정책 분야의 정책별 설문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보여준다. 10개 정책의 평균은 3.0점으로 전반적으로 3점 내외의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단통법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불공정행위 시정 간에는 0.5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작년의 평가와 비교할 때 그 차이는 줄었으나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과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 간에 눈에 뜨일 정도의 체감 상 차이가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과 그렇지 못한 정책의 특성을 살펴보면 최근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책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재정 건전성 문제에 관련이 있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이나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를 다룬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이 좋은 예이다. 한편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단통법의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줄어든 보조금과 단말기 가격 인상이 낮은 평가를 받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작년엔 볼 수 없었던 통신사들의 요금할인 경쟁이 시작되어 부정적 평가가 작년 보다는 많이 줄어든 편이다. 한편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의 경우 최근의 전세값 및 부동산 시세 급등이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경제정책 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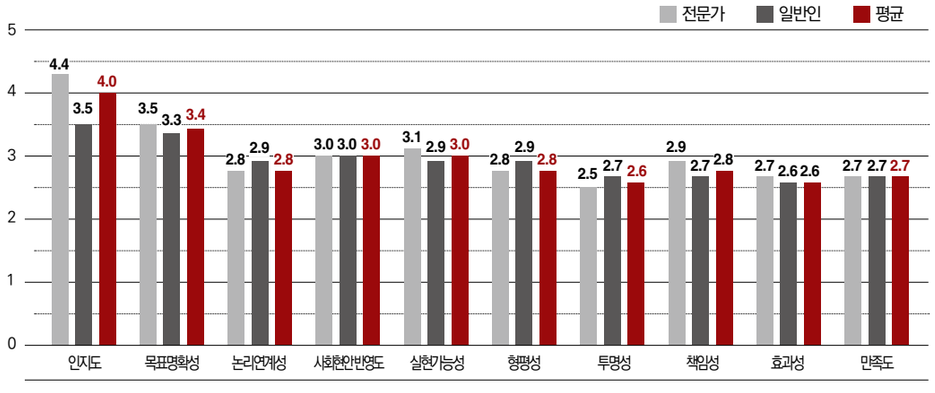


나) 정책별 설문조사 결과

(1)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10%를 상회하는 청년실업률과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이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정책에 대해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년연장 및 청년실업이라는 이중고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게 평가되었다. 전문가는 3.5의 점수를 주었으며 일반인은 3.3의 점수를 주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임금피크제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전문가: 2.8, 일반인: 2.9). 이는 임금피크제의 논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임금피크제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전문가 일반인 모두 동일하게 3.0의 점수를 주어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전문가 집단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일반인 집단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3.1, 일반인: 2.9).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며, 전문가가 일반인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8, 일반인: 2.9).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항목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이다. 특히 전문가는 일반인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본 항목을 평가하였다(전문가: 2.5, 일반인: 2.7).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항목 역시 전문가 및 일반인 모두 비교적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일반인의 평가가 전문가의 평가보다 더욱 부정적이다(전문가: 2.9, 일반인: 2.7).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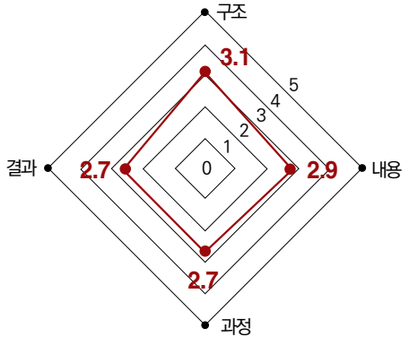
본 항목은 정책의 투명성(민주성) 항목과 더불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이다. 일반인들의 평가가 전문가들의 평가보다 더욱 부정적이다(전문가: 2.7, 일반인: 2.6).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동일하게 비교적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7, 일반인: 2.7).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이 과정과 결과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아직 임금피크제의 확산이 미진하여 본 정책의 결과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은 결국 고령근로자의 고용보장과 청년 고용의 확대 여부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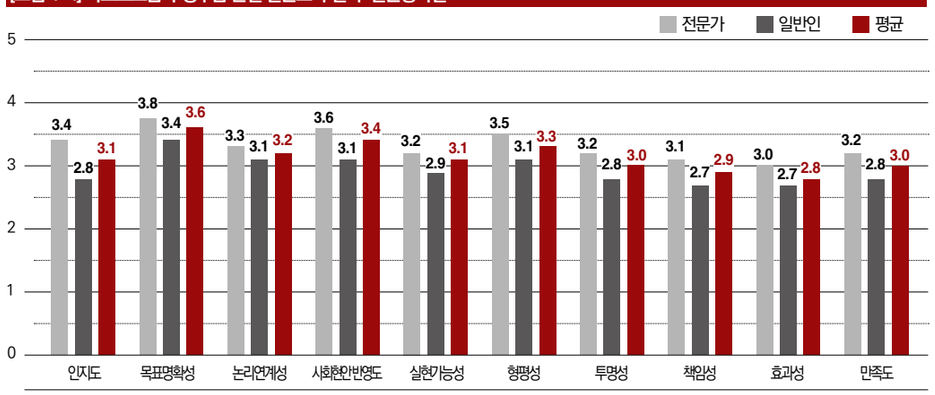
[그림 4-3]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연관되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4점으로 매우 높은 인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인지도는 2.8점으로 낮은 편이다.

[그림 4-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3.8점, 일반인들이 3.4점을 주었다. 이는 평가 대상이 되었던 경제분야 10개 정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문가 그룹에서 정책목표가 명확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은 70%에 달해 다른 정책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비하여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3.3점, 일반인 3.1점으로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긍정 평가의 비율만으로 볼 때 전문가 집단에서는 50% 수준으로 논리적 연계성에 관한 한 10개 평가 대상 정책 중 가장 높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에서도 앞의 패턴이 그대로 이어진다. 전문가 집단의 응답은 3.6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일반인들의 응답은 3.1점에 그친다. 그러나 전문가 일반인 모두 동일하게 10개 평가정책 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사회현안 반영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꼽았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하여 실현가능성 면에서의 평가는 전문가 3.2점, 일반인 2.9점으로 다소 낮은 편이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로 응답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전문가 집단은 본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3.5점으로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일반인의 응답은 이에 비하여 낮은 3.1점 수준이다. 다만 전문가 집단의 평가점수에 비하여 긍정 응답의 비율은 40%로 다소 낮은 편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3.2점, 일반인 2.8점으로 낮은 편이다. 다른 평가대상 정책들과 비교할 때 투명성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본 정책의 성격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3.1점, 일반인 2.7점으로 낮은 편이다. 다른 평가대상 정책들과 비교할 때 책임성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본 정책의 성격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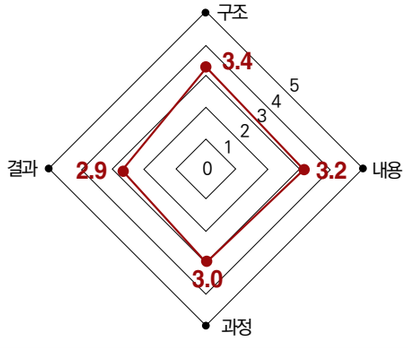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3.0점, 일반인 2.7점으로 9개 평가 영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정책의 효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아직 실행의 초기 단계여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가 3.2점, 일반인 2.8점으로 본 정책의 다른 영역에 비해선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만족도를 논하기엔 이른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이 과정과 결과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아직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향후 계획한 대로 정책이 진행된다면 좀 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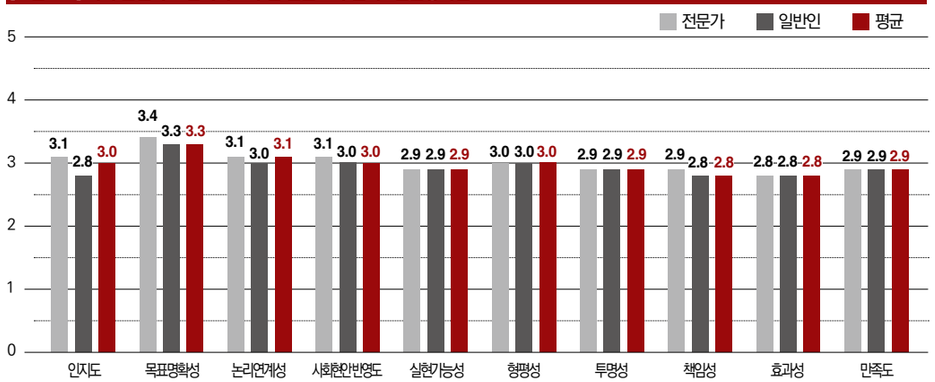
[그림 4-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3)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2020년 이후 신기후 체제 출범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인지도는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더 낮았는데 이는 배출권거래제도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이 주로 산업계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 전체 평가 항목에서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 본 정책의 특징이다.

[그림 4-6]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설문조사 결과 :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으며 전문가들이 일반인들 보다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3.4, 일반인: 3.3).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 있어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항목은 일반인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전문가들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3.1, 일반인: 3.0).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역시 전문가들이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일반인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일반인들의 중립적 의사표현의 이유 역시 해당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전문가: 3.1, 일반인: 3.0).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일반인과 전문가가 모두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전문가: 2.9, 일반인: 2.9).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의 경우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차이는 없었으며, 두 집단 모두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전문가: 3.0, 일반인: 3.0).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항목의 경우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두 집단 사이에서 차이는 없었다(전문가: 2.9, 일반인: 2.9).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항목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전문가들이 일반인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2.9, 일반인: 2.8).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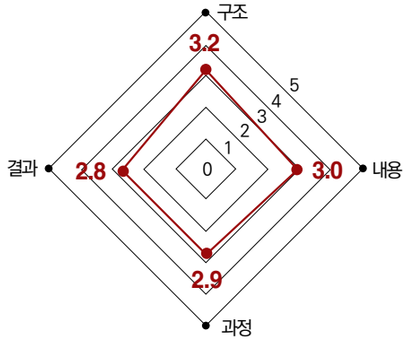
본 정책의 효과성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가장 낮게 평가한 항목이며,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전문가: 2.8, 일반인: 2.8).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의 만족도 역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차이 없이 비교적 낮게 평가하였다(전문가: 2.9, 일반인: 2.9).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 구조의 경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반면 정책 결과와 과정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로는 정책의 대상이 일반 국민보다는 산업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2015년 말에 있을 신기후 협약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의가 결실을 맺고 이에 대해 국내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질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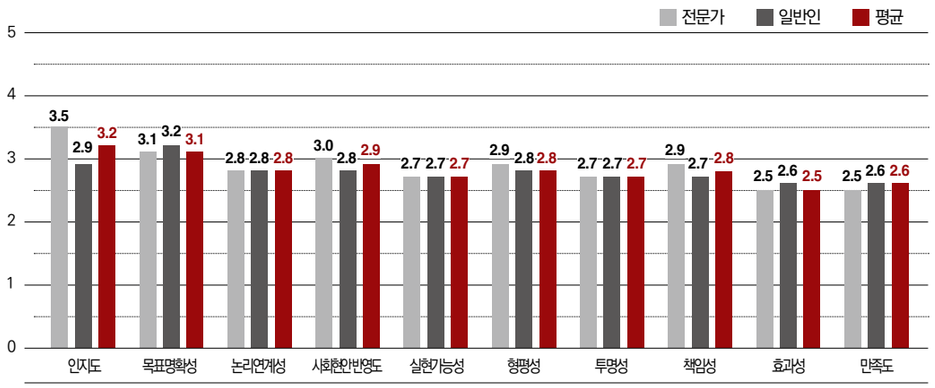
[그림 4-7]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4) 부동산시장 정상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은 일반 국민의 피부와 직접 맞닿아 있는 정책으로 관심도도 높은 편일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뜻밖에 일반인의 인지도가 2.9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는 전체 평가대상 정책 중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에서의 인지도는 3.5점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4-8] 부동산시장 정상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목표의 명확성이라는 측면에서 본 정책은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전문가는 3.1 일반인은 3.2로 평가하여 경제분야 10개 평가 대상 정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본 정책의 내용과 현재 부동산 시장의 괴리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상 최고 수준의 전세값과 부동산 시장의 최근 이상 과열 현상은 본 정책이 도입되던 시점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다 보니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전문가 일반인 그룹 모두 2.8점으로 단통법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의 경우에도 전문가 3.0점, 일반인 2.8점으로 낮은 편인데 이 역시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본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던 시점과는 많이 다른데서 나타나는 괴리현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의 경우에도 전문가 일반인 모두 2.7점의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전문가 일반인 그룹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비율이 22%와 21%로 단통법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 일반인 모두에서 2.9점과 2.8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는 경제분야 평가 대상 정책 중 단통법을 제외하고는 최저 수준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의 경우에도 전문가 일반인 모두에서 2.7점의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다만 투명성 측면에서는 단통법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모두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다소 엇갈렸는데 전문가는 2.9점으로 중간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일반인은 2.7점으로 여전히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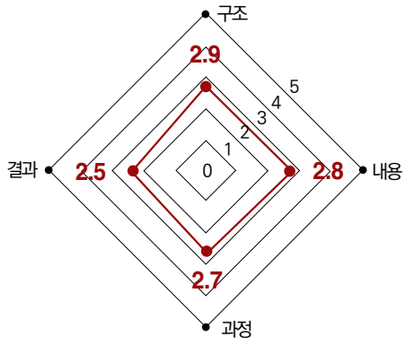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의 평가가 2.5점으로 2.6점을 준 일반인 그룹 보다 특히 낮은 편이다. 전문가 그룹의 긍정 응답 비율은 12%로 8%에 그친 단통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전문가 일반인 모두 2.5점과 2.6점으로 단통법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이 과정과 결과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문가 일반인 모두 본 정책의 결과에 대하여 낮은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면은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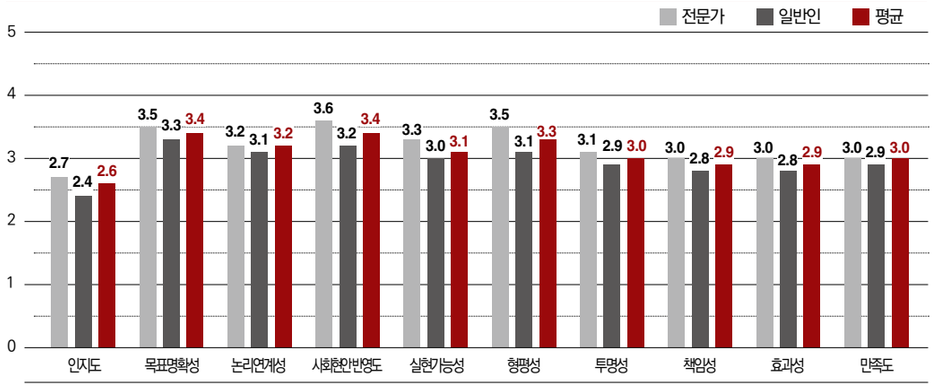
[그림 4-9] 부동산시장 정상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5)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및 일반인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맹분야 불공정행위의 시정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가맹점주 및 가맹희망자에게 제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4-10]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특히 전문가의 평가가 일반인의 평가보다 더욱 긍정적이었다(전문가: 3.5, 일반인: 3.3).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두 집단 사이의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다(전문가: 3.2, 일반인: 3.1).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항목에 대해서 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기할 점으로 전문가의 평가가 일반인의 평가보다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전문가: 3.6, 일반인: 3.2).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항목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평가가 일반인의 평가보다 더 긍정적이었다(전문가: 3.3, 일반인: 3.0).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전문가와 일반인 두 집단 모두 본 항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보다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3.5, 일반인: 3.1).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전문가 집단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반인 집단은 비교적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3.1, 일반인: 2.9).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전문가 집단은 중립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반인 집단은 비교적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3.0, 일반인: 2.8).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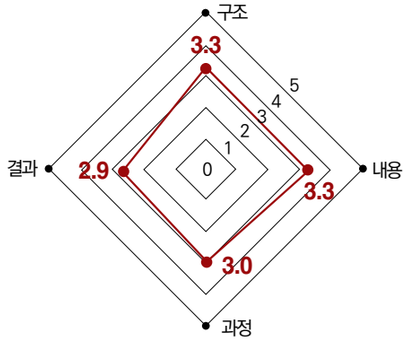
정책의 책임성 항목과 동일하게 전문가 집단은 중립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반인 집단은 비교적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3.0, 일반인: 2.8).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전문가는 중립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일반인은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3.0, 일반인: 2.9).

위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정책의 결과는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정책의 과정은 중립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책 결과의 부정적 평가는 정책 결과가 일반 대중보다는 이해당사자들에게만 확인되는 가시성의 제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정책에 대한 보다 대중적인 홍보가 실시된다면 정책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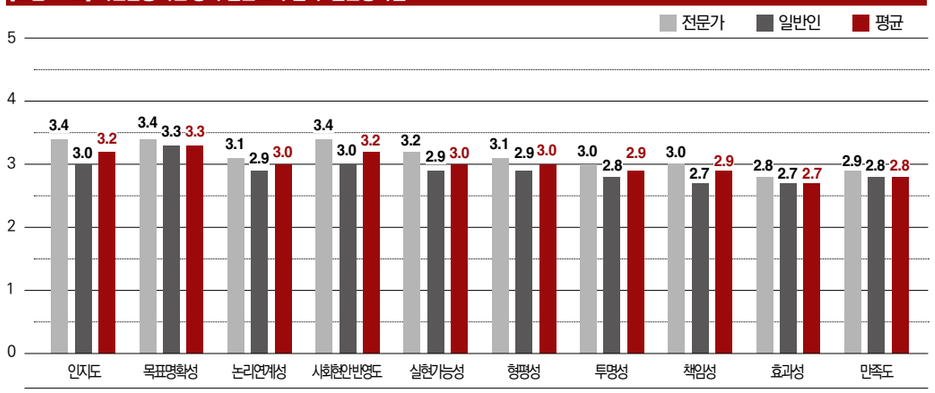
[그림 4-11]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6) 서민금융지원 강화

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책은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3.0점으로 예상 외로 낮은 편이었다. 물론 다른 경제분야 정책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다. 한편 전문가 그룹에서의 인지도는 3.4점으로 경제분야 정책 중 중상위권에 속한다.

[그림 4-12] 서민금융지원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서민들의 자본 접근성을 높여주고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는 비교적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목표의 명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전문가 3.4점, 일반인 3.3점으로 중상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논리적 연계성에 있어서는 전문가 그룹에서 3.1점으로 경제분야 평가 대상 정책 중 중상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일반인 그룹에서는 2.9점으로 중하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에 있어서는 특히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전문가는 3.4점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일반인은 3.0점으로 중간 정도의 평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문가의 경우 긍정 평가의 비율이 54%에 이르지만 일반인은 그 비율이 33.8%에 그쳐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일반인들이 본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한 점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는 전문가 3.2점, 일반인 2.9점으로 전문가 집단이 다소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체 평가 대상 정책 중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다음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일반인들은 중하위권 수준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전문가는 3.1점, 일반인은 2.9점을 주었다. 이는 모두 전체 경제분야 평가 대상 정책 중 중하위권에 속하는데 서민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속성을 고려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역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낮은데 기인하지 않았을까 유추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은 3.0점, 일반인은 2.8점으로 두 집단 모두 중상 정도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평가도 투명성에 대한 평가와 거의 유사한데 전문가 3.0점 일반인 2.7점으로 중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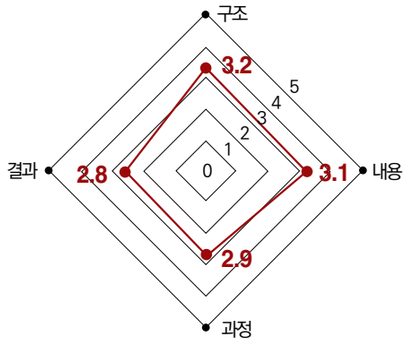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점대의 다소 낮은 수준의 평가를 하였다. 특히 전문가 그룹에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48%로 과반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전문가 2.9, 일반인 2.8로 다소 낮은 수준인데 특히 전문가 그룹의 부정적인 응답 비율은 40%을 넘는다. 본 정책은 상대적으로 결과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편이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이 과정과 결과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 본 정책의 결과에 대하여 낮은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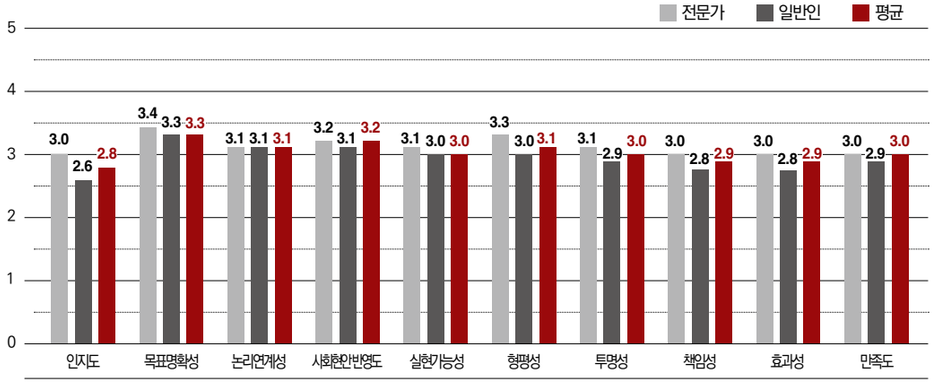
[그림 4-13] 서민금융지원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전문가들이 중립적인 입장이었던 반면 일반인들은 비교적 낮은 인지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본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주로 에너지 산업 부문에 한정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정책 개발과 확산이 아직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4-14] 에너지 신산업 육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가장 높은 평가가 나온 항목이며 일반인보다 전문가들의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전문가: 3.4, 일반인: 3.3).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항목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고 두 집단 사이에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전문가: 3.1, 일반인: 3.1).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전문가가 일반인보다 조금 더 높게 평가하였다(전문가: 3.2, 일반인: 3.1).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는 일반인은 중립적인 평가였고, 전문가들의 경우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3.1, 일반인: 3.0).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의 경우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차이가 가장 뚜렷했던 항목이며 일반인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3.3, 일반인: 3.0).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항목은 전문가들이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일반인들은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여 평가가 나뉘었다(전문가: 3.1, 일반인: 2.9).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항목의 경우 전문가들의 경우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고, 일반인들은 비교적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3.0, 일반인: 2.8).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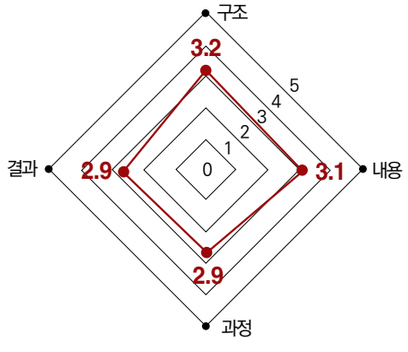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평가가 다소 달랐는데 전문가들은 중립적인 입장이었고, 일반인들은 본 정책의 효과성을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3.0, 일반인: 2.8).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전체적인 정책의 만족도는 전문가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일반인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전문가: 3.0, 일반인: 2.9).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선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의 전체 항목에 있어서 일반인보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일관되게 더 높게 나왔는데 이는 본 정책의 수혜 집단이 주로 산업계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전문가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 구조와 내용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정책의 과정과 결과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향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홍보된다면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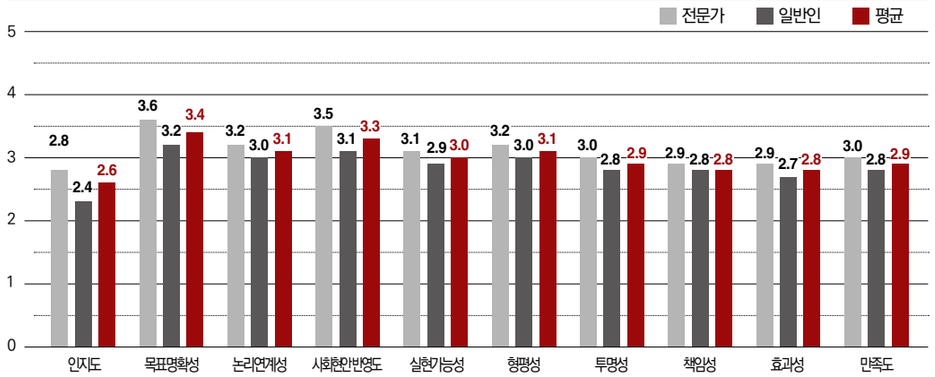
[그림 4-15] 에너지 신산업 육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8) 국내 산업의 피해우려가 큰 초대형 글로벌 M&A 적극 대응

본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본 정책이 각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산업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이상 글로벌 M&A의 움직임은 물론 국내적 영향에 대해 쉽사리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이사항으로는 모든 항목에서 전문가가 일반인보다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역시 본 정책의 이해를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6] 국내 산업의 피해우려가 큰 초대형 글로벌 M&A 적극 대응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항목은 평균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전문가 및 일반인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3.6, 일반인: 3.2).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일반인들은 중립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3.2, 일반인: 3.0).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항목 역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전문가: 3.5, 일반인: 3.1).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이견을 보인다. 전문가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반인들은 비교적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3.1, 일반인: 2.9).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항목과 동일하게 본 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일반인들은 중립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3.2, 일반인: 3.0).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일반인들은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3.0, 일반인: 2.8).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항목은 인지도 항목을 제외하고 정책의 효과성 항목과 함께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본 항목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9, 일반인: 2.8).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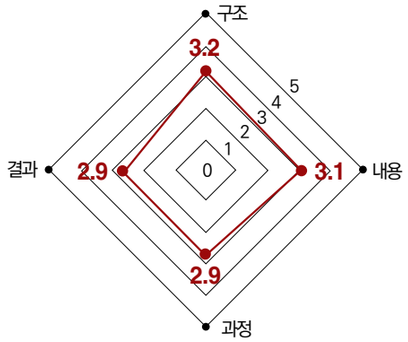
본 항목은 인지도 항목을 제외하고 정책의 책임성 항목과 함께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본 항목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그 차이는 정책의 책임성 항목보다 크다(전문가: 2.9, 일반인: 2.7).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중립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일반인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전문가: 3.0, 일반인: 2.8).

위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으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부정적이다. 이는 본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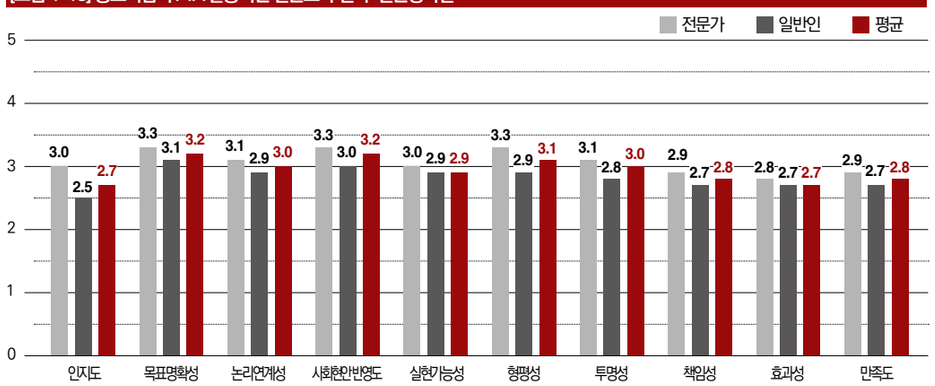
[그림 4-17] 국내 산업의 피해우려가 큰 초대형 글로벌 M&A 적극 대응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9)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정책 인지도 수준이 전문가 3.0점, 일반인 2.5점으로 경제분야 평가 대상 정책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그림 4-18]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중소기업이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전문가 3.3점, 일반인 3.1점의 평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목표의 명확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특히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전문가 28%, 일반인 23.6%로 단통법을 제외하고 제일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논리적 연계성도 전문가 3.1점, 일반인 2.9점으로 낮은 편이다. 전문가 집단의 응답은 중간 정도인데 비하여 일반인의 경우 단통법을 제외하고는 제일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는 전문가 3.3점, 일반인 3.0점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의 평가는 경제분야 평가대상 정책 중 중간 수준이었으나 일반인들의 평가는 최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본 정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특히 낮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는 전문가 3.0점, 일반인 2.9점으로 경제분야 평가대상 정책 중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3.3점으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반인들은 2.9점으로 중하위권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의 부정적인 응답 비율은 부동산 활성화와 단통법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있어서는 전문가 3.1점, 일반인 2.8점으로 경제분야 정책 중 중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서도 투명성과 마찬가지의 패턴이 관찰되는데 전문가 2.9점 일반인 2.7점으로 경제분야 정책 중 중하위권 수준을 보이고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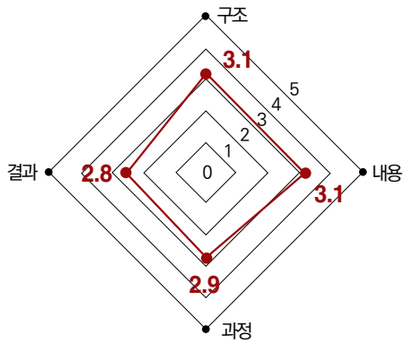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전문가 2.8점, 일반인 2.7점으로 다소 낮은 편이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17.2%로 단통법을 제외하고는 제일 낮은 수준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는데 전문가 2.9점 일반인 2.7점으로 다소 낮은 편이고 일반인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20.8%로 단통법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이 과정과 결과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다른 정책들과 달리 일반인 집단에서 본 정책의 결과에 대하여 낮은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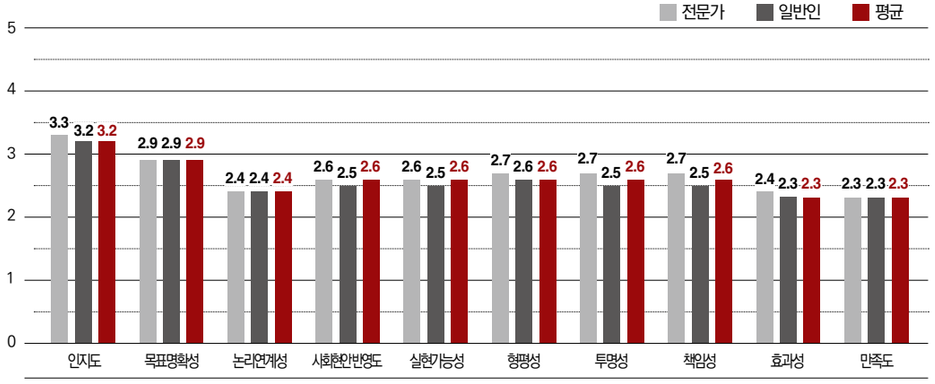
[그림 4-19]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0)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단말기유통법 안착)

단통법에 대한 인지도는 예상외로 낮은 수준이었다. 전문가 3.3, 일반인 3.2로 경제분야 평가대상 정책 중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 작년의 경우 단통법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관심과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인해 인지도가 매우 높았으나 올해엔 작년 보다 관심 수준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인지도도 함께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0]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단말기유통법 안착)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단통법은 서비스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시킨다는 나름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의 명확성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9점으로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전문가 일반인 모두 2.4점으로 역시 경제분야 정책 중 최하위로 평가되었다.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조금 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바로 이 '수단'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한 낮은 평가도 보조금 규제라는 수단이 지나치게 부각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에서도 전문가(2.6점) 일반인(2.5점) 모두 최하위의 평가를 하고 있다. 단통법은 경제분야 정책 중 유일하게 사회현안 반영도에서 2점대의 평가를 받았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이어지는데 전문가 2.6점, 일반인 2.5점으로 경제분야 정책 중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형평성 측면에서도 전문가 2.7점, 일반인 2.6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본 정책의 취지 중

하나가 보조금의 차별을 없애고 누구나 투명하고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이러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정책의 취지를 거의 실감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투명성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평가가 2.7점으로 일반인의 평가인 2.5점보다 다소 높았다. 전문가 평가에서는 드물게 최하위를 면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책임성에 있어서도 전문가 2.7점, 일반인 2.5점으로 다소 차이가 났으나, 여전히 전체 경제분야 정책 중 최하위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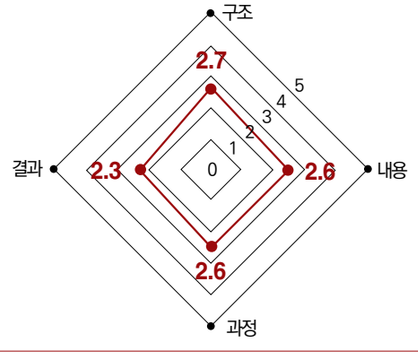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서는 전문가가 2.4점, 일반인이 2.3점을 부여하였는데, 특히 전문가 집단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이 8%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가 일반인을 통틀어 긍정 답변의 비율이 유일하게 한자리수를 보이고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만족도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이다. 전문가 일반인 모두 2.3점을 받았는데, 특히 전문가 그룹의 긍정 답변은 8%로 한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다른 정책들과 비교할 때 눈에 띌 정도로 큰 격차이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이 과정과 결과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문가 일반인 모두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작년과 비교할 때 이통사 서비스 경쟁 촉발 등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책 결과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림 4-21]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단말기유통법 안착)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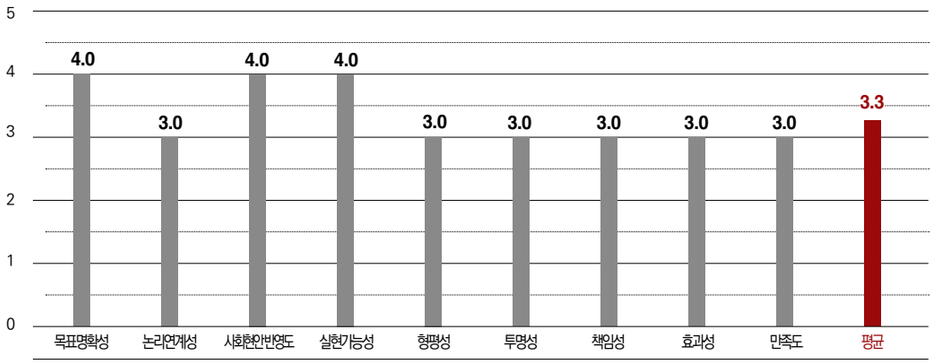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가) 정성평가 결과

(1)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그림 4-22]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임금피크제로부터 기대되는 실질적인 효과와는 별개로 임금피크제가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실업 문제라는 딜레마의 해결을 목표로 입안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정책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는 정책 자체에 대한 내재적 평가라기보다는 평가자의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비롯한 환경적이고 맥락적인 평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기업이 사내보유금을 투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정년연장의 문제와 상관없이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임금피크제의 논리적 연계성은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연계성이 비교적 낮게 평가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3포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실업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큰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전쟁으로 묘사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의 지속적 증가 및 고령인구 부담의 증가는 결혼 및 출산율의 저하, 일할 의욕의 상실 등을 야기하며 사회 및 경제의 재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임금피크제의 실현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5년 11월 현재 91.7%의 공공기관과 62%의 30대 기업 계열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높은 평가는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예산 및 인사가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할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사실과 정부의 강력한 임금피크제 도입 의지의 표명에 비추어 볼 때, 실현가능성에 대한 높은 평가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라 볼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평가는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과 동일한 수준의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항목에서 언급했듯이, 형평성에 대한 평가는 정책의 내재적 완결성보다는 정책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평가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 해결에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채용의 주체인 기업이 아닌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부정적이라 볼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임금피크제의 투명성은 평가된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공공기관이라는 대상의 특성상 정부의 단독적인 진행이 가능하며 따라서 임금피크제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고령 근로자들의 입장이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될 기회가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민간기업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꾀하는 정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낮은 정책 투명성 평가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암시하고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평가 역시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및 정책의 형평성과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정책의 책임성은 임금피크제로부터 비롯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한 평가라 볼 수 있다. 즉, 임금피크제가 청년채용의 증가라는 순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의 주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본 항목의 평가는 임금피크제에 그러한 대책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려졌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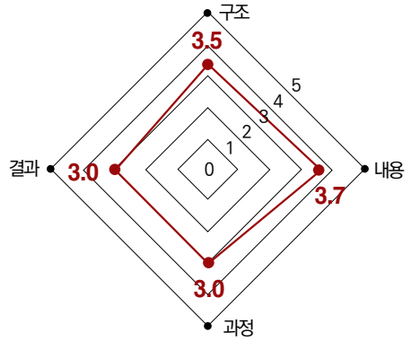
본 항목은 정책의 투명성 항목과 더불어 가장 낮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이라는 연결고리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의 부족함이 이러한 낮은 평가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물론 '상생고용지원금'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은 높게 평가되어야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본 항목에 대한 평가의 결과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항목은 위에서 고려한 여러 항목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볼 수 있다.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낮게 내릴 수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만족도는 임금피크제가 내세운 목표,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실업의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얼마만큼 조화롭게 잡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해결의 핵심 고리는 바로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의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2016년 약 4211개의 공공기관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의 청년실업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작은 수치에 불과하다. 물론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경제계 전반의 임금피크제 확산과 이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만족도는 본 정책에 대한 민간기업의 반응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 민간기업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재원이 신규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이러한 재원이 정말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투명하고도 명확한 모니터링 절차 구축이 임금피크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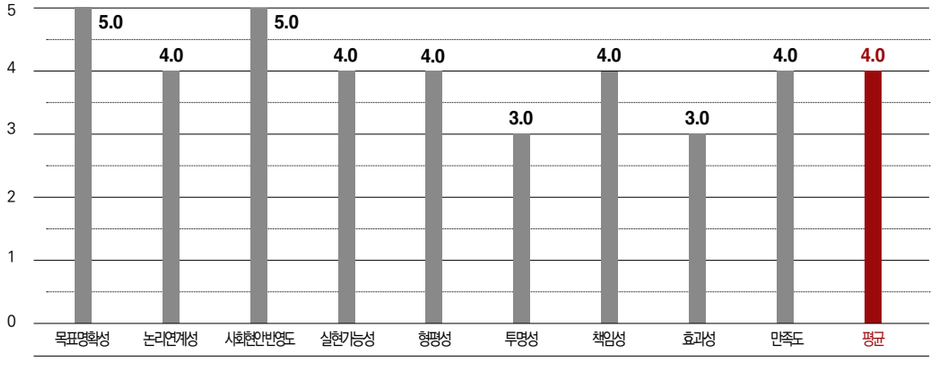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자면, 임금피크제에 대한 구조 및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획득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는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특히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정책자체의 완결도 보다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4-23]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그림 4-2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국가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고보조금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흔히 "눈먼 돈"으로 간주되는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조금 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재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좀 더 광의의 목적의 측면에서는 단순히 부정수급의 근절보다 좀 더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국고보조사업 중에는 꼭 필요한 사업도 있으나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도 존재하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도 존재한다. 이런 사업들을 걸러내는 장치가 보조사업 평가인데 평가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조사업 평가 결과의 사후조치 내용 조사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에 폐지 평가를 받고도 이듬해 예산이 유지된 사례가 8건에 달했다(이주영. 2011). 특히 올해(2015년) 평가에서는 평가 대상사업 중 51.6%(734개)만을 정상추진으로 판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감축 및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이정희, 2015).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보조사업 평가 결과의 적극적인 활용도 통합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매년 감사원 감사에서 수천억 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문제, 재정건전성 문제 등이 공공부문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회현안을 다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방지시스템 구축 외에 보조사업 심사 평가 강화, 보조사업자 감시 감독 및 벌칙 강화, 사후관리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와의 협력체계가 어떻게 구축될 것인가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현장에 보다 가까이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정부에서 본 정책의 의도한 효과가 보다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수혜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일반 국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형평성이라는 면에서 어느 특정 집단에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는 부분은 관찰되지 않는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의 성격이 상당히 규범적이어서(보조금 새는 곳을 줄이고 부정수급자 막자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음) 일반적으로 정책 과정에 요구되는 투명성/민주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 운영지침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노력은 평가할만 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의 성격이 상당히 규범적이어서(보조금 새는 곳을 줄이고 부정수급자 막자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음) 일반적으로 정책 과정에 요구되는 책임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및 폐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저항이나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업추진 주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좀 더 충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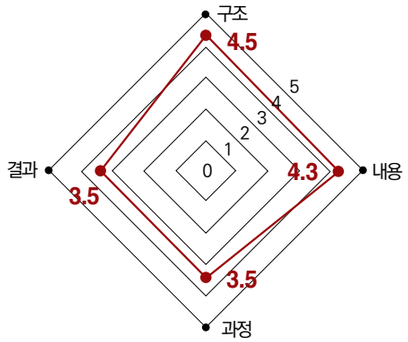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본 정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정책의 효과성을 논하기 어렵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에서 본 정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대로 시행되어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한다면 그 파급력이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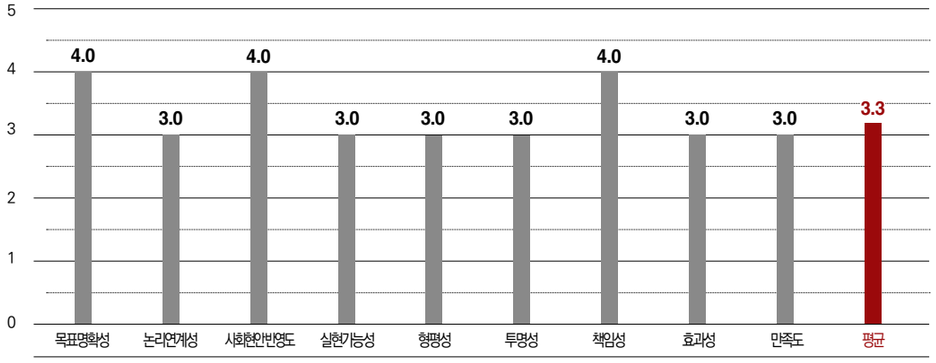
정책의 목적과 수단의 논리적 연계,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등 정책의 전반적인 구조와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한 수준이다. 아직 본격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단계이므로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정책이다.

[그림 4-2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3)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그림 4-26]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2013년 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있었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제19차 당사국총회(COP19)의 결과에 따라 모든 국가들이 2015년까지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자 2014년 2월부터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논의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 우리 역할과 국내 산업계의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여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매우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의 경우 국제사회와 국내 산업계 사이에서 양립하기 힘든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기반한 정책이다. 해외 감축분에 대한 인정 등 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계에서는 현 수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목표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동시에 국제 사회의 평가 역시 2030년 배출전망치(BAU)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의 감축 목표가 OECD 회원국에 걸맞지 않은 낮은 수치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본 정책이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책대안에서 이를 충분히 다루어야만 본 항목에서 평가결과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기후변화에 대한 교토 체제가 종결되고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2015년 말 프랑스 파리 당사국 총회(COP21)에서 도출될 예정이다. 본 정책은 이에 앞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사회현안 반영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 볼 때 적실성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21차 파리 당사국 총회의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와 연계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신기후체제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여부와 국내 여론의 동향에 따라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가 여러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책 실현가능성이 매우 유동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 항목에서는 산업 부문의 부담과 비산업 부문의 부담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감축목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의 감축률을 12%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송이나 건물 등 비산업부문에서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비 산업부문에 대한 감축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산업 부문과 비산업 부문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본 항목의 평가에 고려되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의 경우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몇 가지 대안을 염두에 두고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차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점은 본 항목의 평가에서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볼 때 정책의 직접적인 관련 집단 그 어느 쪽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향후 신기후체제의 국제 협약이 도출되는 결과에 맞추어 국내에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항목은 정책목표의 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와 함께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이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국내 송도 유치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 약속했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의 생산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평가된 결과이다. 그러나 정책의 책임성이 더욱 담보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효과도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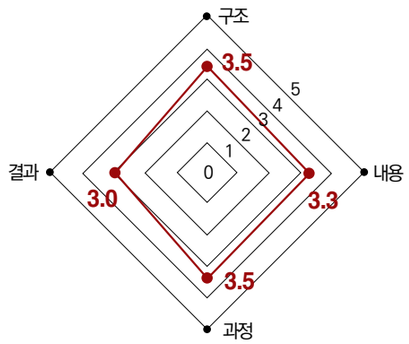
본 항목의 평가는 앞선 항목 중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매우 유사한 맥락이다. 국제사회의 합의 도출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이 매우 유동적이며, 정책의 효과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합의 결과와 상관없이 국내의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일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중간 정도의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충분히 예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축 목표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 움직임은 정책 추진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분야의 우리 위상을 고려할 때에도 감축 목표가 크게 도전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향후 신기후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도출된 후에는 대국민 홍보 활동도 필요해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더욱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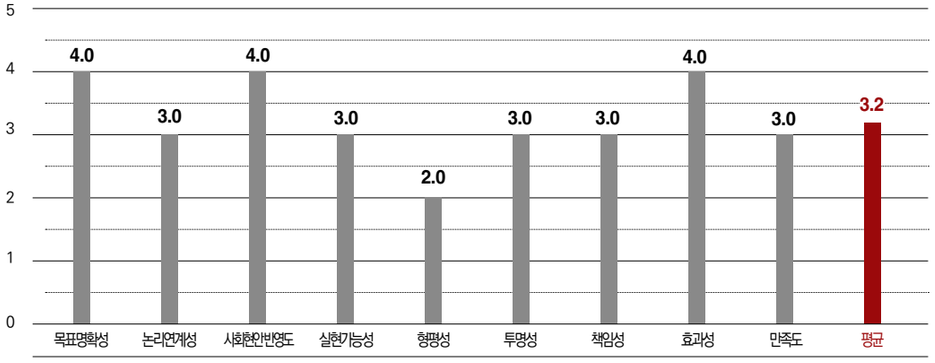
본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정책의 구조와 내용, 과정 측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정책의 결과 측면에서는 향후 국제사회의 합의 도출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유동적인 측면으로 인해 중간 수준의 평가가 내려졌다.

[그림 4-27]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4) 부동산시장 정상화

[그림 4-28]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라는 대체로 뚜렷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만 본 정책이 시작된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013년 4.1대책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2013년은 아파트 거래의 비수기인 8월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지난 10년간 가장 적었던 2012년의 다음해이다. 즉 부동산시장이 동맥경화에 걸렸다는 진단이 계속되었던 시점에 거래활성화를 목적으로 등장한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본 평가가 시행된 2015년 8월 거래량을 보면 2012년의 3배 수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미 정책이 의도했던 소기의 성과를 넘어 과열 수준으로 접어들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태성·김인호, 2015 & 김수현, 2015).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2013년 4.1대책 이후로 발표된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은 부동산 정책을 거의 총망라한 백화점식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안에는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율 인하 등의 세금 관련 내용에서부터 리모델링 연한 단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 공급 관련 내용까지 매우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소 우려되는 부분은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 지나치게 포괄적인 정책수단이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쉴러(로버트 쉴러, 2005) 교수도 지적했듯이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함께 합리성이 아닌 감정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장이다(우성문, 2015). 거래 활성화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경우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나치게 강한 개입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자칫 실수요 뿐 아니라 저금리 시대에 갈 곳을 잃은 자금의 투자수요를 촉발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실제로 최근의 부동산 시장 동향에서는 이러한 조짐이 보인다) 좀 더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집 문제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주택시장 침체와 이와 연관된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문제점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본 정책은 중요한 사회현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시장과 관련된 현안을 단순히 주택거래 활성화라기보다 이를 통한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거래 활성화가 지나쳐서 오히려 국민 주거복지를 저해할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이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앞서도 언급했듯이 본 정책은 부동산 관련 정책 수단을 백화점식으로 총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래 활성화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지 않을까를 염려해야 하는 수준인데,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모자란 처방도 문제이지만 지나친 처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 중의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정책효과가 발현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처방이 시행되고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후속 대책이 발표되다 보니 발표된 정책 수단이 쌓이게 되고 기대한 효과 이상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 활성화가 지나치게 이루어져 다소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재건축 활성화로 이어져 멸실 증가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 부담을 짊어지게 된 주거 서민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정책의 내용에도 전월세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전월세 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통한 전월세 가격 안정 도모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주거 약자들의 단기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 등 단기적인 처방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은 업계, 학계, 민간 자문가와 지자체와 협의하여 여러 차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월세 대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거 약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도 업계, 학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의견 수렴의 통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의 책무성은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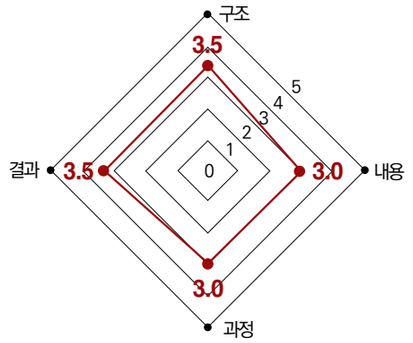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본 정책은 보기 드물게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도가 다소 지나쳐서 시장 과열을 염려해야 할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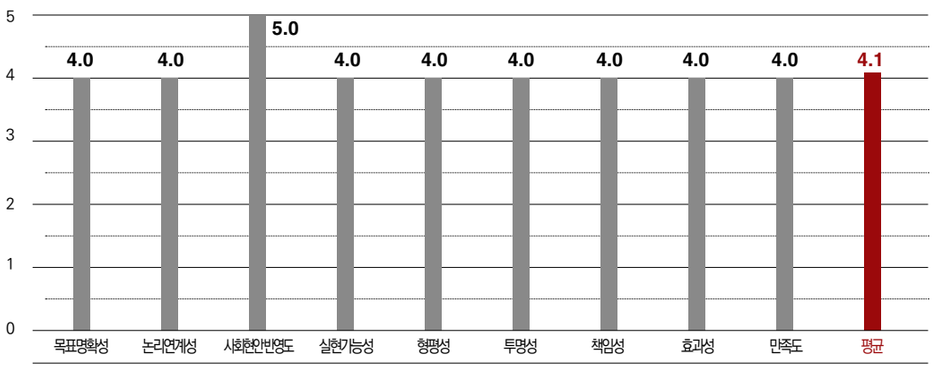
백화점식 정책은 자칫 과유불급(過猶不及)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상당 수준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대책에 소홀했다는 부분과 지나치게 많은 정책 수단을 백화점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29]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5)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그림 4-30]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정책의 목표는 매우 명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의 정책의 개요에서 설명되었듯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은 법, 제도의 정비는 물론 실질적인 감시활동의 강화, 적극적인 정보의 전달, 그리고 정기적인 피드백의 실시 등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입체적인 정책 실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매우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역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입체적인 정책의 설계는 제도적 측면과 실행적 측면의 간극을 줄이는 데에 일조하고 있으며, 특히 이해당사자가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보다 유기적인 정책논리를 입안,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항목은 매우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소위 '갑-을 문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사회현안 반영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본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안 반영도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이해당사자가 아닌 이상 본 정책에 대해 낮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는 시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이 보여주듯이 이해당사자를 초점으로 하는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 역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이 이해당사자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큰 비용 없이 시행할 수 있음에 기인한다. 또한 본 정책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들에게 먼저 접근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불공정행위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또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 역시 높게 평가내릴 수 있다. 특히 가맹본부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가맹점주 및 가맹희망자들의 정보비용을 낮추는 형식의 정책 방식은 높은 평가가 마땅해 보인다. 또한 정기적인 피드백의 실시는 가맹점주 및 가맹희망자들이 정책시행자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접촉 및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정책 형평성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 역시 비교적 높게 평가내릴 수 있지만 그 평가의 수준은 정책의 내용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 이러한 결과는 정기적인 정책 피드백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공개 등의 투명성강화를 위한 과정을 실시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과정 자체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 자체를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은 효과성과 더불어 인지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전문가의 평가는 비교적 높은 반면 일반인의 평가는 낮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가맹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결에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며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 과정의 참여 역시 전문적 지식이 일정 정도 요구되는 특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정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홍보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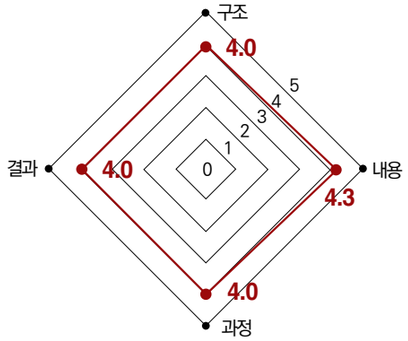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 역시 비교적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성 역시 전문가들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린 반면 일반인은 낮은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정책의 결과가 이해당사자, 즉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가시적이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2014년 실태점검 결과 평균 위약금 부과금액이 33.4%, 매장리뉴얼 실시 건수가 11% 감소하였으며, 심야영업 시간단축이 대부분 허용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제공비율이 각각 98.5%, 89.2%, 78.1%로 나타나는 등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에 대한 대중적 홍보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항목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의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정책의 결과와 효과가 이해당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가시적인 특성을 고려해 보면,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홍보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홍보는 불공정행위에 따르는 비용이 높음을 대중들에게 인지시킴으로써 불공정행위 발생의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도 일조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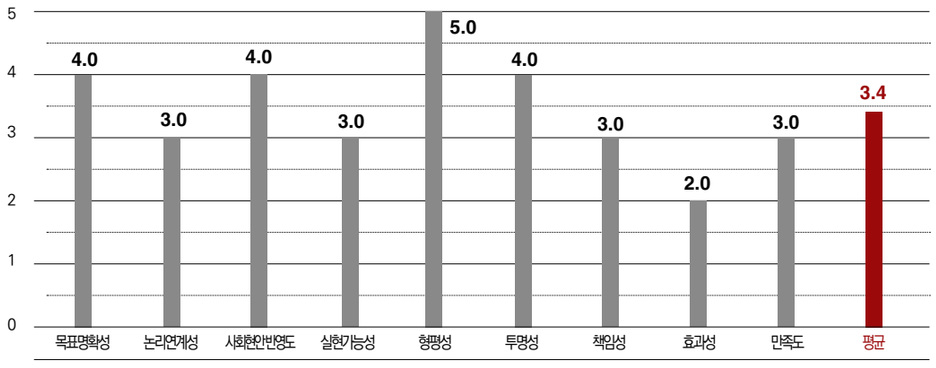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자면,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에 대한 구조 및 내용적 측면은 물론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도 대체로 높은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1]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6) 서민금융지원 강화

[그림 4-32] 서민금융지원 강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서민금융 공급확대와 과중채무자 채무조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서민금융 기능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등 저신용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의 확대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의 인하이다. 그런데 전자의 서민금융상품은 종류도 많고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 생업에 매인 실제 저소득층 수요자들이 필요 정보를 찾기 어려워 그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결실을 못보고 있다. 서민 금융상품 확대라는 수단이 의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선 현재의 공급자 위주 시스템을 수요자 위주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같은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문제도 크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고금리를 5% 낮췄다고 하나 여전히 30%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를 지불해야하므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금융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전통적인 서민금융기관이 위축되고 우량금융 위주로 금융시장이 재편되면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이들 계층의 상당수가 사설 대부업체에 의존하게 되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본 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정책은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된 면이 없지 않다. 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수요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지나치게 분산되어 제공되므로) 의도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낮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융약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은 저신용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다만 서민금융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이나 교육 등 복지로 접근해야함에도 대출로 해결하도록 하는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주택이나 교육 분야의 복지가 충분치 못한 것이 일차적인 이유겠으나 이와 같이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현장방문 및 수요자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 수렴 대상이 주로 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었고 실제 정책수요자인 저신용 저소득 계층으로부터 어떠한 의견수렴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명확치 않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서민금융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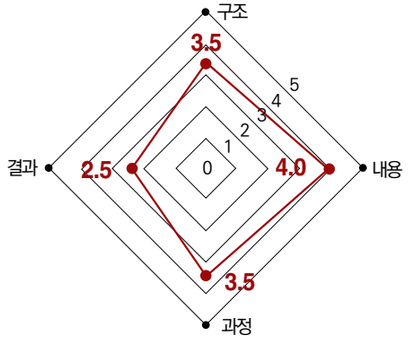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서민금융 지원 확대는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비용을 낮추어줄 수는 있으나 이들 계층의 부채경감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기는 어렵다. 소득증가가 병행되지 않으면 금융 문턱이 낮아짐으로 해서 오히려 부채의 악순환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서민 금융 확대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정책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 소득증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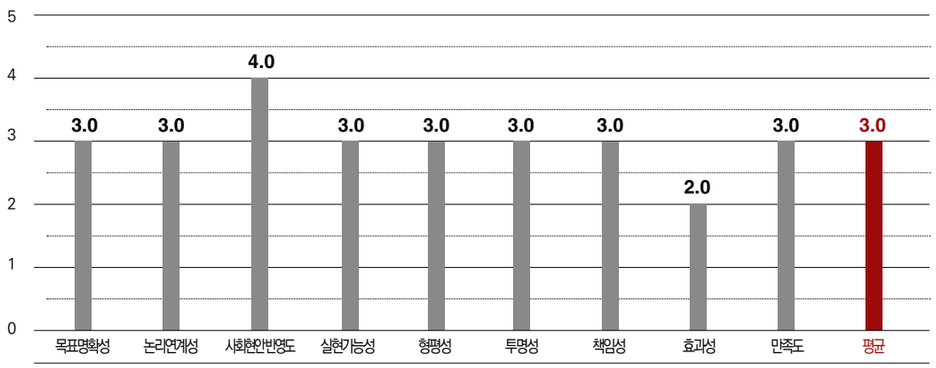
저신용 저소득 계층이 느끼는 당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며 그런 의미에서 평가받을만하다. 다만 그 효과는 진통효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저소득층 부채 문제를 대출 문턱을 낮추는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통제는 일시적인 처방이지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그림 4-33] 서민금융지원 강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7) 에너지 신산업 육성

[그림 4-34]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은 2020년 이후 출범 예정인 신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에너지 분야에서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탄소 배출을 줄임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저탄소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위기 요인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산업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기존의 에너지 산업구조를 과감하게 전환하여 저탄소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신산업을 발굴하여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는 매우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2015년 11월에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통해 볼 때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에 있어서 정책 목표와 대안 사이의 연계성 역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본 정책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조한다면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창의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에너지 산업 전반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융합적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 융합의 중심에 에너지 산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점은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존 조직을 개편하여 2015년 7월 '에너지 신산업 정책단'을 출범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비록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기는 하나 본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정책 실현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는 해당 정책이 다소 미흡해 보인다.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지원 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항목의 경우 신산업 육성 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균형감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정책 역시 그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자생적인 시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중소기업의 구조적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한 다양한 유인책이 함께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에 본 항목의 평가는 중간 수준에 그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 개최, 국내 다양한 투자기관으로 구성된 '에너지 신산업 투자협의회' 설립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점은 본 항목의 평가에서 높이 고려될 만하다. 그러나 정책 추진의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본 정책의 낮은 인지도는 아직도 정책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미흡한 점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 역시 정책의 형평성과 유사한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다. 에너지 산업의 경우 기후변화 대책과 함께 현재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이 때 정부의 역할은 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즉 정부 정책의 보다 선도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정책의 경우 자칫 단발적인 지원 정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책임성 확보 항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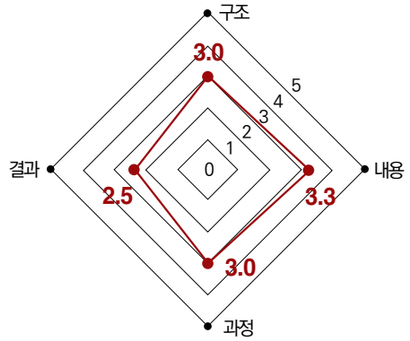
본 정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기회 요인으로 생각하여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단기적인 효과성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에너지 산업 구조의 전환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를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정책의 확산을 추진한다면 그 효과성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추진력은 홍보와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 만족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비교적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지원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가 관건이 될 수 있지만 에너지 프로슈머, 저탄소 발전, 전기자동차, 친환경 공정 등의 분야는 사회적으로도 그 파급효과가 상당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 정책에 있어서 핵심 중점 분야를 잘 선별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책의 만족도와 효과성 역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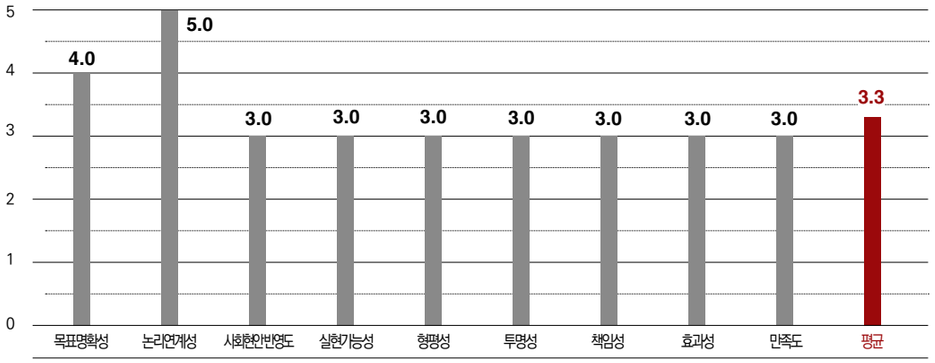
본 정책의 전체적인 평가를 볼 때, 정책의 구조와 결과 측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정책의 과정에서는 현재 정책 추진의 초기 단계인 점이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4-35]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8) 국내 산업의 피해우려가 큰 초대형 글로벌 M&A 적극 대응

[그림 4-36] 국내 산업의 피해우려가 큰 초대형 글로벌 M&A 적극 대응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목표는 매우 명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M&A라는 외부적 충격에 대하여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의 목표는 수혜집단과 손해집단을 명확하게 나눌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을 광의의 수혜집단으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의 선명성이 뚜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사실상 국내 산업이 글로벌 M&A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실상 국내 시장 활동의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만이 글로벌 M&A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할 통로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시장경제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은 국제적인 분쟁을 피하면서 효과적으로 국내 산업을 글로벌 M&A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 역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산업분야가 부품 및 장비의 수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글로벌 M&A의 악영향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더불어 국민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 및 산업의 구조적 취약점을 반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 역시 비교적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정책이 효과적으로 글로벌 M&A로부터 국내 산업의 피해를 보호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가 예측되는 업계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에 참여할 유인이 충분해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 역시 비교적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사실상 본 정책으로 인한 손해집단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은 다른 정책과는 달리 국내적 갈등을 일으킬 여지를 제공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 역시 비교적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 평가의 수준은 정책의 내용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 전문가 및 일반인 평가에서 일반인들의 평가가 전문가보다 낮은 편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본 정책을 통해 얻게 되는 소비자의 후생이 다소 불명확하며 소비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정책의 참여과정은 해당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므로 정책의 결정과정 참여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특성 역시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은 효과성과 더불어 인지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본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참여에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며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결과에 따른 책임을 쉽게 평가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정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홍보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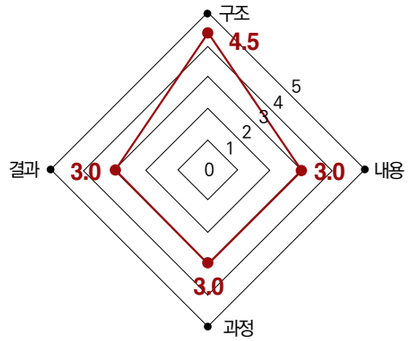
본 항목은 정책의 책임성과 더불어 가장 낮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주목해 볼 점은 이러한 이 정책의 보호하는 산업분야는 국내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주도적인 구매자 혹은 판매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2015년 본 정책을 통해 AMAT-TEL간 합병심사를 통해 국내 반도체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글로벌 M&A를 철회시킨 바 있으며 또한 MS-노키아 휴대폰 제조부문 인수 역시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계의 피해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정책은 이처럼 국내 산업분야가 세계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에만 그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세계시장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결여한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그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항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통 수준의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정책의 인지도가 낮기도 하며 또한 일반 대중들이 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에서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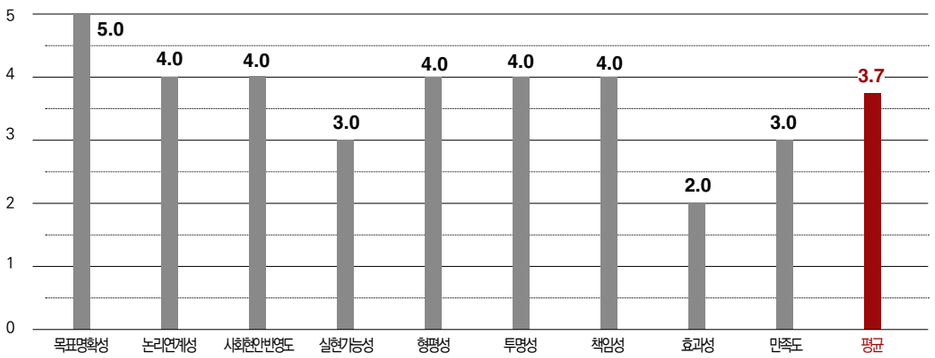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적 평가결과를 요약하자면, 이해에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정책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반면, 그 합리성과 효과성의 판단에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정책의 결과와 과정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37] 국내 산업의 피해우려가 큰 초대형 글로벌 M&A 적극 대응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9)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그림 4-38]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FTA 시대에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뚜렷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세관에 공익관세사를 배치하여 인증, 검증 대비 사전 진단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을 평가할만하다. 특히 유효성 논란이 있었던 기존의 백화점식 컨설팅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으로의 전환은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우리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이다. 무역의존도는 100%에 이르고 전체 무역액은 세계 10위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는 피할 수 없는 길이고, 따라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규모별 FTA 수출 활용률을 살펴보면 2015년 현재 대기업 79.3%, 중소기업 63.9%로 아직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정진욱, 2015). 또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규모를 보면 대기업은 50-60%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은 20-30% 증가에 그쳤다(정지영, 2015). 이러한 사례들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세계시장 진출 문제와 FTA 활용은 중요한 사회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은 중요한 사회현안을 다루고 있고 이해관계자의 상충된 이해도 크지 않으며, 뚜렷한 목표와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어 다른 정책보다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 부분이다. 관세청에 의하면 본 사업의 예산은 3년째 12억 3천만 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정진욱, 2015). 게다가 지원 기업수도 2011년에는 734개였으나 2014년에는 574개로 오히려 줄었다. 물론 2012년부터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예산 규모가 정체된 상황에서 지원 기업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원래 의도한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지와 예산 배정이 요구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주요 타깃은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라는 의도한 효과를 위해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담당자들의 실무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세관 방문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지역거점을 정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기업담당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세관에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익관세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중소기업의 FTA 관련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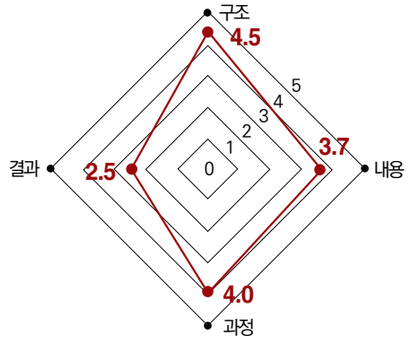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본 정책은 의미 있는 정책목표를 가진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이 아직 의도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 정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경험한 기업들로부터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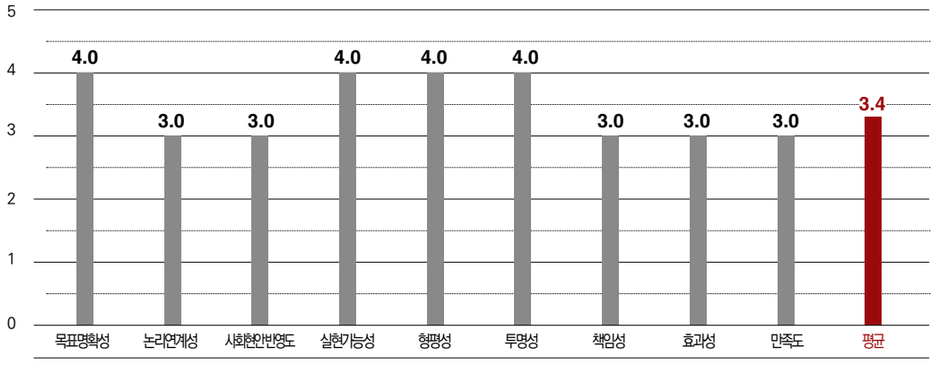
본 정책의 구조와 과정은 대체적으로 만족할만하다. 정책의 내용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반적인 정책의 결과도 아직은 기대만큼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림 4-39]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10)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단말기유통법 안착)

[그림 4-40]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단말기유통법 안착)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한다는 목표와 서비스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 극대화를 주요한 정책 목표로 하고 있어 대체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본 정책의 목표에는 중요한 가정이 존재한다. 보조금 경쟁이 여러 가지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이로 인해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 경쟁을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 후생에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보조금 경쟁을 규제함으로 잃게 되는 소비자 후생 이상의 소비자 후생 증가를 서비스 경쟁을 통해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보조금 경쟁의 규제가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으나 조금씩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단말기 보조금 규제(차별적 보조금 지급금지와 보조금 상한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보조금 규제를 통해 진입시장의 경쟁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서비스 시장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가입비 폐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20% 사용요금 할인 선택 등으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긴 했지만 이는 최근에 정부가 통신사들을 압박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즉 기대한 만큼의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다소 인위적인 개입으로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인위적인 경쟁으로 시작된 만큼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의 배경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통신비 지출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측면과 (OECD 비중 가계통신비 지출액 3위, 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 1위) 통신시장이 지나치게 불투명하다는 측면이다. 이러한 점이 문제일 수는 있으나 중요성이나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된다. 게다가 통신비 지출이 높은 이유는 최신형 고가단말기를 선호하여 단말기 교체주기가 빨랐던 것도 중요한 이유인데, 그렇다면 이는 개인 선호의 문제이지 사회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 통신비 지출이 다소 줄어든 이유도 최신 고가단말기를 보조금 없이 구입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중저가 단말기를 오래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상품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서 통신비 지출이 줄어들었다면 그것을 문제해결이라고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은 보조금 규제를 통해 지나친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서비스 경쟁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보조금 규제가 서비스 경쟁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위해선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할 이유가 크지 않으므로 현재의 상한선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은 단통법 이전에 많이 지적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과점 기업의 고객 차별을 많이 해소시켰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의 차별도 사라짐으로 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 시장의 투명성 향상에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단통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가 높지 않고 불만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일반인 뿐 아니라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방통위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단통법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수정이 고려되고 있지 않은 점이다. 현재 국회에 단통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정부와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충분히 살리되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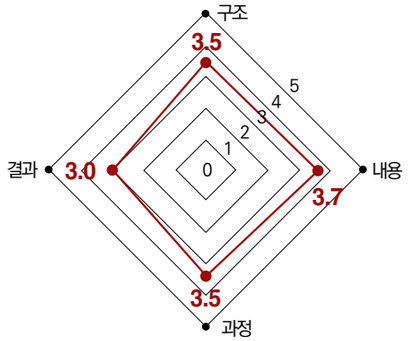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본 정책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통신비 절감으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년 3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9% 감소한 14만 5200원으로 집계되었다(이미정, 2015). 이는 같은 기간 총 소비지출이 0.5% 감소한 것에 비하면 더 큰 감소폭을 보인 것으로 단통법의 효과가 일부 작용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통신비 지출 감소의 상당 부분은 보조금 규제로 고가 단말기가 아닌 중저가 단말기를 선택함에 따라 발생하였다. 중저가 단말기의 비중이 단통법 이전에는 20%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34%까지 높아졌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즉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단말기의 질 저하도 함께 수반되었기 때문에 이를 진정한 소비자 후생 증가라고 평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가입비 폐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서비스 분야의 비용 감소 효과는 평가할 만하다. 또한 소비자 차별을 금지함으로 해서 통신시장의 투명성 향상에도 기여한 부분 역시 평가할 만하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은 일반인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본 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이나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막 정책의 효과가 서비스 경쟁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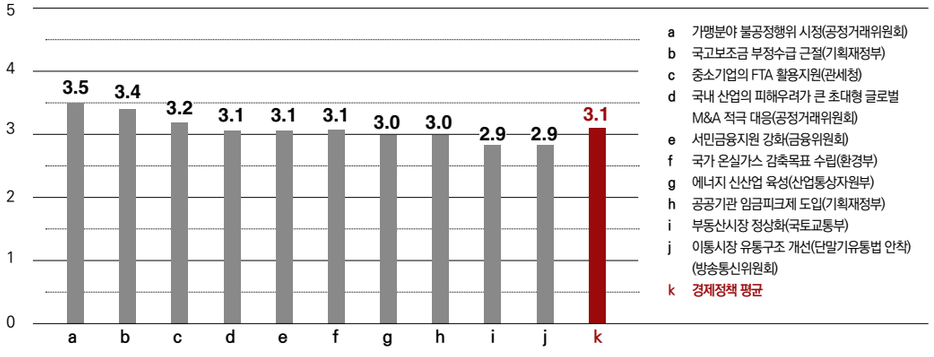
[그림 4-41]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단말기유통법 안착)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3) 평가결과 종합

가)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 합산

[그림 4-42]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경제정책 분야 10개 정책에 대하여 일반인과 전문가, 그리고 본 연구진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평균이 3.1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평가와 비교했을 때(3.0점) 소폭 상승한 결과이다. 특히 작년 평가에서는 일반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회복지분야 정책에 비하여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에는 사회복지분야와 비교해서는 근소하게 높은 평가를 교육문화정책 분야와 비교해서는 동일한 평가를 받았다. 교육이나 복지 분야와 같이 일반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정책이 아님에도 높은 인지도와 관심, 그리고 평가가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제 단순한 성장 보다는 형평성, 공정성 등의 가치를 갖춘 질 좋은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과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을 비교해 보면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많이 논의 되고 있는 화두와 무관하지 않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정책은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갑-을" 문화의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작년 평가에서 가맹점주 권리 강화 정책이나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책과 같이 시장의 공정성 형평성에 초점을 둔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정책 역시 재정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보조금 집행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잘 반영하는 정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과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 정책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의 효과가 부정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예를 들면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과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가격 상승) 정책 자체로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좋은 정책의 필요조건으로서 국민들에게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뚜렷한 목표와 실효성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별 쟁점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실업 문제라는 어찌 보면 다소 상반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다소 상충되지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꼭 청년 고용 창출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논리적 연계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투명성과 책임성 등 정책의 과정 측면에서 다소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의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와 보조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라는 중요한 현안이 반영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다른 정책들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본 정책 역시 투명성과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아직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들 항목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중요한 현안을 담아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산업계의 반발과 국내 여론 등으로 인해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은 유동적이다.

넷째,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경우 단통법과 함께 경제분야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다소 억울한 면도 존재한다. 일반인과 전문가 설문에서 본 정책이 낮게 평가된 것은 정책의 시작 시점과 현 시점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정책 시작 시점의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적절한 시장 부양 조치가 필요했으나 현 시점의 상황은 시장이 오히려 지나치게 과열된 상황이다. 본 정책은 특히 전세대책이 결여된 관계로 형평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다섯째,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은 경제정책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으로 특히 사회현안 반영도와 형평성, 효과성 등에서 다른 정책들보다 월등히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최근에 불거진 갑질 문화에 대한 논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평가에 이어 시장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서민금융지원 강화의 경우 뚜렷한 정책목표와 높은 사회현안 반영도에도 불구하고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 설계로 인하여 수요자가 필요한 혜택을 쉽게 받지 못하는 현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은데 기인한다. 또한 부채 문제를 보다 양질이기는 하지만 결국 부채로 해결하려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지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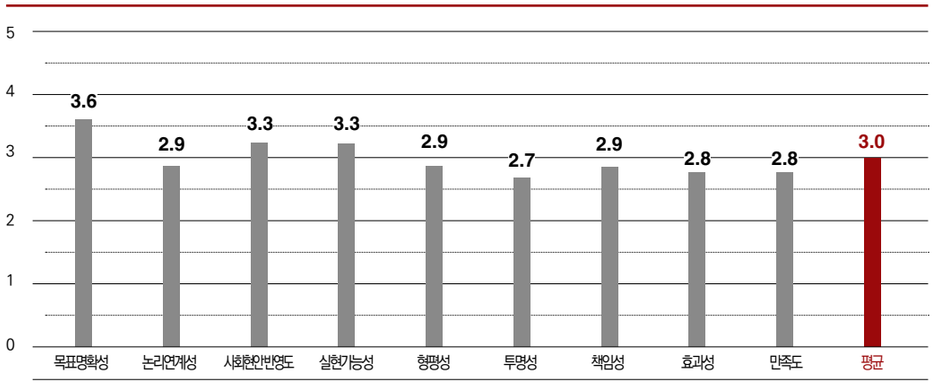
일곱째,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경우 에너지 분야에서의 창조경제 구현과 탄소 배출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현안 반영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정책의 인지도가 낮다보니 전반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정책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서의 평가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아직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이 높은 정책이다보니 효과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평가가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산업 구조 전환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본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여덟째, 국내 산업의 피해우려가 큰 초대형 M&A 적극 대응의 경우 뚜렷한 목표와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은 국제적인 분쟁을 피하면서 효과적으로 국내 산업을 글로벌 M&A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정책의 내용이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다보니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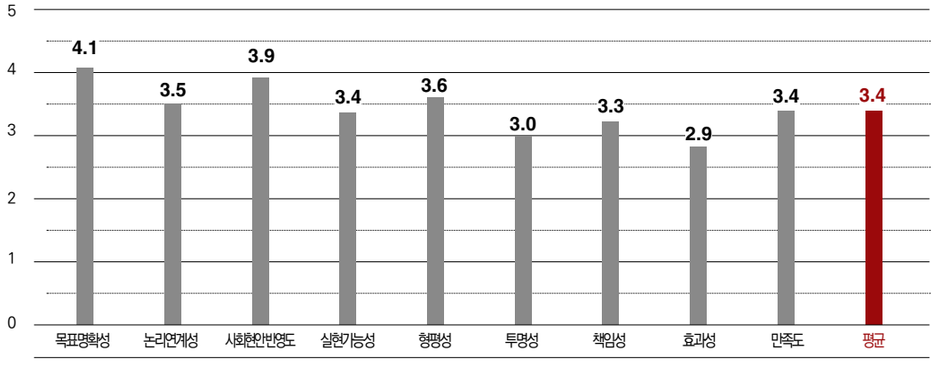
아홉째,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의 경우 뚜렷한 목표와 높은 사회현안 반영도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FTA의 혜택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다만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효과성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는데, 향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과 함께 경제정책 분야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작년에 이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전반적인 평가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보조금 상한제로 인하여 아직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가입비 폐지, 요금할인, 데이터 중심요금제 도입 등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는 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점은 분명히 평가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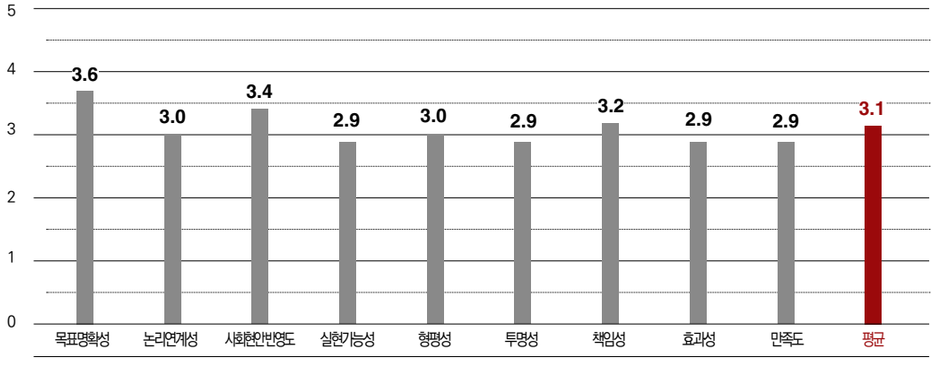
[그림 4-43]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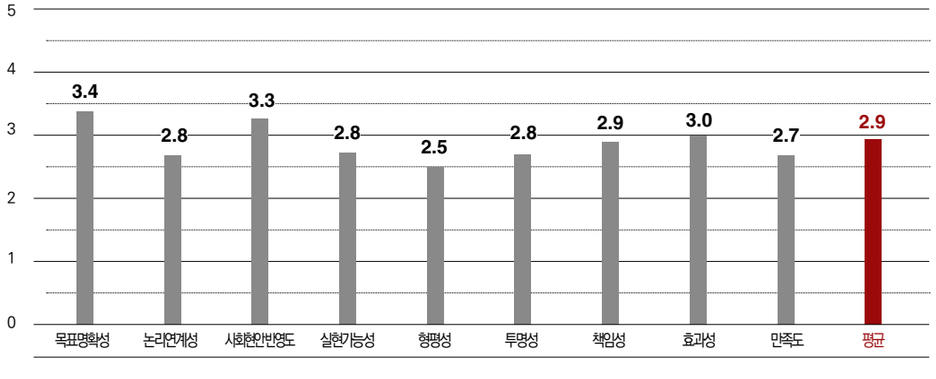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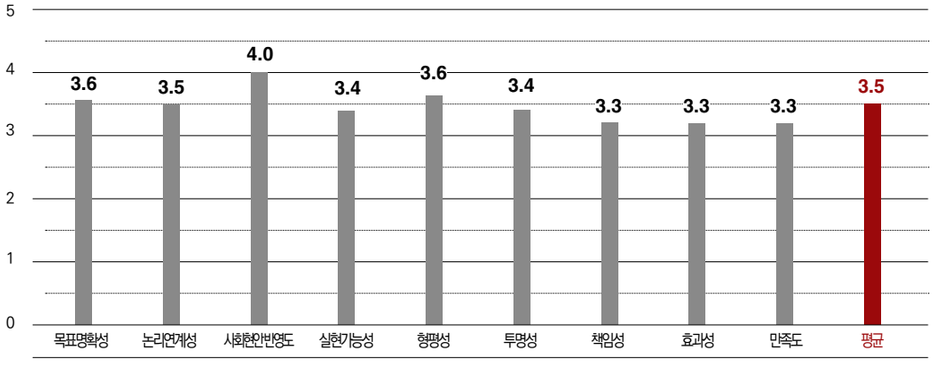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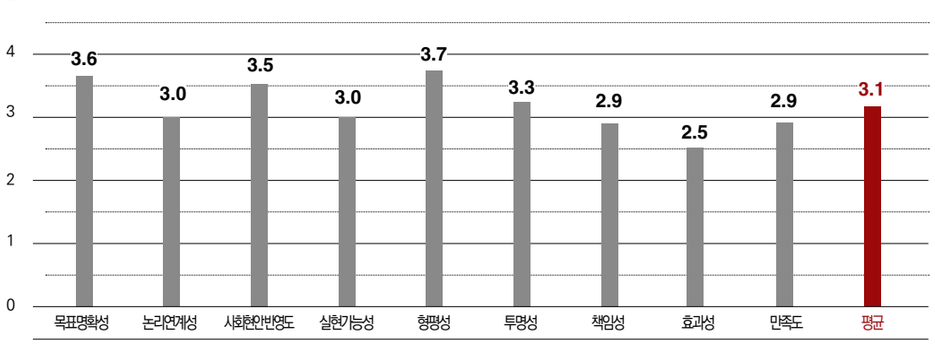
부동산시장 정상화(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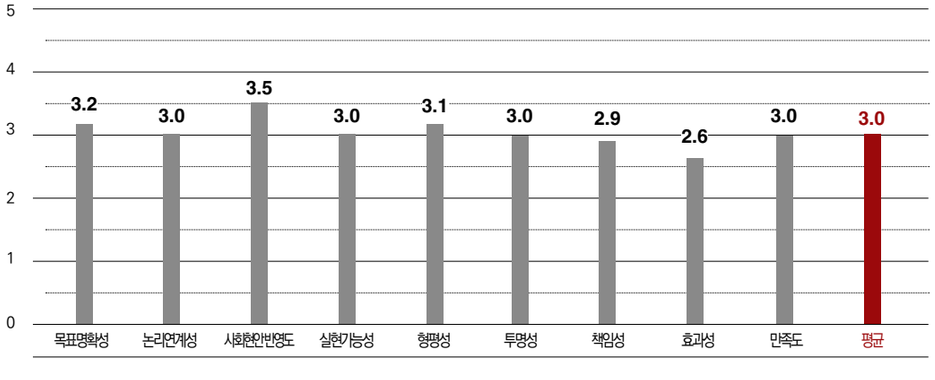
기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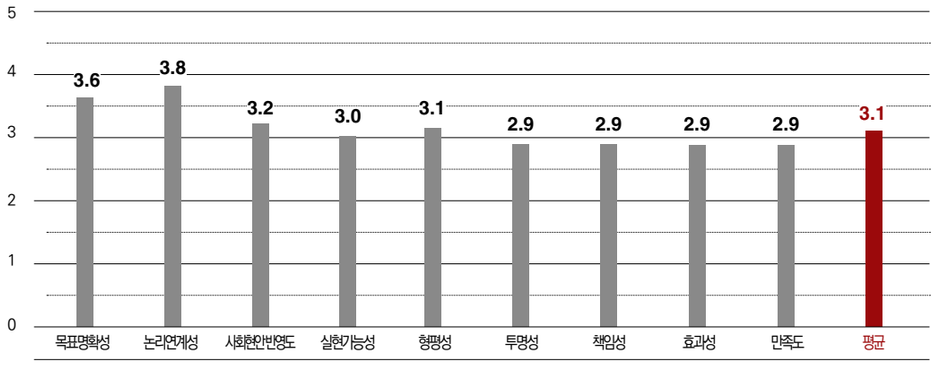
서민금융지원 강화(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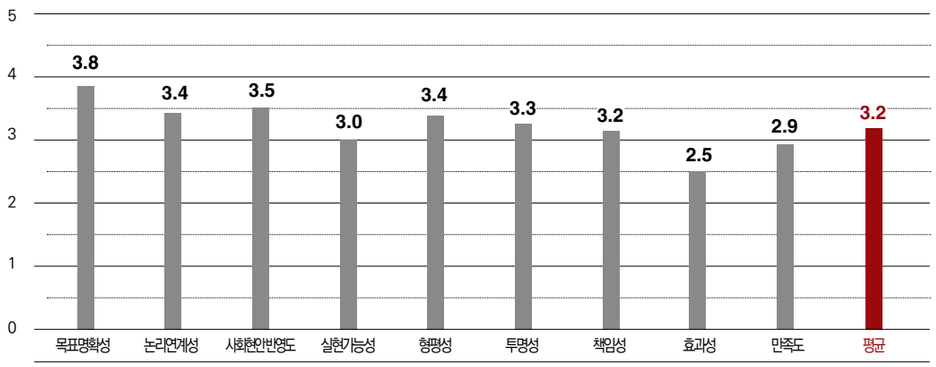
에너지 신산업 육성(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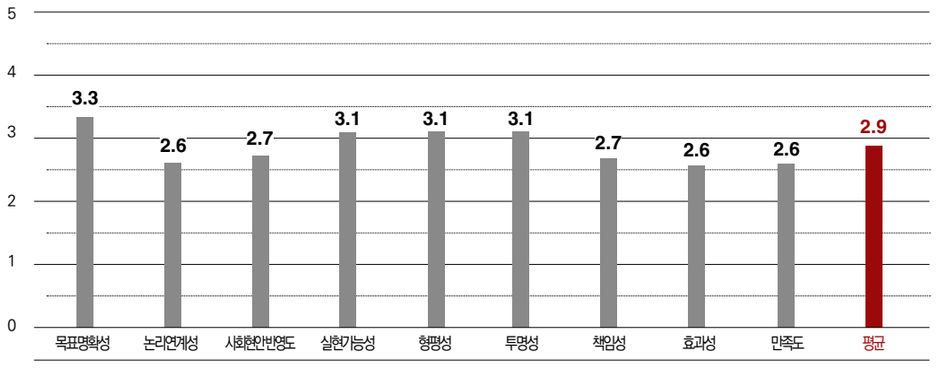
국내 산업의 피해우려가 큰 초대형 글로벌 M&A 적극 대응(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의 FTA활용 지원(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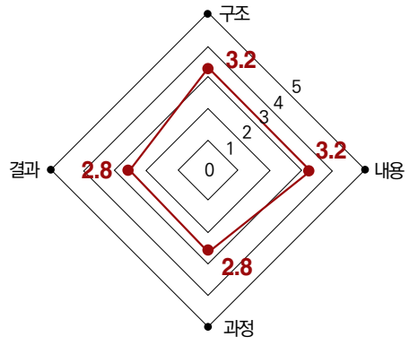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단말기 유통법 안착)(방송통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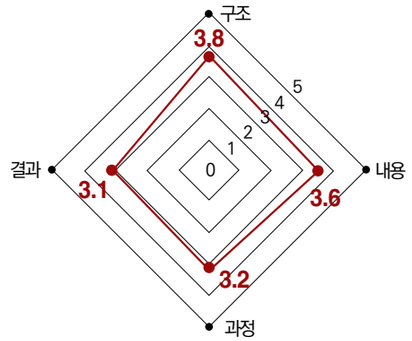


[그림 4-44]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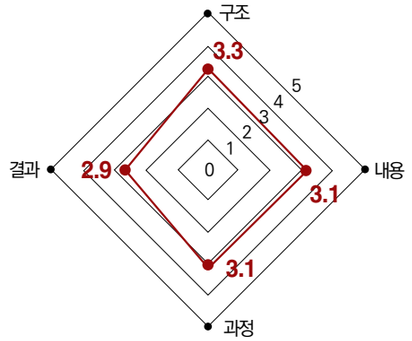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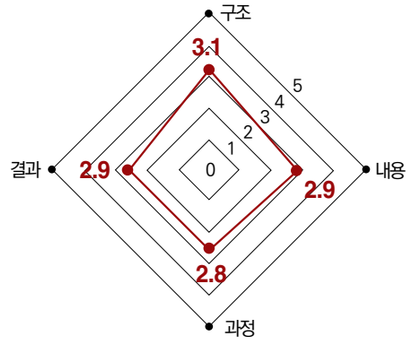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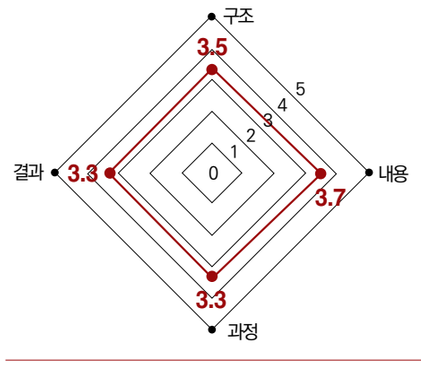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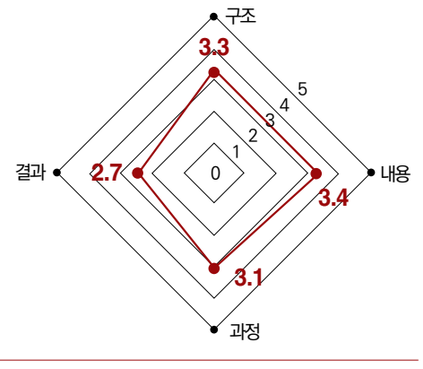
부동산시장 정상화(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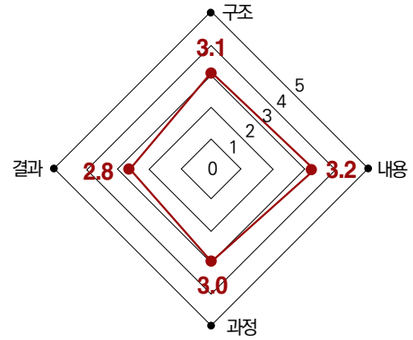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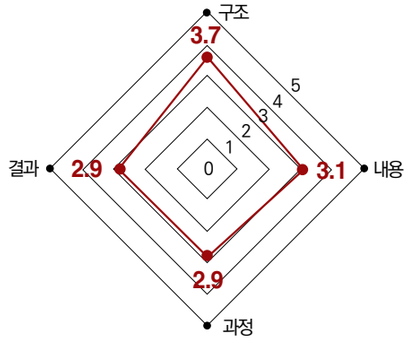
서민금융지원 강화(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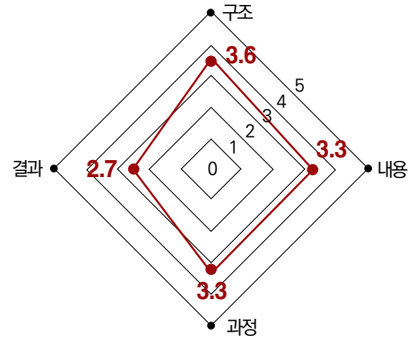
에너지 신산업 육성(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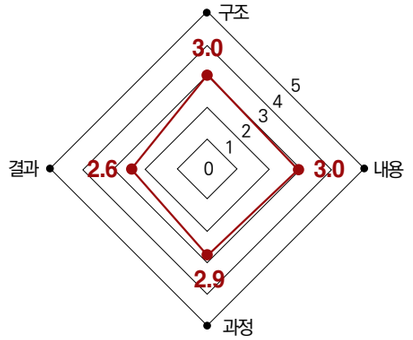
국내 산업의 피해우려가 큰 초대형 글로벌 M&A 적극 대응(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의 FTA활용 지원(관세청)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단말기 유통법 안착)(방송통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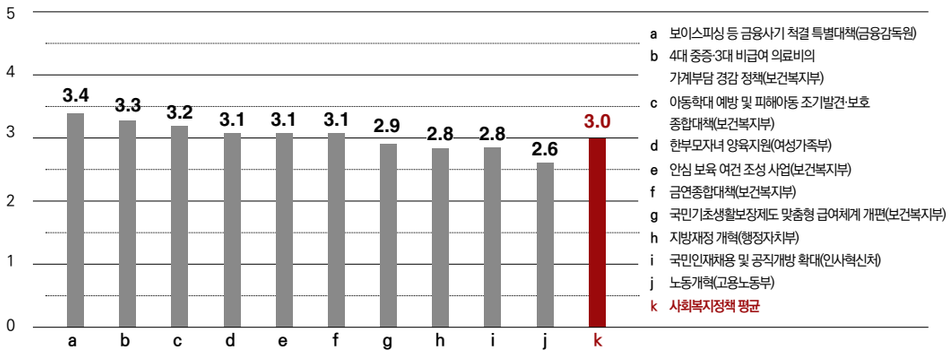
2. 사회복지정책 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결과 종합

[그림 4-45]는 사회복지정책 분야의 정책별 설문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보여준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이 3.4점으로 최고점을 받았고, 노동시장 개혁이 2.6점으로 최저점을 받았

[그림 4-45] 사회복지정책 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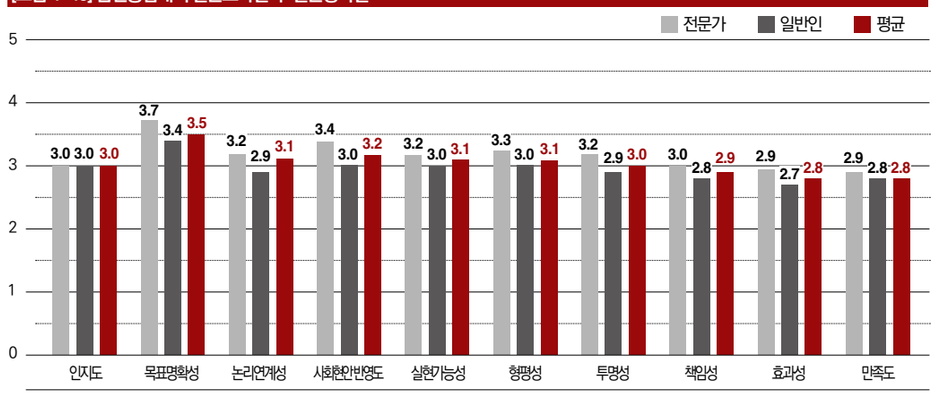
다. 10개 정책의 평균은 3.0점이다. 재분배정책을 수반하는 복지정책이나 배분정책(allocational policy)들이 정부 내부 혁신 정책이나 규제정책들 보다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방재정 개혁과 국민인재채용 및 공직 개방 확대는 인지도 점수가 낮았고, 정책의 구조와 과정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도 대체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의 정책 결과 점수는 2.6점으로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는 노동시장 개혁 정책에 대해 과연 제대로 합의와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반영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이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이 1, 3등을 한 것은 역시 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음을 알려준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 2.9점을 받은 것은 국민 인지도가 낮은 정책이 점수가 낮은 경향이 있음을 알려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2015년에 88,245억 원의 예산으로 이미 집행되어 131만 명에게 평균 4만 9천 원의 급여를 지급한 정책이다.

나) 정책별 설문조사 결과

(1) 금연종합대책

금연종합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모두 3.0점으로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책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 34%, 일반인 36.4%로,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전문가 28%, 일반인 32.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종합대책은 2014년 9월 발표되었고,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을 통한 가격정책이 시행되었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금연종합대책에 대한 일반인의 높은 인지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46] 금연종합대책 설문조사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는 3.7점, 일반인은 3.4점으로 평가하였다. 명확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 68%, 일반인 53.2%로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 14%, 일반인 20.2%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정책 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2점으로 일반인 2.9점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일반인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이 33%로 나타나 긍정적인 응답을 한 32%보다 많았으며, 전문가 집단에서 긍정적인 응답 44%, 부정적인 응답 22%가 나타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일반인이 가격 정책 위주의 금연종합대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는 3.4점, 일반인은 3.0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응답을 한 전문가는 58%, 일반인은 38.6%인 반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 22%, 일반인 30.8%로 나타나 전문가보다는 일반인 중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더 많았다. 이는 높은 흡연율과 이로 인한 금연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인에 비해 전문가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해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2점, 일반인은 3.0점으로 평가하였다. 사회현안 반영도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에 비해 일반인에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 3.3점, 일반인 3.0점으로 평가하였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50%,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24%로 나타났으며, 일반인 집단에서는 전자가 35.6%, 후자가 29.8%로 전문가에 비해 격차가 적었다. 이는 일반인들이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가격 정책이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는 3.2점, 일반인은 2.9점으로 평가하였다. 전문가 40%가 긍정적으로, 18%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반인 29.8%가 긍정적으로, 34.4%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전문가에 비해 일반인이 더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은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소통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문가는 3.0점, 일반인은 2.8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36%, 일반인 28.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전문가 32%, 일반인 37.4%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정책의 특명성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게 정책의 책임성 측면에서 일반인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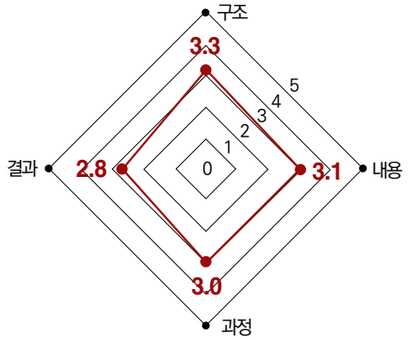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 2.9점, 일반인 2.7점으로 두 집단 모두 보통(3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38%, 일반인의 40.8%가 효과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각 집단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26%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금연종합대책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문가는 2.9점, 일반인은 2.8점으로 두 집단 모두에서 보통(3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의 42%, 일반인의 37.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 34%, 일반인 28.4%에 비해 높았다. 이는 금연종합대책의 낮은 민주성과 책무성, 형평성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타 사회복지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렸다. 정책 목표의 명확성, 사회현안 반영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지만, 정책 과정의 민주성과 책무성, 결과의 효과성과 만족도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영역별로는 구조(3.3), 내용(3.1), 과정(3.0), 결과(2.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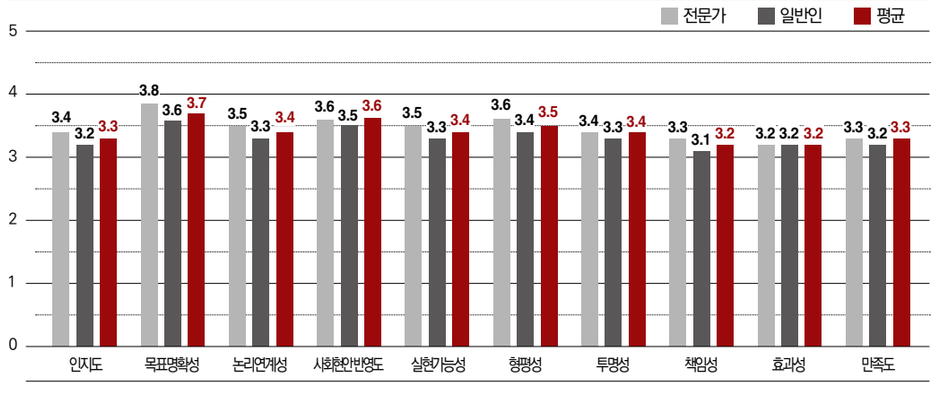
[그림 4-47] 금연종합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인지도는 전문가 3.4점, 일반인 3.2점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보면 정책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 54%, 일반인 42.8%로 나타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전문가 16%, 일반인 16.8%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파밍 등의 금융사기 피해 급증이 지속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4-48]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3.8점, 일반인 3.6점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에서 명확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 76.1%, 일반인 62.4%로 나타나, 명확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 8%, 일반인 11.6%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에서 발생건수와 피해액 등의 지표를 통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최선의 방안인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 3.5점, 일반인 3.3점으로 나타나 다른 정책에 비해 높았다. 또한 전문가의 60%, 일반인의 4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 16%, 일반인 17.8%와 큰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이 사전 예방, 사후 조치를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원 외 다수 유관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 3.6점, 일반인 3.5점으로 두 집단 모두에서 보통(3점)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문가의 66%, 일반인의 56%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 14%, 일반인 16%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다른 정책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정부의 특별대책이 사회적 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해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5점, 일반인은 3.3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 60%, 일반인 47.8%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 14%, 일반인 17%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부의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조사결과는 전문가 3.6점, 일반인 3.4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의 64%, 일반인의 50.2%에 이르는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의 10%, 일반인의 14.4%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서민 등의 사회적 약자에게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일 것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문가 3.4점, 일반인 3.3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 56%, 일반인 40.4%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의 16%, 일반인의 15.6%였다. 이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정부의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민주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문가는 3.3점, 일반인은 3.1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문가의 50%, 일반인의 36.8%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의 22%, 일반인의 23.8%로 나타났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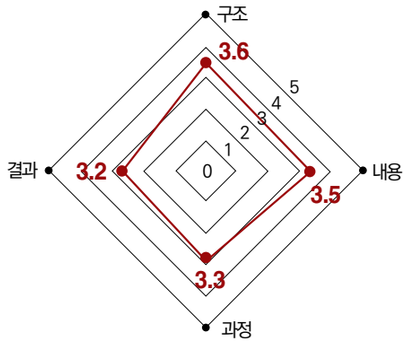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보통 이상의 3.2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의 42%, 일반인의 39%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의 22%, 일반인의 24%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3점, 일반인은 3.2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 54%, 일반인 42.4%로 나타나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 20%, 일반인 21.4%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정책에 비해 전반적으로 전문가와 일반인 두 집단 모두 금융사기 척결 대책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목표의 명확성과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6), 내용(3.5), 과정(3.3), 결과(3.2) 순으로 나타나,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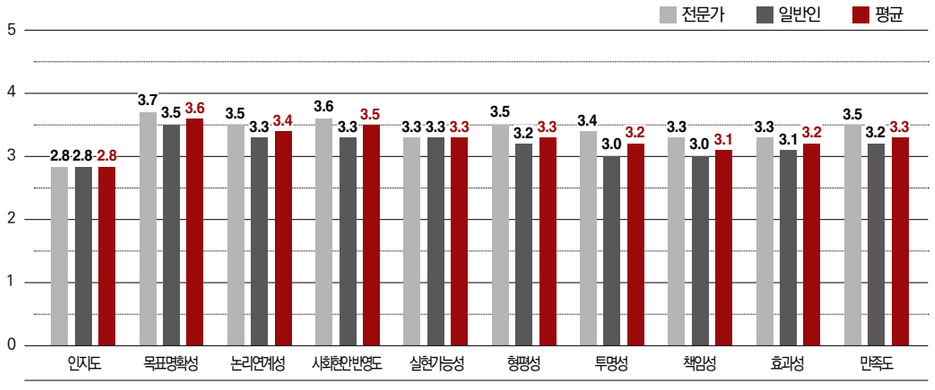
[그림 4-4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3)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2.8점, 일반인 2.8점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24%, 일반인의 29.8%로 나타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전문가 38%, 일반인 37.8%보다 적었다. 의료비 경감 정책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온 것은 정책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의료체계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4-5의]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3.7점, 일반인 3.5점으로 다른 평가 항목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70%, 일반인 57%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 8%, 일반인 13.8%와 큰 차이를 보였다.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목표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조사결과 전문가 3.5점, 일반인 3.3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56%, 일반인 47.4%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의 16%, 일반인의 18%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축소, 선택진료의사 비율 축소, 일반병상 확대 등의 정책대안이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 3.6점, 일반인 3.3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62%, 일반인의 50.4%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 10%, 일반인 19.8%에 비해 많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정부 대책이 사회경제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해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3점으로 나타나, 보통(3점) 수준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전문가 42%, 일반인 45.2%에 이르는 반면, 전문가의 20%, 일반인의 19.6%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와 일반인 공히 4대 중증 질환 및 3대 비급여 항목 축소라는 정책 대안이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3.5점, 일반인은 3.2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56%, 일반인 46%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12%, 일반인의 21.6%로 나타났다. 일반인에 비해 전문가들이 형평성 측면에서 보다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 3.4점, 일반인 3.0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46%, 일반인의 32%였고, 전문가의 12%, 일반인의 25.2%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일반인에 비해 전문가 집단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는 의료비 가계 부담 경감 정책의 실시 과정에서 병원, 의료인,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반인이 소통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문가는 3.3점, 일반인은 3.0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문가 집단의 36.2%, 일반인의 32.8%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14%, 일반인의 26.8%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정책의 특명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정책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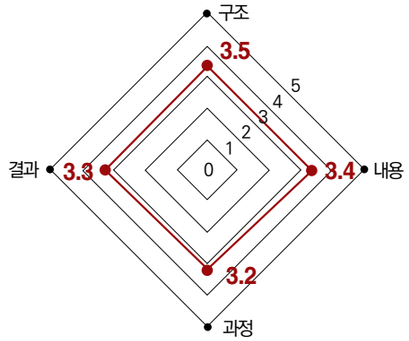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의 조사결과는 전문가 3.3점, 일반인 3.1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40%가 긍정적으로, 16%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데 반해, 일반인은 36.8%가 긍정적으로, 24.4%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 3.5점, 일반인 3.2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54%, 일반인의 39.4%이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 12%, 일반인 24.2%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가 일반인에 비해 정책의 만족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평가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목표의 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 만족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데 비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유형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5), 내용(3.4), 결과(3.3), 과정(3.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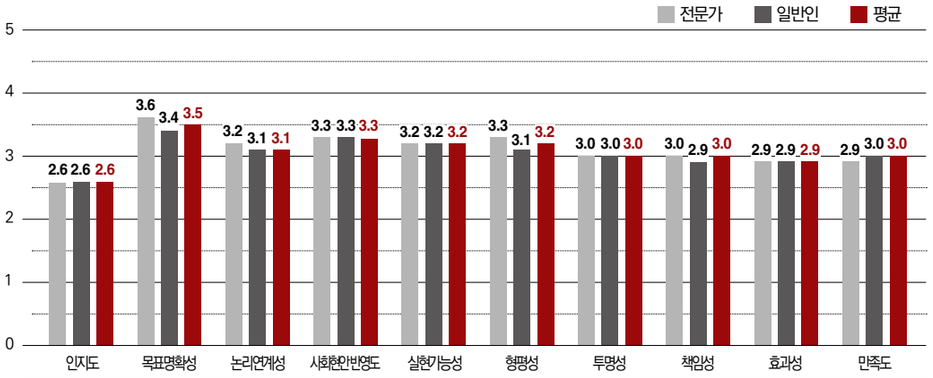
[그림 4-51]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4)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일반인 두 집단 모두에서 보통(3점) 미만인 2.6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와 일반인 두 집단 모두에서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2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기타 정책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방대하고,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그림 4-52]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에 대한 질문에서 전문가 3.6점, 일반인 3.4점으로 나타났다. 명확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64%, 민간인 51%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 인력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 보육 프로그램 개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가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한 응답은 전문가 3.2점, 일반인 3.1점으로 나타났다. 정책 대안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은 평균 3.3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46%, 일반인 46.6%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 16%, 일반인 21.6%에 비해 큰 차이로 높았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해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일반인 모두 3.2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40%, 일반인 41.4%이며, 전문가의 20%, 일반인의 24%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3.3점, 일반인은 3.1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 48%, 일반인 39.2%이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 22%, 일반인의 24%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보통 수준인 3.0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30%, 일반인의 25%로 나타났고, 전문가의 24%, 일반인의 28%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에 비해 일반인 중에서 정책의 특명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정책에 대한 소통과 홍보 측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문가는 3.0점, 일반인은 2.9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32%, 일반인 29%이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32%, 일반인 34.2%였다. 일반인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더 높았는데, 이는 보육 정책 추진에 있어서 책무성에 대한 일반인의 회의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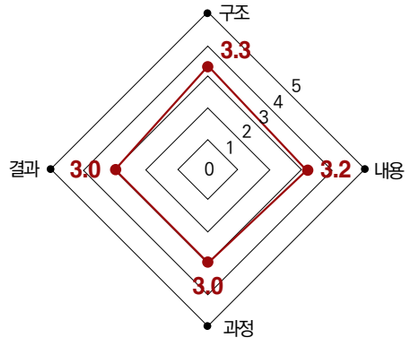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2.9점으로 나타나 보통(3점)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의 28%, 일반인의 32.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전문가의 36%, 일반인의 34.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 2.9점, 일반인은 3.0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30%, 일반인의 34.2%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전문가의 32%, 일반인의 30.4%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일반인에 비해 전문가가 만족도 측면에서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평가 항목 중 목표의 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투명성과 책임성, 효과성, 만족성 측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유형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3), 내용(3.2), 결과(3.0), 과정(3.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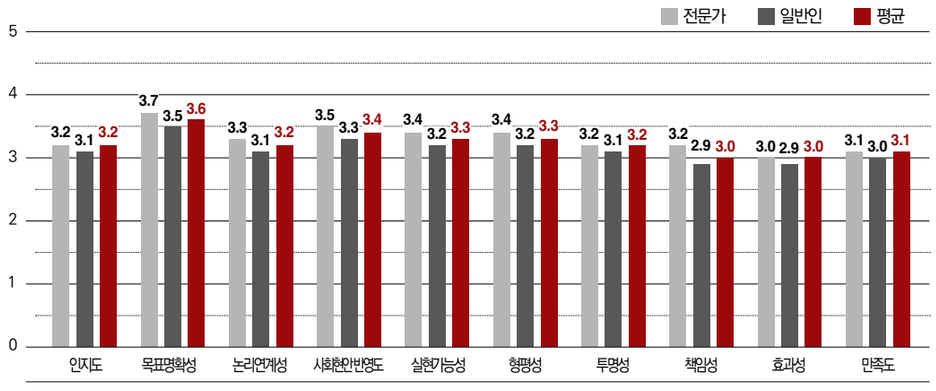
[그림 4-53]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3.2점, 일반인 3.1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문가는 44%, 일반인은 41.4%로,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전문가 28%, 일반인 24.8%에 비해 높았다.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 이슈화되었고, 이를 통해 아동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그림 4-5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7점, 일반인은 3.5점으로 나타났다. 정책 목표가 명확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70%, 일반인 52.4%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 10%, 일반인 13.8%에 비해 높았다.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 3.3점, 일반인 3.1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 48%, 일반인 37.6%인 반면 전문가의 18%, 일반인의 28.2%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일반인에 비해 전문가 집단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더 높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 3.5점, 일반인 3.3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64%, 일반인의 47%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전문가 18%, 일반인 22.6%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전문가 집단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더 높았다. 연이은 아동 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해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4점, 일반인은 3.2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56%, 일반인의 38.2%이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16%, 일반인의 24.2%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3.4점, 일반인은 3.2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가 54%, 일반인의 40.8%인 반면, 전문가의 12%, 일반인의 20.2%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는 3.2점, 일반인은 3.1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의 40%, 일반인의 33.8%에 비해 전문가의 16%, 일반인의 24.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전문가에 비해 일반인의 평가가 더 낮은 것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소통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문가는 3.2점, 일반인은 2.9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44%, 일반인의 28%이며, 전문가의 22%, 일반인의 33%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전문가에 비해 일반인의 평가가 더 낮았다. 이는 정책의 특명성에 대한 평가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와 소통, 피드백 과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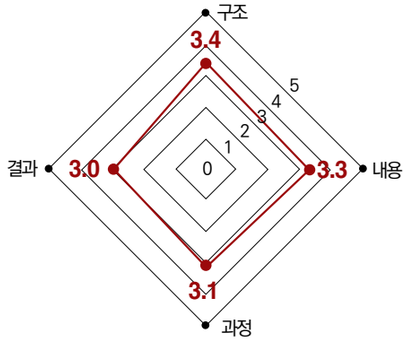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는 3.0점, 일반인은 2.9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40%, 일반인의 30%인데 반해, 전문가의 32%, 일반인들의 36.4%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전문가에 비해 일반인이 더 회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특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일반인의 낮은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1점, 일반인은 3.0점으로 평가하였다. 전문가의 38%, 일반인의 32.6%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전문가의 24%, 일반인의 28.8%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가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 중에서는 목표의 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 측면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정책의 책임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유형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4), 내용(3.3), 과정(3.1), 결과(3.0) 순으로 나타나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정책의 당위성과 타당성 측면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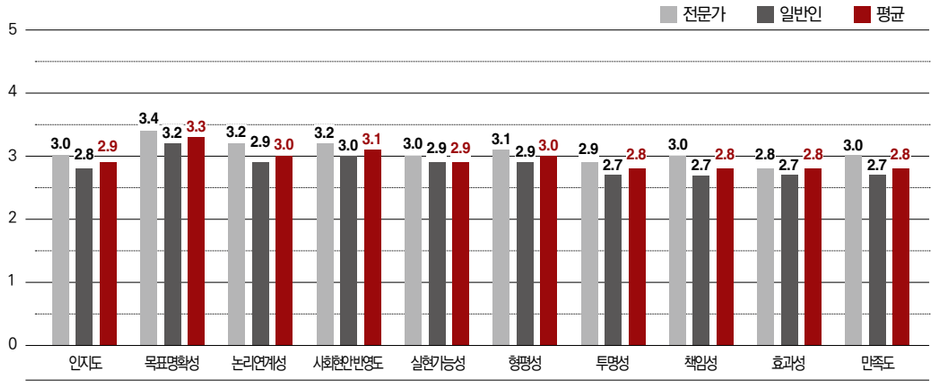
[그림 4-5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3.0점, 일반인 2.8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문가는 30%, 일반인은 28.4%로,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전문가 30%, 일반인 36.28%에 비해 적거나 같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소요되는 재원의 크기가 비교적 큰 정책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에 통과됨에 따라 2015년 7월에는 131만 명에게 첫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종합대책이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등에 비해 일반 국민의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정책 인지도가 언론의 보도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재삼 일깨워준다.

[그림 4-5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은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각각 3.4와 3.2로 다른 평가 항목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란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을 그 목표로 한다. 그리고 개편을 통해 수급자의 수가 76만 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따라서 이 정책은 목표의 명확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여타 정책에 비해 낮게 나온 것은 정책 차체의 이해난이도가 높거나, 정책의 명칭이 다소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2점으로 일반인의 2.9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도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와 연관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은 각각 3.2, 3.0점으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과 유사한 수준의 평가를 내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사회현안 반영도 인식이 보통 수준으로 나온 것은 정책의 대상이 저소득층에 국한된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해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0점, 일반인은 2.9점으로 평가하여,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3.1점으로 평가한 반면, 일반인은 2.9점으로 평가하여, 전문가들이 약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는 2.9점을, 일반인은 2.7점으로 평가하여, 일반인에 비해 전문가들이 약간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투명성 및 민주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문가는 3.0점으로 평가한 데 반해, 일반인은 2.7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생활보호급여가 때때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잘못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곤 한다. 생활보호대상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책임성에 대해 특히 일반인이 다소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점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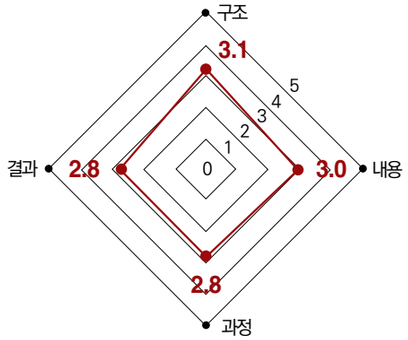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는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일반인은 2.7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효과성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이 어느 정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0점, 일반인은 2.7점으로 일반인이 전문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가 집단의 평가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평가 항목 중에서는 목표의 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 측면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실현가능성, 민주성, 책무성, 그리고 효과성 측면에서는 여타 항목보다 낮은 평가가 이루어졌다. 유형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1), 내용(3.0), 과정(2.8), 결과(2.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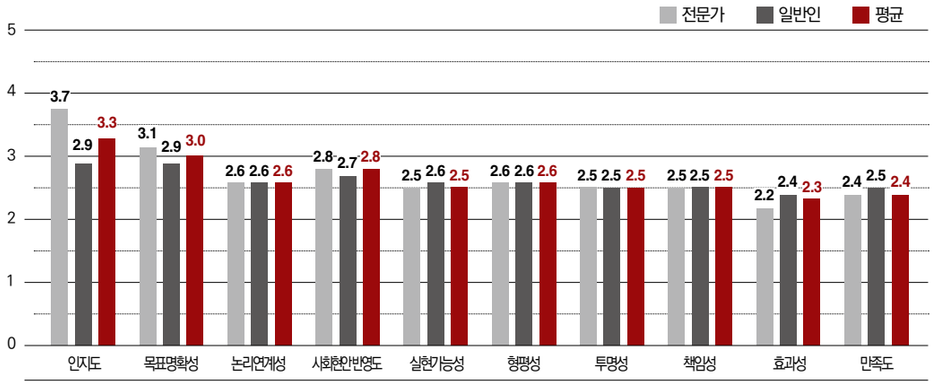
[그림 4-5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 노동개혁

노동개혁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3.7점, 일반인 2.9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문가는 66.0%, 일반인은 31.8%이다. 반면에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 10.0%, 일반인 35.0%로 나타나서,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커다란 인지도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6%의 전문가가 알고 있다고 답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개혁은 언론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이 보도된 국가 사회적 이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보다 모른다고 응답한 국민의 수가 더 많은 것은 우리나라의 정책 이슈 관련 소통 및 정책 여론 형성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4-58] 노동개혁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은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각각 3.1과 2.9로 노동시장 개혁의 다른 평가 항목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낮다. 노동시장 개혁의 정책목표명확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은 전문가 및 일반인이 노동시장 개혁의 주된 목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에 있을 것이란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6점의 다소 낮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노동개혁을 위해 제시된 정책대안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이 모두 일정 수준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은 각각 2.8, 2.7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주었다. 노동시장 개혁이 과연 얼마나 사회현안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노동시장 개혁 정책의 그리 높지 않은 선호도가 사회현안 반영도에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해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2.5점, 일반인은 2.6점으로 평가하여,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반인보다도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약간 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와 일반인은 모두 2.6점을 부여하여, 보통 수준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5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보통 수준인 3.0보다 낮은 평가로 노동개혁 정책의 특명성 및 투명성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이 모두 약간의 회의적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노동개혁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은 모두 2.5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수는 정책의 특명성에 대한 평가와 동일하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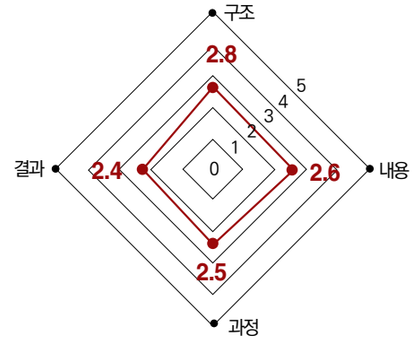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는 2.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일반인은 2.4점을 부여하여, 두 집단 모두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전문가 집단은 노동개혁의 정책 효과성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욱 낮게 평가하여, 노동개혁의 의도한 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더욱 회의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2.4점, 일반인은 2.5점으로 평가하여, 노동개혁에 대한 정책 만족도가 보통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전문가는 일반인에 비해 약간 더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인지도, 목표명확성, 논리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등 정책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노동개혁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비관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정책의 특명성과 책무성, 즉 정책 과정의 측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거의 같은 수준의 다소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유형별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2.8), 내용(2.6), 과정(2.5), 결과(2.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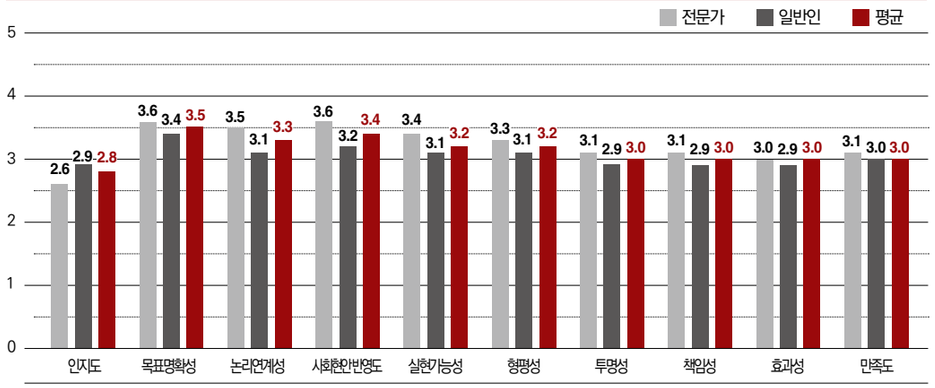
[그림 4-59] 노동개혁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8)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2.6점, 일반인 2.9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문가는 16.0%, 일반인은 33.2%이다. 반면에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 40.0%, 일반인 33.2%로 나타나서, 전문가보다도 일반인의 정책 인지도가 오히려 높음을 알 수 있다.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은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 복지부 등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정책이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정책 전체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통계청의 협업과제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의 정책 인지도가 낮은 것은, 여성가족부가 복지부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사업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큰 부처가 참여하는 한부모가족 관련 협업과제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림 4-60]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은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각각 3.6과 3.4로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사업의 다른 평가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전문가가 일반인보다도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사업의 목표명확성 자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5점을 그리고 일반인은 3.1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한 핵심적 기둥을 이룬다. 전문가들이 부여한 높은 점수는 이러한 점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반영한다고 보겠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전문가와 일반인은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사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각각 3.6과 3.2점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해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4점, 일반인은 3.1점으로 평가하여,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보통이상의 높은 점수를 주었다.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은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적고,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을 통해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전문가와 일반인이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와 일반인은 각각 3.3과 3.1점을 부여하여,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평가하였다. 특정 집단을 위한 자원배분을 수반하는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은 대체로 그리 높은 형평성 점수를 주지는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집단이 우리 사회의 이곳저곳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형평성 점수도 이러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은 각각 3.1과 2.9점을 부여하였다. 정책의 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함에도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대해서는 그리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 정책 논의가 사회적으로 더욱 소통되고 공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은 각각 3.1과 2.9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수는 정책의 특명성에 대한 평가와 동일하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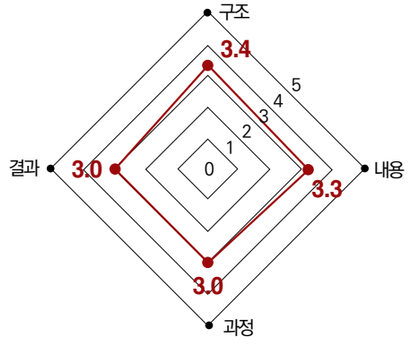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사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는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일반인은 2.9점을 부여하여, 두 집단 모두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1점, 일반인은 3.0점으로 평가하여,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만족도가 보통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만족도는 그의 효과성과 크게 연동되는 경향이 있는데,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와 일반인에 있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표명확성, 논리적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등 정책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책의 과정과 효과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유형별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4), 내용(3.3), 과정(3.0), 결과(3.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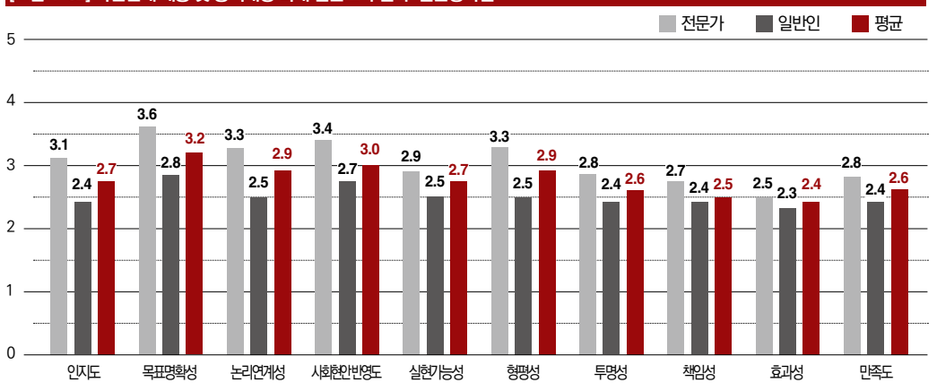
[그림 4-61]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9) 국민인재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국민인재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3.1점, 일반인 2.4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문가는 42.0%, 일반인은 17.8%이다. 반면에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전문가 32.0%, 일반인 51.2%로 나타나서, 정책 인지도의 측면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격차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국민인재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책은 정부혁신을 위한 것으로 국민을 직접적인 대상 집단으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반인의 인지도가 전문가에 비해 낮은 것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림 4-62]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은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각각 3.6과 2.8로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정책 인지도의 차이가 큰 것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겠다. 정책 인지도가 높은 전문가 집단이 목표명확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3점을 그리고 일반인은 2.5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집단별 인식은 목표명확성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전문가와 일반인은 국민인재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각각 3.4점과 2.7점의 점수를 부여했다. 국민인재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책은 세월호 사건 이후 인사혁신처가 만들어지는 정부혁신의 맥락에서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해당 정책에 대한 홍보와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2.9점, 일반인은 2.5점으로 보통 이하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특히 정책의 구조와 필요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도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보통 정도의 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은 향후 정책 개선에의 필요성이 적지 않음을 함의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국민인재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와 일반인은 각각 3.3과 2.5점을 부여하였다.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두 집단 사이의 인식격차가 크게 드러난 것이다. 민간으로부터의 인재 모집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 일반인이 보통 이하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은 각각 2.8과 2.4점을 부여하였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도 정책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인들은 그보다도 낮은 점수를 매기고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국민인재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은 각각 2.7과 2.4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수는 정책의 특명성에 대한 평가와 유사하다. 비록 정부 내부의 인사관리에 관한 정책일지라도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그의 책무성에 대해 보통 이하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정책 개선에의 필요성이 있음을 함의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국민인재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는 2.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일반인은 2.3점을 부여하여, 두 집단 모두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국민인재채용 및 공직개방은 기존의 공무원 충원 방식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실험적 요소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일반인은 모두 그러한 방식이 과연 효과적일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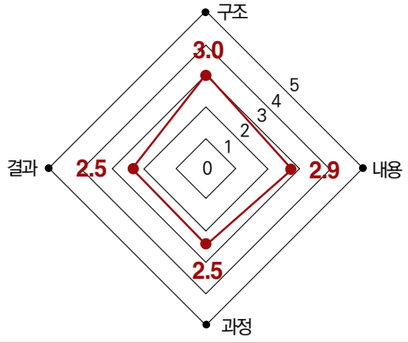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국민인재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2.8점, 일반인은 2.4점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책의 구조와 내용, 사회현안 반영도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도 효과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나타냈는데, 정책의 만족도도 효과성에 대한 낮은 평가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인재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분야별로 인식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인지도, 목표명확성, 논리적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등 정책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유사한 수준에서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유형별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0), 내용(2.9), 과정(2.5), 결과(2.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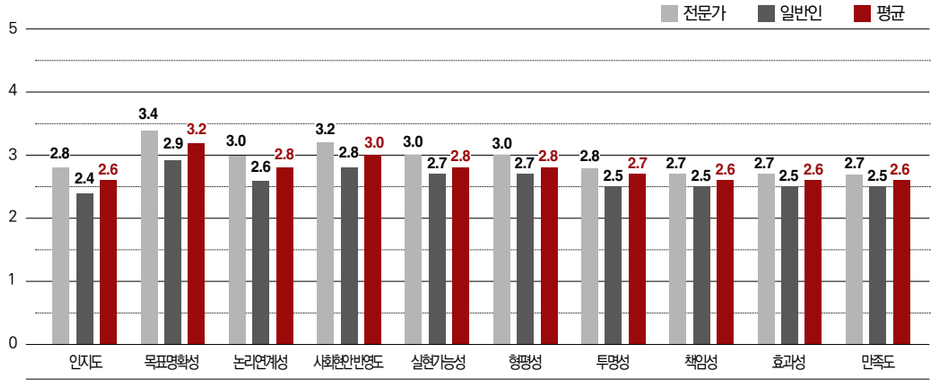
[그림 4-63]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0) 지방재정 개혁

지방재정 개혁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2.8점, 일반인 2.4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문가는 30.0%, 일반인은 17.0%이다. 반면에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문가 44.0%, 일반인 50.2%로 나타났다. 결국 지방재정 개혁에 대한 정책 인지도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낮은 편이다. 그리고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지도 격차는 상당히 크다. 지방재정 개혁은 정부 내부 혁신 정책이다. 따라서 일반인의 인지도가 낮은 점은 쉽사리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집단의 44.0%가 지방재정 개혁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정책 소통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함의한다.

[그림 4-64] 지방재정 개혁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은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각각 3.4와 2.9로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지방재정 개혁 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가 일반인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이러한 차이가 정책의 목표명확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0점을 그리고 일반인은 2.6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목표명확성보다 점수는 약간씩 낮지만,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집단별 인식은 목표명확성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전문가와 일반인은 지방재정 개혁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각각 3.2점과 2.8점의 점수를 부여했다. 지방재정 개혁이 정부 내부의 혁신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인식 격차가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지방재정 개혁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0점, 일반인은 2.7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도 특히 노동개혁 등의 경우보다는 높은 점수이다. 지방재정 개혁이 특별한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수준의 점수가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지방재정 개혁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와 일반인은 각각 3.0과 2.7점을 부여하였다. 지방재정 개혁의 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별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지방이전 재정의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이 형평성과 관련하여 큰 함의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고려할 때,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 보통 수준의 응답이 나온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현상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은 각각 2.8과 2.5점을 부여하였다. 정부혁신의 일환인 지방재정 개혁 정책의 특성상 민주성과 투명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지방재정 개혁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은 각각 2.7과 2.5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수는 정책의 특명성에 대한 평가와 유사하다. 비록 정부 내부의 지방재정 관리에 관한 정책일지라도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그의 책무성에 대해 보통 이하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정책 개선에의 필요성이 있음을 함의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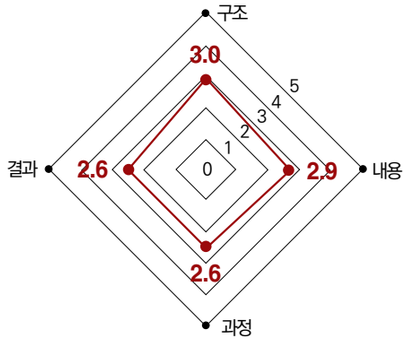
지방재정 개혁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는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일반인은 2.5점을 부여하여, 두 집단 모두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지방재정 집행과 지방공기업 운영에 있어서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시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전문가와 일반인은 지방재정 개혁 정책이 과연 효과적일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지방재정 개혁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2.7점, 일반인은 2.5점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책의 구조와 내용, 현안 반영도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도 정책의 책임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나타냈는데, 정책의 만족도도 책임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재정 개혁 정책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일반국민에 비해 모든 측정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목표명확성, 논리적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등 정책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에 비해 눈에 띠게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책임성과 효과성 그리고 만족도에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의 평가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별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0), 내용(2.9), 과정(2.6), 결과(2.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65] 지방재정 개혁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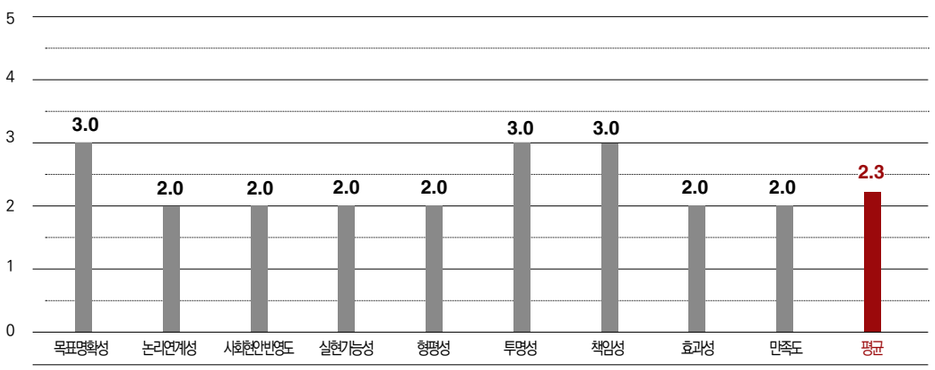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가) 정성평가 결과

(1) 금연종합대책

금연종합대책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높은 흡연율 감소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2014년 9월 11일 발표되었으며, 동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을 통해 2015년 1월부터 건강증진기금이 인상되어 결과적으로 담뱃값이 대폭 인상되었다. 그러나 경고그림 삽입 의무화 등의 정책 내용을 담고 있는 동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이 낮은 평가를 받았고, 실현가능성, 효과성과 만족도 역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담뱃값 인상이라는 가격 정책이 흡연율 감소에는 큰 효과가 없으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켜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림 4-66] 금연종합대책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2014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인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과 이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함'으로 그 목표를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흡연율 감소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근거로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효과를 명시하고 있는 등 정책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금연종합대책에 따르면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담뱃값 인상 및 물가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가격정책 및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의무화,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금연 치료 및 지원 확대 등의 비가격 정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된 담뱃값 인상 폭이 담배 판매를 통한 정부 수입 극대화 지점에서 결정되어 흡연율 감소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전자담배 등 유사 흡연 수단은 담뱃값 인상에서 제외되는 등 흡연율 감소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이 미비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의무화 등의 비가격 정책이 입법 과정 지연으로 인해 가격정책과 동반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우리나라의 높은 흡연율과 흡연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은 OECD 최고 수준으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금연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금연종합대책 발표의 맥락을 살펴보면, 높은 흡연율이 특별히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경기 침체로 인한 정부의 세입 감소와 재정적자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상황에서 금연종합대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흡연율 감소가 아닌 정부의 세입 증대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서 금연 관련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역시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에 대한 낮은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비록 2015년 예산안에서는 금연 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 등 흡연 예방사업,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 장기흡연자 단기금연캠프, 저소득층 금연치료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예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는 가격 정책과 동반되지 못했고, 담배 광고의 포괄적 금지 정책 역시 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책대안이 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과 조직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흡연에는 중독성이 있어 가격 인상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낮고, 따라서 담뱃값 인상은 상대적으로 흡연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로 연결된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정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의 금연으로 연결되어 저소득층의 건강 불평등 격차 개선에 기여한다는 논거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 폭이 담배 판매량 감소를 불러올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소득이 낮은 실업자와 노인, 건설노동자, 군인, 최저시급 노동자,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은 담배 지출액 증가로 식료품비, 건강관리비 등 기타 지출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결국 담뱃값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현행 금연종합대책은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금연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의견수렴 등의 입법예고 절차가 준수되었다는 점에서 보통으로 평가하였으나, 흡연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사회적 비판 역시 존재한다.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정책의 당위성과 목표, 수단에 대한 합의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면, 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은 분명한 정책 목표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관리 및 책임성 소재는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금연종합대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가격 정책 이후에도 비가격 정책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에 기반한 후속 대책이 요구되나, 실제로는 담뱃값 인상이라는 가격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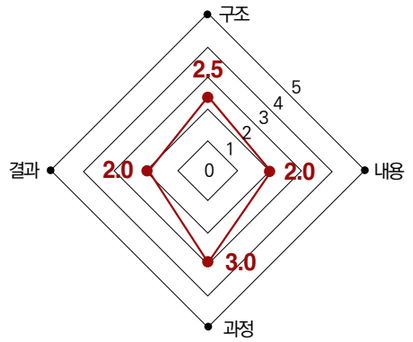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배 판매량은 인상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의도한 정책 효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과 같은 징벌적 가격 수단은 일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비가격 정책과 동반되지 않으면 결국 흡연자가 인상된 가격에 적응하여 담배 소비량은 다시 증가한다. 결국 가격 인상과 함께 흡연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병행되어야 의도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은 가격 정책 위주로 비가격 정책이 동반되지 않아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는 점에서 효과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흡연자의 경제적 부담을 늘렸으면서도 결국 담뱃값 인상 이전 수준으로 담배 판매량이 회복되었음을 감안하면 정책 만족도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연종합대책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정(3.0), 구조(2.5), 내용(2.0), 결과(2.0)이다. 전문가 정성평가에 있어서 다른 정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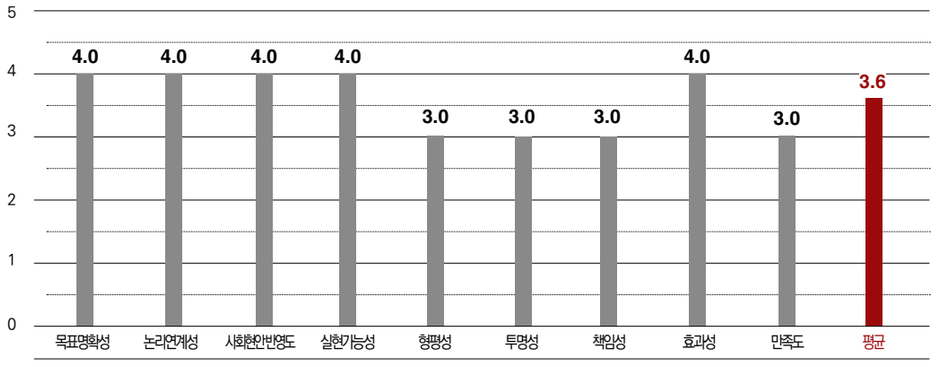
[그림 4-67] 금연종합대책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은 기존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하여,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특별 지정,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목표의 명확성과 정책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효과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4-6]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2014년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르면, 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개별적인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통합·강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금융사기 피해 건수 및 피해액 축소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금융사기의 대포통장 근절, 통장개설 사실 통지 의무화, 의심계좌에 대한 신속지급정지제도, 인출 지연제도 및 한도 축소, 의심거래 추적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예방에서 사후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망라하는 대책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또한 금융사기 척결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권, 경찰청 등 유관 부처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일반인의 예방의식 제고 및 참여형 감시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 간의 논리적인 연계가 비교적 잘 갖춰졌다고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의한 피해 금액이 2012년 1,154억 원에서 2014년 2,16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 현안에 대한 적실성이 높은 정책으로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기존에 실시되었으나 예산 확보 미흡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었던 제도(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예산 확대와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사전-사후 간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제도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주도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라 실제 보이스피싱 범인 녹취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 및 시민 참여 강화 역시 긍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효과가 특정 계층이 아닌 금융거래 이용자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사기 척결 대책이 사회적인 형평성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는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금융당국, 경찰, 금융사 등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전문가 집중토론회를 개최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운영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업로드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실무 전문가 및 일반인의 참여와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와 시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통해 환류 체계가 작동하였고,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책임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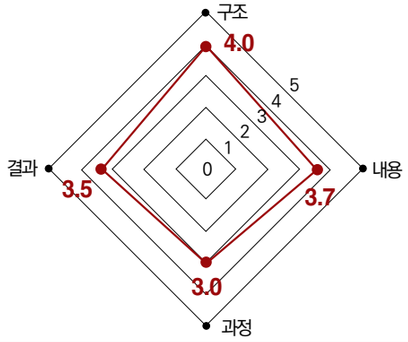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금융사기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피해자금 인출 지연 등의 조치를 통해 최초 피해금 대비 환급금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결국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대포통장 근절 등의 조치로 인해 금융거래 이용자들에게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한 홍보 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민의 순응도가 높고 실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4.0), 내용(3.7), 결과(3.5), 과정(3.0)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정책의 구조와 내용, 결과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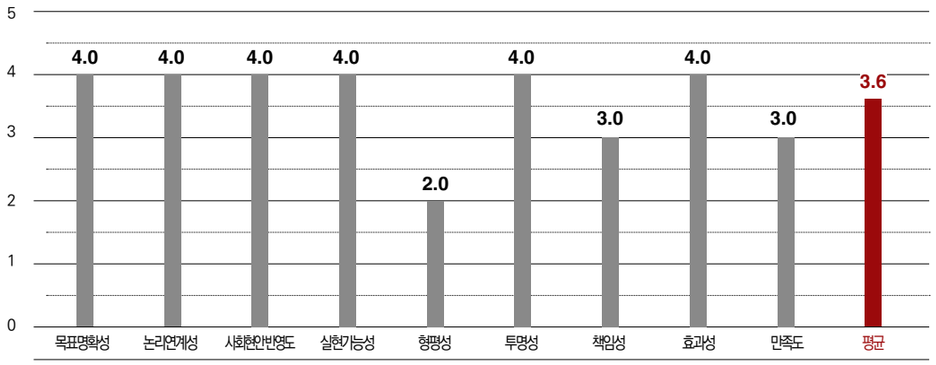
[그림 4-69]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3)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정책

이 정책은 소득계층·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구현의 일환으로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정책을 통해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목표명확성, 논리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민주성, 효과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4대 중증 질환과 그렇지 않은 질환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제도 자체의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70]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정책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경제적 부담이 높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 3대 비급여항목(선택진료, 상급진료비, 간병비)에 대한 국민부담 축소라는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의료비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대안을 보면,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종전 대비 축소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형 병원의 일반 병상을 확대하며,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포괄간호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현재 중증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의 원인인 선택진료와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는 것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리적 연계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료 확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부재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건강보험의 보장율이 2006년 이후 정체되어 있고, 일종의 풍선효과로 인해 비급여 진료비가 급증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의료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독점적 성격에 의해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실현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예산 측면에서 검토하면,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은 2014년 시행 직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 중단 위기가 있었고, 미지급한 의료비 120억 원에 대하여 2015년에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선별급여를 도입하여 향후 비급여 진료 증가 추세를 차단했다는 것과 나아가 모든 의학적 치료에 대한 급여화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선별급여 제도를 관리할 만한 인프라 측면에서의 보완이 요구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와 높은 치료비가 요구되는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만, 질환별 보장성 강화 전략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4대 중증 질환과 기타 질환을 구분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책 시행 이후 4대 중증 질환과 기타 질환 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격차는 오히려 더 확대되었다.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정책은 4대 중증 질환을 앓는 저소득층 환자와 기타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 간의 형평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소통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책 입안 및 시행 과정에서 4대 의료 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책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보건복지부 주최로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현황과 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제도의 효과와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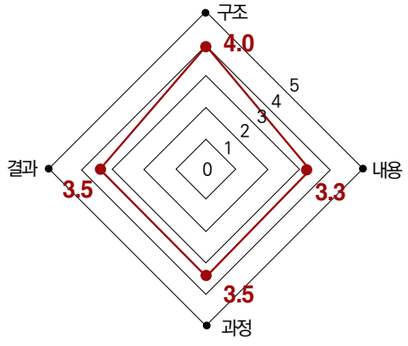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선택진료비의 부담이 2012년 대비 35% 가량 줄어들었으며, 선택진료비가 진료비의 15~60%로 제한되어 직접적인 의료비 경감과 연결되었다. 실제로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감소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를 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환자가 자비로 부담해 왔던 과도한 의료비 경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의료비 부담 경감은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과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 상태에서의 개선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축소 역시 정부의 정책 대안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과 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항목 확대 추세와 맞물려 건강보험 보장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정책의 만족도 측면은 보통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비교하면 정책의 구조(4.0), 과정(3.5), 결과(3.5), 내용(3.3)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정성평가에서 기타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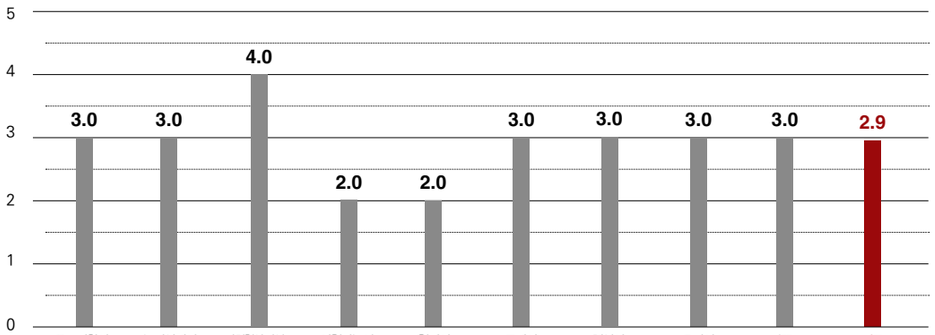
[그림 4-71]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정책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4)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지원,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사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 인력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 개발,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통해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을 통한 아동의 건전한 발전과 부모의 선택권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 현안 반영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실현가능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4-72]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제 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0~5세 전 계층에 대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품질 강화, 보육교사 자질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육 여건 조성,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등 6개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보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확대 등과 같이 비교적 명확한 수치로 정의될 수 있는 목표와 함께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등과 같은 장기 과제가 혼합되어 제시되고 있어, 정책 목표의 명확성 측면은 보통으로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양육 부담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보육의 사회화 자체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육인력의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 개발,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등의 정책대안은 정책 목표와의 논리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육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의미하기보다는 기존의 민간 위주 보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 확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아동 발달과 사회투자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보육 환경 개선은 사회 현안으로서 그 중요성과 적실성이 높은 정책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적정한 예산 수준의 확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정책의 도입 단계부터 재정 부담의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분담이 장기간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이 실현된 측면이 있다.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 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육 정책에 대한 역할 분담 및 예산 확보 측면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은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정책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전업주부 0~2세 자녀에 대한 무상보육 시간을 제한하고, 종일 무상 이용을 위해서는 취업·구직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정책 등이 발표되면서,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육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현장의 요구와 현실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형평성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제제1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인 새싹플랜(2006-2010)과 이를 수정·보완한 아이사랑플랜(2009-2012)의 성과와 한계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며, 또한 단순한 양적 지원 확대에서 벗어나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 강화와 지원과의 연계,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기조의 전환을 통해 책무성을 확보하려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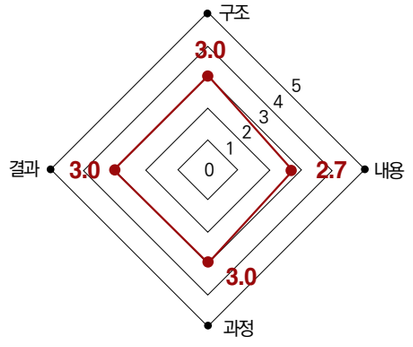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 CCTV 설치 등을 통한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등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보육정책의 민간 공급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민간부문 보육 서비스의 질이 자동적으로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없이 근본적인 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가가 쉽지 않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남아 있다. 비록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그리고 정책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적정한 예산 확보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책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평가를 영역별로 비교하면 정책의 과정 (3.0), 결과(3.0), 구조(3.0), 내용(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의 내용 측면에서 보통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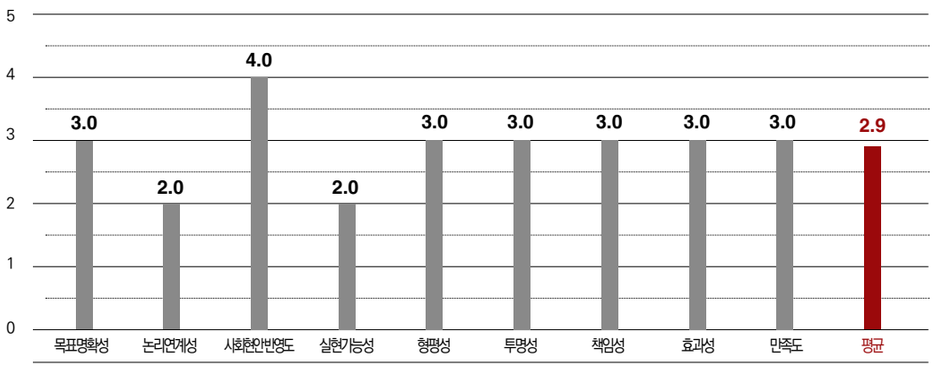
[그림 4-73]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은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존의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의 문제점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지역사회 복지 자원과의 연계 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정책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은 사회현안 반영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및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림 4-7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그동안의 단편적인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 검토와 종합적인 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따른 대책 발표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피해아동에 대한 조기발견 및 보호를 통해 아동의 권리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목표는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를 위한 정책대안들이 전체적으로 신고 의무자의 범위 확대, 아동복지법상 의무 규정의 이행 관리 강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통제와 처벌 위주라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조기 발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와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아동 학대는 학대 행위자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보호자인 경우가 많아 처벌 위주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학대받은 아동을 원 가정에서 완전하게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를 훈육의 일환으로 관대하게 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을 위한 사회적 홍보 및 교육 등 예방 측면의 강화가 필요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심각한 아동 학대 사건의 발생이 지속되면서 아동 학대 문제가 전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동시에 아동 인권 보호 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지역아동보호기관을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에 아동보호 전문 기관은 50여 개소에 불과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아동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제도와 예산 측면이 여전히 미흡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라는 정책이 특정한 사회 계층에 대해 유·불리한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가 많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피해 아동에 보다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아동학대 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받아온 만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통과 홍보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은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네트워크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정책결정과 집행의 책무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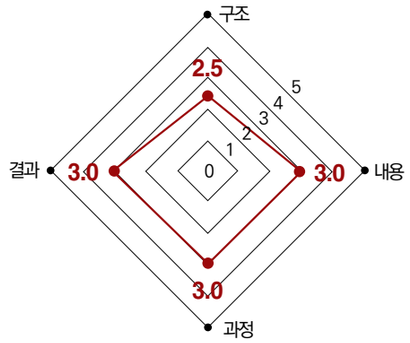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학대 판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해체 증가 등의 원인과도 무관하지 않으나, 기존에 신고 되지 않았던 아동학대 사건이 정책의 효과로 인하여 더 많이 드러나고 아동보호기관이 각 신고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확대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고의무자 확대나 인식 개선 등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아동 학대에 대하여 친권자 중심의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 지속적인 의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 대책의 실시 이후 아동 학대 신고와 학대 판정이 증가되었으나, 정책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하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내용(3.0), 과정(3.0), 결과(3.0), 구조(2.5) 순으로 나타났는데, 종합 대책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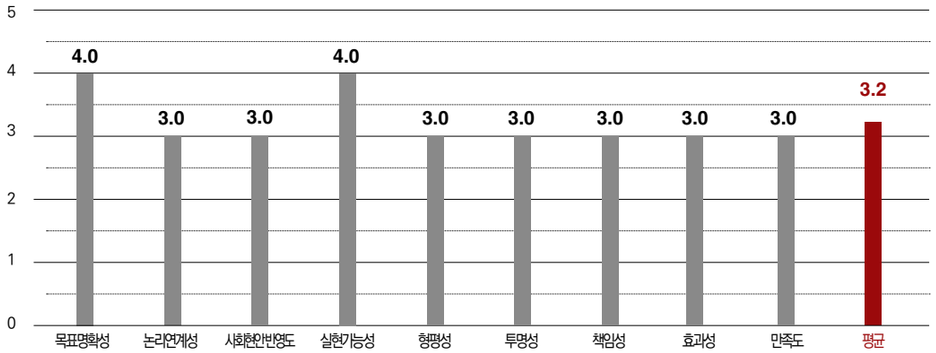
[그림 4-7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2013년 5월 관계부처(국토부□교육부 등)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기획단 운영을 통해 개편방안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2013년 12월 「주거급여법」이 제정되어 2014년 7월에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2014년 12월 9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라는 두 목표를 지니고 있고, 이미 실행되고 있어 목표명확성과 실현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림 4-7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빈곤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소득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지원되던 모든 급여가 중단되어 일을 통한 자립 유인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노정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범위 등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 지적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편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상당히 명확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기존의 최저생계비에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전환하고,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으로 전환하고, 급여 간 연계·통합 강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추구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며,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추가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담았다.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2013년 5월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기획단 운영을 통해 개편방안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2013년 12월 「주거급여법」이 제정되어 2014년 7월에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4년 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간담회 및 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의 수렴 및 합의를 도출하여, 2014년 12월 9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정책의 기획부터 의견수렴 및 합의도출, 그리고 법률안 개정과 정책집행에 이르는 과정이 상당히 무리 없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기존의 최저생계비에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부양의무자를 고려하여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며,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추가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고 판단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2014년 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간담회와 국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기획단을 조직하여,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확보했다고 판단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기획단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전문가적 책무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의견 수렴 및 합의 과정을 통해 정치적 책무성도 일정 수준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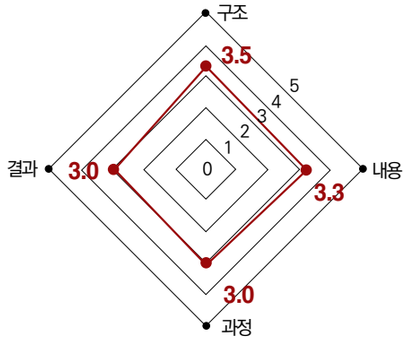
2015년 7월 총 131만 명에게 첫 급여를 지급하였다. 가구당 평균 현금 급여액(생계+주거)은 개편 전 40만 7천원에서 45만 6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을 2014년 88,245억 원에서 2015년 94,557억 원으로 증가시켰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2014년 2조 5,240억 원에서 2015년 2조 6,988억 원으로, 주거급여는 7,285억 원에서 1조 1,073억 원으로, 교육급여는 1,111억 원에서 1,353억 원으로, 의료급여는 4조 4,366억 원에서 4조 5,33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비록 급여 증가액의 규모가 4만 9천 원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정책의 시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 증가를 제공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 무슨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결과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급자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그럼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현금급여액의 조정을 통해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그 나름의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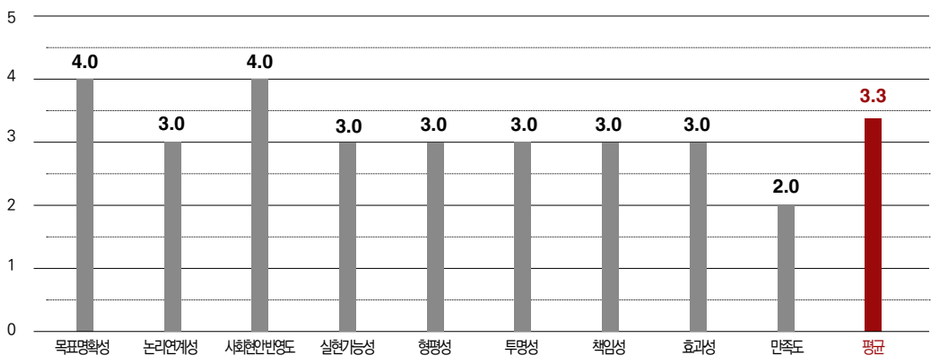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3), 과정(3.0), 그리고 결과(3.0)이다. 전문가 정성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정책에 비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4-7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7) 노동개혁

[그림 4-78] 노동개혁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정부는 2015년 6월 17일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014년 12월 23일 체결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을 토대로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기간제, 파견제 등 「비정규직법」 쟁점들에 대한 정치적 합의는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다. 이 정책은 목표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책의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낮은 점수를 얻었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 개 분야의 36개 과제로 구성된다. 추구하는 정책목표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책 구조의 측면에서 보아,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목표가 상당히 명확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노동시장 개혁 정책은 청·장년 간 상생고용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청년 고용 확대 대책 마련 등을 담고 있고, 원·하청 상생협력의 정책 대안으로 원청의 상생협력 노력 유도, 공정거래관행 정착, 공공조달의 역할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제고를 제시하고,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기간제와 파견제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36개 세부과제별 추진 일정도 제시하여 정책목표와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시한 정책대안의 인과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고 주도 담론이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급속한 인구 노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그리고 청년실업의 문제는 한국의 경제와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개혁은 어떠한 형태든 지금의 시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 정책이 제시하고 있는 5대 분야 36개 과제들의 실현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기간제와 파견제 도입과 같은 과제는 정치적 합의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혀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의 도입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개혁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보통인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기간제, 파견제, 임금피크제 등이 과연 얼마나 노동시장의 형평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와중에서도 세대 간 상생고용, 임금피크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배정되고 있고, 비록 크게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자원배분이 형평성 제고에 약간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노동시장 개혁 정책과정의 한 장소는 합의제 기관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다. 그리고 이 정책의 결정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책결정의 민주성은 일정 부분 확보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결정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의 방식과 내용이 얼마나 투명하고, 민주적인가는 더욱 지켜보아야할 문제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노동시장 개혁의 기구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및 전문가적 책무성을 일정 수준 확보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의견 수렴 및 합의 과정도 정책결정의 정치적 책무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결정의 장에서 벌어지는 정책 논의의 방식과 내용이 노동시장 개혁 정책의 예기적(anticipatory) 책무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해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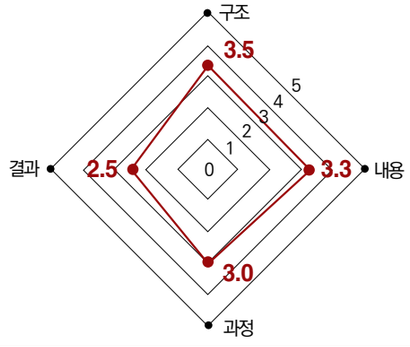
노동시작 개혁 과제들은 대체로 2015-6년에 그 시행이 개시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입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세대 간 상생 고용과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지원 사업을 위해 2016년 예산으로 619억 원을 배정하였고, 임금피크제 지원 예산을 2015년 320억 원에서 2016년 521억 원으로 증가시켰다. 국회에서의 노동시장 개혁 입법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입법을 필요로 하지 않은 과제들이 이미 일부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노동시장 개혁 정책이 무슨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리고 정책의 핵심 내용들은 입법화를 통해 시행될 수 있는데, 합의안이 국회에서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미진하여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시장 개혁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3), 과정(3.0), 그리고 결과(2.5)이다. 노동시장 개혁 정책은 전문가 정성평가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보다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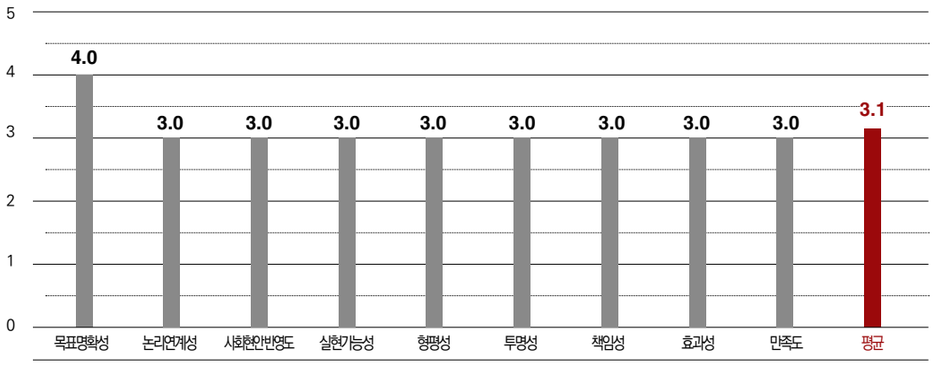
[그림 4-79] 노동개혁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8)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 정책은 목표명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기타 지표에서도 고루 양호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80]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해 양육비,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목표를 지닌다. 사업의 타겟 집단이 명확하고, 그의 목표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 목표명확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이다. 아동양

육비는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된다. 그리고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월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이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과 자립역량에 강화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나, 그 자체로 충분한 수준의 정책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이혼 등에 의한 가정해체 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부모자녀의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다.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사업은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사업으로서 사회현안 반영도가 인정된다고 보겠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저소득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사업의 재원은 복권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다만 양육 지원의 충분성이 부족하여 그러한 수준의 지원으로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사업의 비용은 복권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복권을 구매하는 국민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재원을 복권기금에서 충당하는 한,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사업의 형평성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부처 간 협업이 민주성을 반드시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은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보다 많은 의견수렴 및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렴과 조정을 통해 정책결정의 민주성은 일정 부분 확보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사업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수행된다는 점은 사업 기획과정에서의 조정과 확인을 강화시키고 사업의 책무성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재원이 정규 예산이 아닌 복권기금으로 충당되는 점은 사업의 책무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산 당국의 모니터링 및 환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사업의 책무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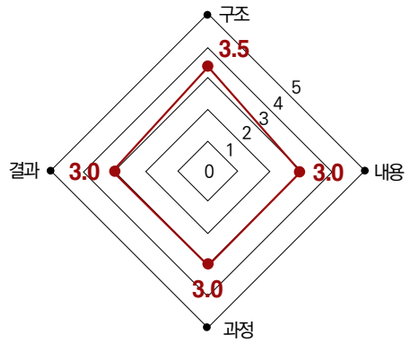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사업의 예산은 2014년도 515억 6천 4백만 원에서 2015년 724억 4천 2백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사업 예산의 증액이 정책의 효과성에 도움이 됨은 물론이지만,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사업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도 그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보겠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사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적 충분성이 다소 부족하다. 그러나 비록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지만, 복권기금을 그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부모자녀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 사업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0), 과정(3.0), 그리고 결과(3.0)이다.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사업은 평가 대상인 복지 분야 사업들 중에서 중상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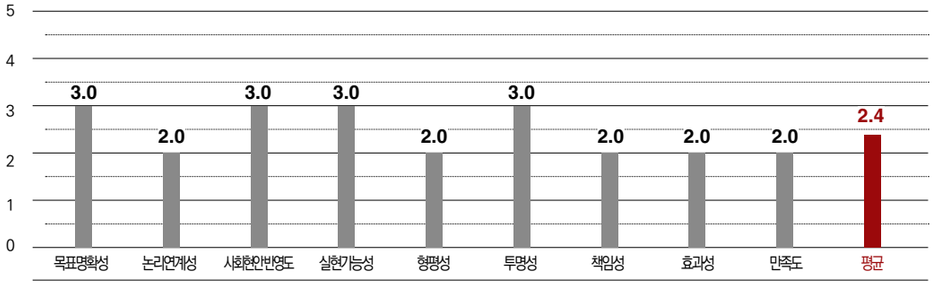
[그림 4-81]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9)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부는 세월호 사건이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인사행정기능을 안전행정부에서 분리하여 인사혁신처를 설립하였다. 그 이후 인사혁신처는 인사혁신의 세부 추진정책으로, 국민인재를 공직에 적극 초빙하고, 공무원과 민간의 쌍방 교류를 통한 공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목표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투명성 등에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나, 책임성과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림 4-82]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책의 이유는 소위 관피아 논란에 휩싸인 공직 개혁에 있다. 그러나 민간인재를 채용하고 공직을 개방하여 공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겠는지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의 정책목표명확성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책은 전직급 국민인재 경력채용제도의 도입, '스펙초월' 국민인재의 열린 채용 여건 조성, 다양한 국가인재 적극 발굴, 장애인·지역인재 등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공무원의 민간분야·국제기구 등의 진출 확대, 채용시험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충원방식들이 정부혁신을 위한 좋은 실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이 어떠한 인과성을 가지고 좋은 정부구현에 기여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혁신과 공직쇄신에의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는 인사정책이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는 공직 충원방식에 관한 정책으로 대체로 정부가 스스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정책에는 정실주의와 같이 국민이 특별히 싫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정책 방안들의 시행을 통해 과연 정책이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책은 형평성에 있어 커다란 함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스펙초월' 및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충원의 비례대표성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시험위주 선발보다 충원의 형평성이 약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은 공무원 충원방식에 관한 것으로 그에 대한 정책결정은 인사혁신처가 주도하였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방안을 만들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정책과정의 민주성은 보통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민간부문의 인력관리 전문가를 정책결정가로 초치하고 여러 내·외부 인사행정 전문가의 자문을 추구하여 전문가적 책무성을 제고했다고 판단한다. 다만 새로이 도입한 충원방식이 국정 운영에 있어 무슨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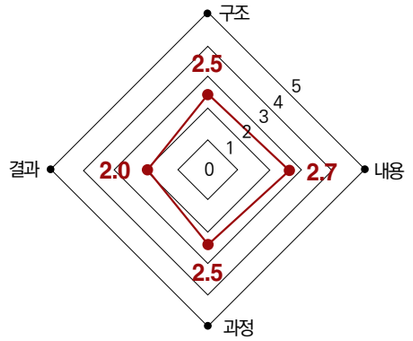
정책의 세부 방안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전문가 스카웃을 위해 채용절차 생략을 현재 가등급(실장급)에서 나등급(국장급)까지 확대하고 임기 제한 규정을 철폐하며,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편하고, 2017년까지 5급 이하 공채·경채 신규채용 비율을 5:5로 조정하고,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선발단위 및 채용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그리고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 주관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은 모두 공직혁신을 위해 충분히 시행해볼만한 방안들이다. 다만 이 방안들이 무슨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안들이 본래 의도했던 정부혁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책이 무슨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체계적 정책분석과 실제 무슨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결과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정책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겠다. 다만 이 정책이 공직충원에 적지 않은 변화를 추구하는 만큼 정책에 대한 형성평가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2.5), 내용(2.7), 과정(2.5), 그리고 결과(2.0)로,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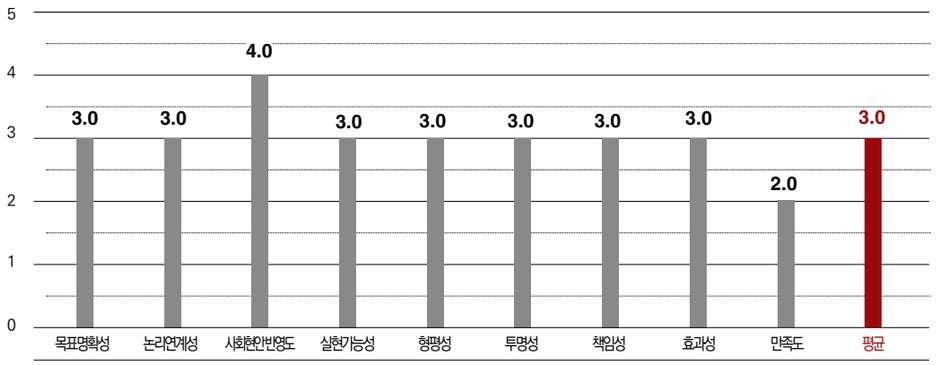
[그림 4-83]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10) 지방재정 개혁

지방재정 개혁 정책은 크게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재정정보 공개 강화, 지방공기업 혁신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방교부세 제도는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고자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지방교부세를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이 정책은 목표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 투명성, 효과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보통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나, 정책 만족도에 있어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림 4-84] 지방재정 개혁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지방재정 개혁의 목표는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교부세의 배분을 조정하고, 지자체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지방공기업의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방면의 지향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다만, 이러한 정책목표는 지방재정 관리에 있어 늘 존재해온 것으로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방재정 관리의 목표를 이번에는 과연 구체적으로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로드맵의 마련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정책의 목표명확성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교부세를 더 지원하기 위한 교부세제도 개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 그리고 구조개혁, 제도개혁, 부채감축을 통한 지방공기업 혁신은 나름의 인과성을 지니고 계획되었다. 다만, 이러한 세 방면의 노력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일들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소기의 개혁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고 생각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나라의 세금기반 확대가 쉽지 않고, 복지를 중심으로 한 지출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지방재정 건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 게다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재정 운용에 있어서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높다. 지방재정 개혁은 이러한 점에서 사회현안 반영도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행정자치부가 지자체를 통할하는 부처인 까닭에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높다. 아울러 정책의 내용에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올 사안도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안들의 시행을 통해 과연 정책이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지자체의 복지재정 수요에 대응하여 지방교부세의 배분을 조절할 경우, 정책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도 간접적으로는 재정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은 지방재정 운영의 혁신에 관한 것으로 그에 대한 정책결정은 행정자치부가 주도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방안을 만들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그리고 여러 지방재정 전문가들의 자문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정책과정의 민주성은 보통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재정 운용의 책무성 제고 자체를 큰 정책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 정책의 정책책무성은 일정 수준에서 이미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지방교부세 배분 개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시행, 공기업 혁신 노력 등이 지방재정 운영의 책무성에 실제로 무슨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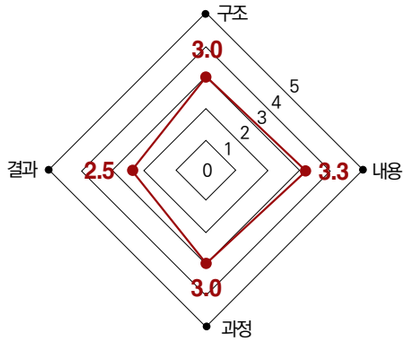
지방재정 개혁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지방공기업 개혁을 위해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경제 위축기능 감축, 지방공기업의 설립요건의 강화, 부실공기업 청산요건 절차 마련, 사업실명제 도입 등을 시행하려는데, 이와 유사한 노력은 처음이 아닌 것이다. 결국 도입한 정책 방안들이 무슨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정책 환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지방재정 개혁은 크게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의 정책방안이 무슨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정책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재정 개혁 정책이 무슨 결과를 낳을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볼 일이다. 다만, 지난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자동적으로 크게 제고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정책에 포함된 공기업 개혁 방안도 이미 시행해왔던 방안과 사뭇 다른 큰 폭의 변화를 만들 수 있을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간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0), 내용(3.3), 과정(3.0), 그리고 결과(2.5)이다. 이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정성평가 결과는 설문조사에 비해 다소 높았다.

[그림 4-85] 지방재정 개혁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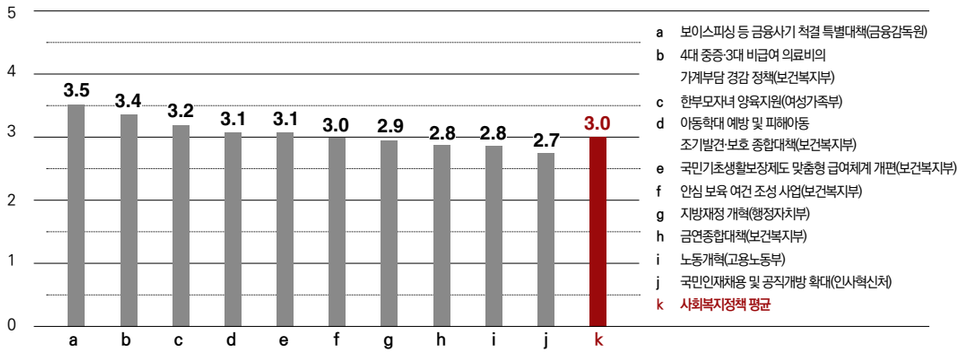


3) 평가결과 종합

가)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 합산

일반인과 전문가 설문조사와 전문가 정성평가를 거쳐 가중치를 계산하여 종합적으로 정책을 평가한 결과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10개 정책이 2.7점에서 3.5점까지 다양한 평가 결과를 나타냈다. 10개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86]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상 많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수반한다. 그런데 정책 집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과 제도적 준비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 정책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은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에 대한 비용과 혜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가 갈리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효과성과 만족도 측면에서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정책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이 근소한 차이지만 사회복지분야 정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정책의 만족도 측면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금융사기 척결 특별 대책이 명확한 목표와 타당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금융사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의견수렴 등을 더욱 확대하고, 정책 환류 시스템을 보완·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대 중증, 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 부담 경감 정책 역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형평성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질환 중심의 의료비 경감 대책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 경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정책도 앞선 두 정책에는 못 미치지만 다른 사회복지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은 사업의 목표 대상과 세부 추진사업의 내용, 지원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사회현안 반영도와 실현가능성, 형평성, 효과성 등에 있어 3.3점에서 3.0점으로 두루 고른 점수를 받았다. 특히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정책결정은 사업의 민주성과 책무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 보호 정책은 특히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대안들이 통제와 처벌, 가정에서의 친권자 위주의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친권자의 아동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의 근본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동 학대 사건의 특수성, 즉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완전하게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적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 학대 발견과 조사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응하여 개편이 이루어졌다.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달성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정책 기획에서부터 정책집행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보통(3점)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는 급여보장 수준의 현실화와 수급자 상황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돌아가도록 실행되고, 2015년 하반기부터 첫 급여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체감이 높아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시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실질적인 혜택 증가가 이루어졌지만, 급여 증가액의 규모가 5만원 수준이라는 점과 기초생활수급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의 효과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의 경우 사회현안 반영도와 정책목표의 명확성 측면에서 다소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다른 지표의 경우는 보통으로 평가받았고, 특히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타당하고 적

실성있는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프라의 미비, 그리고 형평성 측면에서의 비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육 정책에 대한 예산 마련과 정부 간 재정 분담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과 함께 인프라 확충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재정 개혁은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사회적 요구에 맞춰 지방재정구조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추진됨에 따라 사회현안 반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부 추진계획이 기존 계획과 얼마나 차별성을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논리적 연계성과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정책집행 결과와 그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분석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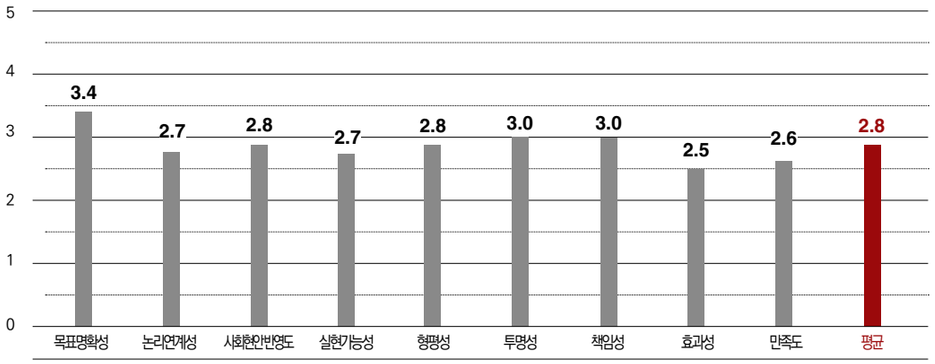
금연종합대책은 특히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만족도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금연종합대책이 담뱃값 인상이라는 가격 정책 위주로 시행되었고, 그나마도 전자담배가 제외되는 등 완전한 대책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담뱃값 인상이 정부의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는 점도 문제이다. 일시적인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친다는 점에서, 가격 정책 못지않게 홍보와 교육, 치료 등을 포함하는 비가격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등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대안 역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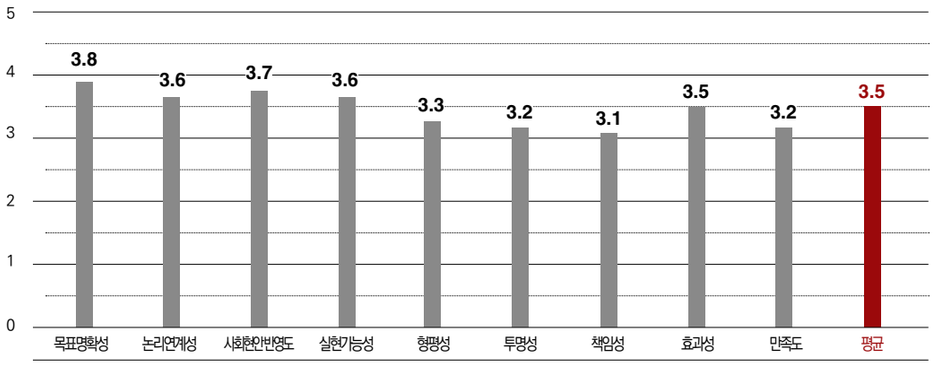
노동개혁은 명확한 목표 제시와 노동시장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당면 문제를 적실성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개혁방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법안 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정책의 실현가능성, 효과성, 만족도 등에 있어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범위와 규모가 크고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은 정책집행에 있어서 실현가능성과 책임성, 정책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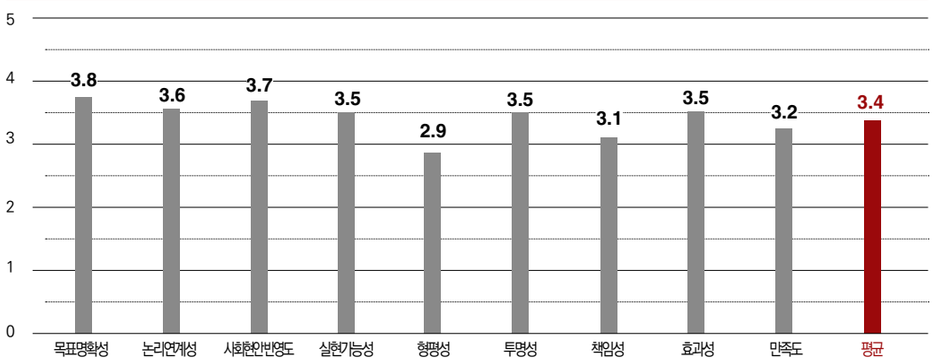
국민인재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책은 공직 개혁을 통한 구체적 변화 모습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목표명확성은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논리적 연계성과 실현가능성, 형평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 등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경력개방형 직위' 개편과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등과 같은 새로 도입한 충원방식이 국정 운영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공직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은 해당 정책이 좋은 정부 구현에 가져올 변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전반적인 평가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금연종합대책,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종합대책,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 지방재정 개혁, 노동개혁 등 정책의 범위와 규모가 큰 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정책,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등 정책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범위와 규모가 큰 정책의 경우 정책의 목표가 더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정책 대안과의 논리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으며,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넓은 범위와 규모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책의 만족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기 쉬운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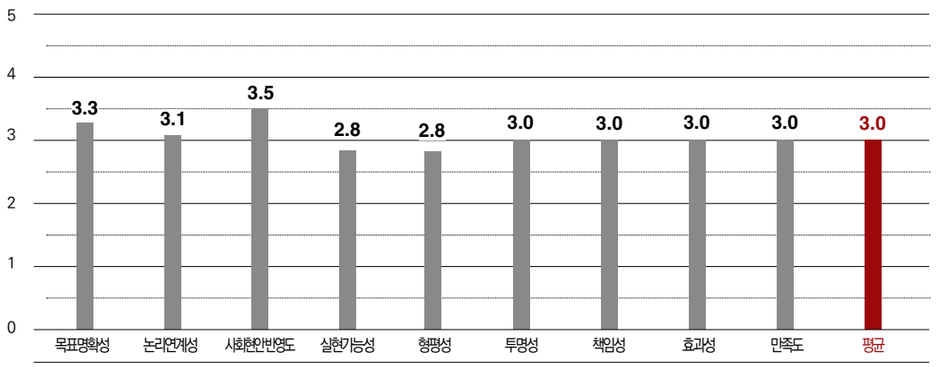
[그림 4-87]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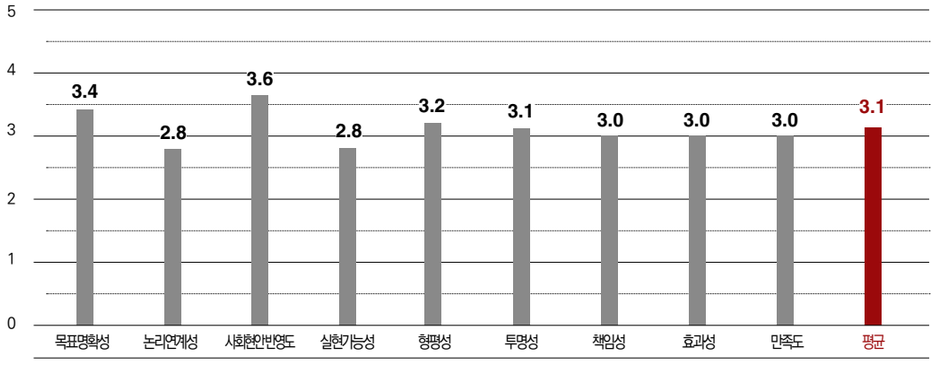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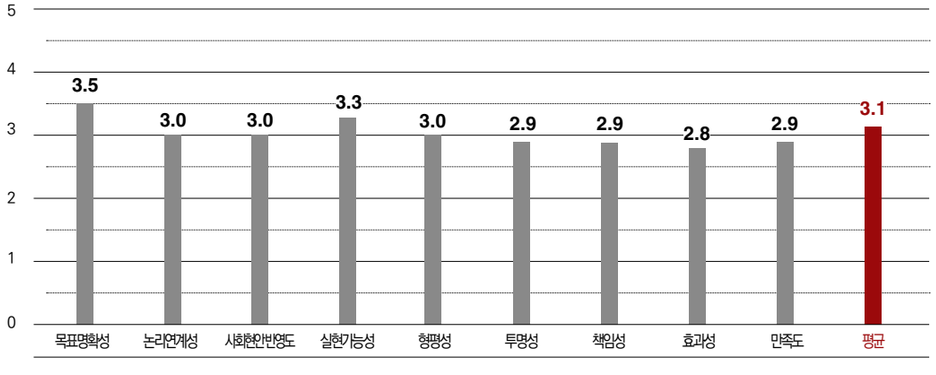
안심 보육 여건 조성사업(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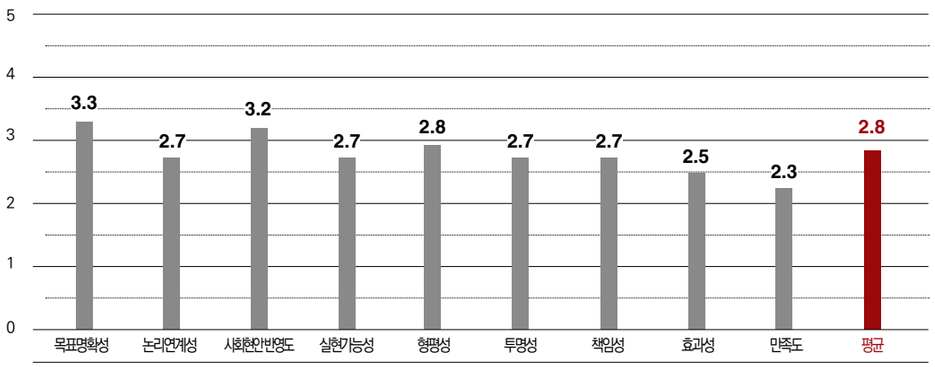
아동학대 예방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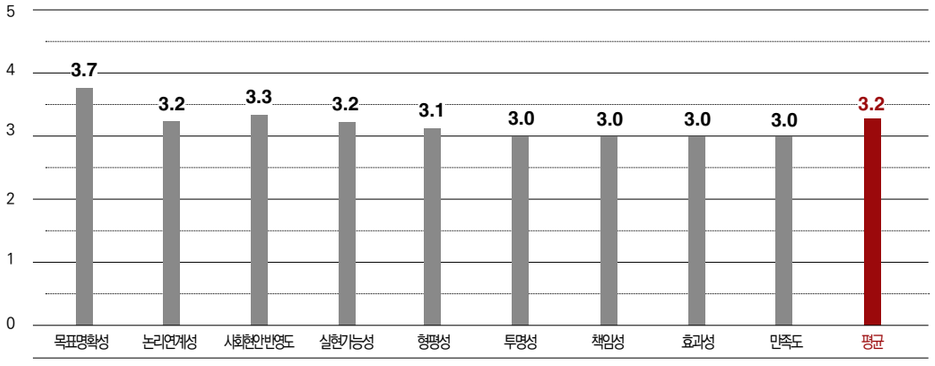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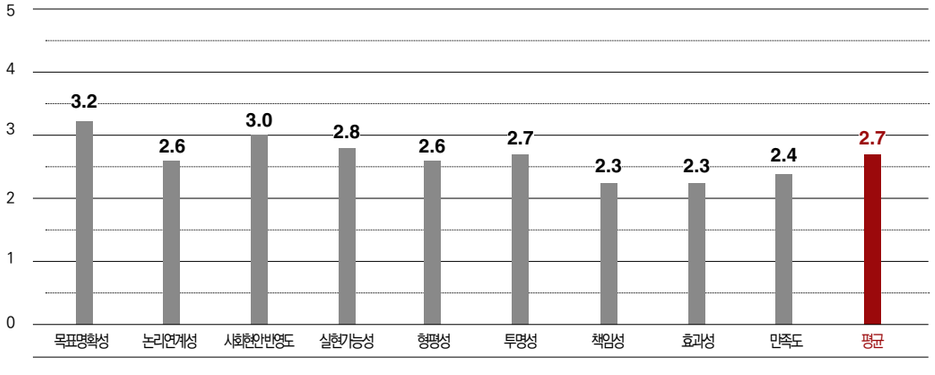
노동개혁(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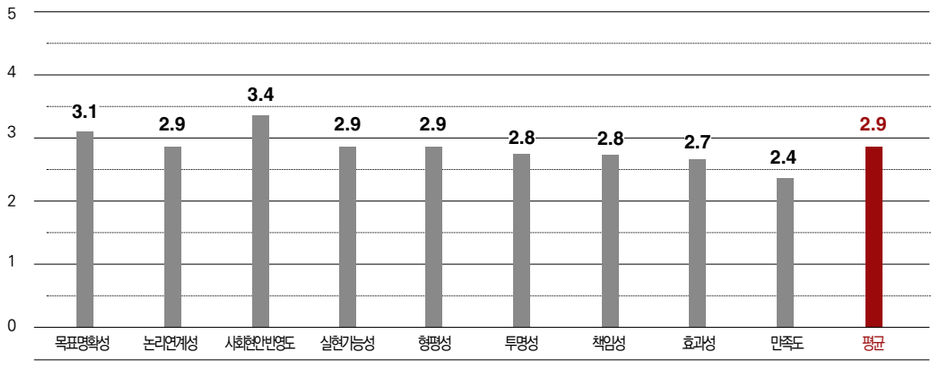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여성가족부)



국민인재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인사혁신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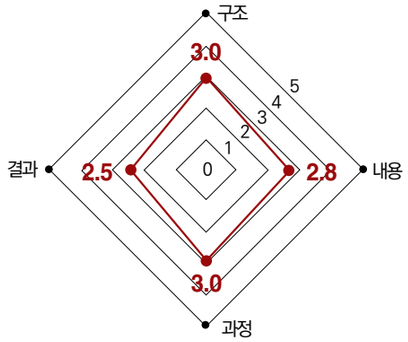


지방재정 개혁(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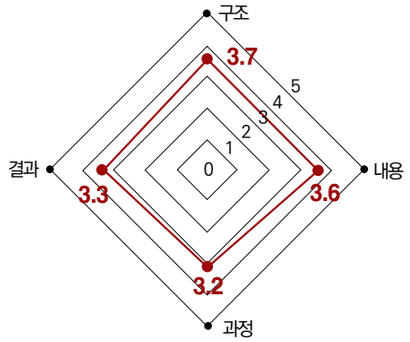


[그림 4-88]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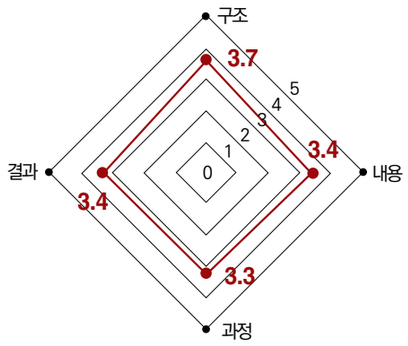
금연종합대책(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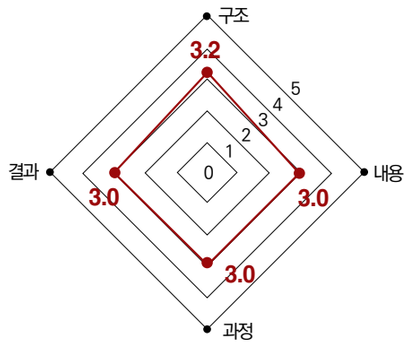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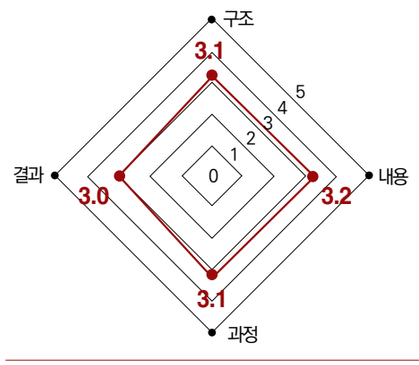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정책(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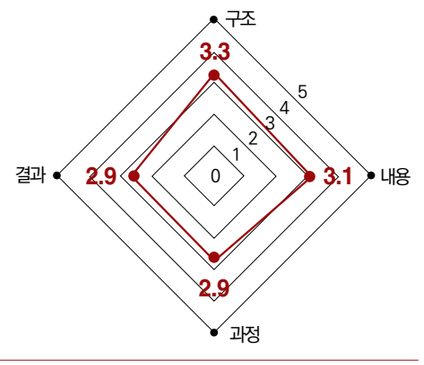
안심 보육 여건 조성사업(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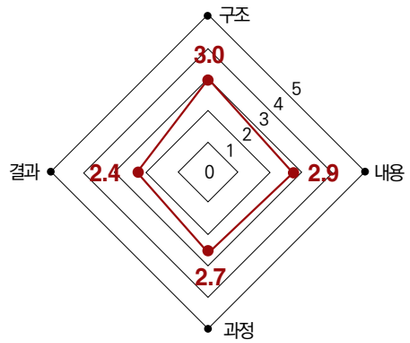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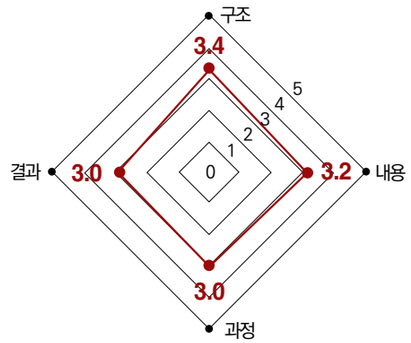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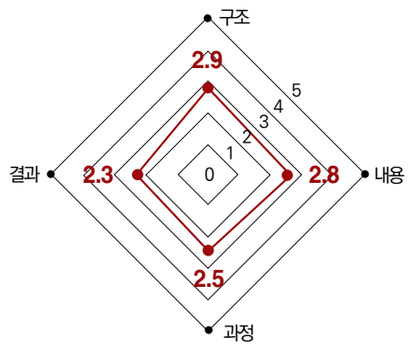
노동개혁(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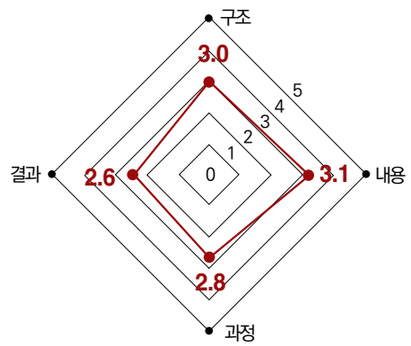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여성가족부)



국민인재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인사혁신처)



지방재정 개혁(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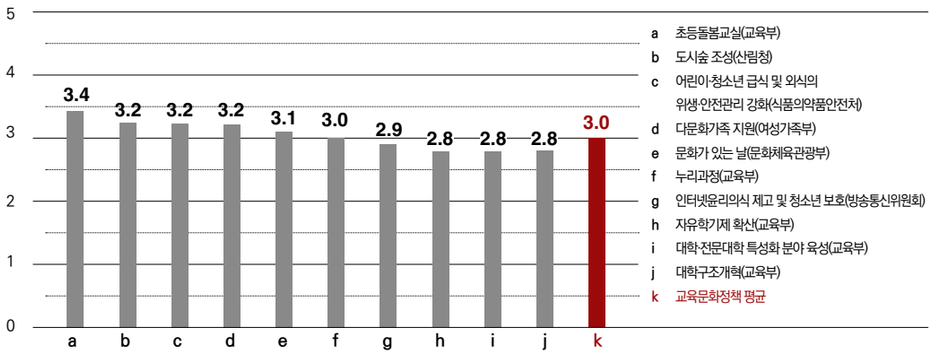
3. 교육문화정책 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결과 종합

교육문화 분야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10개 정책은 다음과 같이 3개의 순위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상위집단(초등돌봄교실, 도시숲 조성, 어린이·청소년 급식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목표명확성 및 논리연계성(정책구조), 사회현안 반영도 및 형평성(정책내용)이 높게 평가되었고, 정책내용 중에서 실현가능성과, 정책과정(투명성, 책임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2) 중위집단(문화가 있는 날, 누리과정): 목표명확성 및 논리연계성(정책구조),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실현가능성 및 형평성(정책내용), 정책과정(투명성, 책임성)에 대해서는 평균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책결과(효과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하위집단(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보호, 자유학기제 확산,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분야육성, 대학구조개혁): 정책구조(목표명확성 및 논리연계성)에 대해서도 다른 정책들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정책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및 정책과정(투명성, 책임성)의 측면에서도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정책결과(효과성, 만족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4-89] 교육문화정책 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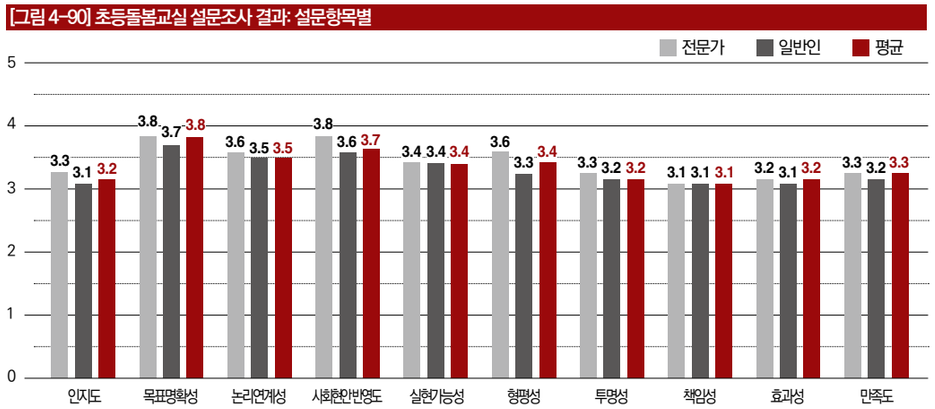


나) 정책별 설문조사 결과

(1)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개별지표인 인지도에서 일반인의 평가점수가 3.1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정책의 수요를 위해서 해당 정책의 인지도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지표인 책임성에서 모든 개별지표 중 가장 낮은 평가 점수가 나왔고, 전문가 및 일반인의 평가가 동일하게 낮은 정도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해당 정책의 과정과 결과 측면에 있어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해당 정책에 대해서는 인지도를 제외하고는 개별지표 모두 전반적으로 3.0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로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해당 정책의 목표명확성에 있어서는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정책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필요한 경우 환류를 통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

[그림 4-90] 초등돌봄교실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은 각각 3.8과 3.7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은 각각 3.6과 3.5로 목표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 다음으로 가장 긍정적인 개별지표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현안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반영한 정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8, 일반인 집단은 3.6으로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정책수요에 부응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일반인 모두 동일하게 3.4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과 마찬가지로 정책목표 및 사회현안 반영도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 내용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3.6, 일반인 3.3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집단 간 평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집단인 일반인들의 평가가 낮은 것으로 보아 해당 정책에 대해 정책수혜 측면에서는 일반인들이 다소 유보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 3.3, 일반인 3.2로 모두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책수행 과정에서 참여의 기회는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1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와 유사하게 정책 수행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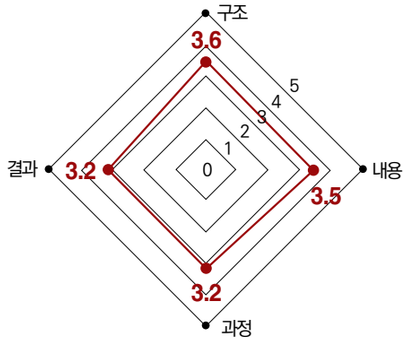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3.2, 일반인은 3.1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두 집단 모두 해당 정책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알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전문가는 3.3으로 일반인은 3.2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두 집단 모두 해당 정책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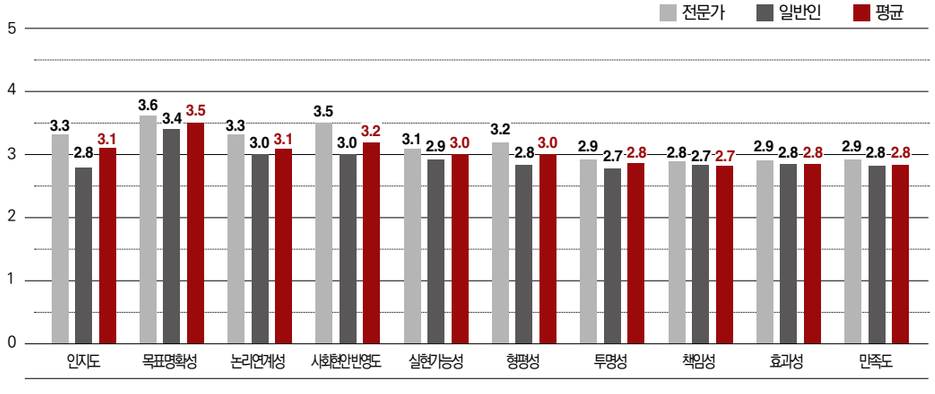
[그림 4-91] 초등돌봄교실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 누리과정

누리과정 정책은 모든 개별지표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인지도와 사회현안 반영도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의 인지도에 비해 일반인의 인지도가 2.8로 매우 낮았으며,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인식 또한 일반인은 해당 정책에 대해 전문가에 비해 3.0의 낮은 평가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개별 평가지표인 투명성과 책임성, 효과성과 만족도에서 전문가 및 일반인의 평가가 동일하게 3.0이하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해당 정책의 과정과 결과 차원에 대해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해당 정책의 목표명확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효과성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 4-92] 누리과정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3.6으로 높게 평가하였고 일반인도 3.4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각각 3.3, 3.0으로 평가하여 다소 긍정적이기는 하나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비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은 각각 3.5와 3.0으로 평가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일반인 집단의 평가가 크게 낮은 것으로 보아 누리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았던 맥락을 감안하면 기대보다는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응답자 집단 각각 3.1, 2.9로 전문가 집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일반인 집단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사회현안 반영도에서 일반인 집단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실현가능성 또한 낮은 것으로 보아 일반인 집단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볼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 내용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3.2, 일반인 2.8로 평가되어 이 정책의 수혜 범위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 집단이 느끼기에 다소 유보적임을 알 수 있다. 목표명확성과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등 정책설계의 차원에 비해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민주성에 대해서 전문가 2.9, 일반인 2.7로 평가되었고 평균이 2.8에 그쳐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일반 시민에 대한 해당 정책의 정보공개 및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2.8, 일반인 2.7로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추진체계의 확립 정도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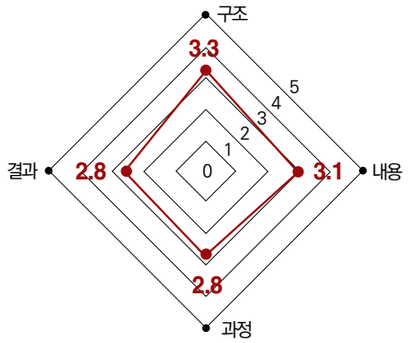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전문가 2.9, 일반인 2.8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목표명확성과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등 정책설계의 차원에 비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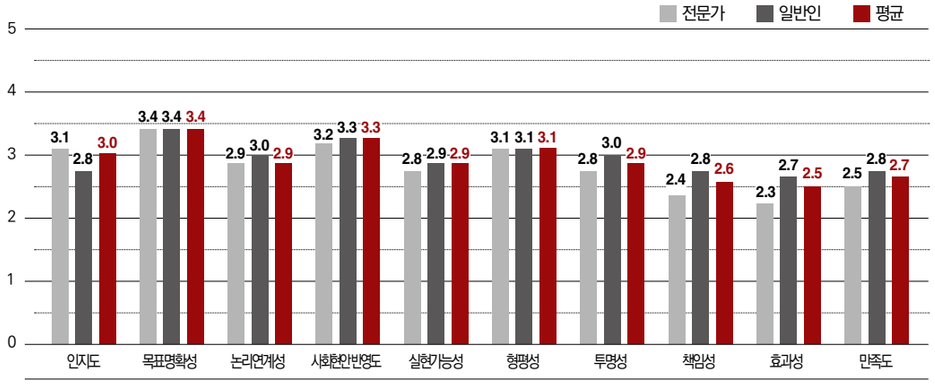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전문가는 2.9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들도 2.8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4-93] 누리과정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3)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

[그림 4-94]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정책은 목표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을 제외한 모든 개별 평가지표에서 3.0이하의 낮은 평가는 물론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이 비슷하게 낮은 평가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이 세 개별 평가지표 모두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의 평가가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인지도의 경우 전문가의 인지도는 3.1이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2.8로 나타나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에 차이가 있었다. 일반시민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 지표에서 평균 3.0이하의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해당 정책의 정책결과의 차원에 대해서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시민들 모두 3.4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별 지표 중 정책목표의 명확성의 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해당 정책의 정책방향에 대한 뚜렷한 지향목표와 차별성을 알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각각 2.9, 3.0으로 평가하여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책목표에 비해 정책수단의 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시민 각각 3.2, 3.3으로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터넷문화가 매우 발달한 현실인식을 반영한 평가로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응답자 집단이 각각 2.8과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응답자들이 정책 대안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평가에 이어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 내용의 형평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응답자들이 모두 3.1로 평가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수혜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평등하게 분배가 이뤄지고 있고, 형평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각각 2.8, 3.0으로 전문가 집단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반인 집단 또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전문가 집단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가의 평균이 2.9로 부정적인 결과로 보아 이 정책은 정보공개 및 참여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각각 2.4, 2.8로 모두 낮게 평가하여 앞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정책추진 체계의 확립 정도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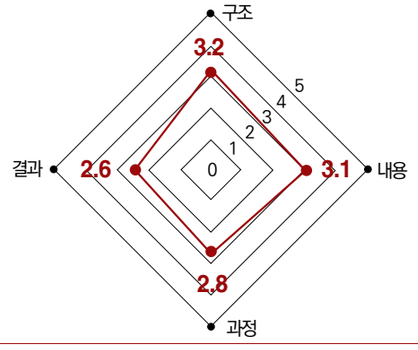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응답자 집단 각각 2.3, 2.7로 평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해 전문가는 2.5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시민도 2.8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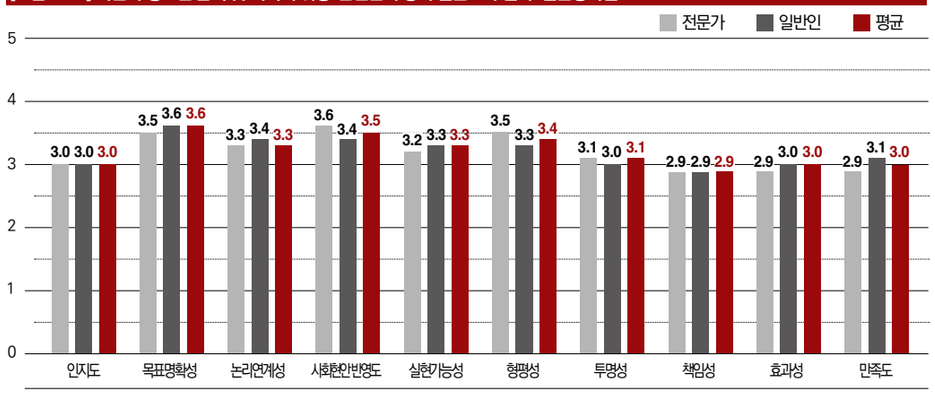
[그림 4-95]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4) 어린이·청소년 급식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어린이·청소년 급식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전문가와 일반인 응답자 집단 모두 3.0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보였으나, 인지도 측면에서 지표 중에서도 책임성 다음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나타냈다. 목표명확성 지표가 평균 3.6인 반면 인지도는 3.0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방안을 전문가 및 일반인 모두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부정적인 지표로는 책임성으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2.9의 낮은 평가로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효과성, 만족도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 응답 집단의 평가가 2.9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에 있어 정책결과의 차원에 대해서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96] 어린이·청소년 급식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 3.5, 일반인 집단 3.6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각각 3.3, 3.4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응답자 집단이 정책대안 설계 품질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6로 평가하였고 일반시민은 3.4로 평가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2로 긍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이고 일반인 집단 또한 비슷하게 3.3에 머무르고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 내용의 형평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응답자들이 각각 3.5와 3.3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여 정책수혜의 범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이 각각 3.1, 3.0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인식하고 있다. 이 정책도 역시 정보공개 및 참여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대체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목표명확성과 논리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등의 개별지표들과 상대적인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지표에 대한 강화 방안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2.9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책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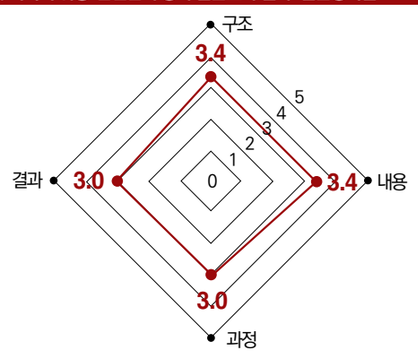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전문가 응답자 집단이 2.9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인 응답자 집단도 3.0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평가결과가 3.0으로 해당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이 평가결과는 다른 개별지표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낮은 평가결과로 정책의 설계차원의 측면과는 달리 책임성 및 효과성 등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의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효과성과 유사하게 전문가의 평가는 2.9로 낮았고 일반시민의 평가는 3.1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나 평균 결과는 3.0이었다. 따라서 정책결과의 효과성과 마찬가지로 만족도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효과성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설계차원의 측면과는 달리 책임성 및 효과성, 만족도 등 과정과 결과측면에서의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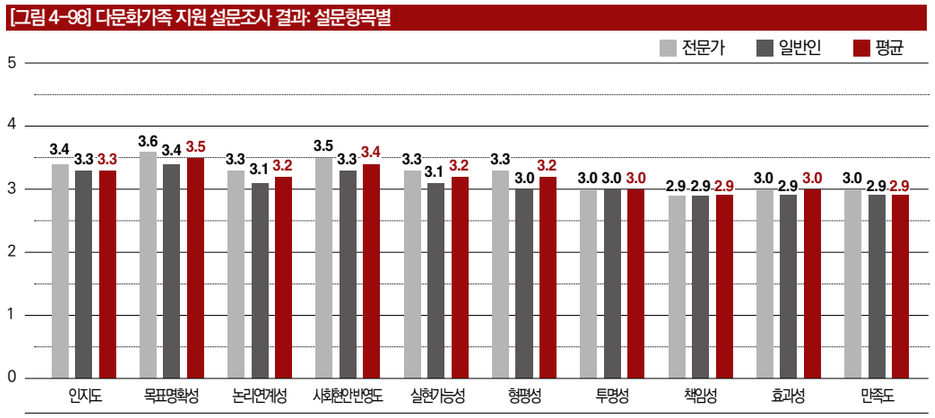
[그림 4-97] 어린이·청소년 급식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5)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전문가와 일반인 응답자 집단이 개별지표마다 집단 간 비슷한 평가를 보였다. 개별 지표인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전문가 및 일반인 집단 모두에서 3.0이상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언급한 세 지표는 3.0 또는 2.9의 다소 낮은 평가를 나타내 특히 해당 정책에 있어 정책결과의 차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98] 다문화가족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6, 일반인 집단은 3.4로 매우 높게 평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3.3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도 3.1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와 관련해서 전문가는 3.5로 매우 높게 평가하였고 일반인도 3.3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다문화사회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평가로 두 집단 간 동일한 시각을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는 3.3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도 3.1로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각각 3.3, 3.0으로 평가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동일하게 3.0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정책도 역시 정보공개 및 참여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대체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동일하게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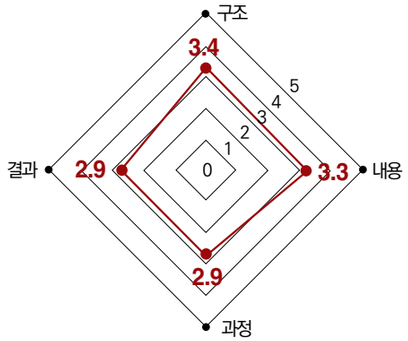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결과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는 3.0으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일반인 집단은 2.9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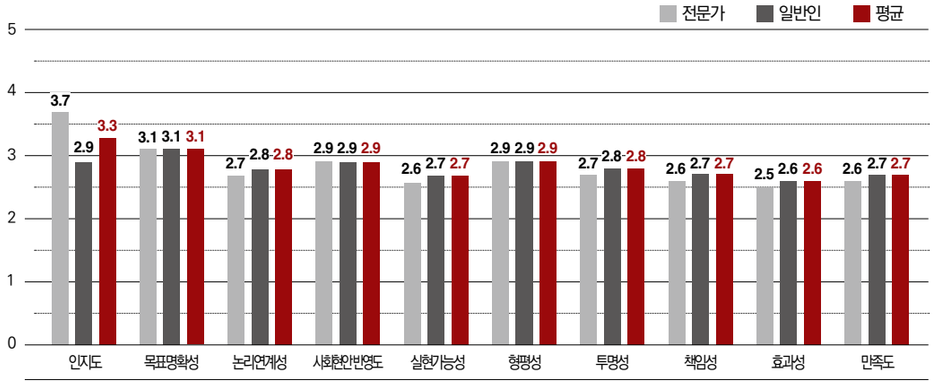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 또한 효과성과 동일하게 전문가는 3.0으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일반인 집단은 2.9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만족도의 평균 결과는 효과성보다 더 낮은 결과로 개별지표 중 가장 낮은 평가로써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있어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림 4-99] 다문화가족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6) 자유학기제 확산

[그림 4-100] 자유학기제 확산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자유학기제 확산정책은 전문가와 일반인 응답자 집단이 비슷한 평가를 보였으나, 인지도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의 인지도는 3.7로 매우 높았으나 일반인의 인지도는 2.9로 매우 낮았다. 개별 지표인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3.1이상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나머지 지표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일반인이 모두 3.0이하로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실현가능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 등에 대해 전문가 응답 집단의 평가가 매우 낮은 편이었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동일하게 3.1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이 각각 2.7, 2.8로 두 집단 모두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동일하게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이 각각 2.6, 2.7로 비슷하게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2.9로 평가하여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2.7로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도 2.8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보공개 및 참여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대체적으로 충족시키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또한 전문가는 2.6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도 2.7로 낮게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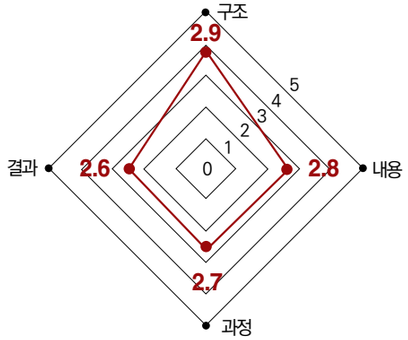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결과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는 2.5, 일반인 집단은 2.6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가 집단에서 2.6으로 낮았고 일반인 집단에서도 2.7로 다소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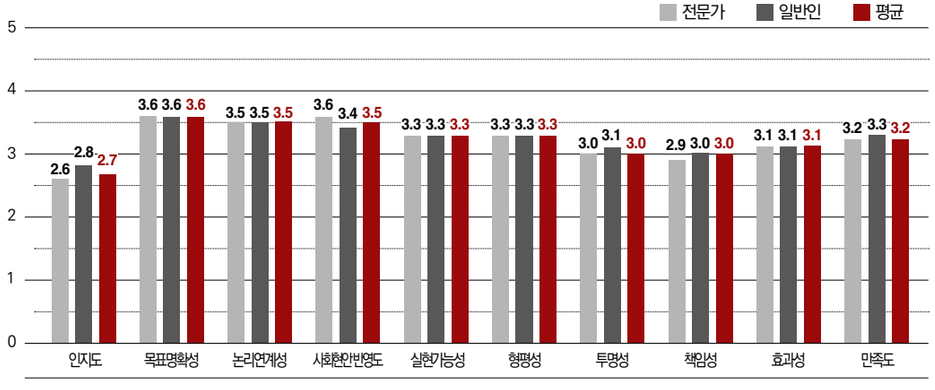
[그림 4-101] 자유학기제 확산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 도시숲 조성

도시숲 조성정책은 10개의 지표 중 9개의 개별지표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에서 3.0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두 집단 간 비슷한 평가를 보였으나, 인지도에서 유일하게 9개의 지표와 달리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인지도에서 평균 2.7로 매우 낮게 나타나 정책의 수요를 위해서 해당 정책의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두 집단 모두에서 인지도의 평가점수가 3.0이하의 낮은 평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해당 정책의 인지도를 다른 어떤 전반적인 측면보다도 우선순위로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4-102] 도시숲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이 모두 3.6으로 평가하였다.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개별지표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이 모두 3.5로 모두 매우 긍정적으로 목표명확성 다음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6 일반인 집단은 3.4로 평가하였다. 도시숲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예상했던 기대치라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3.3으로 평가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해당 정책의 예산확보 및 진행상황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은 일반인 집단 모두 3.3으로 평가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두 집단 간 모두 해당 정책이 수혜자 집단에 있어 차별적으로 부여되지 않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을 대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각각 3.0, 3.1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해당 정책의 정보공개 및 참여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대체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3.0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이기는 하나 개별지표 중 인지도 다음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같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과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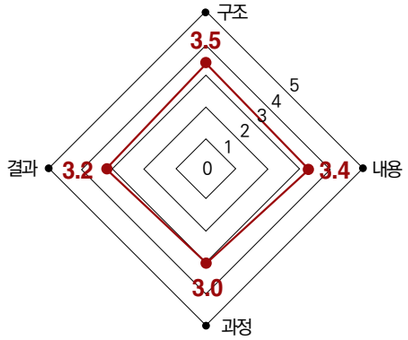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결과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동일하게 3.1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에서 각각 3.2, 3.3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정책과정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으나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두 집단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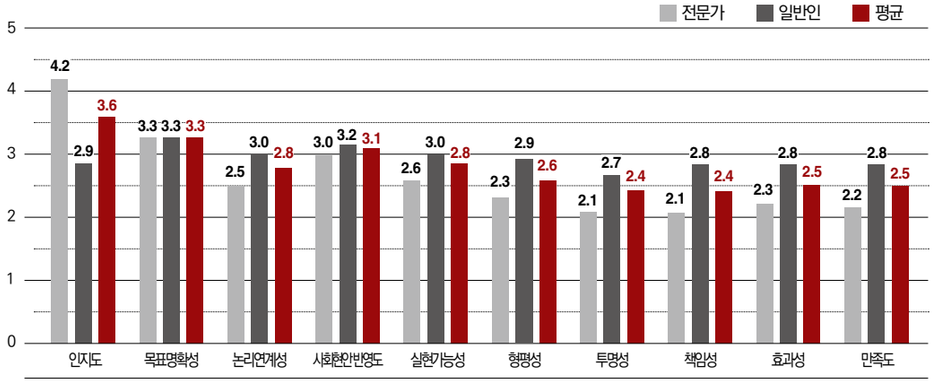
[그림 4-103] 도시숲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8) 대학구조개혁

대학구조개혁정책은 10개의 개별지표 모두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에서 다소 다른 평가를 보였으나, 인지도에서 그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지도에서 전문가의 인지도 평가는 4.2로 매우 크게 나타난 것과 상이하게 일반인의 평가점수가 2.9로 매우 낮게 나타나 정책의 수요를 위해서 해당 정책의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목표명확성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지표에서 모두 0.2~0.5의 상이한 평가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들 지표에서 3.0이하의 낮은 평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해당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과 결과 측면의 전반적인 모든 측면에 있어 강화는 물론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사이의 인식차이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4-104] 대학구조개혁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3.3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였고 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2.5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3.0로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3.0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도 3.2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대학정원에 반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은 2.6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일반인 집단은 3.0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반인 집단에 비해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해 실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각각 2.3, 2.9로 평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집단 간 차이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책의 수혜자 집단 사이에 차별이 상당히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일반인 집단 평가 또한 부정적인 것으로 보아 해당 정책의 수혜측면에 있어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2.1로 개별지표 중 책임성과 더불어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며 일반인 집단 또한 2.7로 평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해당 정책의 정보공개 및 참여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물론 전문가의 기대 또한 더욱 심각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투명성과 마찬가지로 2.1로 개별지표 중 투명성과 더불어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며 일반인 집단은 2.8로 평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해당 정책의 과정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편이며 전반적인 제고가 심각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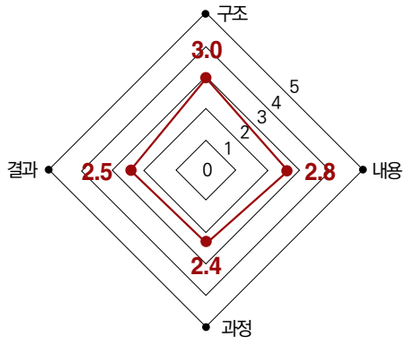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결과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는 2.3, 일반인은 2.8로 평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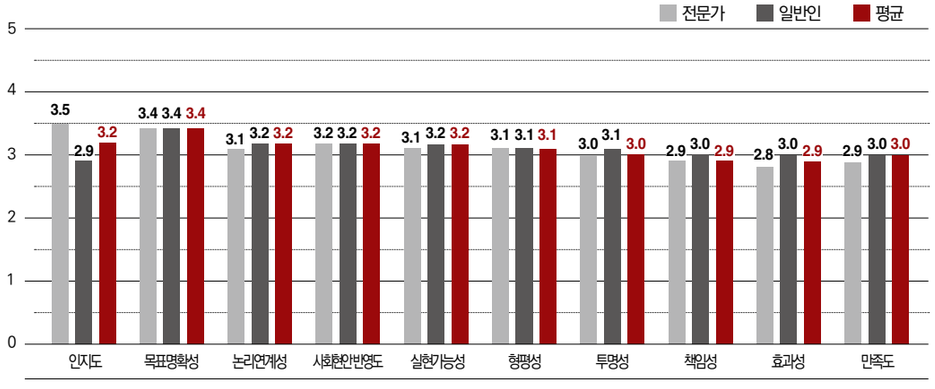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가 집단이 2.2, 일반인 집단은 2.8로 이 지표 또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4-105] 대학구조개혁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⑨ 문화가 있는 날

[그림 4-106] 문화가 있는 날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은 인지도를 제외한 9개의 개별지표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이 비슷한 평가결과를 보였다. 인지도에서는 전문가 3.5, 일반인 2.9의 수준으로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인 집단이 평가한 개별지표 중 3.0이하의 개별지표는 인지도가 유일한 지표라는 측면에서 해당 정책의 인지도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가 목표명확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 책임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정책이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필요한 경우 환류를 통한 수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에 두 집단이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모두 3.4로 평가하여 개별지표 중 가장 긍정적이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각각 3.1, 3.2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모두 3.2로 평가하여 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휴일문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은 3.1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도 3.2로 평가하여 휴일문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그에 대한 공급도 충분히 잘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3.1로 문화의 수혜측면에서는 형평성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각각 3.0, 3.1로 평가하고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정보공개 및 참여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2.9, 일반인 집단은 3.0, 그 평균 결과는 2.9로 전체적으로 다소 부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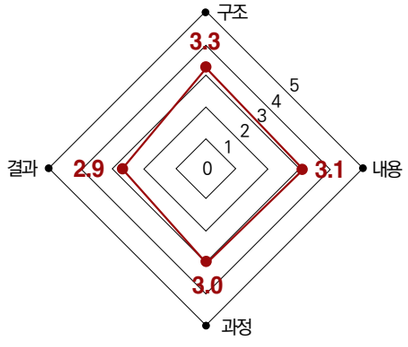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결과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 2.8, 일반인 집단 3.0으로 책임성과 마찬가지로 평균 결과는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가 집단이 2.9, 일반인 집단이 3.0, 평균 결과는 3.0으로 다소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책임성과 효과성, 만족도는 정책의 형성측면과 비교했을 때 낮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해당 정책의 과정과 결과측면에서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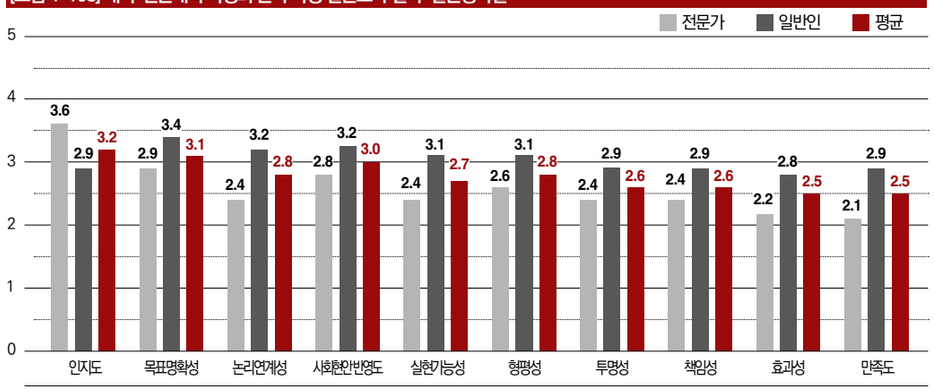
[그림 4-107] 문화가 있는 날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0) 대학·전문대학 특성화분야 육성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 정책은 10개 개별지표 모두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간 평가에서 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두 집단 모두 전반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인지도를 제외한 9개의 개별지표에서 전문가 집단은 3.0이하의 부정적 평가를 나타냈으며 특히 논리적 연계성, 실현가능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는 2.5이하의 평가로 해당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과 결과 측면의 전반적인 모든 측면에 있어 강화를 시사하고 있다. 일반인 집단의 평가에서도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는 3.0이하의 평가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림 4-108]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2.9로 낮은 평가를 하였으며 일반인 집단이 3.4로 매우 높은 평가를 하였다. 집단 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아 해당 정책에 있어 일반인 집단에 비해 전문가의 입장에서 대학 및 전문대학 특성화분야를 육성하는 데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행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이 2.4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3.2로 높게 평가하였다.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도 해당 정책에 있어 일반인 집단에 비해 전문가의 입장에서 목표설정과 추후 단계들의 연계에 있어 매끄럽지 못하고 논리적 허점이 많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볼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문가 집단이 2.8, 일반인 집단이 3.2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그 평균 결과는 3.0으로 전반적으로 다소 긍정적이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은 2.4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3.1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예산확보에 있어 대학 및 전문대학의 특성화분야를 육성하는 데에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하고 있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낙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과 관련해서도 상반된 평가가 나타났으며 전문가 집단 2.6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3.1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평균 결과는 2.8로 전반적으로 다소 부정적이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2.4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도 2.9로 두 집단 모두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해당 정책에 대해 정보공개 및 참여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매우 심각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은 2.4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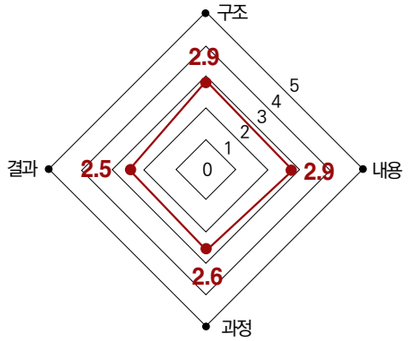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결과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은 2.2로 개별지표 중 만족도 지표 다음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도 2.8에 그쳤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가 집단이 2.1로 개별지표 중 가장 낮았고 일반인 집단도 2.9로 다소 부정적이었다. 만족도는 효과성과 더불어 개별지표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지표로써 해당 정책의 결과측면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며 전반적으로 정책이 단순히 행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는 등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09]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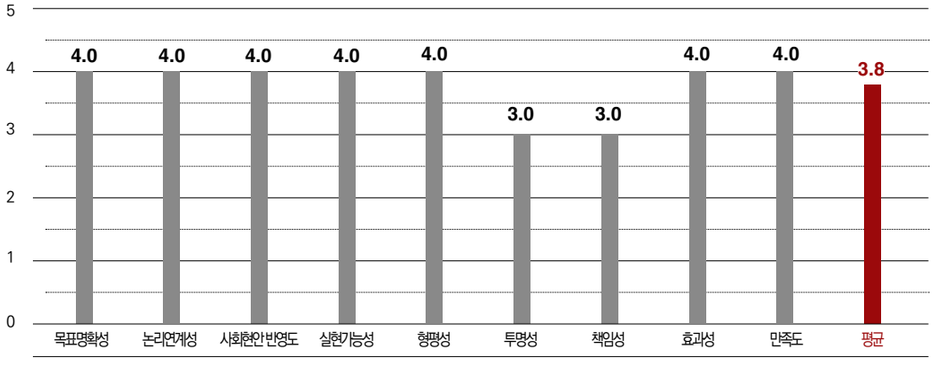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가) 정성평가 결과

(1) 초등돌봄교실

[그림 4-110] 초등돌봄교실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학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 방과 후 학교 연계 운영, 지역 돌봄 기관 간 연계 강화 등을 제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정책의 방향과 비전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 방과 후 학교 연계 운영, 지역 돌봄 기관 간 연계 강화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돌봄을 실시하고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정책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 교실 운영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는 등 정책목표와 정책 방안들 사이에 연계성이 높다. 이러한 정책대안의 구체화는 현장에서의 운영 경험으로부터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는 '정책학습'의 체계를 갖추어 가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인식해서 대안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제공·여성의 사회진출 확대가 사회적 목표인 만큼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수요와 학교별 특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돌봄 교실의 지원대상 확대와 내용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방과 후 교실과의 연계, 학교별 여건 및 학년별 특성에 따른 다양화 등 교육행정 재원의 중복을 억제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어 정책의 실현가능성도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초등돌봄교실이 모든 학부모들에게 제공이 되고 추가로 저녁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사회집단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돌봄 교실 교육서비스 수요에 전반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형평성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 및 지자체 등 정부 내부의 관련 부처에서 대부분의 정보가 공유되어 학부모와 돌봄 학교 관계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광범한 정보공유 및 의견반영을 위한 통로를 더욱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실제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현장의 경험이 정책의 새로운 내용으로 반영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언론과 현장 등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한 자료가 있지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항들이 제기될 수 있고 반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실효성은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부처에서 예산을 제공하고 협력하는 체제로 운영되어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통제와 책임의 소재를 더욱 명확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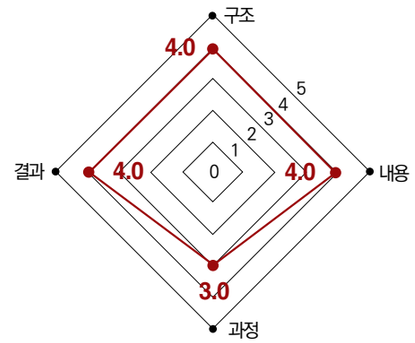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초등돌봄교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1~2학년뿐만 아니라 3~6학년으로 수혜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다양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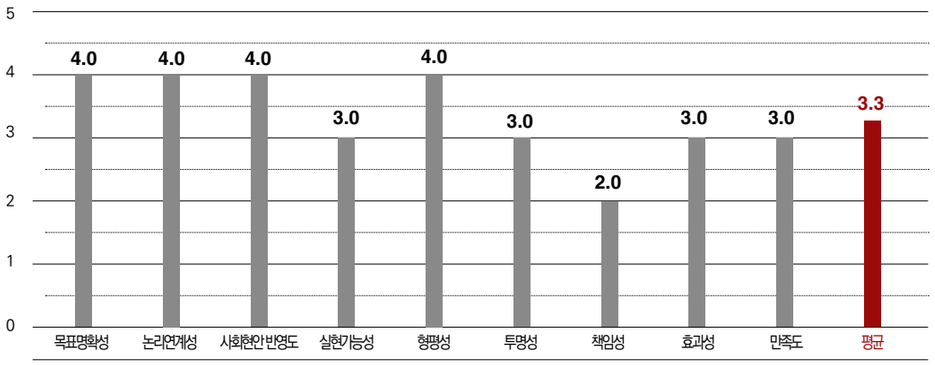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단위 학교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있고 돌봄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확대 계획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어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11] 초등돌봄교실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 누리과정

[그림 4-112] 누리과정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누리과정 정책의 목표는 만 3-5세 어린이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누리과정의 목적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가가 5세 미만 어린이의 교육 및 보육을 보장한다는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만 3-5세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누리과정의 표준교과와 정부의 지원범위로 이루어져 있다. 누리과정은 기존의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여 5개 영역의 연령별 공통교과과정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신체운동 및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로 구성되어 있다.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은 2013년부터 만 3-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으며 일정액의 유아학비와 보육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유아의 교육 및 보육을 책임진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표준교과와 지원이라는 정책수단이 명확하고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육아 및 보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투자의 필요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면서 노인부양비가 급속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육아 및 보육의 비용을 공적 재원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미래의 잠재적 사회적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어하는 측면에서도 사회현안 반영도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만 3-5세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반면에 소요 재원의 확보 측면에서 다소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2014년까지 일부 국비에서 부담하던 5,000억 원의 3세 어린이집 보육비를 2015년부터 전액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면서 일시적으로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이 부각되었다. 2015년에도 재원확보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반복되었고 결국 여야 정치적 타협으로 미봉책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향후 이러한 정부간 갈등에 대한 정치적 합의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가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공통의 교과과정을 제공하므로 전 계층의 모든 가정에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래의 노인부양을 책임지는 세대의 교육 및 보육이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관점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간의 형평성도 제고하는 측면도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기재부, 교과부, 복지부, 행자부 등 관련부처의 TF를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3월 만 5세 공통과정에서 만 3-5세 누리과정으로 확대되는 결정이 매우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정책변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과연 국민의 관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누리과정의 운영에는 유치원을 관장하는 교육부,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복지부, 재원을 부담하는 시도교육청 등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앞으로 재원을 부담해야 할 시도교육청과 중앙부처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운영체계의 불안정성까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만 3-5세 교육 정책의 집행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운영주체의 책임성은 낮은 편으로 평가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서 여·야 정당 간의 타협이 필요한 정치적 이슈로 확장되어 결과적으로 행정당국의 책임성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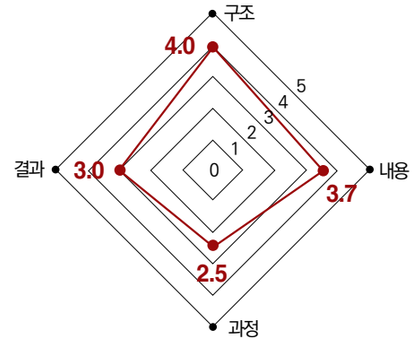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이 정책은 만 3-5세의 유아를 키우고 있는 모든 가정에 정부가 교육비와 보육비를 보조함으로써 부담을 경감시키는 단기적 효과는 매우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부모에게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교육서비스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민주시민의 소양을 기르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하기에 이르다고 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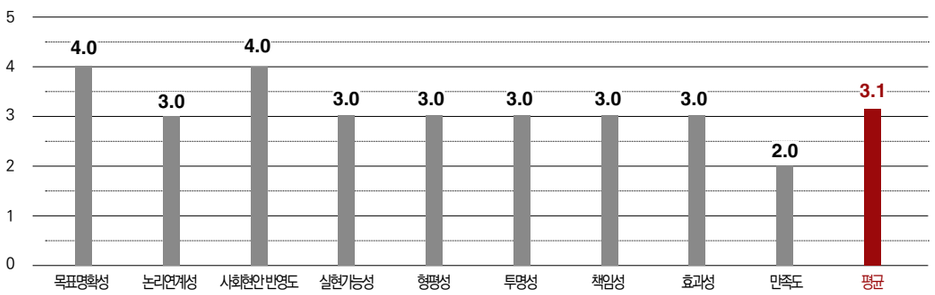
미래세대에게 보편적인 교육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재원의 부담을 둘러싼 지방교육청과 중앙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하여 이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도 상당하다. 이 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감안할 때 시급히 정책의 제도 및 재정적 기반을 정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그림 4-113] 누리과정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3)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

[그림 4-114]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인터넷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부터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되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ICT 발전수준이 짧은 시간에 세계 최상위에 도달하였으나 인터넷의 불법유행 정보, 권익침해, 사이버 폭력 등과 같은 인터넷 환경의 질은 기술발전에 상응하지 못하였다. 방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 정책은 이러한 인터넷 환경의 질에 대한 정부의 문제 인식과 대처 방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 정책의 근간은 온라인에서 유해정보 유통 및 접근과 관련한 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규제와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윤리성 회복을 위한 교육 및 홍보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수단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와 사용자에 대한 규제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강제성이 낮고 교육 및 홍보 등과 같은 설득적 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외적으로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공익 보호를 위해 인터넷 표현 및 사용의 적절한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정부개입의 실효성이 있는 정책대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우리나라 ICT 발전으로 인하여 인터넷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디지털 정보 및 서비스, 온라인 토론 및 참여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생산되고 접근되고 있는 유해정보,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적인 요구는 확산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정책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현저성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동통신사, 포털, 일반사용자 등 정책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상황에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의 유통과 소비와 같은 문제부터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동통신사, 포털, 그리고 실제 생산·유통자에 대한 정부개입의 규제수단을 더욱 강화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등 정책대상을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인터넷상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구체적 내용은 주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 교육, 그리고 학부모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기술지원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 정보의 유해성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대책이 수립되고 실효적으로 이행되어 인터넷 환경의 전반적인 질이 개선되고 모든 사용자의 윤리성이 제고되어야 청소년 보호 정책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현장 방문, 강연 등의 노력이 보이고, 인터넷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재개발, 홍보물 제작 등 대국민 홍보를 위한 노력도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 미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환경의 바람직한 상이 무엇이고, 개인과 공동체의 책임은 어떤 것이며, 이 영역에서 정부개입의 범위는 어떤 과정으로 정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의제설정자 역할은 부각되고 있지 않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ICT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에 비해 인터넷 환경의 질을 제고하고 유해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제정책은 그 우선순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환경에서 공익, 윤리성, 공적 개입에 대한 논의를 행정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수단을 구체화·정교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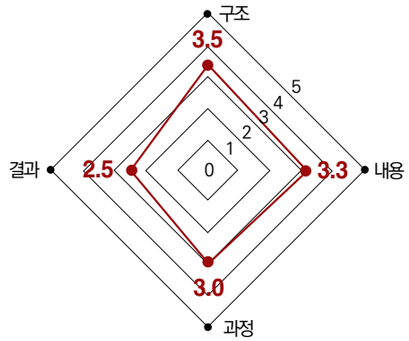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현재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정부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용인되는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집행과정 및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의 수립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려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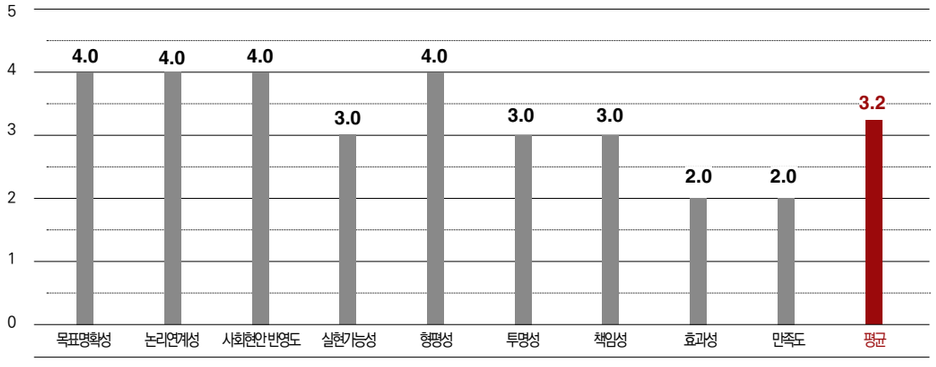
본 정책의 시민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의 지속적인 집행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넷 유해성에 대한 신고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채널이라도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구축하는 것부터 시도할 수 있겠다.

[그림 4-115]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4) 어린이·청소년 급식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그림 4-116] 어린이·청소년 급식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 정책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급식과 외식의 영양 및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정책의 목표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어린이집과 학교의 급식 영양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어린이 청소년의 외식환경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정책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호식품 판매환경 안전성 확보대책, 식생활 안전성 확보대책, 학교급식 공급체계의 안전성 확보대책 등으로 정책수단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교육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 민·관 협력, 지역별 위생 및 안전성 평가 등의 체계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평가되는 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은 어린이집 및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영양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제정된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확대, 식중독관리 체계 구축, 식생활안전지수 평가 발표 등으로 제반 정책수단을 발전시켜 사회적 관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어린이집과 학교의 급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중장기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린이·청소년의 전반적 식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민간부문과의 협력, 주방문화 개선 등의 측면에서 자율규제와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에는 명확한 성과지표가 제시되지는 않아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점에서는 한계도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의 경우 2011년 900개소 7만 명에서 2015년 3,177개소 71만 명으로 수혜대상이 증가하였고, 향후 50명 이하 보육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며, 모든 시도에 대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평가 발표 하는 등 정책수혜대상의 측면에서 정책의 형평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식약청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소비자 단체, 보육시설 관계, 학부모에게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밀집지역으로 관리대상 확대, 외식업체의 어린이·청소년 외식 영양 및 안전성 관리 등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은 식약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실제의 집행은 지자체, 교육부의 협력과 보육시설, 민간업체 등의 협조에 의존하는 등 매우 다양한 관련당사자들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복잡성이 높은 집행체계에 대한 식약청의 통제 및 관리 역량을 제고해야 할 과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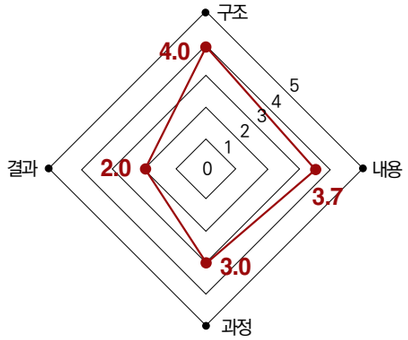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이 정책은 급식체계 안정성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전반적인 식생활 양양 및 안전성까지 확보하려는 정책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대안의 수립 및 이행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에 비해 어린이와 청소년 식생활 환경의 전반적인 질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질적 변화를 이루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까지 보육시설 및 학교의 급식체계에서 사회적으로 현저성이 높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식업체의 가시적인 협력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안전식품 안정성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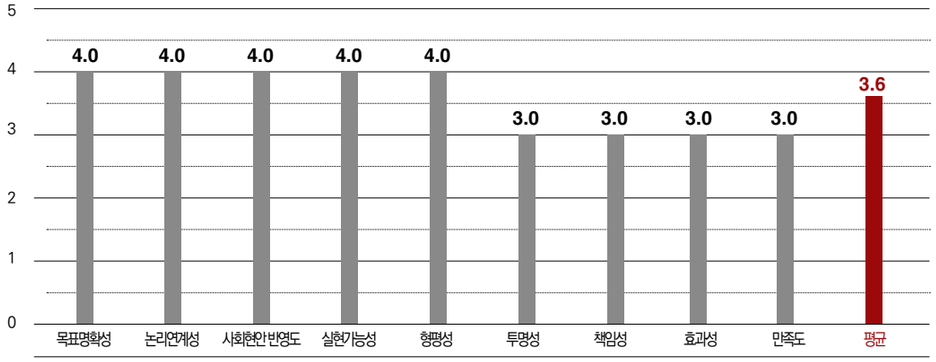
보육시설과 학교의 급식과정에서 끊이지 않는 안정성 논란과 전반적 어린이 청소년 외식환경의 질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다는 측면에서 정책에 대한 학부모와 일반시민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17] 어린이·청소년 급식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5) 다문화가족 지원

[그림 4-118] 다문화가족 지원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구체적인 정책목표 달성 로드맵도 명시되어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추진체계 정비 등의 정책대안을 포함하고 있는데(여성가족부, 2012). 이들 정책 목표와 정책대안 간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다문화 가족의 실태는 2012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267,0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다문화가족의 58.6%는 수도권(경기도 26.9%, 서울 25.8%, 인천 5.9%)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이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51.9%에 비해 6.7%p 증가한 것일 뿐 아니라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 전체 가구 중 수도권 거주 비율 47.6%보다 11.0%p가 더 높은 것으로, 지난 3년간 다문화가족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을 위해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를 통합번호 1577-5432로 운영하고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였고(여성가족부, 2014),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합동 운영 추진하는 등 다문화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의지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이러한 정책사업의 시행은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모든 국민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므로 정책의 형평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결정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인 다문화가족과 여성가족부 그리고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등 관계들과의 정보공유 및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비록 다문화가족포럼의 개최 등의 노력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여성가족부, 2013), 본 정책 추진 경과를 보더라도 여성가족부 및 관련 민간단체 간 워크숍 개최 등 광범위하게 정보가 공유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관련 미디어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한 자료가 있지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슈들을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관계 부처(특히, 여성가족부, 외교부, 법무부 등)로 부터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가동될 때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는데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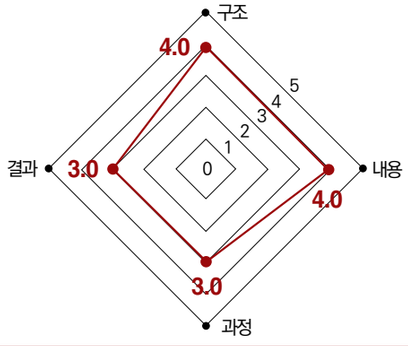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본 정책의 경우 결혼초기(5년 이내) 해체비율이 '09년도 53.1%에서 '12년에 37.8%로 감소하였고, 다문화 본인이 한국어를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09년에 37.3%에서 '12년에 57.5%로 증가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5년 이상 거주비율이 '09년 41%에서 '12년에 72.5%로 증가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으나(여성가족부, 2015), 체감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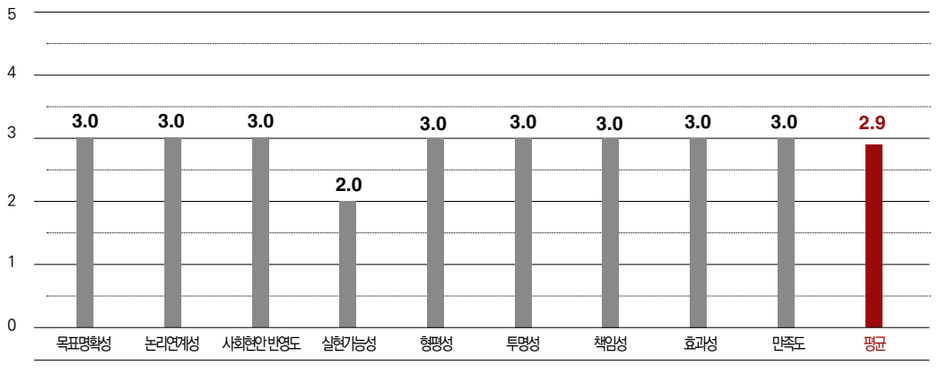
본 정책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이 '09년에 36.9%에서 '12년에 53.0%로 증가하였고, 남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도 '09년에 74.3%에서 '12년에 80.3%로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의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보이나(여성가족부, 2015), 전체적인 정책의 만족도는 그러한 지표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4-119] 다문화가족 지원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6) 자유학기제 확산

[그림 4-120] 자유학기제 확산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입시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끼와 잠재력을 키워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고등 교육과정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우지 못한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하다면 과연 한 학기 동안의 다양한 활동 및 체험을 통해 그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자유학기제라는 정책내용으로 달성하기 힘든 매우 추상적이고 근원적인 목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입시 중심 교육과정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한 학기 동안 시험 없는 참여형 교실교육,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 학생 선택의 주제중심 자유 과정, 동아리 활동 중심과정, 예술□체육 중심과정 등의 운영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험처 및 프로그램, 교육지원청의 지원체계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이 정책이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될 때 단위 학교의 현장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교육부의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완비하여 집행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입시위주 교육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교육부의 대응도 끊이지 않았다. 즉, 우리나라 중등교육에 대한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이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정책 자체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기 보다는 정부 당국의 주도로 하향적으로 제시된 측면도 있다. 이 오래된 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비추어 해결수단으로서 정책의 적절성에 대해 공론을 모으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의 자유학기제를 지정하여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비전통적 탐색,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을 이수하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나, 실제로 학생들에게 유익한 학교교육의 일부로 운영하기에는 단위 학교에서 해결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책실험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교육부는 2015년까지 체험처 58,882개, 프로그램 102,507개를 확보하여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 경제적 기반에 있어서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위 학교의 여건, 학생과 학부모의 특성, 소재지의 발전수준을 감안하여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서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안의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은 2013년에 공교육 내실화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정책으로 채택되고 즉시 42개의 연구학교를 지정하면서 시행되었다. 최근 전면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대학의 체험활동 전수 조사와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형성 단계에서 학생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수단으로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공론을 모으는 과정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은 교육부가 자유학기제의 모형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실제의 성패는 다양한 체험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중앙부처, 민간기업, 대학 등이 얼마나 협조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정책집행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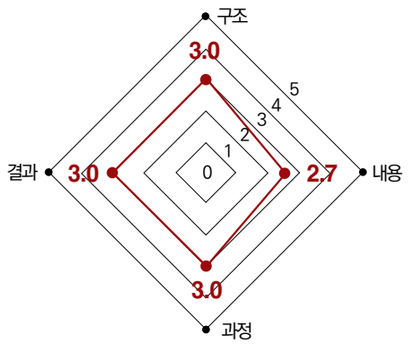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학생들의 끼와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는 정책목표가 가진 추상성에 비해 자유학기제 정책의 방안은 현행 교육과정에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부담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는 데에는 지속적인 정책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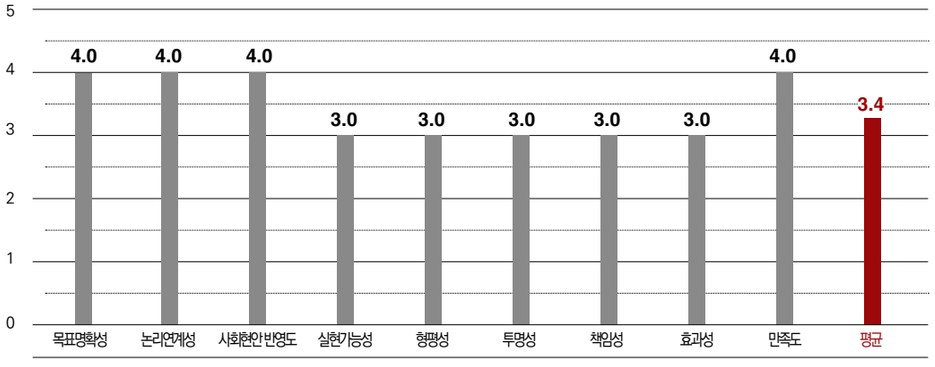
이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일반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자유학기제 정책이 지닌 불확실성에 대한 학교현장과 학생,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부처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21] 자유학기제 확산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7) 도시숲 조성

[그림 4-122] 도시숲 조성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내 녹색공간 확충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시녹화운동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도시숲을 체험 교육의 장소가 되도록 나무와 꽃 등으로 자연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정자·분수 등 시설물은 최한 지양하되, 도시숲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도시숲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하여 국민들의 높이에 맞는 산림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도시숲이 자연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되고 도시숲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확대하고자 하는 도시숲 조성정책 대안간의 논리적 연계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국민 1인당 생활권내 도시숲 면이 국제 권고기준에 미달하고, 국민들의 71.2%가 도시숲 면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한국갤럽, 2013),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활권내 도시숲 면(8.3㎡)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9㎡)에 미달하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여가시간 활용 등 복지증진을 해 생활권내 녹색공간 확충에 한 수요와 참여 욕구가 급증하고 있다(산림청,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본 정책은 사회현안 반영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은 생활권내 도시숲을 확충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해 녹색쌈지숲 138개소 조성사업에 13,604백만 원, 산림공원 22개소 조성 6,421백만 원, 그리고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에 64개소

10,041백만 원을 투자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도시녹화운동 확산 집행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정책의 확대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체계와 재정적 지원에 대한 실현가능성은 그리 높게 평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도시지역의 거주민에게 제공되는 생활환경 숲 조성이나 산림공원 등에 대한 투자가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도시지역에 대한 투자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도시숲 녹색쌈지숲 조성을 위해서 136억 원을 투자하는 데에 반해, 산림공원에 64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본다면, 예산 투입의 지역적 형평성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도시거주민이나 생활환경 숲 이용자들에 대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도시숲 조성이나 산림공원 투자가 일반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정책의 시기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시급성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의 특명성 지표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산림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처로서 산림청이 도시숲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정책을 전담하고 있어서 행정적 책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도시숲 조성 투자 비율이 일반 국민들의 수혜 대상자들과의 비례적 측면에서의 형평성 그리고 도시숲 조성이 얼마나 일반 국민들의 요구와 수요에 시급함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본 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평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은 산림청이 본 정책의 홍보와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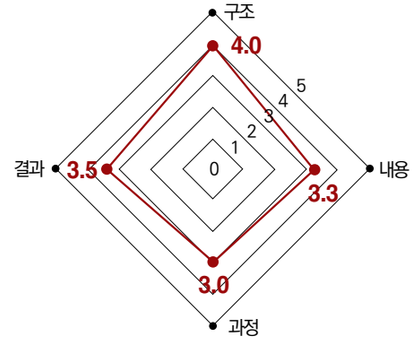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도시숲을 자연 체험형 공간화하고 도시숲 내 시설물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산림청의 정책효과가 실제 피부에 와 닿은 수준으로까지는 확산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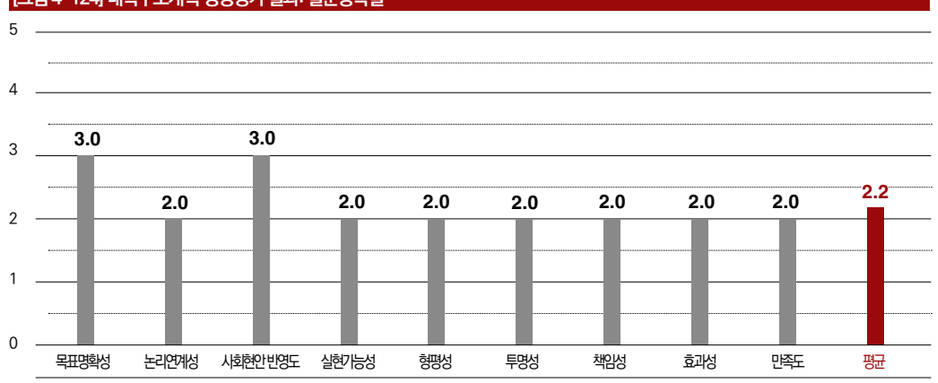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직접적 효과가 쉽게 체감되는 정책으로서 도시숲의 조성이 정책의 효과 면에서는 실제 체감하고 있지 않더라도 정책의 만족도면에서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실제 도시숲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산림청은 이러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책홍보와 정책수단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림 4-123] 도시숲 조성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8) 대학구조개혁

[그림 4-124] 대학구조개혁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선제적 대학 구조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한 대학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노력과 대학의 자율적 노력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학의 담당자나 이해관계자들은 본 정책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고등교육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개혁으로,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정 규율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대학의 자율적 질 제고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수단들 간의 연계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등급 구분 기준 및 학교 수에 따른 구조개혁 평가결과에 의한 차등적 정원감축 비율 권고는 특히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러한 정책 환경에 대한 정책문제 해결기제에 대한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에 따른 강제적 정원감축 또는 재정지원 축소 등은 사회현안 반영도가 다소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적 감축 비율 권고 등 합리적 정원감축 추진을 통해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본 정책의 실현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학의 자율적 노력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아닌 대학평가결과에 따른 강제적 정원 감축이라는 강력한 정책수단동원에 따른것이며 더 나아가 실질적인 예산지원의 폭과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 당연할 것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여건과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 간의 격차와 이러한 것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형평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에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입어야 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권역별로 대학의 여건과 특수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정책결정이나 진행과정에서 정책결과가 미칠 파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여나 정책결과의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많지 않았음은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은 대학의 "교육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권역별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이 조정된 대학 발전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한 교육 전문가의 주제발표의 일부 내용과(교육부, 2015), "대학의 자율성과 정부의 개입 정도"에 대한 고려,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정성평가 및 사립대학의 퇴출 경로 마련" 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선행되었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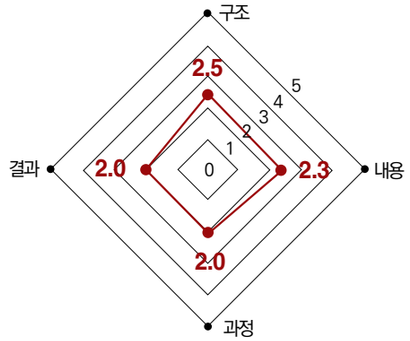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본 정책의 효과는 많은 대학들이 대학의 교육적 가치와 대학 자체의 특성 그리고 대학 스스로 퇴출경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간접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학구조개혁의 평가결과에 의한 대학 정원 감축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식하는 관계자가 많음은 이 정책의 효과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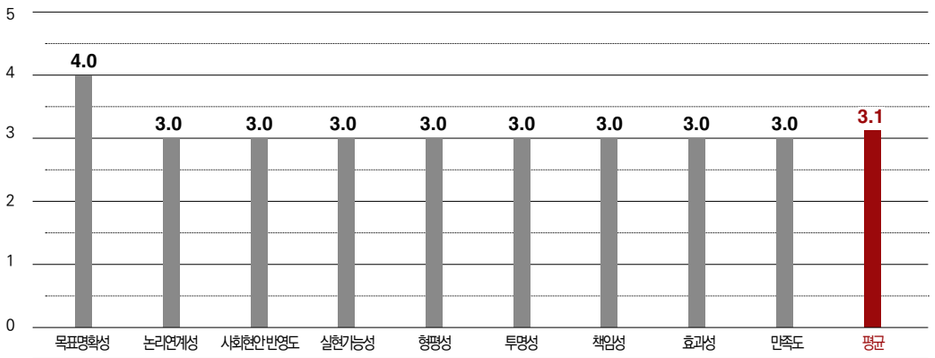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과 책임성에서도 밝혔듯이, 본 정책으로 수익과 혜택을 입을 정책대상집단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만족도는 크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며, 동시에 대학당국의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낮은 상태에서의 정책집행으로 인해 정책의 만족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125] 대학구조개혁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9) 문화가 있는 날

[그림 4-126] 문화가 있는 날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을 활짝 열고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밤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는 명확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쉽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 무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야간개방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시행하며 각종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온 가족이 함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인식수준은 보통으로 조사되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문화융성을 체험하도록 하는 본 정책이 어느 정도 사회현안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그러나 국민 누구나 공연예술을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잠재적 관람객의 개발로 공연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립공연시설과 국립예술단체의 자체 기획공연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사회현안에 대한 반영도는 보통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문화가 있는 날 정책실행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도 기준 총 100억 원을 사업예산으로 투입하고 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사업예산과 비교하여 보면(국회예산정책처, 2014),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153억 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400억 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프라 지원 174억 원, 해외문화원 운영 105억 원,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332억 원,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186억 원,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220억 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지원 1,528억 원, 스포츠산업 융자 227억 원, 스포츠산업 활성화지원 293억 원이 증액되었음을 볼 때 문화가 있는 날 정책사업 예산의 규모는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에 대한 수혜집단을 고려해 볼 때, 문화가 있는 날의 정책수혜집단은 일반적으로 각종 공연시설이나 문화예술시설 등이 위치한 거주민이 될 것이며, 원래 문화가 있는 날의 정책이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 집단을 주요한 대상으로 잡지 않았더라도 제한적인 가능성이 높다. 대도시권에 근무하는 국민들과 지방이나 문화적 시설물이 거의 없는 지역 간의 형평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대상 집단의 차이에 의거한 정책의 형평성 이슈는 본 과제에서 풀어야 할 이슈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게 나타날 것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 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민간기업과 기관 및 지자체의 참여와 이들 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은 정책의 특명성 확보에 기여한다. 예를 들면, 업무협약을 통해 엘지(LG)전자, 엘지(LG)화학, 엘지(LG)유플러스 등은 사내 게시판 및 사보를 활용하여 매달 '문화가 있는 날'의 각종 문화행사와 이에 대한 할인정보 등 혜택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문화체육관광부, 2015a), '문화가 있는 날' 당일에 정시 퇴근을 장려하여 직원들이 문화 소비를 확대시키는 등 상호기관 간의 정책 확산을 정책의 특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이 단순히 문화가 있는 날 지정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의 문화체험을 위한 정책의 목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소비증가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을 기대할 수 있다면 본 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 정책의 시행을 통한 내수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결과에 의한다면(문화체육관광부, 2015b), 본 정책의 책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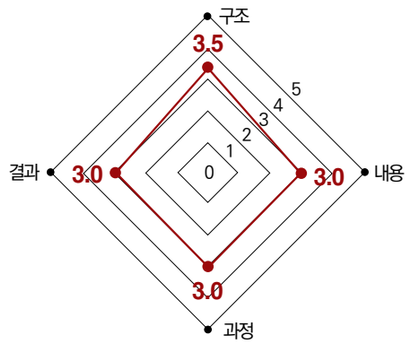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본 정책의 효과는 일반국민들은 물론 관련 기업이나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이용고객 수와 이용 금액에서 증가하였다는 조사결과는 정책의 효과가 있다는 증거이다. 문화체육부(2015b) 자료에 의하면, 문화가 있는 날 시행 후 문화 분야 가맹점의 이용 고객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에는 문화 분야 가맹점의 이용 고객 수뿐만 아니라, 총 이용 금액 역시 다른 수요일 대비 13%~63% 늘었다는 보고가 있다.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 자료를 토대로 평가한다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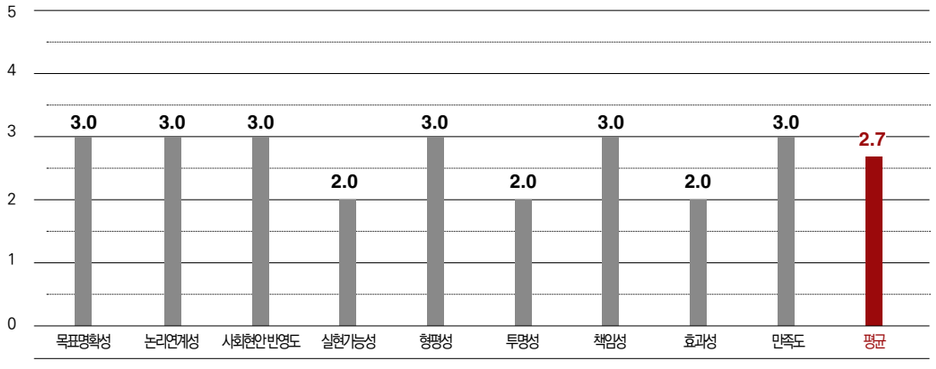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이용고객 수의 증가는 결국 본 정책의 만족도가 낮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이용고객의 수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과 단체들의 입장에서도 이용금액의 증가는 결국 정책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2] 문화가 있는 날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10)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

[그림 4-128]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교육부가 산업구조·기술 고도화에 부응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직업인 양성할 비전을 가지고 전문대학이 핵심 전문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할 목표로 대학·전문대학 특성화분야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의 핵심 정책과제들은 대학 스스로 강점분야의 특성화분야를 선택하고, 대학의 자율성장 역량기반 구축 및 구조개혁으로 차별화된 대학을 육성하여, 세방화(glocalization)시대 지역사회와 세계에 기여하는 세계적 수준 또는 지역 명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토록 하는 것이다. 현장중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직무수행 완성도가 높은 산업체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차별성을 확보한다. 평생직업교육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 전문대학 수업연한·학위과정 다양화하고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의 설립·운영을 통해 일과 학습이 연계된 실무중심의 평생직업 교육체제 구축한다. 이러한 정책대안들 간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대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산업체에서의 관심이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대학 교육 역량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교수 역량 및 학습력 제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직업인 양성할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통한 핵심 전문직업인을 양성한다는 본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질적으로, 본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예산 규모나 정책지원 결과 등에 효과에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낮게 평가하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개별 대학이 처한 환경과 교육 여건, 그리고 특성화분야의 선택으로 대학구조개혁과 교육프로그램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대학의 여건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대학들 간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수도권과 지방 대학들의 교육여건과 지역적 특성화 분야에 선택에 대한 부담과 학부교육과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개별대학들이 특성화전략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의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지역별로 대학의 여건과 특성화분야의 차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정책결정이나 진행과정에서 정책결과가 미칠 파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과정과 정책결과의 파급과 형평성 등의 이슈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대응으로 본 정책의 특명성에 대한 평가로 낮게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대학의 구조개혁 조치나 역량강화관련 정책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교육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권역별로 대학들 간 상호 역할과 기능의 협력적 분담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본 정책은 이러한 책임성 평가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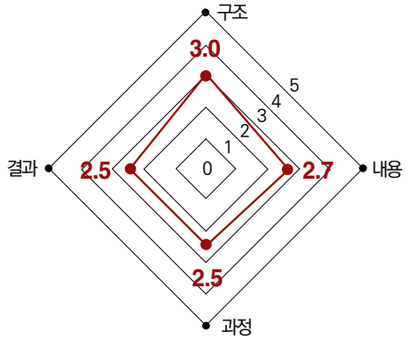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본 정책의 효과는 대학들이 대학의 교육적 가치를 유지하고 대학 스스로 특성화분야를 선택하도록 교육부가 간접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여야 할 본 정책의 목적이 대학사회의 특성화 노력 부족과 대학의 양적지표위주의 평가로 대학별 특성과 학부교육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효과성과 책임성에서도 밝혔듯이, 본 정책에 대한 대학들의 만족도는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기본지원금 대비 인센티브 지원 비중이 낮아 재정지원에 따른 대학의 성과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고, 평가 기초자료에 대한 정확성 등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정책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4-129]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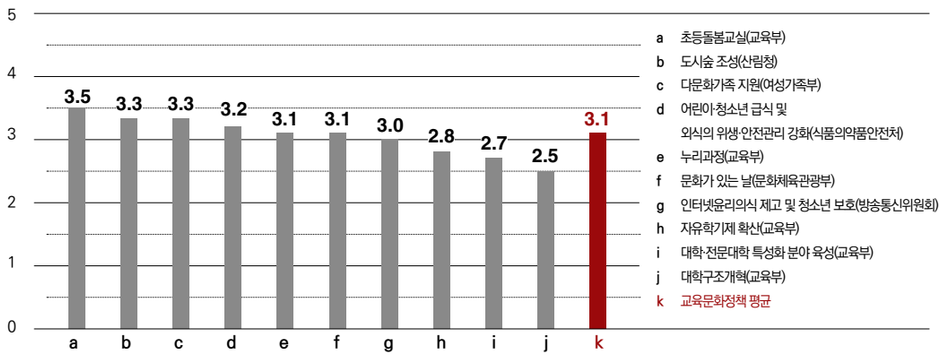


3) 평가결과 종합

가)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 합산

교육문화정책 분야 10개 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정성평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합산한 결과 2015년에는 평균점수가 3.1로 2014년에 비해 다소 긍정적으로 상승하였다. 평가지표 4개 차원의 종합합산 결과를 보면,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을 나타내는 구조차원이 3.4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다음으로 사회현안 반영도와 실현가능성을 포함하는 내용차원이 3.2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는데 반해, 민주성과 책임성의 과정차원과 효과성과 만족도를 포함하는 결과차원은 각각 2.8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2015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책설계의 품질을 나타나내는 구조와 내용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반 절차의 제도화와 운영의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책결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정책과정의 품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30]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개별 정책에 대한 종합합산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전체 평균이 3.5에 이르러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구조차원에서는 3.8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으며 내용차원도 3.7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결과차원에서도 3.5로 점수가 높은 편이었으나 과정차원에서 3.1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모든 세부평가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책과정과 책임성에 대해 각각 3.2와 3.1로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다른 개별 정책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다.

누리과정 정책은 전체 평균이 3.1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구조차원과 내용차원의 평균점수가 각각 3.5와 3.3으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나 내용차원과 결과차원에서 각각 2.7과 2.9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 평가항목에서 책임성에 대한 평가가 2.5로 매우 낮았고, 정책과정의 투명성, 정책결과의 효과성과 만족도가 2.9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 정책은 전체 평균이 3.0에 머물렀고, 구조와 내용차원의 평균점수가 각각 3.3과 3.2로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과정과 결과차원에서 각각 2.8과 2.5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과차원의 효과성과 만족도가 각각 2.7과 2.4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실현가능성, 투명성에 대한 평가도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청소년 급식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정책은 전체 항목의 평균점수가 3.2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구조와 내용차원에서는 평균점수가 각각 3.6과 3.5에 이르러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으나 과정차원에서는 3.0에 머무르고 결과차원에서는 2.6으로 낮은 편이었다. 세부 평가지표 중에서는 정책결과의 효과성과 만족도가 2.6과 2.7로 낮았고 과정의 책임성이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정책은 전체평균 점수가 3.3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구조, 내용차원이 3.6과 3.5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과정, 결과차원도 3.0으로 다른 정책에 비해서는 높게 평가되었다. 세부평가 항목 중에서는 책임성에 대한 평가가 2.9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었다.

자유학기제 확산 정책에 대한 전체 평균점수는 2.8에 머물렀다. 구조차원이 3.0으로 평가되었고, 내용과 과정차원(2.8)과 결과차원(2.7)에서 다소 부정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세부 평가항목 중에서는 목표의 명확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표에서 2.7~2.9로 다소 미흡했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2.4로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숲 조성 정책은 전체 평균점수가 3.3으로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정책구조 차원의 평균점수가 3.7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내용차원 3.4, 과정차원 3.0, 결과차원 3.3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모든 세부지표에 대한 점수가 3.0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역시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평가가 3.0에 머물렀다.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평균점수가 2.5로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편이었으며, 구조차원 2.8, 내용차원 2.7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고, 과정과 결과차원도 2.3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세부 평가항목 중에서 목표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2.5 이하의 저조한 평가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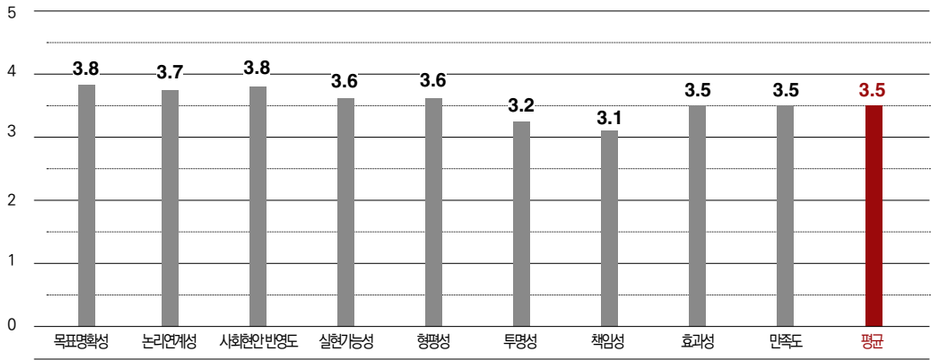
문화가 있는 날 정책에 대한 평가의 전체평균 점수는 3.1로 다소 긍정적이었다. 구조차원에서 3.4

로 높은 편이었고, 내용차원과 과정차원은 각각 3.1과 3.0에 머물렀고 결과차원에서는 2.9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명확성이 3.6으로 가장 높았고 정책과정의 책임성과 결과의 효과성이 2.9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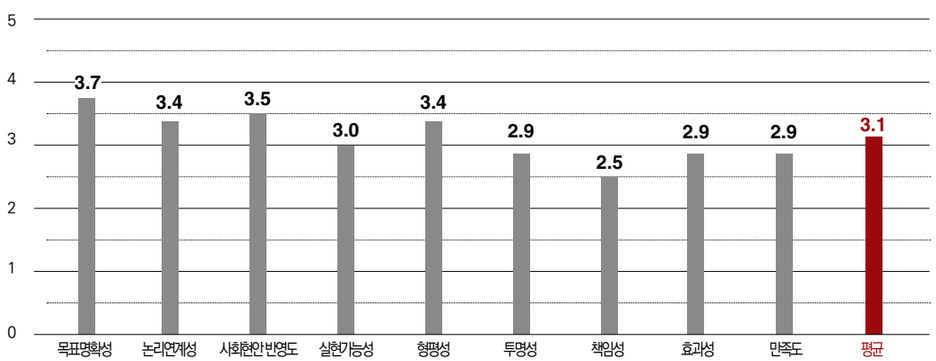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 정책에 대한 전체 평균점수는 2.7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평가의 네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구조차원(2.8)과 내용차원(2.7)에 비해 과정 및 결과차원(2.3)이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세부평가 지표 중에서는 목표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가 3.0이상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실현가능성, 투명성,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2.5이하로 매우 저조하였다.

[그림 4-131]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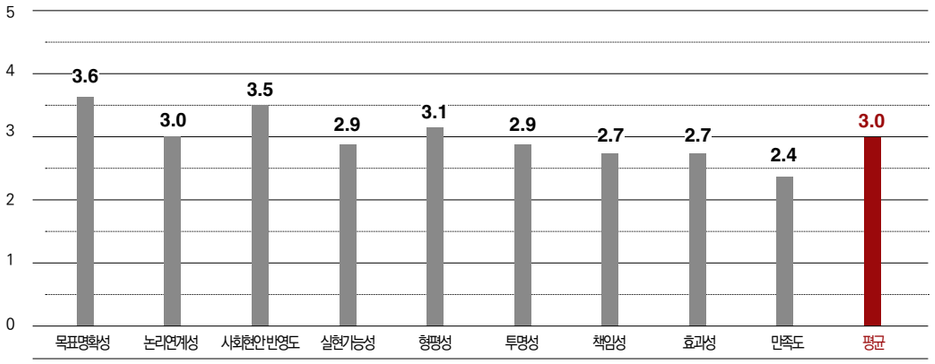
초등돌봄교실(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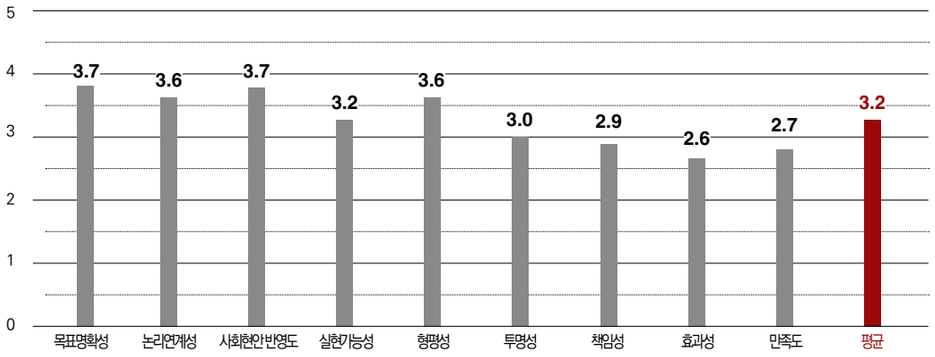
누리과정(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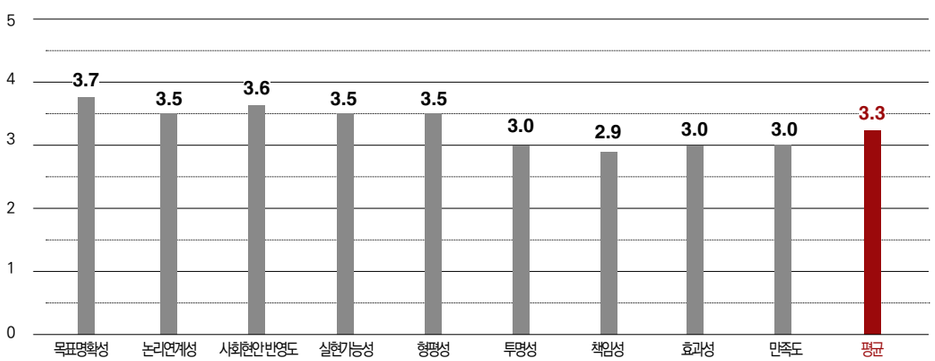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방송통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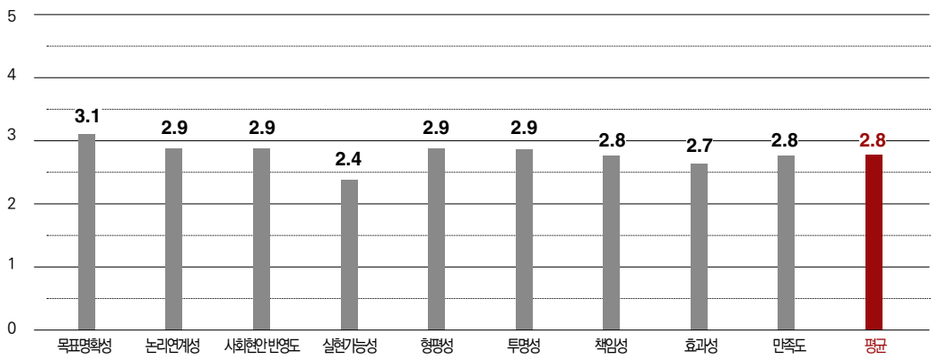
어린이·청소년 급식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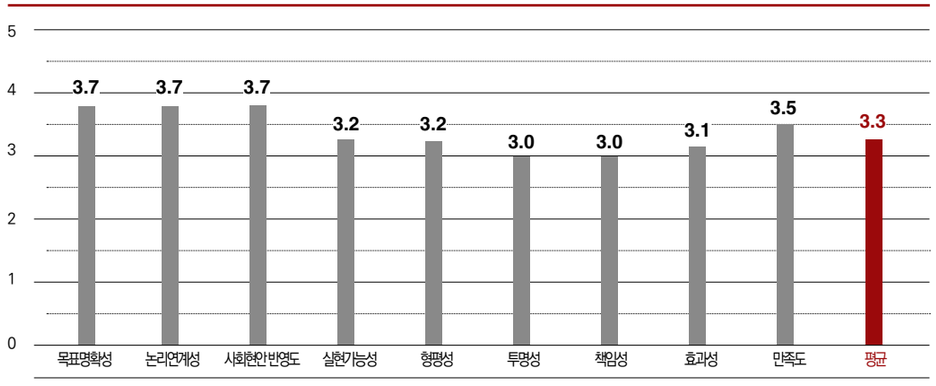
다문화가족 지원(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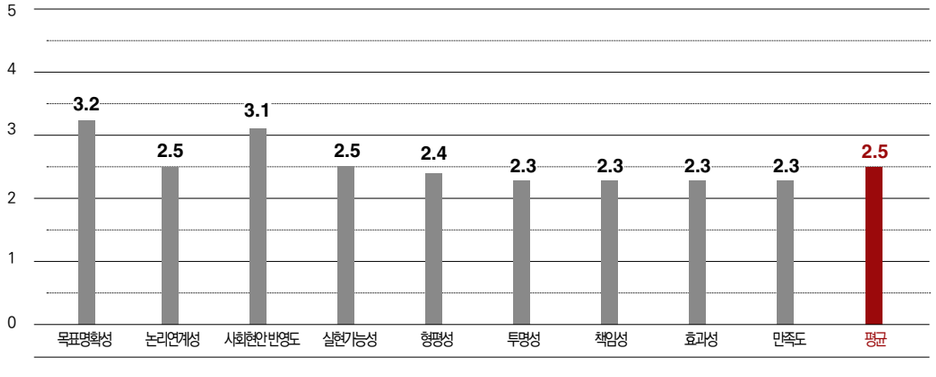
자유학기제 확산(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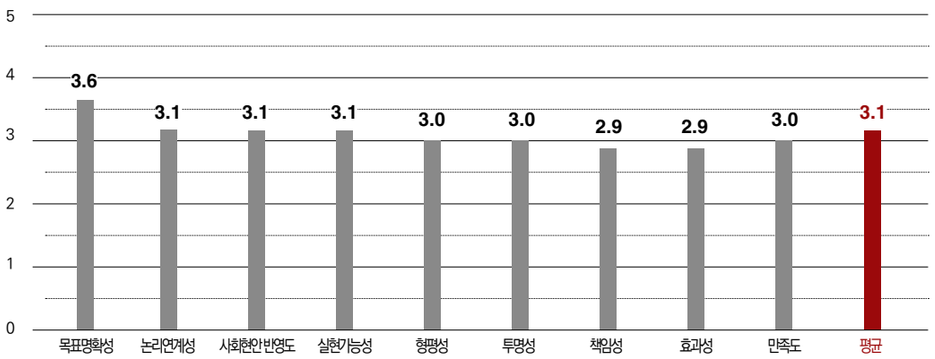
도시숲 조성(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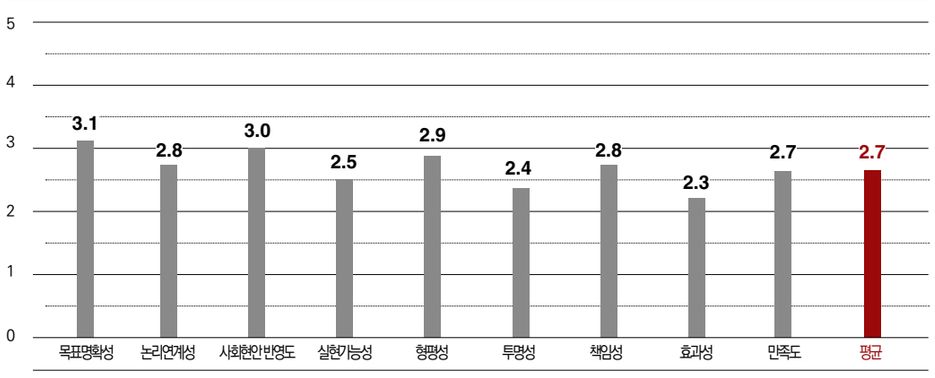
대학구조개혁(교육부)



문화가 있는 날(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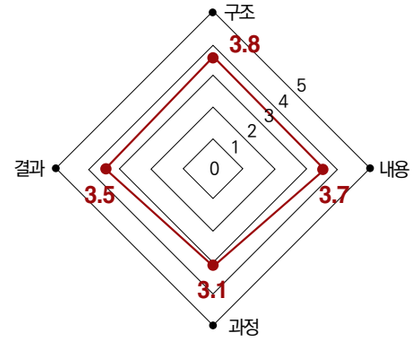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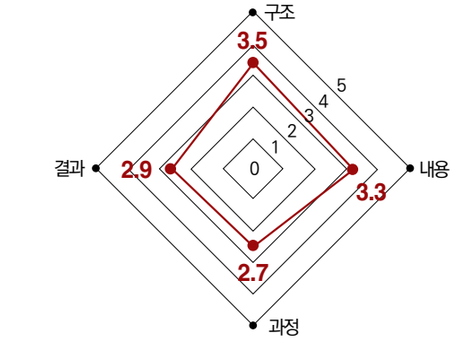


[그림 4-132]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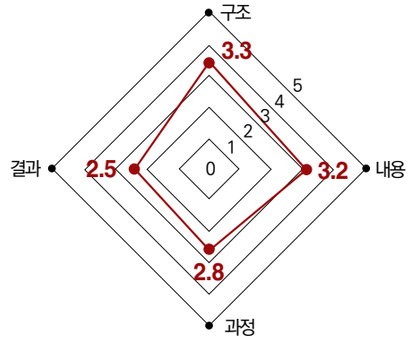
초등돌봄교실(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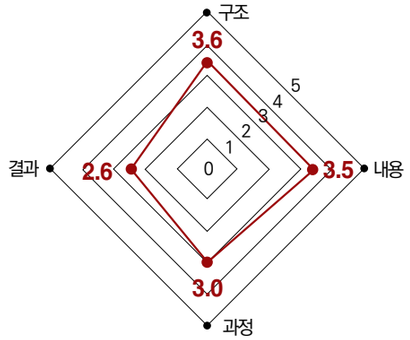
누리과정(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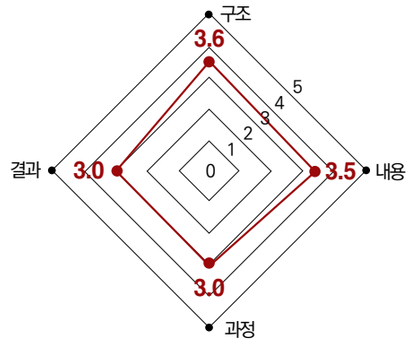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방송통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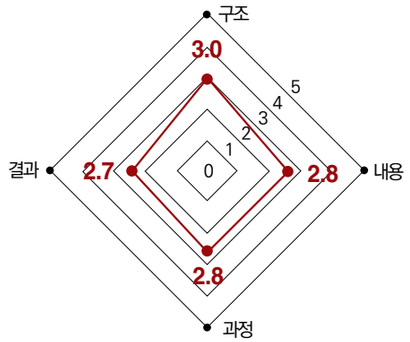
어린이·청소년 급식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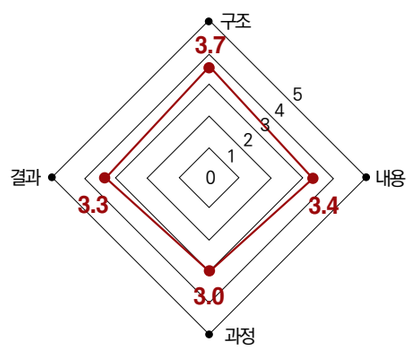
다문화가족 지원(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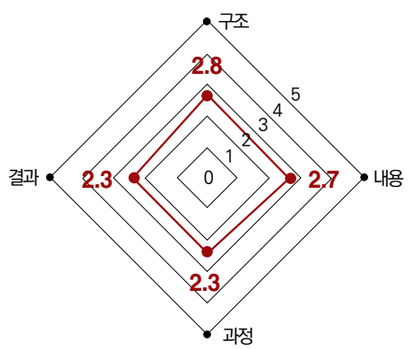
자유학기제 확산(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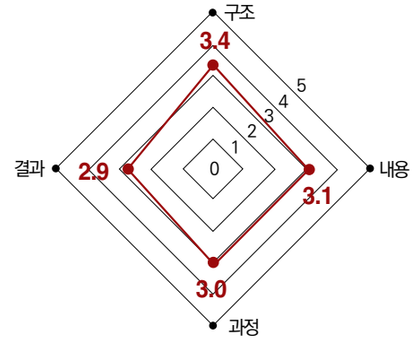
도시숲 조성(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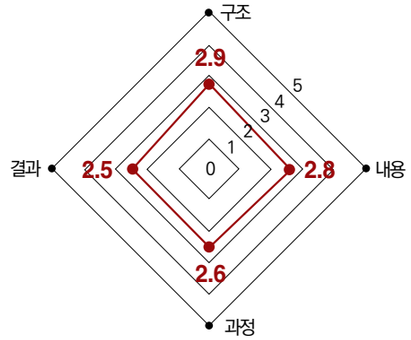
대학구조개혁(교육부)



문화가 있는 날(문화체육관광부)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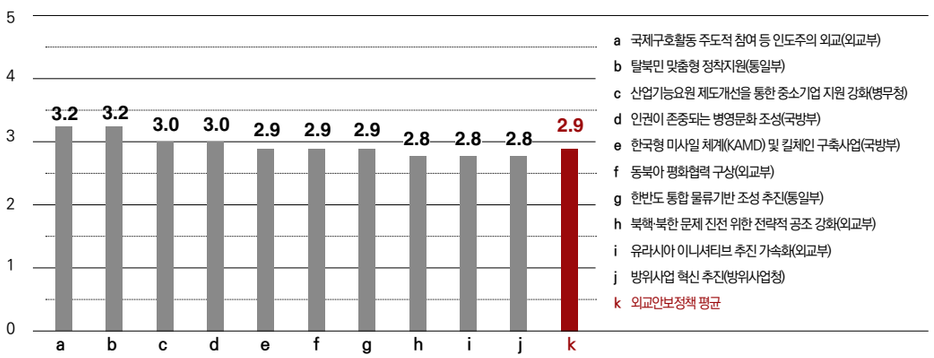
4. 외교안보정책 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결과 종합

일반인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모든 지표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결과, 외교안보 정책 분야는 2.9점의 평균을 나타내었다. 이는 동일한 점수의 경제정책(3.0), 교육문화정책(3.0), 사회복지정책(3.0)과 비교하였을 때 근소한 차이지만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남북분단의 특수한 현실과 최근 동북아 안보 지형의 불안정 등 외교안보정책들은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정책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 외교안보분야 정책의 각 지표별 평가결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

[그림 4-133] 외교안보정책 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나고 있다. 또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정책 인지도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 또한 외교안보정책 분야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외교안보정책들에 대한 전문가의 평균 인지도는 3.5점으로 경제정책(3.3), 교육문화정책(3.4), 사회복지정책(3.0)에 비하여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일반인의 인지도는 2.6점으로 경제정책(2.8), 교육문화정책(3.0), 사회복지정책(2.8)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로써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지도 차이가 타 정책영역에 비하여 가장 컸다. 이는 또한 대부분의 외교안보정책별 지표에서 전문가의 평가점수가 일반인의 평가점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교안보정책은 그 특수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홍보의 어려움과 부족, 타 정책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의 측정과 증명이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일반인에게 생활체감 정책으로서 다가오기 힘든 측면이 있다. 더구나 정부가 직접 출판한 외교안보 성과집 등의 자료들은 객관성 부족을 지적받고 있어(최재혁, 2015) 일반인이 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평가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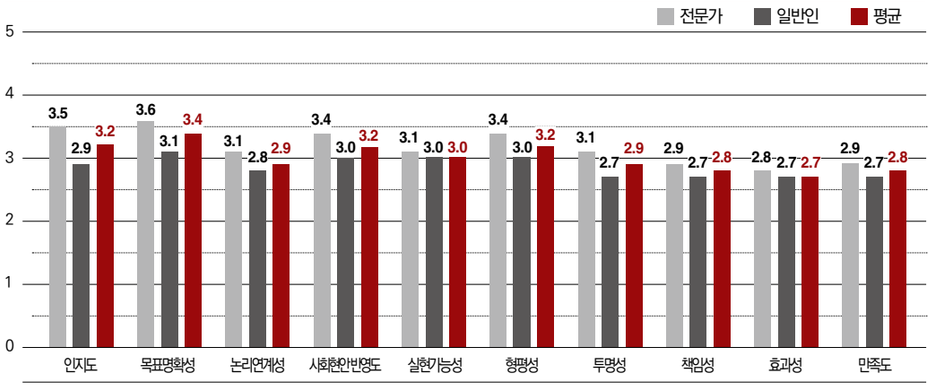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외교안보분야 10개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데, 각 정책의 평균 점수는 2.8~3.2에 해당하여 근소한 편차를 보였다. 각 정책의 평균을 순위별로 언급하면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3.2),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3.2), 산업기능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강화(3.0),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조성(3.0),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2.9),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2.9), 한국형 미사일체계(KAMD) 및 킬체인 구축사업(2.9),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2.8), 북핵·북한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2.8), 방위사업 혁신 추진(2.8)정책 순이다. 상위 네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평균 3.0 이상에서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고 하위 여섯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평균 2.9점 이하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주어졌음이 파악된다.

다음에서는 각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나) 정책별 설문조사 결과

(1)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

[그림 4-134]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부정적이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끊임없이 보도되어왔던 심각한 군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서 제안된 만큼 이 정책이 의도하는 목표가 이미 정책명을 통하여 충분히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정책목표의 명확성 지표에 비하여 대안의 연계성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제시된 정책이 고질적인 군인권 침해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군내 심각한 가혹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때마다 다양한 세부 대책들이 정책 내에 추가되고는 있지만 정책에 대한 회의를 감소시키고 신뢰를 확보하기에는 군인권 침해 사례의 심각성에 대한 인상이 크게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군인권 침해문제가 고질적 사회문제로 지적받고 있음에도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평가가 높은 수준에 달하지 않는 것은 정책에 대한 낮은 기대치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을 위한 예산은 2015년에 약 130억에 가까웠다. 그러나 예산의 확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는 점, 보다 혁신적인 법제도 기반의 부족, 나아가 근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점 등 이 정책이 가지는 특수성에 의하여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는 보통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은 일부 장병이 아닌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직접적인 정책의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 장병의 가족 및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에서 보통 수준의 평가가 비롯되었다고 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특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그간 군내 인권존중을 위한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하여 국방부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형식적인 노력들을 보였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에 내놓은 대책들에 토론의 결과 및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측

면이 있다. 나아가 특히 군 가혹행위의 실제 해결과정, 장병 자살사건 및 의문사 등에서의 국방부의 폐쇄적 태도들은 병영 정책 전반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관하여 일반인의 부정적 평가를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9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성관련 사건의 빈번한 발생과 일명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에서와 같이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군내 가혹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집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책임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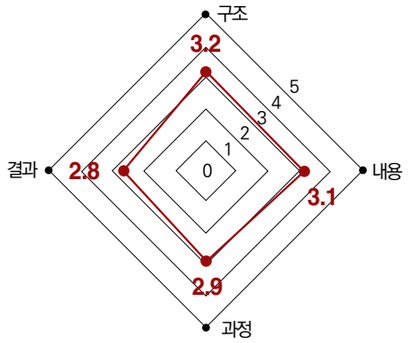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8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과 관련된 지표들 중에서 정책의 효과성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다. 예산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세부 대책들을 추가하고는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는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만큼 아직까지도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9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앞서 설명한 정책의 특명성, 책무성 및 효과, 즉 정책과정과 정책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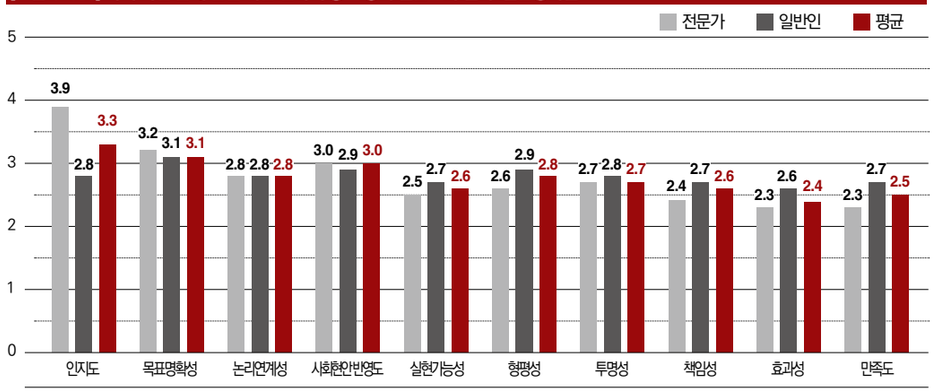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2), 결과(2.8), 과정(2.9), 내용(3.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5]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그림 4-136]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책의 목표명확성을 묻는 문항에 있어서 전문가 점수의 평균은 3.2점, 일반인 점수의 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3.1점의 전체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 정책 관련 다른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보다 명확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정책은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의 진전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여태까지 다른 정부에서의 북핵 문제 진전의 방식과 매우 유사하므로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비교적 목표가 명확하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을 묻는 문항에 있어서 전문가 답변은 2.8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답변은 2.8점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이들의 전체 평균점수는 2.8점으로, 이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달성할 최선의 방안이냐의 질문과 관련하여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에서의 논리적 연계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정책의 목표가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가 북핵 문제의 진전에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 점수의 경우는 3.0점의 평균을, 일반인 점수의 경우는 2.9점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3.0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공조 강화 정책이 사회현안을 반영한 정책임은 어느 정도 분명하지만, 북핵 문제가 외교 분야를 비롯한 다른 분야의 산재해 있는 사회현안들에 비해 시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평가의 경우에는 2.5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평가의 경우에는 2.7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전체 평균점수는 2.6점으로 다른 평가 문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다른 나라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가늠함에 있어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점수의 수준이 조금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의 경우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따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무력도발 등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이고, 바로 이러한 점이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책의 형평성을 묻는 항목에 있어서 전문가 평가는 2.6점, 일반인 평가는 2.9점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전체 평균점수는 2.8점으로, 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정책 수혜자와 정책의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정책은 평균적으로 보통수준에 가까운 형평성을 인정받고 있다. 북핵 문제는 개인을 넘어 전 국민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문제이며 형평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될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설문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고, 당장 시급한 현안도 아니라고 평가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의 경우 2.7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평가의 경우 2.8점의 평균점수를 보여, 두 집단 간 평균 점수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았다. 전체 평균점수는 2.7점으로 다른 평가문항의 평균점수에 비해 평균적인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 정책의 경우 정책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절차들을 통해 이해당사자 및 관련 실무가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민주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책임성에 관한 질문에 있어 전문가 답변의 경우 2.4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답변의 경우에는 2.7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평균은 2.6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또한 민주성과 함께 다른 문항들의 평가점수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이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책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이 정책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 외교부 홈페이지 국정과제 추진현황란과 북한핵문제관련일지란에서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여기에 게시된 자료들은 회담이 이루어지는 현황과 그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여(강력한 메시지 도출 등) 어느 정도 모니터링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실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은 개최되고 있지 않아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방식을 고수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은 정책의 책임성의 평가가 낮은 이유로 생각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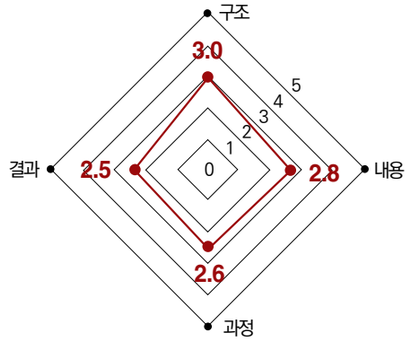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전문가 답변의 경우 2.3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답변의 경우에도 2.6점의 평균점수를 보여,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점수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의 평균점수는 2.4점으로 다른 문항들의 평균점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된 이 정책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균점수는 각각 2.3점과 2.7점으로, 정책의 효과성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점수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평균점수는 2.5점으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매우 낮은 수준의 만족도가 확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현안을 반영하고 있고, 그 목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북한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 핵무기 보유에 필사적인 것을 감안할 때,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이 매우 낮은 것이 만족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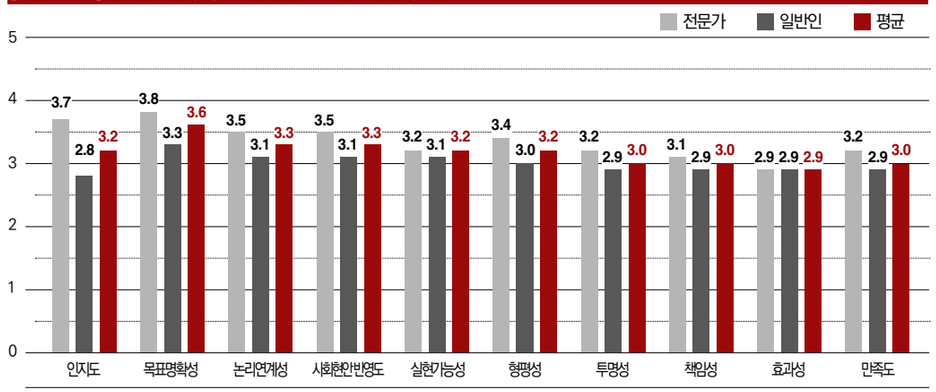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0), 결과(2.5), 과정(2.6), 내용(2.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3)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그림 4-138]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정책 목표의 명확성을 묻는 문항에 있어서 전문가 점수의 평균은 3.8점, 일반인 점수의 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3.6점의 전체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 정책 관련 다른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보다 명확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정책은 탈북민에 대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의료지원 강화하고 이들을 통일 미래의 역군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의 답변이 비교적 차이가 나는 것은 탈북민을 통일 미래의 역군으로 육성하는 것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비교적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을 묻는 문항에 있어서 전문가 답변은 3.5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답변은 3.1점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이들의 전체 평균점수는 3.3점으로, 이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달성할 최선의 방안이냐의 질문과 관련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의 논리적 연계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정책의 목표가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탈북민들의 정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 점수의 경우는 3.5점의 평균을, 일반인 점수의 경우는 3.1점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3.3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서 살펴본 것처럼,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정책이 사회현안을 반영한 정책임은 어느 정도 분명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다른 분야의 산재해 있는 사회현안들에 비해 시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평가의 경우에는 3.2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평가의 경우에는 3.1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전체 평균점수는 3.2점으로 다른 평가 문항들에 비해 평균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탈북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가늠함에 있어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점수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정책의 예산은 통일부 예산의 약 54%인 1240억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부 차원 외에도 민간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이나 제도적 환경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탈북민들의 정착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반국민 평균 소득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과 다양한 부적응 사례들이 존재하는 점 등 현재까지 이와 유사한 정착 지원 정책의 효과성이 낮았다는 문제로 인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묻는 항목에 있어서 전문가 평가는 3.4점, 일반인 평가는 3.0점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전체 평균점수는 3.2점으로, 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정책 수혜자와 정책의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정책은 평균적으로 보통수준에 가까운 형평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탈북민에 대한 우리사회의 시각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은 친근하지 않다는 시각이 더 우세하여 그들을 완전히 국민의 일원이자 다른 사회적 약자에 비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의 경우 3.2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평가의 경우 2.9점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전체 평균점수는 3.0점으로 다른 평가문항의 평균점수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 정책의 경우 정책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문회의 또는 세미나 등이 존재하지만, 일반 국민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민주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책임성에 관한 질문에 있어 전문가 답변의 경우 3.1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답변의 경우에는 2.9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평균은 3.0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또한 민주성과 함께 다른 문항들의 평가점수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이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책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정책에 대한 정보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을 포함하여 다양하지만, 실제 탈북민들의 의료·교육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

였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별도의 내부 모니터링 제도 등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책무성에 대해 높은 평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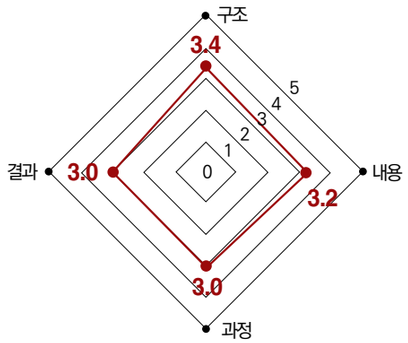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전문가 답변의 경우 2.9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답변의 경우에도 2.9점의 평균점수를 보여, 전문가와 일반인은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의 평균점수는 2.9점으로 다른 문항들의 평균점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탈북민들의 정착지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탈북민들의 생활 지표가 일반 국민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탈북민들의 다양한 부적응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이 아직까지 탈북민 정착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 생각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된 이 정책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균점수는 각각 3.2점과 2.9점으로, 정책의 형평성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점수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평균점수는 3.0점으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만족도가 확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목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탈북민들의 생활수준이 일반 국민들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그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만족도 측면에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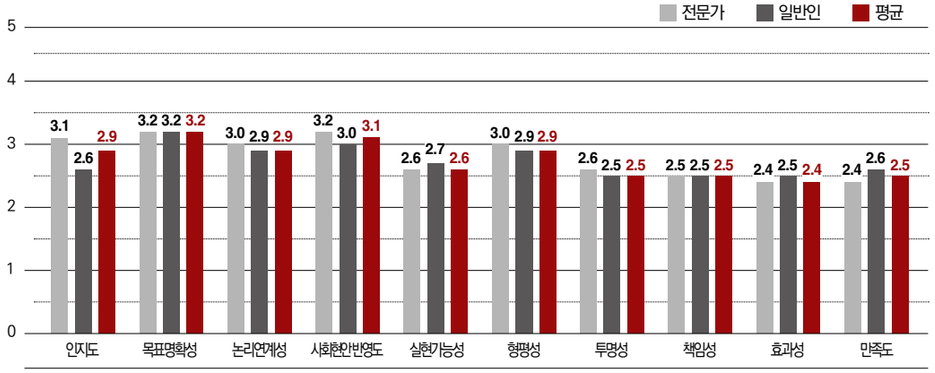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4), 결과(3.0), 과정(3.0), 내용(3.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9]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4) 방위사업 혁신 추진

[그림 4-140] 방위사업 혁신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은 방위사업 비리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의 신뢰 획득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정책목표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사전 정보공개 제도의 확대, 인적구조 개편, 민간 참여 확대라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간에도 방위사업 비리를 둘러싼 유사 대책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사회현안 반영도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 이유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 사건에 의해 그로 인한 충격과 현안으로서의 문제의식이 더 이상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6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6점으로 나타났다. 고질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이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측면에서의 실현가능성 전반에 대한 평가 또한 부정적으로 이끌었다고 본다.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 연루 또한 정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대한 불신과 정책 실현가능성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안보와 관련된 방위사업이 부패 없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효과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국민 일반이 되겠지만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평성에 대한 확신 또한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특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6점, 일반인 집단은 2.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5점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 분야 정책들 중 투명성 분야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방산비리와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은 큰 반면에 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 3.1점, 일반인 집단 2.6점, 평균 2.9점으로 낮은 수준에 속했다. 이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절차와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정책의 특명성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다고 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5점, 일반인 집단은 2.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5점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분야 정책들 중에서 투명성 지표에 있어 두 번째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자체감사결과, 옴부즈맨 운영, 반부패 청렴자료, 부패행위 현황 공개 등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책추진 과정의 다양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무색하게 하는 방산비리의 반복에 의해 책임성 또한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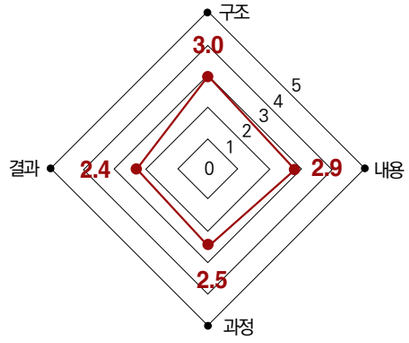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4점, 일반인 집단은 2.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4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 관련 지표들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해당한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비리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지만 방산비리는 계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비리관계의 고착관계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에 대한 낮은 기대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이끈 것으로 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4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핵·북한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책과 함께 평가대상 외교안보 정책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만족도에 해당한다. 거의 모든 지표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이 정책이 만족도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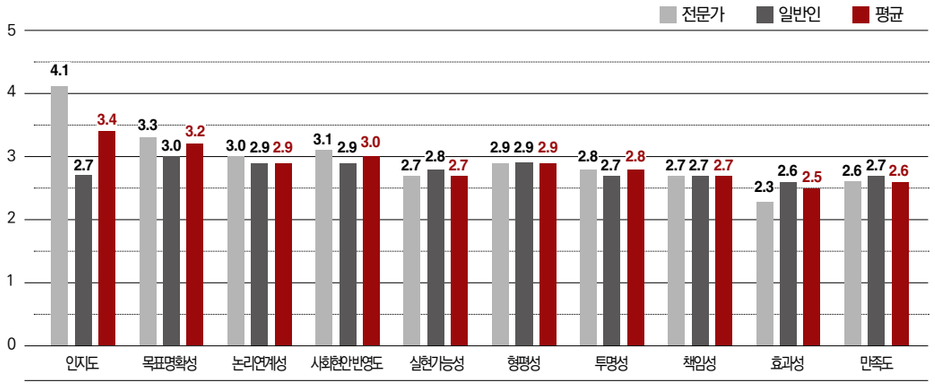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0), 결과(2.4), 과정(2.5), 내용(2.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1] 방위사업 혁신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5)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그림 4-142]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에 관한 모든 지표들 중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 지표 부분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정책은 동북아 지역 내 국가 간 연성안보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동북아의 평화라는 비교적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대화와 협력이라는 명확한 방식을 제시하여 비교적 괜찮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의 평균점수는 다른 지표들 중에서 평균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점수가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화와 협력이라는 방식이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국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 외에도 긴장된 한·일 관계, 중·일 관계, 미·중 관계 등 동북아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 간의 관계에 대해 국민들도 어느 정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7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에 투입되어야 할 상당한 예산과 극복해야할 전문적·기술적 난제 이외에도 현재 각국 간의 관계가 호전되고 있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볼 때,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여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9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국민 개인의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로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던 이 정책의 다른 지표들, 특히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특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8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외교정책의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주성 지표에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7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외교정책의 특수성에 의하여 국가 기밀유지를 이유로 이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정보공개는 부족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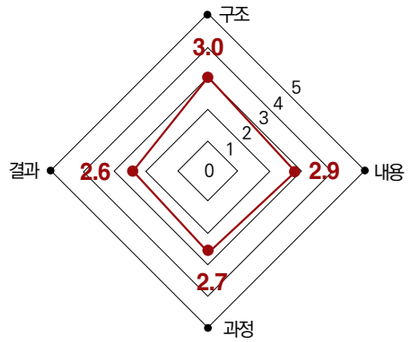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3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5점으로 나타났다. 관련 지표들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해당한다. 이 정책의 경우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받고 있는데다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굉장히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권교체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기반으로 그 효과성에 대해 현재로서 긍정적인 평가는 어렵다고 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6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6점으로 나타났다.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실현가능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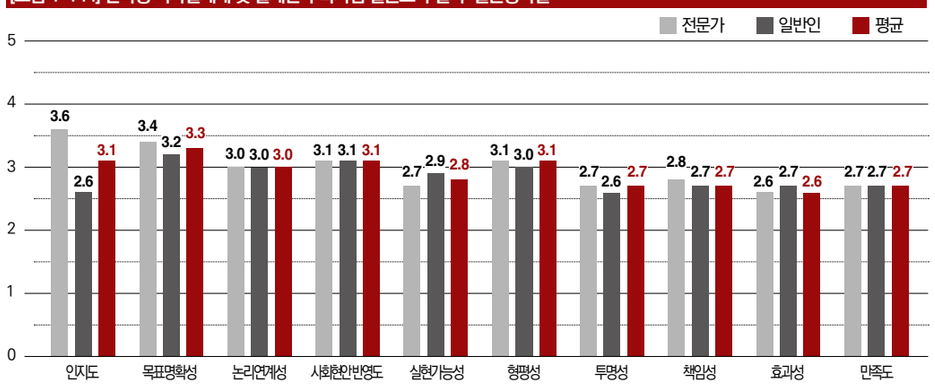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0), 결과(2.6), 과정(2.7), 내용(2.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3]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6) 한국형 미사일체계 및 킬체인 구축사업

[그림 4-144] 한국형 미사일체계 및 킬체인 구축사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에 관한 모든 지표들 중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 지표 부분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또는 미사일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구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 정책은(방위사업청, 2013)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속에서 국민들에게 안보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이 정책 인지도는 2.6점에 그쳤으나 3.6점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도 논리적 연계성의 평가가 보통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 정책 도입 전 이미 시행되고 있던 대응 정책들에 비해 이 정책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후술할 실현가능성 지표에서와 같은 맥락의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성공과 포격 도발 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된 것이지만 개인의 안보의식 차이에 의하여 보통 수준의 사회현안 반영도를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7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에 투입되어야 할 상당한 예산과 극복해야할 전문적·기술적 난제를 고려했을 때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여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수혜자가 일반 국민인 것에 비하여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던 이 정책의 다른 지표들, 특히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특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7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안보정책의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민주성 지표에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8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안보정책의 특수성에 의하여 국가 기밀유지를 이유로 이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정보공개는 부족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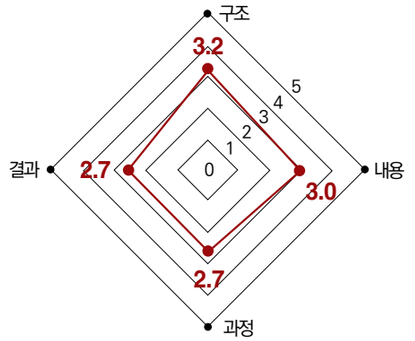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6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6점으로 나타났다. 관련 지표들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해당한다. 이 정책의 경우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2023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권교체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기반으로 그 효과성에 대해 현재로서 긍정적인 평가는 어렵다고 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7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실현가능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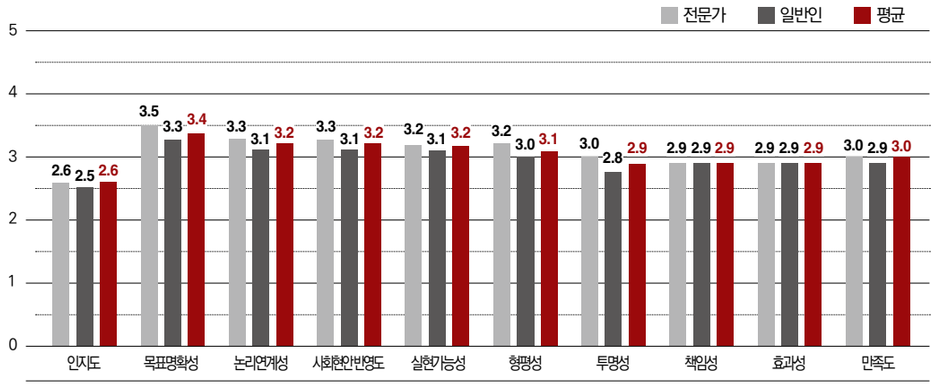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2), 결과(2.7), 과정(2.7), 내용(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5] 한국형 미사일체계 및 킬체인 구축 사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그림 4-146]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여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의 활용이 많은 중소기업을 구체적인 정책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정책 목표에 있어 보통 수준의 명확성을 인정받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은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70% 정도가 대학 이상 학력자였고 이로써 복무만료 후 학업을 위해 대부분이 퇴사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던 것을 배경으로 도입된 만큼 대학 이상 학력자 외의 인력 배정을 필연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적이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지원 몰림 현상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및 인력 수준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자주 지적되던 문제이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인력 불안정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정받으면서 이 정책은 사회현안 반영도에 있어 부정적이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책에 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해관계자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출신 및 중소기업에만 한정됨으로써 보통 수준의 형평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특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의 인지도는 전문가 및 일반인 집단 평균 2.6점으로 정책과정에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일반인 집단에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9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력 배정 결과에 대한 정보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가 제공되고는 있지만 공식적인 모니터링 제도는 부재하여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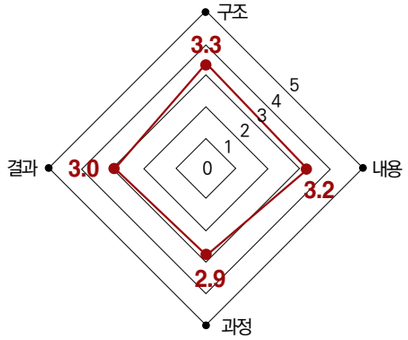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9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산업기능요원이 제공되는 중소기업은 관련 절차를 통해 지정되기 때문에 정책의 수혜자의 한정성에 의해 그 정책의 일반적 효과성에 대한 확신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면에서는 비교적 평이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과정과 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 종합적으로 정책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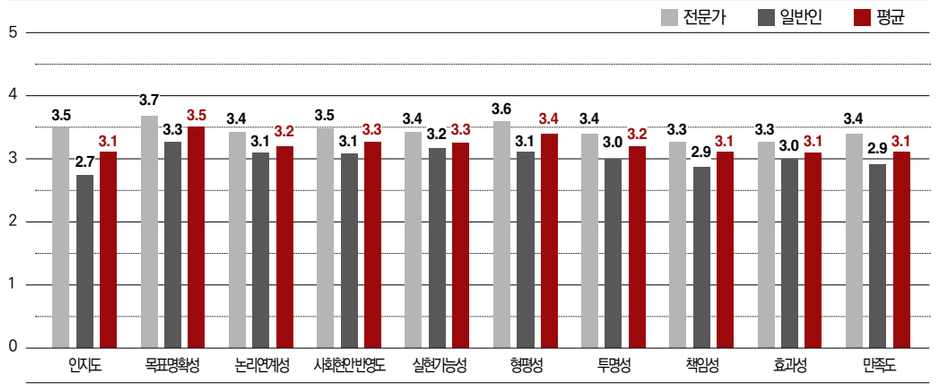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3), 결과(3.0), 과정(2.9), 내용(3.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7]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8)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그림 4-148]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7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5점으로 나타났다. 해외재난 발생 시 피해국의 인적, 물적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인명 및 재난구호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 정책은 목표명확성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답변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구호활동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하여 보통 수준의 목표명확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의 다른 지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평균 수준이며, 해외재난 시에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방식과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이므로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의 다른 지표들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 이상의 점수이며, 이러한 평가는 올해 에볼라 바이러스와 네팔 지진 등의 큰 사건들이 언론에서 집중 조명되는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수는 정책의 다른 지표들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이상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정책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재정적·행정적·제도적 환경이 어느 정도 잘 갖춰졌다는 평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의 수혜자가 해외에서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인 점을 생각해보면 형평성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도 다른 나라의 재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특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외교정책의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들이 해외재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므로 따라서 민주성 지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외교정책의 특수성에 의하여 국가 기밀유지를 이유로 이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정보공개는 부족한 수준이지만, 구호대의 파견과 물적 지원의 수준이 언론을 통해 제공됨에 따라 평균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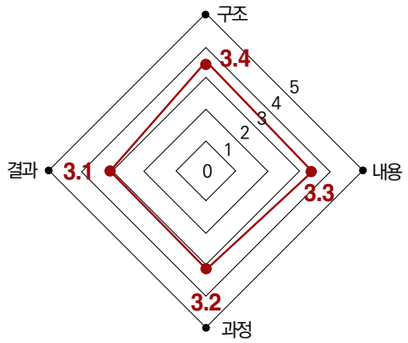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의 다른 지표들에 비해 평균적인 점수이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언론을 통해 구호대의 파견과 물적 지원에 대한 정보가 가시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은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 수준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목표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에 대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평가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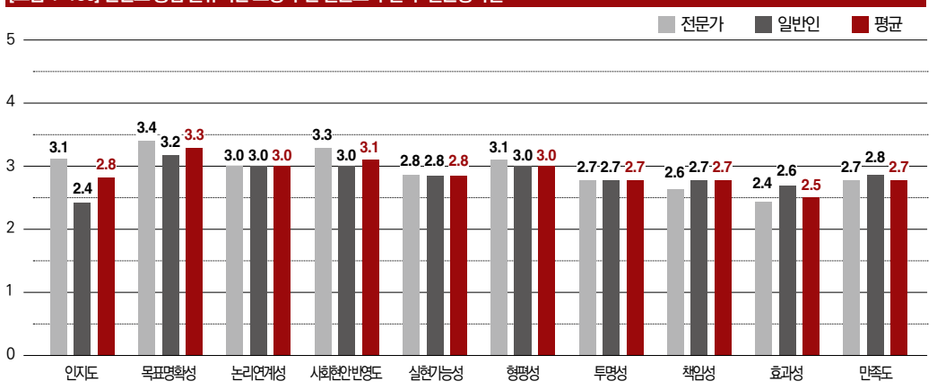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4), 결과(3.1), 과정(3.2), 내용(3.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9]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9)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

[그림 4-150]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에 관한 모든 지표들 중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 지표 부분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육상과 해상의 복합물류통로를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 정책은, 나진-하산 물류사업 및 경원선 복원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사업을 같이 제시하여 목표명확성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정책은 남북한 통합 물류기반을 만들기 위해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재개하고 경원선을 복원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였으며,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도움이 되었던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평균 이상의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성공과 포격 도발 사건들이 증가하고, 5·24 조치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수준의 사회현안 반영도를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8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남북관계의 개선여부이다. 재정적·행정적·제도적 환경이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가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안보이자 국민 개개인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답변의 점수가 평균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은 실현가능성 등의 지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특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7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처의 특성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주성 지표에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6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통일정책의 특수성에 의하여 국가 기밀유지를 이유로 이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정보공개는 부족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4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5점으로 나타났다. 관련 지표들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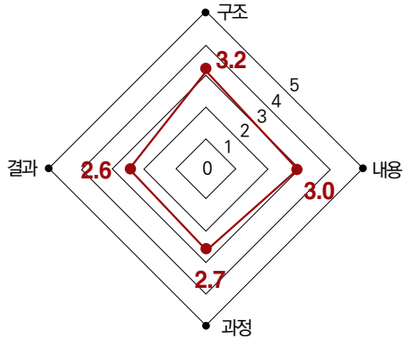
이 정책의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되었지만,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협력에 따라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효과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7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실현가능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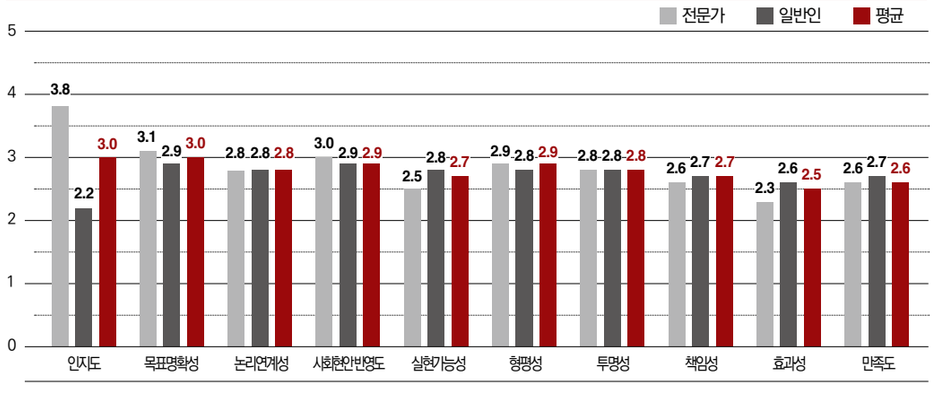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2), 결과(2.6), 과정(2.7), 내용(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1]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0)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그림 4-15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에 관한 모든 지표들 중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 지표 부분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른 외교안보 정책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제일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정책의 인지도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3.8점, 일반인 집단이 2.2점으로 매우 심각한 격차가 나는 것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차이는 이 정책의 목표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일반인에게 매우 생소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발생하며, 이에 따라 목표명확성의 측면에서도 다른 정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8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이 정책 인지도는 2.2점에 그쳤으나 3.8점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도 논리적 연계성의 평가가 보통보다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 정책이 기존의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또는 공조와 매우 유사하여 이 정책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며, 설문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유라시아 국가들 중 러시아와의 협력은 결국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안보와 연관된 부분이므로 보통 수준의 사회현안 반영도가 인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5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에 투입되어야 할 상당한 예산과 극복해야할 전문적·기술적 난제를 고려했을 때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며, 정책의 목표가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는 등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9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수혜자가 일반 국민인 것에 비하여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 다른 지표들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및 공조가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특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8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외교정책의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민주성 지표에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6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외교정책의 특수성에 의하여 국가 기밀유지를 이유로 이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정보공개는 부족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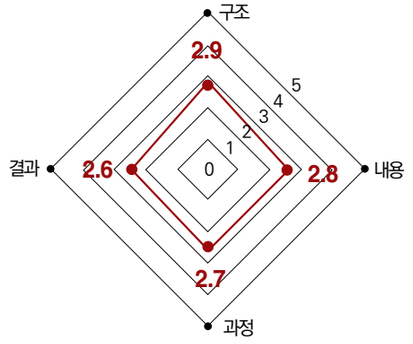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3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5점으로 나타났다. 관련 지표들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해당한다. 이 정책의 경우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목표이고, 개선된 정도를 입증하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2.6점, 일반인 집단은 2.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6점으로 나타났다.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실현가능성, 책임성,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2.9), 결과(2.6), 과정(2.7), 내용(2.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3]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가) 정성평가 결과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형평성 지표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외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실현가능성, 민주성, 책무성, 만족도, 효과성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3.5점, 내용 측면에서 3.7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3.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평균 3.3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2위에 해당했다.

북핵·북한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형평성, 민주성 지표에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책의 실현가능성, 책무성, 효과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3.5점, 내용 측면에서 3.0점, 과정 측면에서 2.5점, 결과 측면에서 2.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평균 2.8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9위에 해당했다.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정책에 대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만족도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실현가능성, 형평성, 민주성, 책무성 지표에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3.5점, 내용 측면에서 3.0점, 과정 측면에서 2.5점, 결과 측면에서 3.5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평균 3.2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5위에 해당했다.

방위사업 혁신 추진 정책에 대하여 모든 지표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2.0점, 내용 측면에서 2.0점, 과정 측면에서 2.0점, 결과 측면에서 2.0점의 평가

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평균 2.0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10위에 해당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정책에 대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그 외 정책의 실현가능성, 형평성, 민주성, 책무성, 효과성, 만족도 지표에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4.0점, 내용 측면에서 3.3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3.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평균 3.3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2위에 해당했다.

한국형 미사일체계 및 킬체인 구축사업 정책에 대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정책의 형평성, 효과성 지표에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책의 실현가능성, 민주성, 책무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4.0점, 내용 측면에서 3.0점, 과정 측면에서 2.0점, 결과 측면에서 2.5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평균 2.9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7위에 해당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어졌다. 그 외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실현가능성정책의 형평성, 민주성, 책무성, 효과성, 만족도에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따라서 지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평가는 없었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4.0점, 내용 측면에서 3.0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3.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평균 3.2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5위에 해당했다.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정책에 대하여 정책의 실현가능성, 효과성, 만족도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외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 민주성, 책무성 지표에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3.0점, 내용 측면에서 3.3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4.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평균 3.3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2위에 해당했다.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 정책에 대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긍정적인 평가가 주어졌으며, 그 외 정책의 형평성, 민주성, 책무성, 효과성, 만족도에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내려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4.0점, 내용 측면에서 3.7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3.0점의 평균을 나타내며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평균 3.4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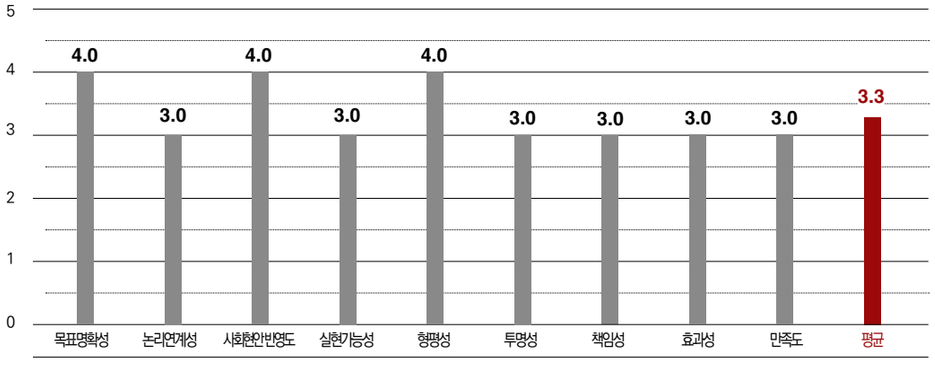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정책은 정책목표의 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형평성, 민주성, 책무성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그 외 정책의 실현가능성, 효과성, 만족도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3.5점, 내용 측면에서 3.0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2.0점을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평균 2.9점으로 7위에 해당했다.

다음에서는 각 지표에 대한 상세한 평가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 정책별 정성평가 결과

(1)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

[그림 4-154]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는 군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군내 비인권적 행위들에 대한 비판을 인식하여 신뢰받는 선진 병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뢰의 확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하여 장병 인성교육의 확대와 고충신고의 편의성 확보, 가혹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 구축이라는 세부 목표들 또한 자세히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인권교육 확대 및 콘텐츠 개발, 인권 및 법무 상담을 위한 전문적인 인권상담관제 운영, 여군 고충처리 강화를 위한 여성고충상담관제 운영,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영, 국방헬프콜 프로그램의 실시, 그린캠프 상시운영 등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세부 대안들이 다양하게 실시되고는 있지만(국방부a, 2015) 보다 혁신적인 정책대안의 도입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2014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윤일병 사건' 직후 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 보호관(옴부즈맨)을 설치하는 것이 국방부 주도로 긍정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공청회, 국회 군 인권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박소연a, 2015). 군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군 외부 독립기관을 통한 근본적인 혁신대안 또한 요구된다고 판단된다(임태훈, 2014; 홍성수, 2014).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2014년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에 이어 최근 파주에서 일어난 일병 수류탄 자살 사건에 이르기까지(정용수, 2015) 군 인권 관련 사건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다고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2015 국방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재정과 인력의 부족으로 이 정책 실현가능성의 확보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병영생활전문상담 인력의 양적 부족과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부족은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2017년까지 상담인력의 양적 증가를 계획 중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증가 계획은 제시되고 있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언론을 통해 상담 인력의 자질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이루어지고 있어(OBS, 2015)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은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장병들이지만, 군 인권의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 군 인권의 개선은 한국의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한 개선에 기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은 공청회,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당사자 및 관련 실무가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상술하였듯 이러한 정책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논의되어왔던 군 인권 보호관 제도에 대하여 국방부가 입장을 바꾸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의결한 사안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의 특명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이는 정책의 이해관계자인 병사들의 의견에도 부합하지 않고 있다(박소연b, 2015).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국방부는 분기별로 군 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 추진평가 회의와 병영문화선진화 추진평가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 4회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국방부b, 2015). 이를 통해 정책 실행 중 야기되는 문제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모니터링을 통해 관심병사 치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그린캠프의 확대와 개선을 계획한 바 있으나, 최근 언론을 통해 지적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관심병사의 수를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였으며, 그린캠프의 개선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최승욱, 2015).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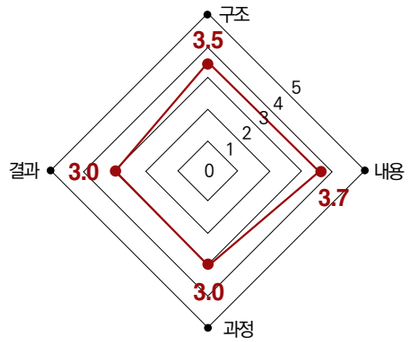
2015 국방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군 사망사고 및 자살사고의 감소 추이와 1일 장병상담 이용 건수 증가 등을 근거로 이 정책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살이 군내 사망의 1위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부족한 상담원의 자질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정책의 효과성을 확신하기 어렵다. 국방헬프콜의 이용 건수가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하였다는 점 또한 이 정책 효과에 대한 일부의 긍정적 평가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에 접수된 건 중 해당 부대로의 실질적 연계는 불과 6.2%에 그쳤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유재훈, 2015). 군 인권센터를 포함한 12개 시민단체의 의견에 따르면 "윤일병 사건" 등 군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 정책이 제대로 집행,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박소연a, 2015).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세부 정책을 통해 군 인권 병영문화개선을 꾀하고는 있지만 민주성, 책무성, 효과성에서의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 결과적으로 정책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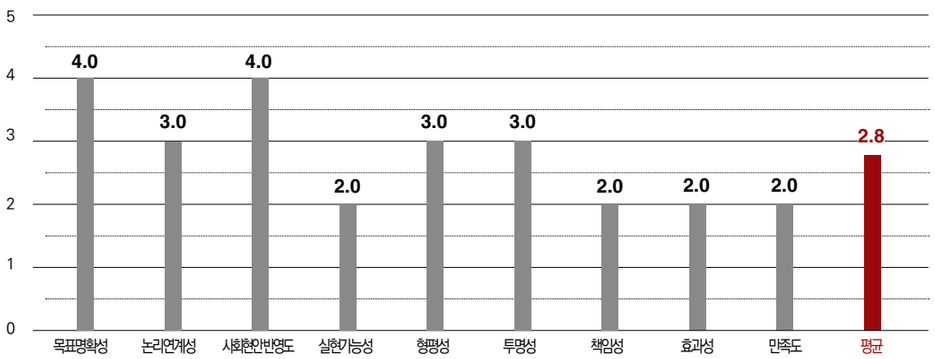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정(3.0), 구조(3.5), 내용(3.7), 결과(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5]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조성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그림 4-156]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목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국들과의 전략적인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로 양·다자 회담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일반 국민에게 쉽게 이해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목표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발전의 실현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과 목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양·다자 회담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과거 6자회담이라는 북핵 문제의 해결기제를 떠올리게 하며, 당시 상황을 비추어보았을 때 6자회담과 같은 방식은 어느 정도 효과적인 해결기제로 생각된다. 그러나 2008년 이후 6자회담이 개최되고 있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무력도발은 주변국들과의 회담 외에도 북한을 직접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북한 비핵화의 핵심은 기존의 방법보다 더욱 북한 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박명규 외, 2014)에 따르면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으로부터 국민들이 느끼는 위협의 수준은 매우 증가하였다.[22]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무인기 남파, 그리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비난 등 지속적인 안보불안을 조성한 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러한 조사결과를 참고하였을 때 이 정책이 사회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북한은 제3차 핵실험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성을 법제화하는 동시에 전 세계 비핵화 시까지 핵을 보유하겠으며, 핵군축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거시적인 비핵화 목표까지 설정해놓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에 진전을 보이고자 하는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핵무기는 북한이 권력을 유지하고 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와 붕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또한 핵을 진정으로 포기할 의사가 없는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불러내봤자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늦출 수 있을지언정 본질적인 핵 폐기는 이루기 어렵다는 경험적 사례에 근거하여 6자회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양무진, 2013).

22) 응답자의 89.3%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낀다.'고 대답하였으며,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9%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북핵 문제와 관련된 정책의 이해관계자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기존의 6자회담에 참여한 주변국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정책이 국민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형평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미 국민들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신뢰 또한 보통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다른 나라와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사업은 국가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회담 및 협의체 참여, 의회 인사 교류 등 대외 교섭업무를 통하여 수행되는 외교부 고유사업으로서,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다른 나라와의 직접적인 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격'의 문제로 인한 외교 정책의 특성상 일반 국민의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산하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외교부a, 2015).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나라와의 정상급 회담 또는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회담에서 이야기한 사항, 그리고 회담을 통해 결정된 사항 등은 외교부 홈페이지 '북한핵문제관련일지' [23]란과 참고자료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태까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6자회담은 북한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는데, 현재 북한을 협상의 장에도 불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의 공조라는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효과성이 적은 방법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이 정책은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대화프로세스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추진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상술한 것과 같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대화프로세스가 바로 6자회담을 개최하는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은 2008년 이후 개최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비핵화의 당사자인 북한이 협상의 장에 나오지 않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적어도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압박 또는 회유 등의 방법을 통해 6자회담과 같은 협상의 장에 참여하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실질적인 약속이 없는 상황이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적어도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대상국들이 모여 북핵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해야 하지만 그것조차 시행되고 있지 않다(외교통일위원회, 2014). 심지어 다양한 학자들로부터 정부가 만병통치약처럼 매달리는 6자회담은 그 무용론이 나타날 정도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나(양무진, 2013; 함택영, 2014; 서동구, 2014), 북핵기획단은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외교부, 2014)을 통해 정부는 여전히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틀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정책 수단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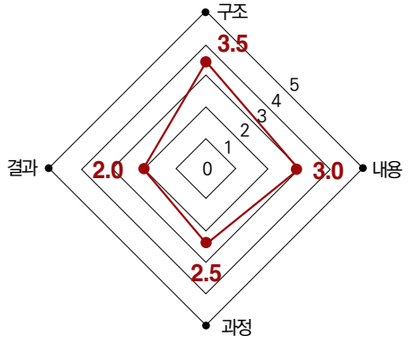
23) 대한민국 외교부 사이트. 북핵관련일지. http://www.mofa.go.kr/trade/hanbando/nuclear/talks/index.jsp?menu=m_30_20_10&tabmenu=t_3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전체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책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목표의 실현가능성과 문제해결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북한과의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고, 주변국들과의 다자회담도 거의 개최되지 않아 전체적인 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일의식조사(2014)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남한국민의 위협의식은 10%가 증가하였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도 작년보다 약 10%나 증가하였고,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 위협의식 수준은 제3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3년에 비해 10%나 증가(박명규 외, 2014)한 것은 북핵 문제와 관련된 국민들의 만족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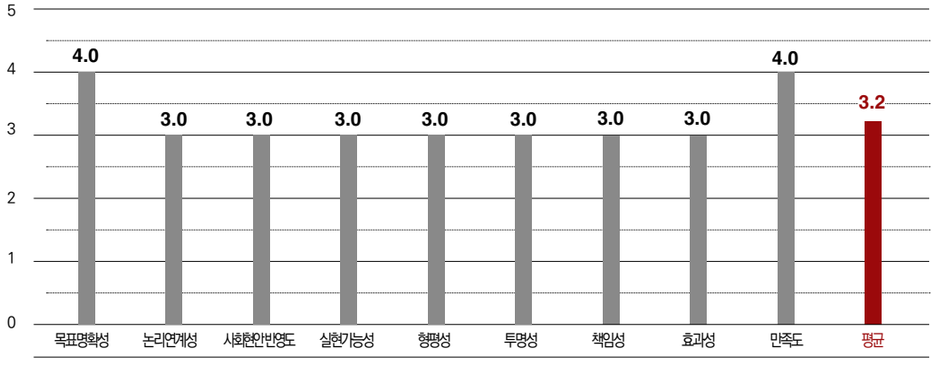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정(2.5), 구조(3.5), 내용(3.0), 결과(2.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7]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3)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그림 4-158]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탈북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정책이 도입되었음은 국민 일반에게 쉽게 이해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정부출범 이후 계속된 정책이며, 특히 탈북민에게 교육과 의료 분야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을 제시하는 것은 목표 설정이 매우 명확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탈북민의 국내정착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반국민의 평균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용률, 실업률, 월평균 소득의 지표에서 일반국민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통일부a, 2015), 취업을 위한 재교육을 확대·실시하는 것은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데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로 '학교수업 따라가기(48%)'를 꼽았으며(통일부a, 2015), 이는 방과 후 공부방, 대안교육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교육·의료 지원 정책들에 비하여 크게 차별성을 인정받기 힘들며, 소수이지만 부적응 사례가 공존함에 따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탈북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의료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통일준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즉, 탈북민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것은 통일 이후 남북주민 간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통일이라는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의 탈북민 '정착정책'은 '정착지원'이라는 도구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탈북민에게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가가 정착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이처럼 지원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정착정책의 중심이 되면서 남북주민이 만나 생활공간에서 '사람의 통일'을 이루어간다는 초기 문제의식이나 탈북이주민과 남한주민간의 의사소통과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와 같은 사회통합에 관한 주제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김화순·최대석, 2011).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다. 통일부는 하나원을 직접 운영하여 탈북민에게 초기 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호담당관제도를 시행하고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하며, 민간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지역적응센터와 연계하여 전문 상담사와 자원봉사자 등을 제공하고 있다(통일부a, 2015). 재정적으로는 통일부 예산에 약 54%를 편성하였으며,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고용지원금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제도적·재정적으로 정착지원을 위한 환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초기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하나원의 교육은 12주로 남한사회 전체를 이해하기에

부족하고,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므로 하나원의 교육만으로 남한사회적응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후관리의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잦은 교체와 업무과중으로 인한 업무기피 등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형식적인 지도 관리에 치중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최동문, 2009)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보통 수준에 그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탈북민 정착 지원 정책의 이해관계자는 탈북민 전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남한 주민들이 탈북민에 대한 친근감과 수용정도가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통일의식조사(2014)에 따르면 탈북민에 대한 친근도 조사 결과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 응답자가 친근감을 느끼는 응답자에 비해 많았으나[24], 탈북민에 대한 수용정도는 과반수의 응답자가 탈북민 수용정책에 우호적이었다[25](박명규 외, 2014).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각하면 일반 국민들이 탈북민 지원정책에 대해 보통 수준의 형평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탈북민 지원정책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협의·조정하여 집행하는 정책으로 협의회는 외교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19개 부처와 기관의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이와 같이 탈북민 지원정책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지만, 민간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라는 지역차원의 정책협의체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고,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보통 수준의 민주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에 관련하여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그 현황, 제도, 법령자료 등을 찾아볼 수 있다[26]. 게다가 통일부는 매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매뉴얼을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보호담당부서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통일부 내부자료(통일부b, 2015)를 검토한 결과 자체적인 모니터링 제도가 존재하고,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 있다는 언급만이 존재할 뿐 실제 개선사항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것은 이 정책의 책임성이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국조치 후 초기자립지원과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초기적응은 하나원에서의 적응교육을 비롯하여 하나원 퇴소 이후 취직, 정착지원 금 지급 및 주거 알선 등의 과정이 포함되며, 안정적

24) 탈북민에 대해 '친근하게 느껴진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3.3%이었으며, 응답자의 56.6%는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25) 응답자의 50.2%가 탈북민 수용정책을 지지하였으며, 지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1%가 동의하였다.
26) 통일부 홈페이지. 탈북민 지원정착제도.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2)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로는 신변담당관 제도와 취업보호담당관 제도, 거주지보호담당관 제도를 두어 정착 후 계속적인 보호 및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정정애 외, 2013). 또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교육과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목표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탈북민들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생활수준의 개선 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남북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 주민들이 탈북민을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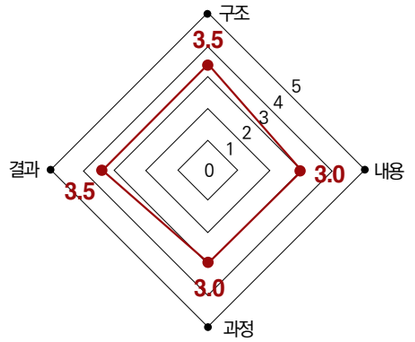
현재 탈북민의 생활수준은 고용률, 실업률, 월평균 소득 등의 지표에서 살펴볼 때 일반 남한 국민들의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재입북, 위장 망명, 범죄 등 다양한 부적응 사례도 공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도의 효과성에 어느 정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탈북민을 보는 우리사회의 시각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27], 탈북민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65.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박명규 외, 2014)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정착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비록 정책의 특명성, 형평성, 효과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듯이 비록 정착지원제도 자체에 어느 정도 문제점은 존재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탈북민들을 단순히 인도적 지원 혹은 시혜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남한사회의 구성원 또는 남북한 통일과 통합을 위한 중요한 행위자 등으로 이해하는 비율 높아지는 만큼(박명규 외, 2014)[28] 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본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정(3.0), 구조(3.5), 내용(3.0), 결과(3.5)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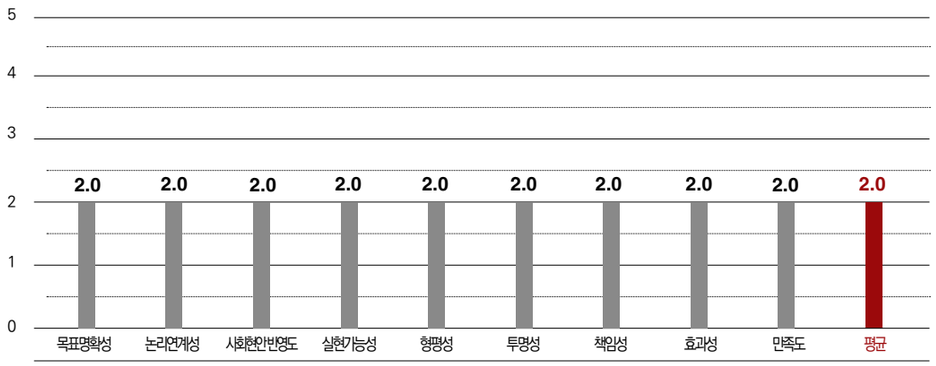
[그림 4-159]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7) 탈북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7년 36%에서 시작하여 2014년 4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8) 상술한 설문 조사결과를 참고하였다.

(4) 방위사업 혁신 추진

[그림 4-160] 방위사업 혁신 추진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방위사업 비리 근절의 계속된 실패를 통해 방위사업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자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이 정책이 도입되었음은 국민 일반에게 쉽게 이해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신뢰 회복 내지 청렴도 회복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등에서의 목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방위사업청은 비리가 터질 때마다 이에 대응한 정책대안들을 추가하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개선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왔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방위사업 비리 문제에 대한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혁신 정책의 경우 방위사업 반부패 혁신추진단 구성, 철저한 조사, 처벌의 강화, 국민 설명회를 통한 조달계획 공개, 방위사업 혁신안 마련, 민간참여 확대 등 매우 다양한 세부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전의 비리 근절 정책들에 비하여 크게 차별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또한 반복되는 정책 실패의 경험으로 인하여 이제는 정책적 노력을 통한 방위사업 혁신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청렴한 방위시스템 구축은 취약한 국방역량을 강화시키는 조건 중 하나로 이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성석호, 2015). 그러나 방산비리는 방위사업청이 처음 출범한 노무현 정부시기부터 사회문제로 언급되었고 따라서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점, 현재 정책을 통한 해결보다는 합동수사단의 수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회현안 반영도는 크다고 볼 수 없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현재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관련 비리 척결에 집중하느라 오히려 방산 수출 등 경제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박병진, 2015). 대통령, 정치인, 여론으로부터 쏟아지는 비판의 홍수 속에서 정책의 시행을 위해 예산과 행정적 측면에서의 투입에 힘을 쏟고 있으나 사실상 방위산업 혁신의 실현가능성은 긍정하기 힘들다. 이는 방위사업청 최초설계시의 잘못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인력 투입, 방위산업 환경을 바꿔놓은 저가경쟁입찰제의 시행 등 전 정권들의 잘못된 운영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방위사업 비리이기 때문이다(윤창욱, 2015; 정충신, 2015). 이러한 배경 하에 방위사업청 자체의 폐지론까지 주장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긍정하기 힘들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방위사업 혁신 정책의 이해관계자는 무기중개상, 군피아, 방위사업청 공무원 등 불법 비리와 관련된 모든 자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형평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미 국민들 사이에 방위사업청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신뢰 또한 보통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에서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방위사업이 방위 비리로 동일시되어 인식되는 반면 방위혁신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에 그쳐 있는 것이다. 올해 초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무기도입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국방부c, 2015) 기존의 정보공개제도에 더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지만 비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정책을 통한 혁신의지를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방위사업 비리사건은 그 심각성에 의하여 현재 내부 모니터링보다는 감사원의 특별감사단과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수사단의 공조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김경운, 2015). 최근에는 방산 비리 특별감사 시한이 1년 더 연장되었는데 정책의 책임성 및 정책 관리 능력이 이미 낮은 수준에 그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방위사업청장은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업무보고에서 방사청 조직이 비리행위를 적발하거나 처벌할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하였고(박병진, 2015) 이에 더하여 국정감사에서는 폐쇄적 조직문화, 퇴직자 불법로비의 구조, 무기중개상의 문제점 등 다양한 문제들을 언급하였다(정용수, 2015). 이는 사실상 그간 방위사업청이 추진해오던 방위사업 근절 정책의 노력과 그 효과성에 대하여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특히 조직문화의 폐쇄성과 로비에 취약한 구조 등은 비리를 조장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며 정책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민간 방위사업 전문가를 교육하는 방위사업교육원이 방위사업청이 아닌 국방부 산하에 설치되었는데(최태범, 2015) 이러한 조치는 방위사업청의 정책수행 능력에 대한 회의와 군피아에 의한 비리 조장이 정책의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방위 비리의 척결은 방위사업청 자체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불가능하고 민주적 문민통제 구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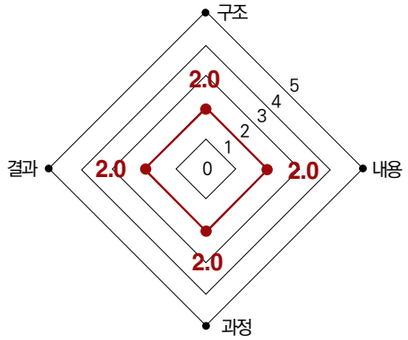
다. 국내외 업체와 군피아의 로비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군의 독점을 시정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이 무기획득 과정을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자체적인 노력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정욱식, 2015).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국민들에게 '방산'은 이미 '비리'와 동일시되어 있으며, 대표사례를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방산비리들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윤완준, 2015).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일부 여야 의원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는 방위사업청의 폐지 논의를 포함 관련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김영석, 2015). 이런 상황을 고려할 경우 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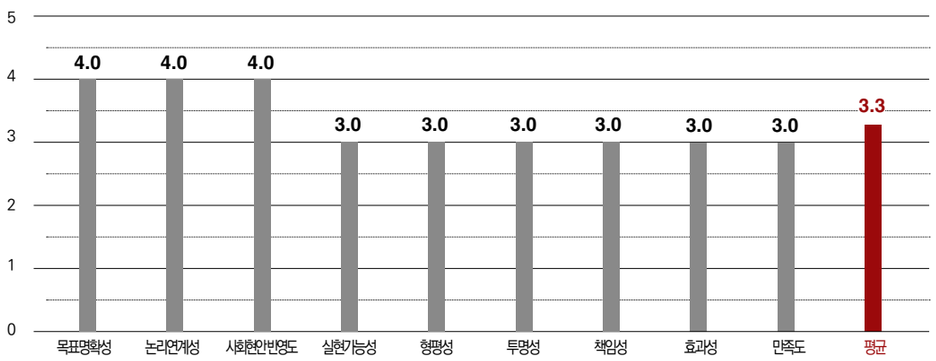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정(2.0), 구조(2.0), 내용(2.0), 결과(2.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1] 방위사업 혁신 추진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5)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그림 4-162]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재난관리, 마약, 보건, 환경, 사이버스페이스와 같은 주요 연성 안보 이슈에서의 협력 진전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 내 구도를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전환시키고자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화하고, 의제별로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창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연성 안보 이슈에서의 협력을 통해 경성분야 안보 의제로 논의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은 비교적 현실적인 방법으로 평가되며, 상기한 정책목표 달성에 적합한 정책 대안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재난관리, 마약, 보건, 환경, 사이버스페이스 등 의제별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국민들의 북한 핵무기 보유와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정책은 단순히 연성 안보 이슈에 그치지 않고 경성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을 증진하여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관련된 재정적·행정적·제도적인 환경은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우선,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작년의 8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다. 이는 수치로는 적게 볼 수도 있지만 기존의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라는 비슷한 정책에 5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환경만을 고려하였을 때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이라는 구체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작년에 비해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외교부b, 2015)하는 등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정책이 실현되기 위한 핵심 중의 하나가 바로 동북아 국가들의 정세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구상은 동북아 지역의 양·다자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었을 때 비로소 진전이 될 수 있는데, 현재 동북아의 정세, 특히 중·일 관계와 한·일 관계는 계속해서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다. 게다가 남북관계의 개선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진전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변창구, 2015) 이 부분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은 안보정책의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정책의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혜의 대상자가 불분명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형평성에 있어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기는 힘들다고 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은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며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5대 국정목표와 21개 전략, 1개의 '신뢰받는 정부'를 위한 추진기반과 이를 위한 2개의 전략, 그리고 140대 국정과제에서 시작되었다(김한권·고명현, 2014). 그러므로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정책의 추진과정에서도 외교부가 핵심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참여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현재 이 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있다. 즉, 외교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발간하여, 동북아 평화협력 회의의 진행 상황과 결과 및 각 의제별 포럼 개최 현황을 홍보하고 있다(외교부b, 2015). 다만 다수의 전문가들과 포럼에 참여하는 정상들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김한권·고명현, 2014; 김효정, 2015; 변창구, 2015;) 이에 대해 명확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것은 정책의 지속적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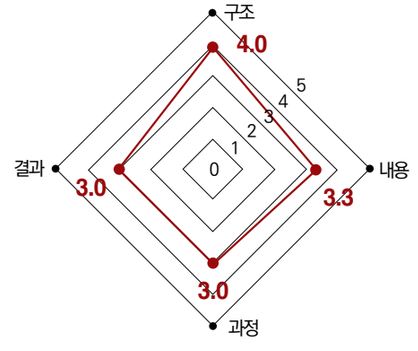
지난 1년간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외교적 노력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미국과 중국에게 한국의 구상을 설명했으며, 양국 지도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이끌어낸 것뿐이며 이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거나 그 모습을 드러낸 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김한권·고명현, 2014; 변창구, 2015). 또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상황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이 신뢰와 평화의 주장을 펼친다면 주변국들의 원칙적인 동의 이외에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김한권·고명현, 2014). 게다가 정부가 추진방향의 마지막 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공고한 협력의 틀'을 구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변창구, 2015), 단기적인 효과성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이 정책은 목표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주지만, 남북관계와 주변 정세에 따라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의 부족이 의심되어 정책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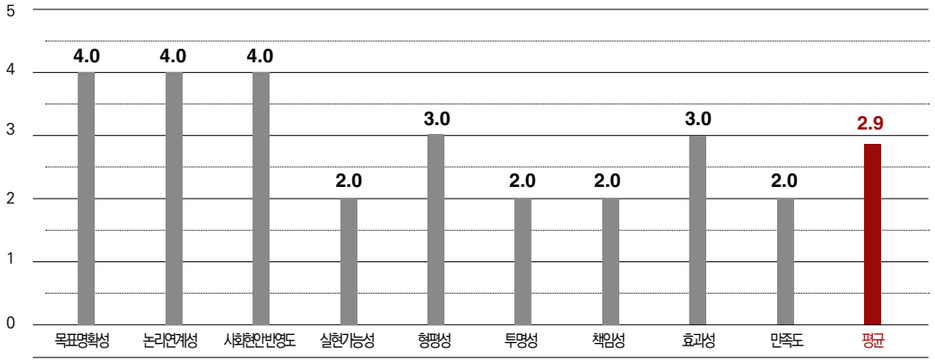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정(3.0), 구조(4.0), 내용(3.3), 결과(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3]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6) 한국형 미사일체계 및 킬체인 구축사업

[그림 4-164] 한국형 미사일체계 및 킬체인 구축사업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구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기조에 따라 위협의 잠재성 정도는 달라질 수 있고 이

것이 정책목표의 정당성 및 명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29] 현재 플루토늄 및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북한의 핵기술 및 장거리 미사일 능력,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는 위협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또한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이헌경, 2015).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을 선탐지, 선제거하고 날아오는 미사일 공격에 대하여 요격하는 것은 '적극적 억제전략'의 일종으로서 상기한 정책목표 달성에 적합한 정책 대안으로 판단되고 있다(김열수, 2013).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이 정책은 북한의 도발 증가 속에 국가의 안보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억제전략으로서 도입되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대북 안보정책은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언제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하였듯 위협의 잠재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현 시점에서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한국형 미사일체계 및 킬체인 구축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안보정책으로 다른 분야의 정책과 달리 재정적·행정적 지원 외에도 충분한 기술적 지원을 전제로 해야 실현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타 지표에 대한 평가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한국이 보유하고자 하는 수단과 운영능력을 고려했을 때 일찍부터 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김열수, 2013). 센서 체계, 정보처리지휘통제 체계, 요격 체계 등 기술상의 부족으로 그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이미 다수의 비판적 견해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 안보정책의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정책의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혜의 대상자가 불분명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형평성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힘들다고 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는 국방부 전력정책관과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으로 정책의 재정적 규모에 비하여 토론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와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도발적 포격 등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 특히 일반인의 인지도가 낮은 수준에 미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현재 이 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를 통한 정책의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는 안보정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책의 무력화 가능성 및 재검토의 시급성이 정치인과 언론을 통해 지적되고 있음을 살폈을 때(이도형, 2015), 내부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의 지속적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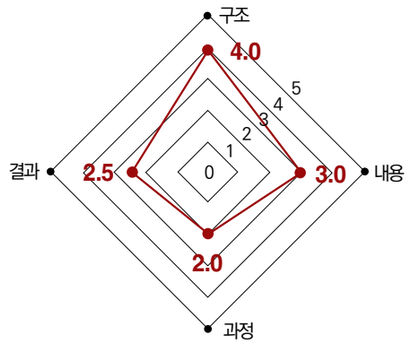
이 정책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나 이론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보완된다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김열수, 2013). 그러나 실제로는 실현가능성의 미흡으로 효과성이 완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정책 도입 이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발사 시험 성공 등 선억제와 반대되는 결과들 또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현재의 정책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윤상호, 2015). 또한 기술성의 부족으로 미국에의 의존도가 높아 정책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최현호, 2013). 따라서 현재로서는 효과성 지표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과 더불어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인 실현가능성의 미흡, 민주성 및 책무성의 부족이 정책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정(2.0), 구조(4.0), 내용(3.0), 결과(2.5)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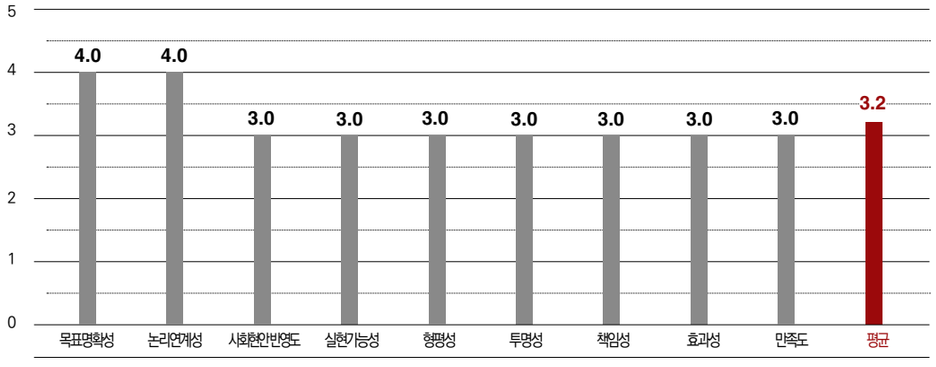
[그림 4-165] 한국형 미사일체계 및 킬체인 구축 사업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29)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을 통해 신뢰에 기초한 대북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정책 없는 통일정책'이라는 한계를 지적받으며 평화에 대한 소극성과 북한 압박과 안보에 대한 적극성이 남북 간 갈등상황을 오히려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김병연, 2015; 정용하·강성훈, 2015).

(7)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그림 4-166]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 산업체의 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체복무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는 기존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보완하면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부터 추진되었으나 2013년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부터는 현역 배정수와 비율을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함으로써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기존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한때 폐지논의가 있었으나(배은희·김옥이, 2009) 중소기업 인력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받아 2015년까지 연장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이전의 문제점들, 즉 대학 학력자들의 퇴사 문제와 고학력자 병역이행 수단으로의 이용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이 지적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우선 배정이 도입되었다. 기존 정책을 둘러싼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되어 도입된 만큼 새로운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대학학력자들의 퇴사 문제와 고학력자의 병역이행 수단으로의 이용 문제가 2011년제도 도입 당시의 배경이었다면, 당초 2015년까지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제도가 최근 다시 연장 결정된 데에는 새로운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즉 군 입대 경쟁률이 높아 군복무가 쉽지 않은 현재의 사회상황에 대한 고려와 낮은 청년 취업률이 정책 추진의 배경이 되고 있다(양낙규, 2015). 다만 이 정책의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보통 수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 정책의 실행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2015년 기준 약 4억 원 정도로 다른 정책에 비하여 크지 않으며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등의 행정 절차가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적 실현에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한정된 점은 상술한 기존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할 경우 적절한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형평성 측면에서는 정책의 정당성이 감소된 면도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 산업기능요원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박준용, 2015). 또한 국회의원 및 언론을 통해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김광진·전병헌, 2014), 이를 통해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30] 이후 ICT 분야에 대학생 병역특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전문연구요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윤대원, 2015), 여전히 특성화고 출신 우선 배정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이해관계자가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했을 때 정책의 인지도가 낮은 것은 일면 수긍이 가기도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평등의 원칙 위반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또한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정책이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특명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힘들다고 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현재 이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모니터링 제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 시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초 정보 획득만이 가능할 뿐이다. 또한 관련법이 개정됨으로써 이 제도의 재수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지속적인 정책 환류 및 개선 노력의 미흡성이 지적될 수 있다고 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산업기능요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하여 2013년 산업기능요원의 생산유발효과가 8,75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338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 지정 산업체 70% 이상이 산업기능요원의 직무수행 역량과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분석이 있다(노민선·백철우, 2015).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지속적인 일자리 형성과 전문성 심화로 연계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취업률 증가를 위해 보여주기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정책의 내용의 수정과 더불어 효과성에

30) 이는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및 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제36조 제4항 후단을 신설함으로써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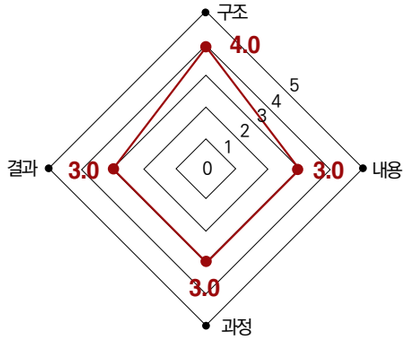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한 확신은 이르다고 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구조에 내용과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정책의 과정과 효과 면에서의 미흡함 때문에 전체적인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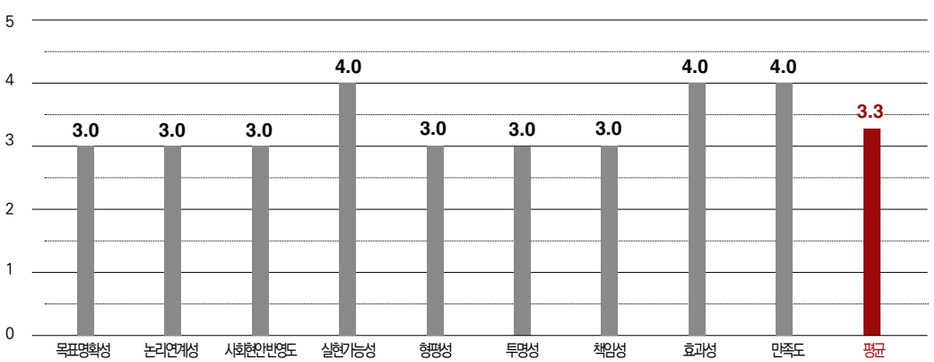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정(3.0), 구조(4.0), 내용(3.0), 결과(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7]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8)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그림 4-168]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해외재난 발생 시 피해국의 인적, 물적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인명구호 및 재난구호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의 모습과 타임라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목표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국제구호활동에 참여하여 재난 발생국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인명구호와 재난구호를 실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으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의 성과와 수단 모두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정책대안에 대한 논리적 연계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인명구호와 재난구호의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외교통일위원회, 2014).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에볼라 바이러스의 창궐과 네팔 지진이라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언론에서 집중조명하지 않는 많은 재난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센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정책을 묻는 응답에 중견국 외교(인도주의 외교 포함)라는 답변이 7.7%에 그치고 있으며(최강 외, 2014), 설문조사 결과 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일반인들에게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아직까지 인도주의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해외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보여주는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31].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에볼라 바이러스 전파와 네팔 지진이라는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이 정책의 예산은 기존의 307억 원에서 약 90억 원이 증액된 403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외교부 산하의 KOICA가 정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외교부 외 8개 부처와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라는 긴급구호체계를 갖추어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준비·수송·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책의 실현에 높은 평가가 이루어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접적인 정책의 이해관계자는 아니지만,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사안이며, 상술한 것처럼 국민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정책의 수혜자가 다른 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에서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된다.

31) 일례로 네팔 지진 사건과 관련하여 네팔 주한대사관으로 우리 국민 약 300명 이상이 총 17억 원을 기부하였으며(주한네팔대사관, 2015),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등의 기구를 통해 약 2만 5천 여명의 인원이 3억 원 이상을 기부하였다(네이버 해피빈 자료를 수집·정리함).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재난이 발생한 국가와 그 국민이기 때문에 구호의 방식과 서비스의 제공은 해당 국가의 수요에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현재 정책에 따른 구호의 방식과 서비스는 해당국가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에 그치고 있으므로(외교통일위원회, 2014)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기본적으로 재난 발생에 따라 인적·물적 구호가 필요한 것은 이해관계자에 요구에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통 수준의 민주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현재 이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모니터링 제도는 주무부처와 KOICA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도이며, KOICA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 시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초 정보 획득만이 가능할 뿐이다. 또한, 국정감사 결과에서도 긴급재난구호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이 KOICA의 ODA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외교통일위원회, 2014) 지속적인 환류 및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이 정책은 재난 발생 지역에 인적구호 및 재난구호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 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중국 쓰촨 성 대지진 발생 시 긴급구호대를 파견하고 구호품을 지원하였으며, 미얀마의 사이클론 나르키스 피해지역에 의료팀을 파견하였다. 2009년에는 인도네시아에 긴급구호대를 파견하여 구호활동을 수행하였으며, 2010년에는 아이티에 긴급구호대를 파견하고 의약품 등의 구호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필리핀의 태풍 피해지역에 대응 구호대를 파견하였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지역에 대응 구호대를 파견하였고, 최근에는 네팔 지진 발생 시 긴급구호대를 파견하였다. 그 외에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약 200억 원 이상을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였다.[32] 이와 같이 국제구호활동 참여 정책은 오랜 기간에 걸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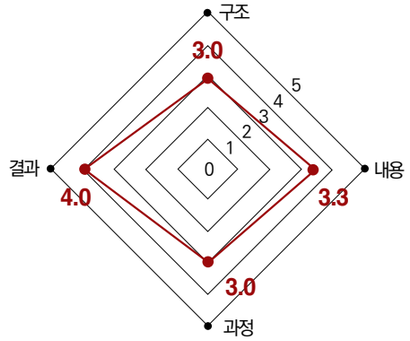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이 정책은 보통 수준의 사회현안 반영도를 가지고 있지만,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며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만족도 또한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정(3.0), 구조(3.0), 내용(3.3), 결과(4.0)의 순으로 나타났다.

32)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홈페이지. KOICA 인도적 지원 사업 실적. http://www.koica.go.kr/

[그림 4-169]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9)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

[그림 4-170]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남북·유라시아 지역 내 물류망을 구축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재개하고, 경원선을 복원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비록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의 모습과 목표와 구체적인 사업 간의 일관성이 존재함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교통망과 남과 북의 교통망이 같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북한의 노후화된 철도시설을 복구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현재 동북아 지역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경색된 남북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다. 이 정책은 남과 북의 경제적 협력을 전제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함이므로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 정책은 현재 나진-하산 물류 사업의 시범운행과 남측 경원선 복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나진-하산 물류 사업의 재개를 위해 2015년 약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외교부에서도 남-북-러 3각 협력팀을 구성하였으므로 실현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환경은 갖춰져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아직까지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점을 비추어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보통 수준에 머문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의 이해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러시아·북한과 같은 대상 국가들로 볼 수 있지만,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의 궁극적 성과를 생각해 볼 때 정책적 수혜자는 일반 국민 전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높고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가 높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정책의 형평성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통일부 정책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 또한 정부의 주무부처임을 감안하면 정책의 특명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일의식조사(2014)의 설문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남북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비율이 높고, 통일을 위해 시급한 사항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을 고려할 때,[33]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정책은 보통 수준의 민주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현재 이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모니터링 제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 시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초 정보 획득만이 가능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구체적인 사업 외에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한반도 국토개발마스터플랜'이 전문가들의 용역을 거쳐서 구상되고 있고, 북한의 참여를 촉구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 정책이 보통 수준의 책무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이 정책은 5·24 조치 이후 남북 간의 경제적 교역 및 협력이 중단된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보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사업의 제3차 시범운송에 동의하여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물품이 한국에 시범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업의 본 계약을 염두에 두어 둔 조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김동선, 2015) 이 정책은 남북 간의 물류망이 연결되는 효과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한과의 직접적인 회담에 북한이 응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효과성을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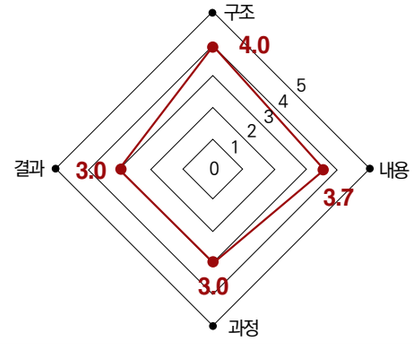
33) 남북경제 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였으며, 통일을 위해 시급한 사항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군사적 긴장해소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목표명확성, 논리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 정책의 핵심이 되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진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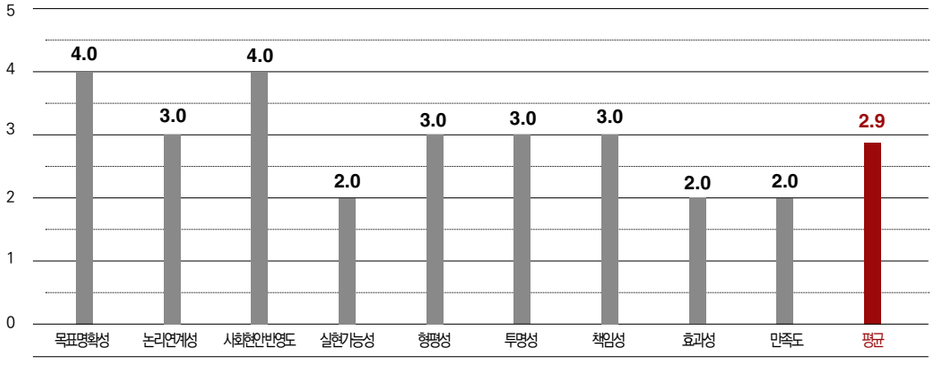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정(3.0), 구조(4.0), 내용(3.7), 결과(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1]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10)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그림 4-17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란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만들고, 유라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직·간접적인 개방 압력을 가하게 함으로써 통일의 초석을 닦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서 유라시아의 국가 및 협의체와 적극적인 인사교류 및 각종 실무협의회 등의 개최를 통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정책은 위와 같이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의 모습과 선후 관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정책목표가 명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및 협의체와의 교류를 실시하고,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과의 차별성을 얻기 힘들지만, 외교부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 외에도 예산을 새로 편성하여 남북러 3각 협력을 확대하고, 유라시아 친선 특급사업에 투자하며, 한-중앙아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는 등(외교부c, 2015)의 추가적인 사업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점은 보통 수준의 논리적 연계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상술한 것과 같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무력 도발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으며,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 또한 이와 맞물려 국민들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통일을 위해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구하고, 한 발 나아가 북한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므로 국민들의 우려에 상응하는 문제해결 기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정책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사회현안 반영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 정책의 실행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약 27억 원으로, 이 예산은 남북러 3각 협력 확대, 유라시아 친선특급 사업, 한-중앙아 협력 사무국 설립 사업에 사용된다. 또한, 외교부는 남북러 3각 협력팀을 구성하여 행정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이유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프로젝트가 그 취지에 상응하는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TKR(남북철도연결사업)·TSR(시베리아 횡단철도)을 포함한 물류, 통상, 에너지 등 단일경제권 관계국들의 발전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정책이 부족하고, 특히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박종진, 2015) 문제가 있다. 즉,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프로젝트가 유라시아 대륙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추진한다는 거대한 목표에 맞지 않게 구체적인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본학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도 "이 정책은 처음부터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고, 포장에 비해 내용이 없다."

고 지적(우경임, 2015)한 것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의 이해관계자는 유라시아 지역 내 국가들로 볼 수 있지만, 정책의 성과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책의 수혜자는 일반 국민 전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높고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가 높지만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의 형평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은 외교정책의 특성상 정책의 추진주체가 주무부처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의 편성과 추진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다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어 사회현안 반영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보통 수준의 민주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현재 이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모니터링 제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언론 매체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 시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초 정보 획득만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기존에 제기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지적(권종영, 2014)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규 예산이 편성된 점을 볼 때 어느 정도 정책 환류 및 개선 노력이 존재한다고 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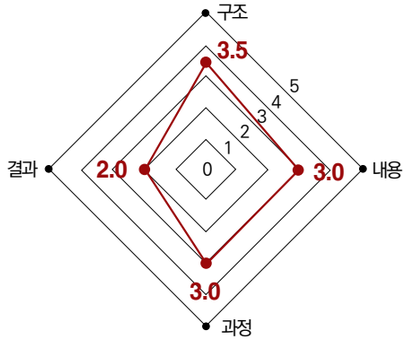
외교부 자체 평가에 따르면 2015년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문가 자문회의는 총 5회, 관계부처 회의는 총 3회, 그리고 외교부내 TF회의는 총 2회가 개최되었고,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러 3각 협력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중앙아시아 정상순방, 한-러 정책협의회, 한-중앙아 협력포럼, 한-우즈벡 정책협의회, 한-러 지역국장협의회, 제7차 한-카자흐 경제공동위원회, 한-우즈벡 산업위원회,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무차관보 회의, 한-러 고위급 안보회의, 비세그라드(V4) 외교장관회의 등 다양한 정상급·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다(외교부a, 2015). 이러한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효과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제시된 지표들이 기존의 '유럽국가와의 공조 강화'라는 정책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었던 지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에서 제시된 회담에서 논의된 신규 사업이나 특별한 성과가 제시되지 않는 점은 상술한 콘텐츠 부족의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구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정책의 결과 면에서의 미흡함 때문에 전체적인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정(3.0), 구조(3.5), 내용(3.0), 결과(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3]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정성평가 결과: 설문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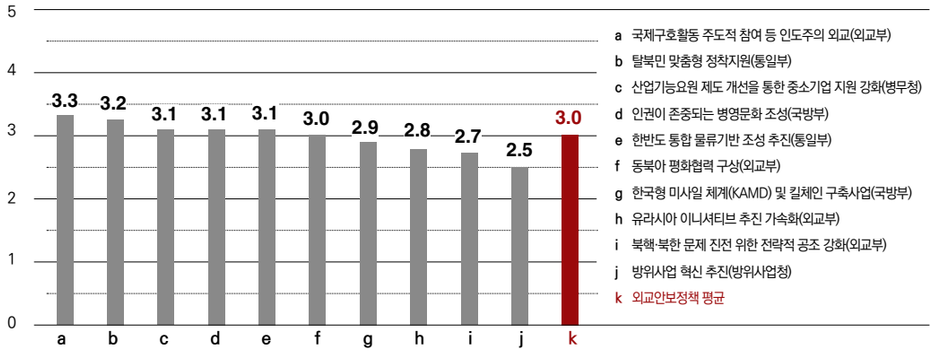


3) 평가결과 종합

가)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 합산

상기한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를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평균 3.29점의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정책이었다. 이어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정책이 3.19점으로 2위를, 산업기능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책이 3.14점으로 3위를, 인권이 보장되는 병역문화 조성정책이 3.12점으로 4위를,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이 3.08점으로 5위를 차지하여 보통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정책들로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정책이 2.99점으로 6위를, 한국형 미사일 체계 및 킬체인 구축 사업 정책이 2.89점으로 7위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정책이 2.80점으로 8위를,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책이 2.74점으로 9위를 차지했다.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방위사업 혁신 추진 정책으로 2.48점의 점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종합 순위 결과는 상기하였던 설문조사 결과의 순위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74]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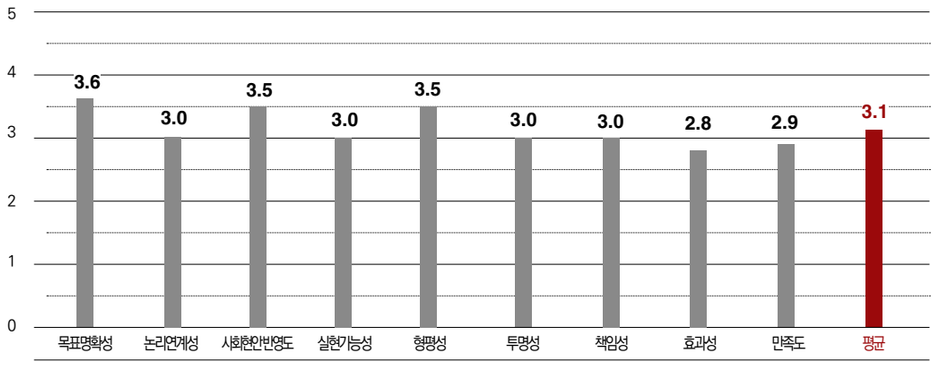


지표별로 살폈을 때 목표의 명확성 지표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3.73점의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정책이었으며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2.77점의 방위사업 혁신 추진 정책이었다. 논리연계성 지표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지표는 3.48점의 산업기능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책이었으며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2.59점의 방위사업 혁신 추진 정책이었다. 다음으로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 있어서는 3.48점의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조성 정책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2.70점을 받은 방위사업 혁신 추진 정책이 또 한 번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실현가능성 지표에 있어서는 3.54점의 가중평균을 나타내고 있는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정책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2.38점의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책이 가장 하위를 차지했다. 정책의 형평성 지표에 있어서는 3.46점의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조성 정책이 최상위를, 2.60점의 방위사업 혁신 추진 정책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책의 투명성 지표에 있어서는 3.13점의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정책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으며, 다시 한 번 방위사업 혁신 추진 정책이 가장 낮은 점수인 2.36점을 나타내며 최하위에 머물렀다. 정책의 책임성 지표에 있어서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정책이 3.22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책이 2.29점으로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효과성 지표에 있어서는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정책이 3.44점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역시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책이 2.27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 지표에 있어서 또 한 번 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정책이 3.45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2.29점의 방위사업 혁신 추진 정책은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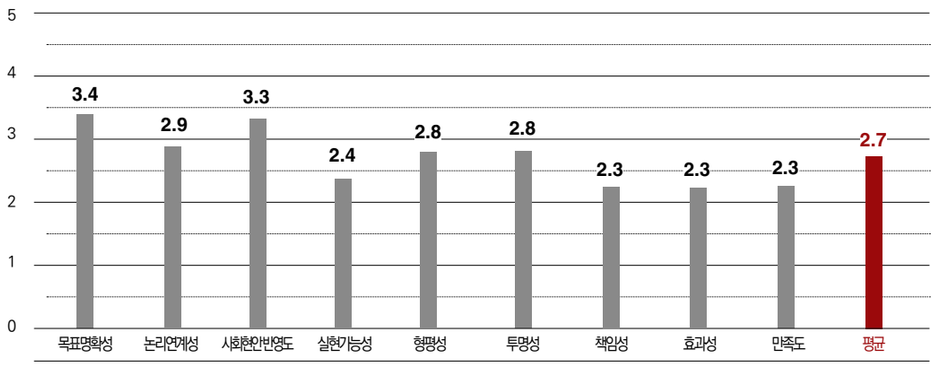
이러한 외교안보분야의 정책들을 다른 분야의 정책들과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나타낸 결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정책은 최종 7위에 올랐다. 이어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정책이 11위에, 산업기능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정책이 15위에 올랐다.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조성 정책은 17위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 정책은 21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정책은 26위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한국형 미사일체계 및 킬체인 구축사업이 30위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가 34위에 올랐으며, 여러 차례 다양한 평가 지표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정책이 36위의 결과를 나타냈다. 거의 모든 지표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방위사업 혁신추진 정책은 결국 40위에 오르며 모든 정책 중 최하위 순위를 나타내었다.

[그림 4-175]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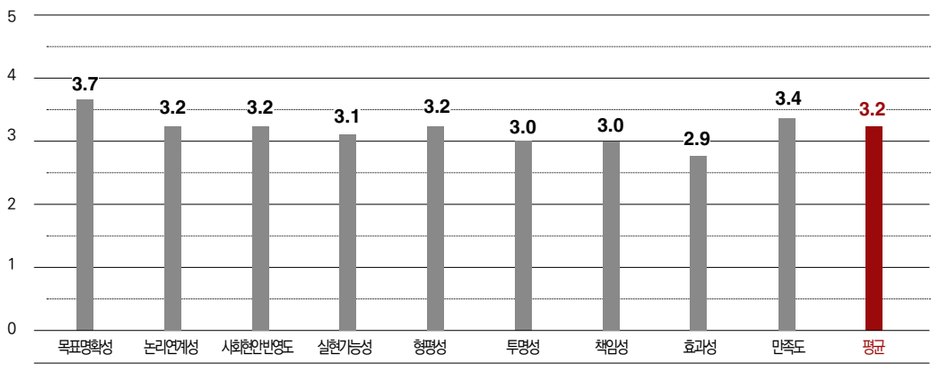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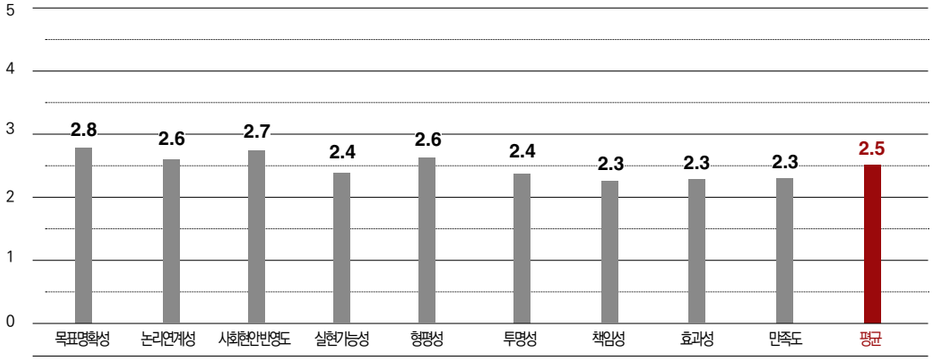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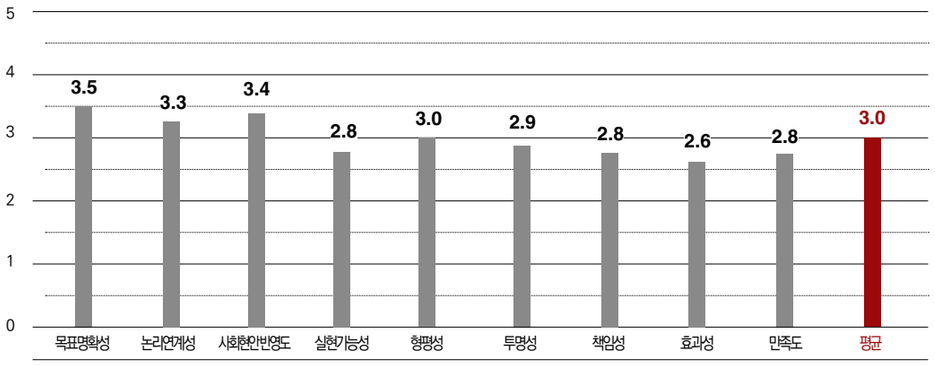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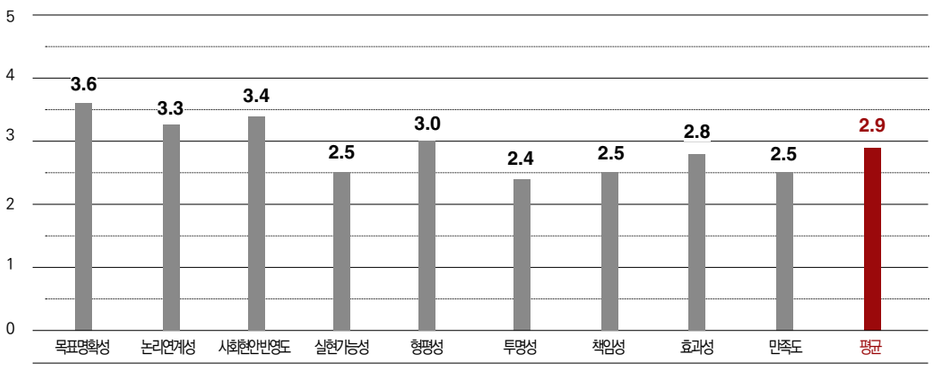
방위사업 혁신 추진(방위사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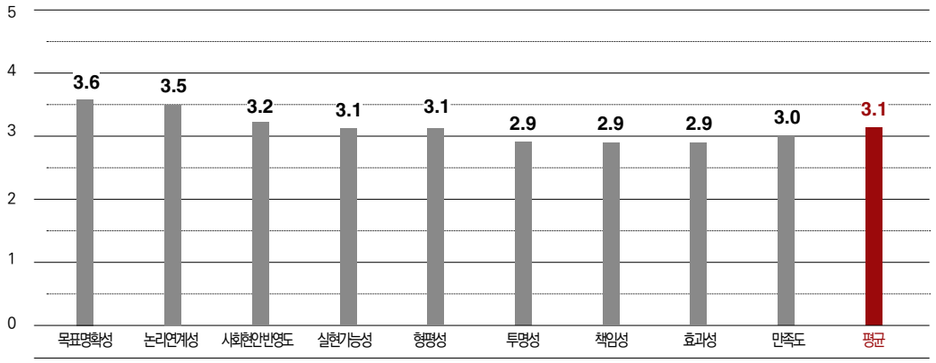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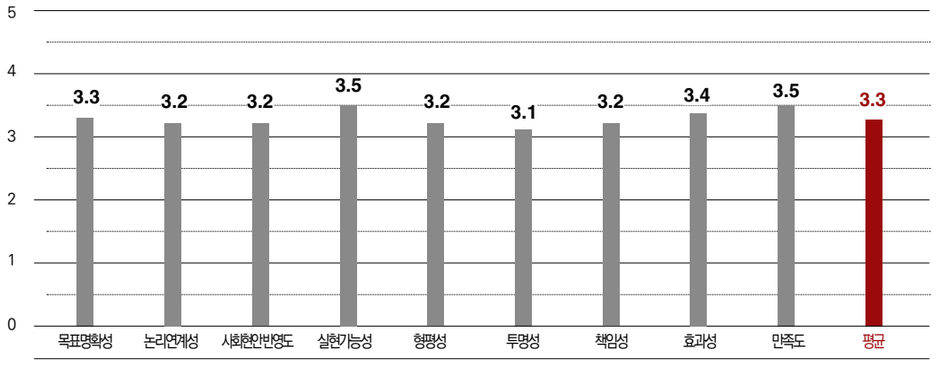
한국형 미사일 체계(KAMD) 및 킬체인 구축사업(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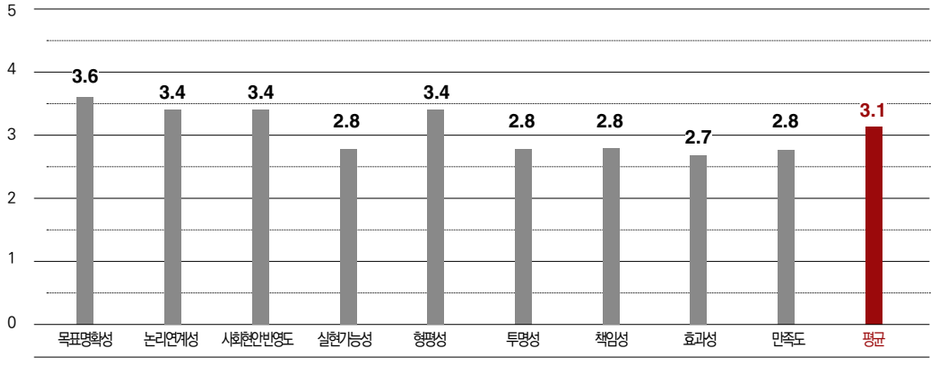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병무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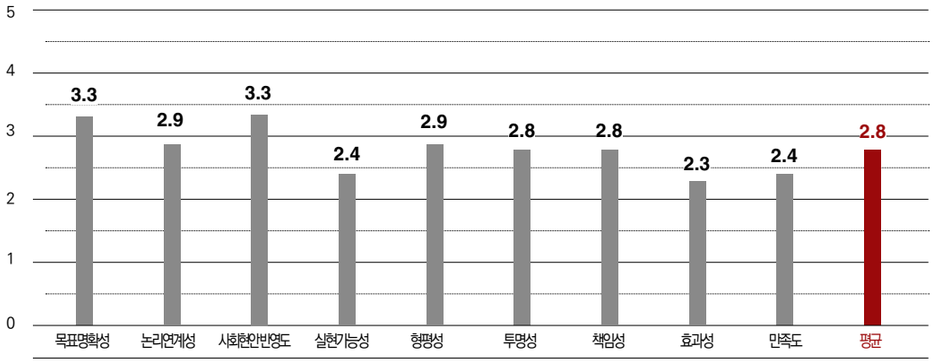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외교부)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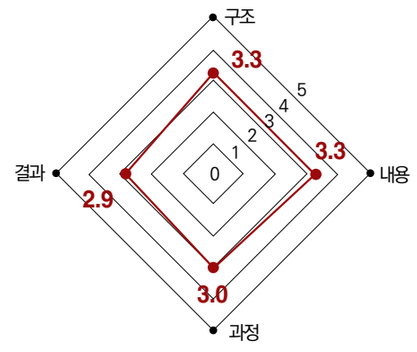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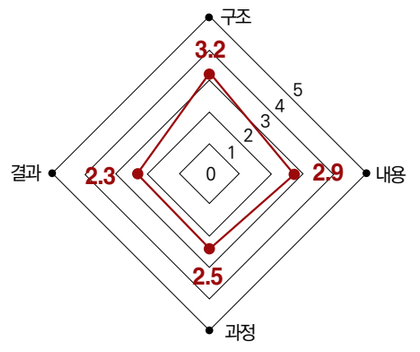


[그림 4-176]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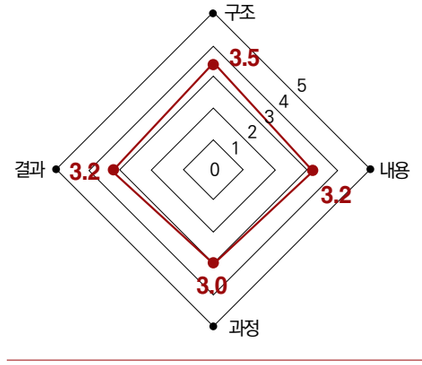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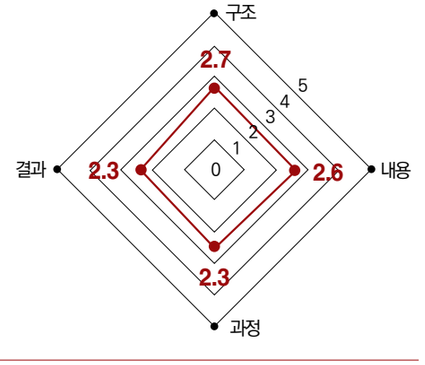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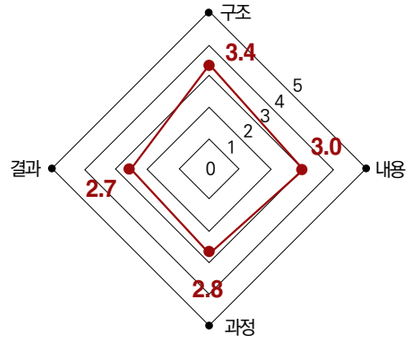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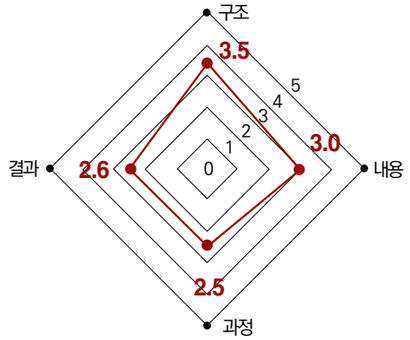
방위사업 혁신 추진(방위사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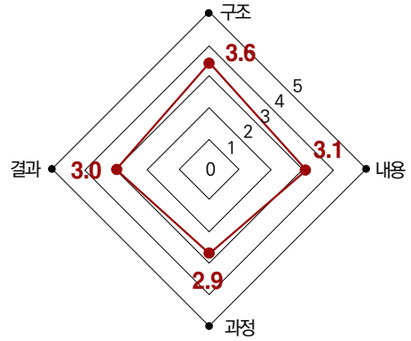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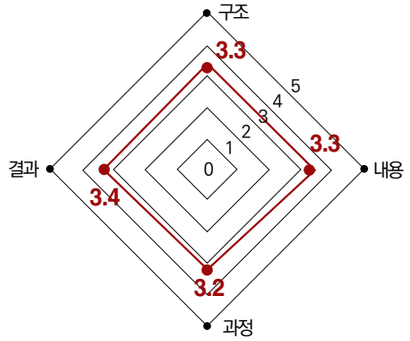
한국형 미사일 체계(KAMD) 및 킬체인 구축사업(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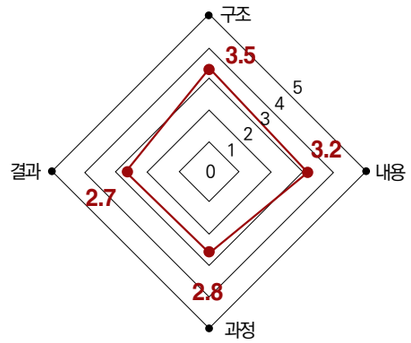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병무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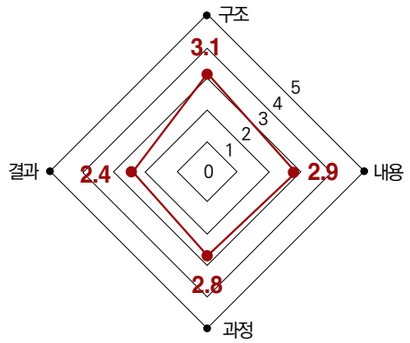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외교부)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통일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외교부)



05

제5장 정책, 삶의 질 그리고 정부신뢰의 관계

2015년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 조사된 정책에 대한 개인 인식의 평균값은 결국 정책에 대한 전반적 지지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일반국민과 정책전문가들의 정책지지도 평균은 2.95점으로 “보통”인 3점보다 다소 낮아 정책에 대한 지지가 부정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들이 평가한 정책이 국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할 것인가를 묻는 항목에 대한 평균값은 3.10점으로 “보통”의 정도로 정책이 삶의 질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1 |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사회신뢰에 대한 인식 296
2 | 정부정책지지도와 정부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296
3 | 정부신뢰도와 사회신뢰도와의 관계 300
4 | 정부정책지지도, 정부신뢰도, 사회신뢰도 간의 인과관계 301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와의 관계

사회신뢰도와 정부신뢰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부의 신뢰가 올라가는 경우 사회에 대한 신뢰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1점 높아지면 사회적 신뢰는 0.52점 상승하게 된다. 결국 정부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책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정부신뢰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사회신뢰에 대한 인식

2015년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 조사된 정책에 대한 개인 인식의 평균값은 결국 정책에 대한 전반적 지지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즉 개별 정책에 대한 9개 세부설문항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개인은 해당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개인은 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래 [표 5-1]은 이러한 정부정책지지도와 함께 이번 설문조사에 포함된 추가항목 3개(평가한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 정부신뢰도, 사회신뢰도)에 관한 기초통계 결과를 보여준다.

설문에 참여한 일반국민과 정책전문가들의 정부정책지지도 평균은 2.95점으로 "보통"인 3점보다 다소 낮아 정책에 대한 지지가 부정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들이 평가한 정책이 국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할 것인가를 묻는 항목에 대한 평균값은 3.10점으로 "보통"의 정도로 정책이 삶의 질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2.38점으로 확인되었고,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는 평균 2.48점으로 나타났다. 즉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모두 부정적이었고, 특히 사회에 대한 신뢰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1]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정부신뢰·사회신뢰의 기초통계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N
정책지지도	2.95	1.00	5.00	0.64	2,200
평가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정도	3.10	1.00	5.00	0.99	2,200
정부에 대한 신뢰도	2.38	1.00	5.00	1.06	2,200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	2.48	1.00	5.00	0.88	2,200

주: 각 항목은 5점 척도

2. 정부정책지지도와 정부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설문에 참여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정부정책지지도를 분석해보면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긍정보다는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 볼 때는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정부정책에 대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의 지지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30세 미만과 40대 또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정책지지도가 가장 낮게 나왔고, 다음으로 호남·제주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남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정책지지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낮지만 이 지역 역시 긍정보다는 부정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보면 진보적 성향의 개인들이 보수적 성향의 개인들보다 정책지지도가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 정부정책지지도 교차분석 결과

구분		부정	보통	긍정	합계
집단	일반국민	1029 (51.45%)	882 (44.1%)	89 (4.45%)	2000 (100%)
	전문가	90 (45%)	107 (53.5%)	3 (1.5%)	200 (100%)
	계	1119 (50.86%)	989 (44.95%)	92 (4.18%)	2200 (100%)
성별	남	481 (48.88%)	440 (44.72%)	63 (6.40%)	984 (100%)
	여	548 (53.94%)	442 (43.50%)	26 (2.56%)	1016 (100%)
	계	1029 (51.45%)	882 (44.1%)	89 (4.45%)	2000 (100%)
연령	19-29세	204 (59.30%)	130 (37.79%)	10 (2.91%)	344 (100%)
	30대	235 (65.28%)	117 (32.5%)	8 (2.22%)	360 (100%)
	40대	253 (58.03%)	166 (38.07%)	17 (3.90%)	436 (100%)
	50대	169 (41.83%)	213 (52.72%)	22 (5.45%)	404 (100%)
	60세 이상	168 (36.84%)	256 (56.14%)	32 (7.02%)	456 (100%)
	계	1029 (51.45%)	882 (44.1%)	89 (4.45%)	2000 (100%)
지역	수도권	541 (54.32%)	414 (41.57%)	41 (4.12%)	996 (100%)
	중부권	135 (51.14%)	113 (42.80%)	16 (6.06%)	264 (100%)
	호남·제주권	125 (52.97%)	102 (43.22%)	9 (3.81%)	236 (100%)
	영남권	228 (45.24%)	253 (50.20%)	23 (4.56%)	504 (100%)
	계	1029 (51.45%)	882 (44.1%)	89 (4.45%)	20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	85 (59.03%)	47 (32.64%)	12 (8.33%)	144 (100%)
	중도진보	294 (55.79%)	219 (41.56%)	14 (2.66%)	527 (100%)
	중도	474 (56.83%)	332 (39.81%)	28 (3.36%)	834 (100%)
	중도보수	199 (38.20%)	297 (57.01%)	25 (4.80%)	521 (100%)
	보수	67 (38.51%)	94 (54.02%)	13 (7.47%)	174 (100%)
	계	1119 (50.86%)	989 (44.95%)	92 (4.18%)	2200 (100%)

다음으로 정부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의 특성에 관계없이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는 불신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전문가와 일반국민들 간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별로 볼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로 볼 때 연령이 낮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제주권의 정부신뢰도가 가장 낮았고, 다른 지역 모두 정부신뢰에 대하여 긍정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에 가까울수록 정부신뢰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보수의 정치적 성향을 띨수록 정부신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낮아졌다.

[표 5-3] 정부신뢰도 교차분석 결과

구분		부정	보통	긍정	합계
집단	일반국민	1215 (60.75%)	442 (22.1%)	343 (17.15%)	2000 (100%)
	전문가	96 (48%)	68 (34%)	36 (18%)	200 (100%)
	계	1311 (59.59%)	510 (23.18%)	379 (17.23%)	2200 (100%)
성별	남	568 (57.72%)	215 (21.85%)	200 (20.33%)	984 (100%)
	여	647 (63.68%)	226 (22.24%)	143 (14.07%)	1016 (100%)
	계	1215 (60.75%)	442 (22.1%)	343 (17.15%)	2000 (100%)
연령	19-29세	266 (77.33%)	49 (14.24%)	29 (8.43%)	344 (100%)
	30대	273 (75.83%)	61 (16.94%)	26 (7.22%)	360 (100%)
	40대	293 (67.20%)	90 (20.64%)	53 (12.16%)	436 (100%)
	50대	209 (51.73%)	107 (26.49%)	88 (21.78%)	404 (100%)
	60세 이상	174 (38.16%)	135 (29.61%)	147 (32.24%)	456 (100%)
	계	1215 (60.75%)	442 (22.1%)	343 (17.15%)	2000 (100%)
지역	수도권	626 (62.85%)	208 (20.88%)	162 (16.27%)	996 (100%)
	중부권	147 (55.68%)	72 (27.27%)	45 (17.05%)	264 (100%)
	호남·제주권	160 (67.80%)	51 (21.61%)	25 (10.59%)	236 (100%)
	영남권	282 (55.95%)	111 (22.02%)	111 (22.02%)	504 (100%)
	계	1215 (60.75%)	442 (22.1%)	343 (17.15%)	20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	95 (65.97%)	27 (18.75%)	22 (15.28%)	144 (100%)
	중도진보	395 (74.95%)	98 (18.60%)	34 (6.45%)	527 (100%)
	중도	565 (67.75%)	183 (21.94%)	86 (10.31%)	834 (100%)
	중도보수	188 (36.08%)	163 (31.29%)	170 (32.63%)	521 (100%)
	보수	68 (39.08%)	39 (22.41%)	67 (38.51%)	174 (100%)
	계	1311 (59.59%)	510 (23.18%)	379 (17.23%)	2200 (100%)

정부신뢰와 마찬가지로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또한 개인적 특성에 관계없이 긍정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집단별로 볼 때 정책전문가들보다 일반국민의 사회신뢰도가 낮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사회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정부신뢰도와 동일하게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호남·제주권의 사회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사회를 신뢰하지 않는 응답 비율이 모두 50%를 넘고 있어 사회신뢰의 부재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진보적 성향의 개인이 보수적 성향보다 사회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사회신뢰도 교차분석 결과

구분		부정	보통	긍정	합계
집단	일반국민	1094 (54.7%)	658 (32.9%)	248 (12.4%)	2000 (100%)
	전문가	95 (47.5%)	73 (36.5%)	32 (16%)	200 (100%)
	계	1189 (54.05%)	731 (33.23%)	280 (12.73%)	2200 (100%)
성별	남	497 (50.51%)	324 (32.93%)	163 (16.57%)	984 (100%)
	여	597 (58.76%)	334 (32.87%)	85 (8.37%)	1016 (100%)
	계	1094 (54.7%)	658 (32.9%)	248 (12.4%)	2000 (100%)
연령	19-29세	226 (65.70%)	91 (26.45%)	27 (7.85%)	344 (100%)
	30대	233 (64.72%)	101 (28.06%)	26 (7.22%)	360 (100%)
	40대	247 (56.65%)	134 (30.73%)	55 (12.61%)	436 (100%)
	50대	194 (48.02%)	149 (36.88%)	61 (15.10%)	404 (100%)
	60세 이상	194 (42.54%)	183 (40.13%)	79 (17.32%)	456 (100%)
	계	1094 (54.7%)	658 (32.9%)	248 (12.4%)	2000 (100%)
지역	수도권	553 (55.52%)	330 (33.13%)	113 (11.35%)	996 (100%)
	중부권	139 (52.65%)	90 (34.09%)	35 (13.26%)	264 (100%)
	호남·제주권	148 (62.71%)	65 (27.54%)	23 (9.75%)	236 (100%)
	영남권	254 (50.40%)	173 (34.33%)	77 (15.28%)	504 (100%)
	계	1094 (54.7%)	658 (32.9%)	248 (12.4%)	20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	86 (59.72%)	37 (25.69%)	21 (14.58%)	144 (100%)
	중도진보	316 (59.96%)	161 (30.55%)	50 (9.49%)	527 (100%)
	중도	495 (59.35%)	269 (32.25%)	70 (8.39%)	834 (100%)
	중도보수	208 (39.92%)	213 (40.88%)	100 (19.19%)	521 (100%)
	보수	84 (48.28%)	51 (29.31%)	39 (22.41%)	174 (100%)
	계	1189 (54.05%)	731 (33.23%)	280 (12.73%)	2200 (100%)

정책지지도, 정부신뢰도, 사회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을 종합해보면 여성과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 성향을 갖는 개인들일수록 정책지지와 정부신뢰, 사회신뢰가 낮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정부신뢰가 정부정책을 통해 회복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과 젊은 층, 진보적 성향의 개인들이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이러한 인식이 다시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개인들이 기대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3. 정부신뢰도와 사회신뢰도와의 관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문에 참여한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정부와 사회의 신뢰가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대상이 정부이건 사회이건 간에 신뢰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자본이다. 신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공통되게 신뢰가 높을수록 개인 간의 거래비용이 줄고, 공동체에 필요한 집단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임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사회에 대한 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사회신뢰도와 정부신뢰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두 가지 유형의 신뢰 간에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상관관계 분석결과도 상관계수가 0.63으로 확인되고 있어 한 유형의 신뢰가 다른 유형의 신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신뢰도가 올라가는 경우 사회신뢰도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사회신뢰도에 대한 정부신뢰도의 영향은 다음 소절의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5-5] 정부신뢰도와 사회신뢰도 간의 상관관계

	(1)	(2)
정부신뢰도(1)	1	0.63***
사회신뢰도(2)		1

주: *** 0.01 수준에서 유의함

4. 정부정책지지도, 정부신뢰도, 사회신뢰도 간의 인과관계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정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회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우선 정책지지도는 정부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1점 높아질 때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0.96점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정부신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사회에 대한 신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가 1점 높아지면 사회에 대한 신뢰는 0.52점 상승하게 된다. 결국 정부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책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정부신뢰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5-6] 정부정책지지도가 정부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종속변수: 정부신뢰도
상수	-0.43*** (0.09)
정부정책지지도	0.96*** (0.03)
N	2,200
Adj. R^2	0.33

주: ( )안은 표준오차. *** 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5-7] 정부신뢰도가 사회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종속변수: 사회신뢰도
상수	1.23*** (0.03)
정부신뢰도	0.52*** (0.01)
N	2,200
Adj. R^2	0.40

주: ( )안은 표준오차. *** 0.01 수준에서 유의함

06

제6장 정책평가 결과 종합 및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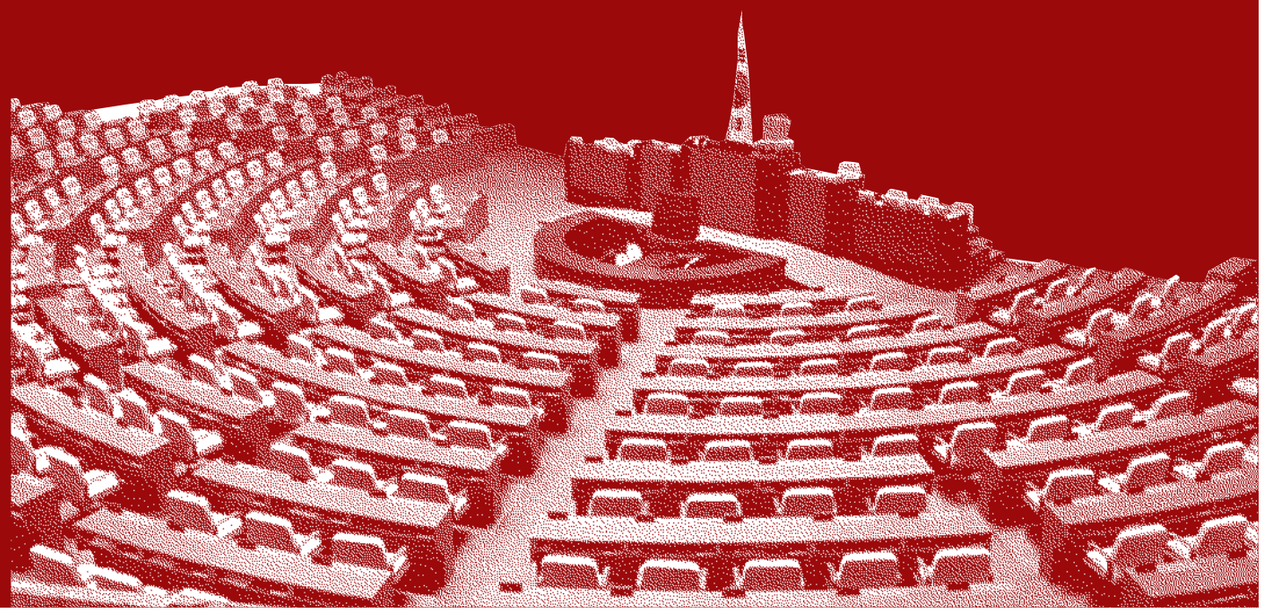
2015년 대한민국 정책평가에 포함된 40개 정책은 2015년에 정부가 각 정책 분야에서 실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40개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과 정책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연구진의 정성평가를 종합한 결과는 5점 만점에 평균 3.05점으로 “보통”으로 조사되었다. 정책에 대한 호응과 지지가 있을 때 정책에 대한 효과성과 순응이 높아지고, 정부와 정책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책평가는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1 | 정책평가 결과 종합 304

2 |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제언 307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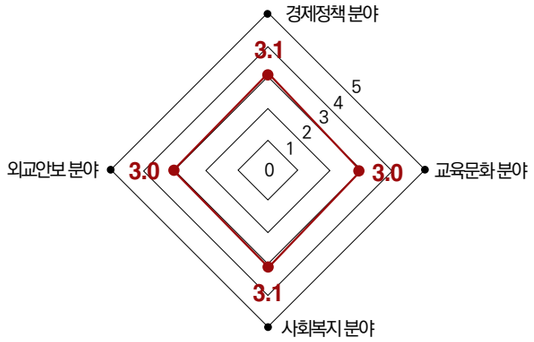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단계에서부터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과 결과 전 단계에 걸쳐 정부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평가결과는 정책이 국민 개개인에게 가져다주는 편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정책결정과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질 때 정책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1. 정책평가 결과 종합

2015년 대한민국 정책평가에 포함된 40개 정책은 2015년에 정부가 각 정책 분야에서 실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40개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과 정책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연구진의 정성평가를 종합한 결과는 5점 만점에 평균 3.05점으로 "보통"으로 조사되었다. 정책에 대한 호응과 지지가 있을 때 정책에 대한 효과성과 순응이 높아지고, 정부와 정책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책평가는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정책평가의 결과를 정책 분야별, 개별정책별, 평가영역·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1] 4대 정책 분야별 종합 평균



① 정책 분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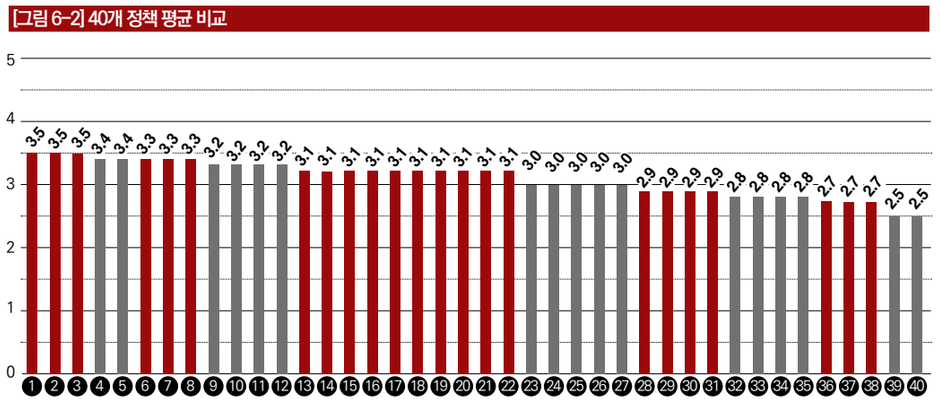
4개 정책 분야의 평균을 살펴보면, 경제정책 분야와 교육문화정책 분야의 평균이 3.1점, 사회복지정책 분야와 외교안보정책 분야의 평균이 3.0점으로 정책 분야 간 평가결과의 편차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② 개별 정책의 비교

최종 평가 대상 40개 정책을 순위별로 보면 "보통" 수준(3.0점)을 넘는 다소 긍정적인 정책이 22개, 보통(3점)으로 평가된 정책이 5개, 부정적으로 평가된 정책이 13개로 나타났다. 평균 3점을 넘는 정책을 정책 분야별로 살펴볼 때 경제정책 분야가 7개, 교육문화정책 분야가 6개, 사회복지정책 분야가 5개 그리고 외교안보정책 분야가 5개로 나타났다. 경제정책 분야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정책은 정부재정 절감 노력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정책(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경제적 정의를 회복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관세청의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산업의 피해우려가 큰 초대형 글로벌 M&A 적극 대응,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지원 강화)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문화와 사회복지정책 분야는 해당 정책대상에게 고르게 혜택을 부여하는 복지정책(교육부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정책, 통일부의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는 효과가 비교적 가시적인 정책(외교부의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국방부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조성)이 비교적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보통" 수준(3점)보다 낮게 부정적으로 평가된 정책은 13개이고, 경제정책 분야에서 2개, 사회복지정책과 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 각각 4개 그리고 교육문화정책 분야에서 3개의 정책이 포함되었다. 부정적으로 평가된 13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2015년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시행 기간이 짧아 아직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정책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단말기유통법 안착), 보건복지부의 금연종합대책,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 인사혁신처의 국민인재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등이 그 예로 볼 수 있다.

[그림 6-2] 40개 정책 평균 비교



[표 6-1] 40개 정책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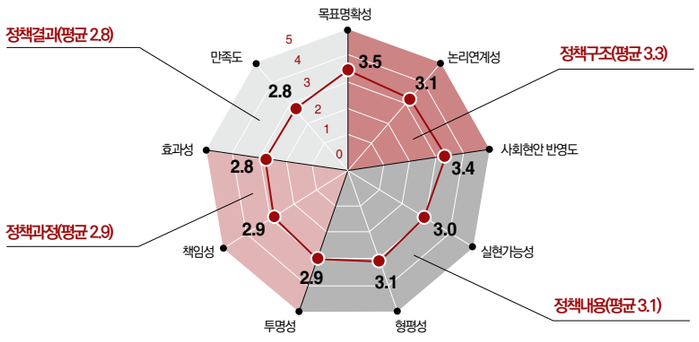
❶ 초등돌봄교실(교육부)
❷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공정거래위원회)
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금감원)
❹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기획재정부)
❺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정책(보건복지부)
❻ 도시숲 조성(산림청)
❼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외교부)
❽ 다문화가족 지원(여성가족부)
❾ 어린이·청소년 급식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
❿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관세청)
⓫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통일부)
⓬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여성가족부)
⓭ 서민금융지원 강화(금융위원회)
⓮ 국내 산업의 피해우려가 큰 초대형 글로벌 M&A 적극 대응(공정거래위원회)
⓯ 산업기능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병무청)
⓰ 누리과정(교육부)
⓱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조성(국방부)
⓲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보건복지부)
⓳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환경부)
⓴ 문화가 있는 날(문화체육관광부)
㉑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통일부)
㉒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보건복지부)
㉓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보건복지부)
㉔ 에너지 신산업 육성(산업통상자원부)
㉕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기획재정부)
㉖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외교부)
㉗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방송통신위원회)
㉘ 부동산시장 정상화(국토교통부)
㉙ 한국형 미사일체계(KAMD) 및 킬체인 구축 사업(국방부)
㉚ 지방재정 개혁(행정자치부)
㉛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단말기유통법 안착)(방송통신위원회)
㉜ 금연종합대책(보건복지부)
㉝ 자유학기제 확산(교육부)
㉞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외교부)
㉟ 노동개혁(고용노동부)
㊱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외교부)
㊲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교육부)
㊳ 국민인재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인사혁신처)
㊴ 대학구조개혁(교육부)
㊵ 방위사업 혁신 추진(방위사업청)

두 번째 유형은 오랜 기간 동안 정부의 개입이 있어 왔지만 그 복잡성으로 인해 쉽게 효과를 보기 어려운 정책들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이다. 세 번째 유형은 비리와 부패가 발생하여 국민적 불신이 높아 그 결과에 대해 의구심이 높은 정책으로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 혁신 추진 정책이 대표적이다. 네 번째 유형은 정책의 외생적 요인이 커 정부 자체에서 그 결과를 낳기 어려운 정책으로 특히 북한 관련 정책과 외교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정투입이 막대하지만 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정책으로 국방부의 한국형 미사일체계(KAMD) 및 킬체인 구축 사업이 이러한 유형의 정책이다.

③ 평가영역 및 항목별 비교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적용한 9개 세부설문항목과 설문영역의 평균은 아래 그림과 같다. 우선 평가영역별 결과를 보면 "정책구조(평균 3.3점)〉정책내용(평균 3.1점)〉정책과정(평균 2.9점)〉정책결과(평균 2.8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목표명확성"이 평균 3.5점으로 전체 9개 세부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사회현안 반영도"가 평균 3.4점, "논리연계성"과 "형평성"이 평균 3.1점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효과성"과 "만족도"가 평균 2.8점으로 가장 저조한 항목으로 평가되었고, "책임성"과 "투명성"이 평균 2.9점으로 나타났다. 평가영역과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를 두고 볼 때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이 표방하는 목표 그리고 정책의 사회형평 추구 정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정책의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와 정책과정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책임성 그리고 정책이 가져다주는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단계에서부터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과 결과 전 단계에 걸쳐 정부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평가결과는 정책이 국민 개개인에게 가져다주는 편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정책결정과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질 때 정책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6-3] 40개 정책 평가지표별 점수 결과



2.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제언

1) 경제정책 분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의 경우 그 내용과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임금피크제가 과연 의도된 효과, 즉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실업의 해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전 경제분야에서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일종의 파일럿 정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피크제가 민간기업에서도 공공기관에서와 같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기존 고령 근로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금피크제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재원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모니터링이 수반될 때 가능할 것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의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을 걸러내는 보조사업 평가의 결과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이미 존재하는 제도적 장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새롭게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 의도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선 국고보조사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정책의 경우 기존에 논의되었던 2030년 BAU 대비 30% 수준의 감축률에 비해 정부가 제출한 37%의 감축률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의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지 않은 목표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는 2015년 11월말 현재, 약 156개국이 제출한 INDC의 비교에 근거한다. 즉, 선진국들은 특정 년도를 기준으로 감축률을 설정하였고 개발도상국들은 BAU를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보다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처럼 BAU를 기준으로 감축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 일본, EU와 같이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실제적인 감축률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산업계의 경우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준도 매우 부담스러운 현실이며, 추가적인 감축목표 설정의 경우 산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2015년 말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의 결과에 따라 새로 도출될 기후협약의 법적 구속력 등을 감안하여 산업계를 포함한 국내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국, IPCC 의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제고에 대한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은 원래 의도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소기의 정책성과를 넘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어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택시장과 관련된 현안의 목적은 단순히 주택거래 활성화라기보다 이를 통한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거래 활성화가 지나쳐서 오히려 국민 주거복지를 저해할 가

능성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높은 전월세 가격으로 이어져 경제적 부담이 커진 세입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 물론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전월세 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통해 전월세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따라서 주거 약자들의 단기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 등 단기적인 처방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정책은 그 입체적인 접근방식은 물론이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적합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피드백의 과정은 정책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책의 특성상 정책 이해에 다소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또한 정책 결과의 가시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이러한 홍보를 통해 범사회적으로 불공정행위가 용납되지 않고 처벌된다는 확신을 불러일으킨다면, 보다 효율적인 불공정행위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서민금융지원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은 중앙, 지방 정부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지나치게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다 보니 생업에 매인 저소득층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정책 실수요자들이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현재의 공급자 위주 시스템을 수요자 위주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같은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부채 문제를 부담은 줄어들지 몰라도 또 다른 부채의 형태로 해결하려는 접근에도 한계가 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복지로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예를 들면 주택이나 교육) 지나치게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은 국제사회의 신기후체제 출범이 우리 산업계에 부담과 위기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오히려 강력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본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에너지 산업이 구조적인 변화를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정책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의 과감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자생적인 시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구조적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산업의 피해우려가 큰 초대형 글로벌 M&A 적극 대응 정책은 무엇보다도 그 효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평가항목에서 지적되었다시피 본 정책의 효과성은 정책 자체의 내재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그 정책이 결부된 산업분야의 세계시장에서의 지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성이 국내 취약산업이 글로벌 M&A로부터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켜 국내 산업분야 간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한 방법으로 해외 주요국과의 공조체제의 강화를 들 수 있겠다. 즉, 글로벌 M&A 철회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네트워크를 조직하여 국내 산업분야의 보호는 물론 세계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효과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미 AMAT-TEL간 합병사례에서 효과적인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주도한 적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국제공조강화를 통한 국내 산업보호는 매우 효과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 판단된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정책의 경우, 우리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FTA는 피할 수 없는 길이고 따라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FTA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본 정책의 의의는 크다. 그러나 본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지난 3년간 예산 수준은 그대로이며 본 정책의 서비스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수도 그리 크게 늘지 않았다. 본 정책을 경험한 기업들로부터 나오는 긍정적인 평가를 고려할 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 정책은 평가 대상이 된 4개 분야 40개 정책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정책 중의 하나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단말기 보조금 규제로 인하여 기존에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던 혜택(차별적 혜택이라고 할지언정)이 사라져서 일반인들의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고착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최근에 서비스 경쟁으로 요금인하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1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이미 대중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굳어진 상태이다. 단통법은 공과 과가 분명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기에 형성된 부정적 인식이 최근에 나타난 긍정적인 현상까지도(가입비 폐지, 데이터요금제 출시, 20% 사용요금 할인 등) 빛을 바라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일반 소비자가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보조금 상한선을 좀 더 올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책목표가 소비자 후생 증대라면 서비스 요금 하락 뿐 아니라 단말기 가격 하락도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므로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복지정책 분야

대부분의 사회복지 및 보건 정책은 다차원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정책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상 불가피한 것으로, 모호성과 추상적 서술이 있다고 해서 그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비록 모호하고 추상적인 목표라고 하더라도 해당 정책이 어떤 결과를 의도한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대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 건수와 피해액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 수치를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재원과 인프라를 활용할 것인지, 유관 부처와 비정부 행위자 및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다른 정책들과 어떻게 연계하여 협력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정책들은 정책 목표 자체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거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어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책 결과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로 연결된다. 정책의 효과성은 결국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그런데 정책 목표 자체가 '의료비 부담 경감' 이나 '피해아동 보호'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으로 제시되는 경우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 비록 모호한 표현으로 정책 목표가 제시되더라도, 정책 목표 달성과 연결된 구체적인 지표가 제시되어야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형평성 측면 역시 평가가 쉽지 않으며,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정책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형평성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준과 조건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비록 모든 국민들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형평성 측면에서 좋은 정책으로 볼 수는 없다. 형평성에 대한 평가는 결국 정책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일반 국민 또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결부되어 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측면에서 형평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내린 반면, 일반인은 낮은 점수를 주었는데, 이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형평성의 논리보다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4대 중증질환·3대 비급여 항목 축소를 통한 국민 의료비 경감 정책에 대해서 특정 질환 중심의 의료비 경감 정책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4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선별적인 혜택을 더 주는 것에 대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동의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정책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실현가능성 여부를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사회복지정책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각 정부 주체들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누리과정 재원 부담 문제와 몇몇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복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복지 정책은 일방적인 지시와 밀어붙이기 식으로 집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상 의도한 결과를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할 수 없고, 정책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책 과정 측면에 대한 낮은 평가는 일견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공청회와 세미나 등 형식적인 의견 수렴만을 거친 후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비록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도, 정부는 대국민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관련 부처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특별 대책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을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의 과정(민주성과 책무성)에 대한 평가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인지도가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모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정책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의 역할이 소홀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책별로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먼저 **금연종합대책**의 경우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과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정책의 효과성 및 만족도에서 보통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가격 인상 정책만으로는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금연 홍보, 치료 등과 같은 비가격 정책과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담뱃값 인상 역시 어느 정도의 인상 폭이 실제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수준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가격 정책으로 인한 수입이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 환류 시스템을 보완하고,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은 예방에서부터 사후 대응에까지 정책 대안들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관련 부처와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 대한 홍보와 참여를 강화하여 일반 국민들의 금융거래에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의 가계부담 경감 정책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측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 질환 중심의 대책이라는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장차 4대 중증 질환 이외의 기타 중증 질환에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3대 비급여 항목 축소를 위한 선택진료 도입 및 확대, 상급병실의 일반병상 전환 등과 같은 정책은 현실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의 필요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함께 병원, 환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중요할 것이다.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사업의 경우 특히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보통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교육부)와 지방 교육청 간의 갈등에서 나타나듯 보육 정책에 요구되는 재원 및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보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또한 보육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전업주부의 보육시설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을 차별한다는 비판 등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어린이집 아동 학대 등에 대한 대책인 CCTV 설치 등과 같은 대안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우수한 보육 교사 유치 등과 동반되지 않는 경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정책 집행을 위한 적정한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 발견·보호 종합대책 정책의 경우 현재 정책이 지나치게 친권자 위주로 되어 있고 처벌 위주의 대안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아동보호 및 교육 시설과 같은 집단 시설의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처벌 보다는 예방 위주의 보호 장치들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발생 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응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달성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정책 기획에서부터 의견 수렴 및 합의 도출, 관련 법률 개정과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면서 보통(3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

다. 이 외의 항목 모두에서도 고른 점수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급여보장 수준의 현실화와 수급자 상황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돌아가도록 실행되고, 2015년 하반기부터 첫 급여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체감이 높아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세수 확보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개혁은 추진 정책 목표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목표 제시와 노동시장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당면 문제를 인지하고 적실성 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간제법, 파견제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지속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법안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개혁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불분명하여 정책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여야 및 노사정간 합의는 물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동개혁 정책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책무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정책은 사업의 목표 대상이 명확하고 세부 추진사업의 내용과 그 지원기준 또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어 목표명확성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현안 반영도와 실현가능성, 형평성, 효과성 등에 있어서 두루 고른 점수를 받았다. 특히 사회변화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증가, 양극화 심화 등의 현상을 반영한 적실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책 집행과 양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은 정책결정에 있어 일정 부분의 민주성을 확보 가능하게 하고, 사업의 책무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적 충분성이 다소 부족해 보이며,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이 그 자체로 충분한 수준의 정책대안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인재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정책은 인사혁신을 위한 세부 추진 정책이지만, 공직 개혁을 통한 구체적 변화 모습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충원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들은 대부분 최근 1~2년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그러한 변화가 좋은 정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개편방안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살펴보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해당 정책은 세월호 사건 등을 통해 불거진 정부의 인사행정에 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논리적 연계성, 형평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 개혁은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사회적 요구에 맞춰 지방재정구조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추진됨에 따라 사회현안 반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복지 지출압력과 지방공기업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추진계획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방안과 크게 차이점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개혁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더불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정정보 공개 강화가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할지에 대해서도 확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방안들이 실제로 지방재정 운영의 형평성과 책무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교육문화정책 분야

2015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책설계의 품질을 나타내는 구조와 내용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반 절차의 제도화와 운영의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책결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정책과정의 품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교육문화정책 분야의 특성상 정책수혜집단이 제한되지 않고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의 일상적 생활에 영향을 미쳐 체감도가 높다는 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교육문화 부문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평가적 태도가 다른 정책영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정책추진 과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집행현장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정책내용의 개선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정책결과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등교육(대학 및 연구)영역의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의 정보격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정보, 인지도, 이해도가 낮아 정책내용, 과정,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반면 전문가 집단은 고등교육정책의 대상으로서 정부의 규제적이고 제한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반 정책과정에서 소통, 설득, 참여, 환류의 기제를 면밀하게 설계하고 세심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돌봄교실은 정책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제반 측면에서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다만, 학교 현장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과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확립하려는 노력을 통해 정책과정의 책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에게 제공하는 보편적인 교육서비스의 확대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학부모의 기대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의 부담을 둘러싼 지방교육청과 중앙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도 상당하다. 이 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감안할 때 시급히 정책의 제도 및 재정적 기반을 정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인터넷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 정책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의 유통과 소비와 같은 문제부터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동통신사, 포털, 그리고 실제 생산·유통자에 대한 정부개입의 규제수단을 더욱 강화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등 정책대상을 분명하게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이·청소년 급식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정책은 어린이집과 학교의 급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중장기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린이·청소년의 전반적 식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민간부문과의 협력, 주방문화 개선 등의 측면에서 자율규제와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에는 명확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지정하여 제도를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나, 실제로 학생들에게 유익한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운영하기에는 단위 학교에서 해결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책실험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평가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될 때 단위 학교의 현장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교육부의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완비하여 집행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관계 부처(특히 여성가족부, 외교부, 법무부 등)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정책과정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숲 조성 정책은 설문조사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정책결과 지표인 효과성과 만족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정책의 확산이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에서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나머지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 등 모든 측면에서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대학구조개혁의 평가결과에 의한 대학 정원 감축 효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수익과 혜택을 입을 정책대상 집단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만족도는 낮으므로 정책과정의 투명성이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은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세부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사회현안 반영도와 실현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채의 내용, 정책의 투명성과 형평성 그리고 책임성을 나타내는 정책과정, 마지막으로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나타내는 정책결과 등의 제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 정책은 세부지표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세부지표 중에서 정책의 실현가능성, 투명성, 그리고 효과성 등에서 각각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보여 정책의 내용, 과정과 결과 측면으로 전반적으로 개선 과제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투명성, 참여의 기제를 확보하고 지지를 확산시켜야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외교안보정책 분야

외교안보분야의 정책평가를 수행한 결과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먼저 외교안보분야의 경우 국민들의 정책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의 특수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정책의 형성과정 및 시행내용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과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로 인해 정책의 투명성을 비롯한 평가지표 전반에 대해 낮은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정보공개 및 국민참여의 범위는 매우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외교안보분야는 국민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국민의 기본적 삶에 영향을 주게 되며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분야이고 국민의 공감대에 바탕을 두는 것이 중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정책의 형성 및 추진과정에 있어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 참여와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책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정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예컨대 최근 그 심각성이 불거지고 있는 군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해감에 있어 소관부처의 자정노력이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국민의 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전향적인 개선방안의 수용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맨)을 외부조직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를 의무규정이 아닌 군의 재량규정으로 하는 내용의 군인권법을 의결하였다. 또한 군인권보호관이 국방부 내에 설치될지 외부조직에 설치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방부 내부에 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외교안보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 직접 이해당사자인 병사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의 경우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등이 높이 평가되는 경우에도 실현가능성은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점은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성에 대한 낮은 평가로 이어졌다. 외교안보분야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이유는 외교안보분야의 경우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 외부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과 기술력의 문제 등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 정책의 투명성·민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책의 형성과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별로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해본다면,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 정책의 경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방안들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보다 혁신적인 정책대안의 도입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국방부의 소극적인 대응 등을 지적할 수 있는데, 군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내부의 자정 노력뿐만 아니라 군 외부 독립기관을 통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 인력을 양적·질적으로 확보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방위사업 혁신추진 정책의 경우 방위사업비리로 인한 국민 불신이 큰 만큼 개선하려는 목표를 추상적

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등에서의 목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방위사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세부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전의 비리 근절 정책과 큰 차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반복되는 정책 실패의 경험으로 인하여 이제는 정책적 노력을 통한 방위사업 혁신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방위사업 정보공개 및 국민 참여의 확대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데, 정보공개 및 국민 참여의 정도는 비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정책을 통한 혁신의지를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수준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한국형 미사일체계 및 킬체인 구축사업의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안보정책이나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의 기술력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충분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의 부족에도 기인하고 있다. 즉 정책의 예산규모에 걸맞게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정책정보의 제공과 의견수렴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책의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책의 경우 정책의 수혜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책이 정책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자들에게조차 지속적인 일자리 형성과 전문성 심화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북핵·북한 문제 진전 위한 공조 강화 정책의 경우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제에 대해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6자회담이라는 틀은 북한의 부재와 각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정책의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정책의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정책의 경우 정책의 수혜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제도는 정책의 수혜자에 대한 지원에만 치중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수혜자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정책의 경우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 정책의 경우 현재 구상 수준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체계의 확립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구호활동 주도적 참여 등 인도주의 외교 정책의 경우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 의례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수혜자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수혜자의 수요와 의견을 고려하여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합 물류기반 조성 추진 정책의 경우 논리적 연계성과 사회현안 반영도가 높은데 비해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단순히 재정·행정적 여건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절차와 내부 모니터링 체계의 부재로 인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갖추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사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정책의 경우 그 목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실현가능성에는 큰 의문이 존재한다. 이는 목표가 너무 거대하여 단기간 내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목표를 단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들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대안에 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경제정책 분야

공정거래위원회. 2015a. '외국 경쟁당국과의 공조강화 위해 매뉴얼 제작- 국내에 영향이 큰 국제 M&A 꾸준한 증가 추세'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308&news_div_cd=1(검색일: 2015. 11. 3).

공정거래위원회. 2015b. '국내에 영향이 큰 국제 M&A 꾸준한 증가 추세-외국 경쟁당국과의 공조강화 위해 매뉴얼 제작', 보도자료 2011.12.30. / 배포일시 2011.12.30.

관계부처 합동 보고서 – 국토부·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 2014.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보도자료 2014. 9. 1. / 배포일시 2014. 8. 31

관세청. 2015a.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현장행보! – FTA 활용지원과 규제발굴을 위한 설명회 개최 및 업체 현장방문', 보도자료 2015. 5. 29 / 배포일시 2015 . 5. 29

관세청. 2015b. '대구경북본부세관,'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대상 수상 – 아진산업(주)과 공동 진행한 FTA 활용 성공사례로 최고 영예 –, 보도자료 2015. 7. 29 / 배포일시 2015. 7. 29

관세청. 2015c. '청주세관,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기업 현장 컨설팅 실시-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가(假)인증제도 등 홍보 –', 보도자료 2015. 10. 29/ 배포일시 2015. 10. 29

관세청. 2015d. '서울세관 한중 FTA 대비 원산지 관리방안 설명회 개최- 소통과 공유의 정부 3.0 실현으로 한중 FTA선제적 활용 지원 –', 보도자료 2015. 10. 27 / 배포일시 2015. 10. 27

관세청. 2015e. '인천본부세관, 삼성전자(주) 70개 협력사 대상 FTA·AEO 활용 지원', 보도자료(작성일) 2015. 10. 21 / 배포일시 2015. 10. 21

관세청. 2015f. '광주본부세관, FTA상담 순회 버스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운영', 보도자료 2015. 10. 20 / 배포일시 2015. 10. 20

관세청 홈페이지. 2015. '한-중 FTA 제대로알기 퀴즈대회 문제게재', 작성일 2015. 10. 29.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15821&bbsId=BBSMSTR_1209&nttId=223 (검색일: 2015. 11. 3).

국토교통부. 2014a. '9.1,「규제합리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보도 관련', 보도자료 2014. 9. 3./ 배포일시 2014. 9. 3.

국토교통부. 2014b. '9.1대책 후속조치 (3)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9.19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 보도자료 2014. 9. 19 / 배포일시 2014. 9. 18

금융위원회. 2015.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15.6.23 / 배포일시 2015.6.23

기획재정부. 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 2015. 6.

기후변화 홍보포털 http://www.gihoo.or.kr/portal/2013_Portal/community/data.jsp?groupname=%EA%B8%B0%ED%9B%84%EC%9E%90%EB%A3%8C%EC%8B%A4&mode=view&idx=10118&pageNo=14&field=&column= (검색일: 2015. 11. 3).

김수현. 2015. "2017년 입주 아파트 32만가구…2006년 이후 최다" 『조선비즈』 (11월 17일). http://news.donga.com/3/all/20100804/30299749/1 (검색일: 2015. 12. 7).

김태성·김인호. 2015. "금융 당국 '돈줄 조이기' 1차 직격탄은 지방 부동산이 맞는다" 『매일경제』 (11월 19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3624207 (검색일: 2015. 12. 7).

녹색성장위원회. 201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주요내용, 2012. 12.

대한민국정부. 2013.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사업별 설명서 1권', 2013. 11. 21

로버트 쉴러. 2005.『비이성적 과열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 뒤에 나타난 금융시장의 탄생과 종말』.알에이치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미래부. 2014. '이통사□제조사 CEO간담회 개최', 미래부 보도자료 2014. 10. 17. / 배포일시 2014. 10. 17.

산업통상자원부. 2015a.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 기관들이 모인다.', 보도자료 2015. 6. 17 / 배포일시 2015. 6. 17.

산업통상자원부. 2015b.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에너지신산업정책단』출범', 보도자료 2015. 7. 15. / 배포일시 2015.7. 15.

산업통상자원부. 2015c. '산업통상자원부(2015),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에너지신산업정책단』출범', 보도자료 2015. 7. 15.

산업통산자원부 홈페이지 정책브리핑 참조, '에너지 신사업' http://www.motie.go.kr/motie/py/brf/motiebriefing/motiebriefing.do?brf_code_v=1#header (검색일: 2015. 11. 3).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http://www.gir.go.kr/ (검색일: 2015. 11. 3).

우성문. 2015. "노벨상 수상자 로버트 쉴러, 美 채권 시장 붕괴 경고"『뉴스토마토』(02월 13일).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35780 (검색일: 2015. 12. 7).

이대길. 2015. (사업내역서)에너지 신산업 육성, 산업통산자원부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자료 http://www.motie.go.kr/motie/gov3.0/gov_openinfo/realname14/Realname15/bbs/bbsView.do?bbs_seq_n=27&bbs_cd_n=88&currentPage=1&search_key_n=&search_val_v=&cate_n=&dept_v=&from_brf=brf&brf_code_v=3 (검색일: 2015. 11. 3).

이미정. 2015. "'단통법·책통법·맥통법'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아시아뉴스통신』(11월 25일).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27351&thread=09r02 (검색일: 2015. 12. 7).

이정희. 2015. "福祉누수 차단하기 위한 3가지 방안"『문화일보』(7월 10일). http://news.donga.com/3/all/20100804/30299749/1 (검색일: 2015. 12. 7).

이주영. 2011. "국고보조사업,폐지 판정에도 버젓이 예산 편성"『경향신문(경향 비즈n라이프)』(9월 11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632976 (검색일: 2015. 12. 7).

정지영. 2015. "[DBR]"中企, 한중 FTA 활용 저조… 정보제공-우수사례 확산 나서야"" 『동아일보』(11월 23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2902302 (검색일: 2015. 12. 7).

정진욱. 2015. ""中企, FTA 수출활용률 64% 그쳐"박광온 "자금·인력 등 지원 필요"" 『경기일보』(10월 6일).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3658 (검색일: 2015. 12. 7).

환경부. 2015a.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 마련', 보도자료 2014. 1. 28. / 배포일시 2014. 1. 24.

환경부. 2015b. '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2015. 6.

환경부 홈페이지 http://search.me.go.kr/search/totalSearch/search.jsp?q=%EB%B0%B0%EC%B6%9C%EA%B6%8C%20%EB%B2%95%EB%A0%B9 (검색일: 2015. 11. 3). Bingham, R. and Felbinger, C. 2002. Evaluation in Practice. Chatham House.

2. 사회복지정책 분야

관계부처 합동. 2015.『정부혁신』(1월).

관계부처 합동. 2015.『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1차)』(6월).

관계부처 합동. 2015.『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1차) 참고자료』(6월).

관계부처 합동. 2015.『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2016년 일자리 예산안 주요내용』(9월).

관계부처 합동. 2015.『주요 사업 설명자료』(2016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 브리핑 참고자료) (9월).

관계부처 합동. 2015. 보도자료, 청/장년·대/중소기업·정규/비정규직 상생고용을 위한 범 정부『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발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 2015. 보도자료, "내년도 일자리 예산 15조 7,685억원… 올해보다 12.8% 증가" (9월 9일).

국무조정실. 2014. 보도자료, 아동학대 신고 즉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공동 대응 (2월 28일).

금융감독원. 2015.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4월 13일).

금융감독원. 2015. 보도자료,「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제2차 회의 개최 (7월 1일).

금융감독원. 2015. 보도자료, 진웅섭 금감원장 기자간담회(7.23.) 발언 요지 (7월 23일).
금융감독원. 2015. 보도자료,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참여형 감시망 대폭 강화! (7월 23일).
금융감독원. 2015. 보도자료, 5대 금융악 척결, 5개월간의 성과 (9월 14일).
금융감독원·경찰청. 2015. 보도자료, 금감원·경찰청 「금융사기 근절」 협력 성과 및 향후 대응 (5월 27일).
기획재정부. 2015. 보도자료, 대통령 담화(8.6일)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8월 7일).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사무처. 2014. 『201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12월).
보건복지부. 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4.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2014. 보도자료, 범(凡)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 (9월 11일).
보건복지부. 2014. 보도자료, 금연! 성공할 때까지 국가가 전폭 지원 (9월 22일).
보건복지부. 2015.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5.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보건복지부. 2015.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결산개요』.
보건복지부. 2015. 『2015년 보육사업안내』 (3월).
보건복지부. 2015. 보도자료,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 2015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1월 21일).
보건복지부. 2015. 보도자료, 4인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 (4월 25일).
보건복지부. 2015. 보도자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7월 20일).
보건복지부. 2015. 보도자료, 기초생활보장제도, '16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7월 27일).
보건복지부. 2015. 보도자료,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36% 증가 (7월 31일).
보건복지부. 2015. 보도자료, 선택진료·상급병실 비용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고,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8월 7일).
보건복지부. 2015. 보도자료,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3.9% 증가한 55.6조원 (9월 8일).
보건복지부. 2015. 보도참고자료,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닻을 올리다 (1월 8일).
보건복지부. 2015. 보도참고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9월 18일).
보건복지부. 2015. 입법예고(안), 보건복지부공고 제2014-479호 (9월 12일).
보건복지부. 2015. 입법예고(안), 보건복지부공고 제2015-591호 (10월 12일).
보건복지부. 2015. 입법예고(안),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안 (10월 12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3. 『2012 국민건강 통계』
여성가족부. 2014. 보도자료, 한부모가족에게 취업·양육·주거 등 종합 지원 강화키로 (10월 14일).
여성가족부. 2015.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 (1월).
인사혁신처, 2014. 보도자료, 국민인재 채용 확대 원년, 민간전문가 120명 최종 합격 (12월 31일).
행정자치부. 2015.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개요』 (1월).
행정자치부. 2015. 보도자료, 지방재정·지방공기업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 (1월 30일).
행정자치부. 2015. 보도자료, 지방재정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게 바꾼다 (5월 13일).
행정자치부. 2015. 보도자료, 지방재정 개혁,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9월 4일).

3. 교육문화정책 분야

교육부. 2012. 누리과정 리플릿(최종) (9월).
교육부. 2013.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 (5월).
교육부. 2013.『2013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 (5월).
교육부. 2014a. 보도자료, 초등돌봄교실 추가 설치 및 운영 내실화 추진 (4월 9일).
교육부. 2014b. 보도자료, 2015년 초등돌봄교실, 학생·학부모 만족도 향상에 주력 (12월 19일).
교육부. 2014.『대학 교육의 질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1월).
교육부. 2015a. 보도자료,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시안 발표 (8월 7일).
교육부. 2015b. 보도자료,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발표 (8월 31일).
국회예산정책처. 2014.『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I』(5월).
국회예산정책처. 2014.『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II』(5월).
문화체육관광부. 2015a. 보도자료, 올해 첫 '문화가 있는 날' 성황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2015b. 보도자료, 문체부-신한카드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5월 12일).
방통위. 2015. 보도자료, 방통위,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4월 29일).
산림청. 2015.『도시숲경관 사업계획서』(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어린이 급식안전 관리 현황』
여성가족부. 2012. 보도자료,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심의·확정 (12월 11일).
여성가족부. 2013. 보도자료, 다문화가족지원사업 2012년 성과 보고 및 2013년 사업설명회 개최 (2월 1일).
여성가족부. 2014. 보도자료, 국민 대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발표 (1월 15일).
여성가족부. 2015. 보도자료, 다문화가족정책의 지난 10년 성과와 미래를 논하다. (7월 22일).
연합뉴스. 2015. 보도자료,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이후 문화시설 언급 늘어" (10월 1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1월).

4. 외교안보정책 분야

국방부a. 2015.『2015년도 국방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국방부b. 2015. 『2015 국방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국방부c.2015. "음성적 정보거래 차단해 방산비리 척결" 『국방일보』 (1월 29일)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60&bbs_id=BBSMSTR_000000000138&ntt_writ_date=20150130(검색일: 2015.11.24.)
권종영. 2014. "박근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하상으로 드러나" 『CBS뉴스』 (10월 16일)
http://www.cbci.co.kr/sub_read.html?uid=219765 (검색일: 2015.11.19.)
김경운. 2015. "차세대 무기 선정 추가 비위 포착… 방산 비리 특별감사 시한 1년 연장" 『서울신문』(11월23일)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123015017 (검색일: 2015.11.24.)
김광진·전병헌, 2014.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 대한민국국회.
김동선. 2015. "나진-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운송… 석탄외 생수 첫 포함" 『아시아경제』(11월 13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11310470393350 (검색일: 2015.11.23.)
김병연. 2015. "진화하는 북한 경제, 진화 없는 대북정책" 『중앙일보』 (11월 19일).
http://news.joins.com/article/19094299 (검색일: 2015.11.24.)
김열수. 2013.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신아세아』 제20권 제4호.
김영석. 2015. "黃총리 고질적 방위사업비리 방위사업청 폐지 포함 제도 보완 검토" 『국민일보』(10월 14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956944&code=61111111&cp=nv (검색일: 2015.11.24.)
김한권·고명현. 2014. "동북아 정세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과제" .한국국제정치학회.
김화순·최대석. 2011. "탈북이주민 정착정책의 인식과 과제-정착지원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통일정책연구』,제20권 2호.
김효정. 2015. "미중일러가 보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협력 모색 속 이견 노출" 『연합뉴스』(10월 27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7/0200000000AKR20151027214200014.HTML?input=1195m (검색일: 11월 23일)

노민선·백철우. 2015.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사점” 『국방연구』 제58권 제1호.
서동구. 2014. “북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딜레마” 『통일정책연구』제23권 2호.
박명규 외. 2014.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박병진. 2015. “한국의 방위산업 현주소와 비전은” 『세계일보』 (10월 13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0/13/20151013003192.html?OutUrl=naver(검색일: 2015.11.24.)
박소연a. 2015. “한민구 “군옴부즈맨 도입 신중해야”… 병영혁신 예산 ‘빨간불’” 『the 300』(10월 30일).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03010467662088(검색일: 2015.11.24.)
박소연b. 2015. “국방부, ‘군 옴부즈맨 군대 밖 설치 불가’ 의견서 제출” 『the 300』(10월 8일).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00720277612416 (검색일: 2015.11.24.)
박종진. 2015. “박 대통령 '통일 구상' 성공하려면…” 『데일리한국』 (1월 11일)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1/dh20150111124449137430.htm (검색일: 2015.11.22.)
박준용. 2015. 법원 “특성화·마이스터고 출신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는 정당” 『아시아경제』 (1월 11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10915490245409 (검색일: 2015.11.24.)
양무진. 2013. “북핵 문제의 경과와 쟁점, 그리고 정책적 제언” 『현대북한연구』 제16권 3호.
방위사업청. 2013. “2014년도 방위력개선 예산 11.28조원 요구” 보도자료 (7월 10일).
배은희·김옥이. 2009. 『산업기능요원 제도 폐지, 대책은 있는가?』 대한민국국회.
변창구. 2015.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통일전략』제15권 2호.
성석호. 2015.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 대한민국국회.
양낙규. 2015. “군, 산업기능요원 제도 연장으로 가닥” 『아시아경제』 (8월 20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2009034119373 (검색일: 2015.11.24.)
외교부. 2014.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외교부a. 2015. 『2015년 외교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외교부b. 2015.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외교부c. 2015. 『2015년도 외교부 예산 개요』.
외교통일위원회. 2014.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우경임. 2015. “3대 외교정책’ 제자리… 美-中 넘나든 균형외교는 선방” 『동아일보』 (8월 25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2849642&sid1=001&lfrom=mail
(검색일: 2015.11.20)
유재훈. 2015. “‘국방 헬프콜’ 올 상담 2만9000건…해당부대 연계는 6.2% 고작” 『헤럴드경제』(11월 16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16000964 (검색일: 2015.11.24.)
윤대원. 2015. “대학생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다” 『전자신문』 (5월 31일).
http://www.etnews.com/20150529000266 (검색일: 2015.11.24.)
윤상호. 2015. “北 SLBM 실전배치땐 킬체인 무용지물… 수중방어 비상” 『동아일보』. (5월 11일)
http://news.donga.com/3/all/20150511/71167467/1 (검색일: 2015.11.24.)
윤완준. 2015. “방사청장, 방산비리 대표 사례 묻자 “하도 많아서…” 『동아일보』. (9월 18일)
http://news.donga.com/3/all/20150918/73699412/1 (검색일: 2015.11.24.)
윤창옥. 2015. “한국 방위산업의 위기와 극복과제” 『국방과기술』 제431호.
이헌경. 2015.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과 핵 폐기를 위한 공동성명과 합의 이행의 중요성”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3권 제1호.
임태훈. 2014. 『독일식 국방 옴부즈만 제도 도입해야』. 대한민국국회.0.
이도형. 2015. “정치권 “KF-X 전면 재검토” 목소리 확산” 『세계일보』 (10월 19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0/29/20151029004400.html?OutUrl=naver (검색일: 2015.11.24.)
정정애 외. 2013.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제22권 2호.
정용수. 2015. “근무 중 수류탄 자살 박 일병, 선임병에게 가혹행위 당했다” 『중앙일보』 (11월 4일).
http://news.joins.com/article/18999129 (검색일: 2015.11.24.)
정용하·강성훈. 2015.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대학생의 남북관계 인식변화” 『한국민족문화』제55호.
정욱식. 2015. “방위산업 비리, 깃털이 아닌 몸통을 봐야 한다.” 『황해문화』 통권 제86호.
정충신. 2015. “방사청 국방부서 분리·저가경쟁입찰… 실책이 부패 초래” 『문화일보』 (11월 20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12001070930114001(검색일: 2015.11.24.)
최강 외. 2014. 『세일즈 외교로 기억된 박근혜 정부의 외교 첫 해』.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최동문. 2009. “북한이탈주민 정착적응 실태와 발전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승욱. 2015. “군내 사고 빈발하는데…1년 새 관심병사 절반 줄이고, 치유 프로그램축소” 『국민일보』(9월 7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830870&code=61111111&cp=nv(검색일: 2015.11.24.)
최재혁. 2015. “朴대통령 지지율 오르자 '외교안보 성과집' 낸 청와대”『조선일보』(9월 15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15/2015091500307.html (검색일: 2015.11.24.)
최태범. 2015. “국방부 ‘방위사업교육원’…군피아→민간전문가 대체” 『아시아투데이』 (11월20일).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120010012151 (검색일: 2015.11.24.)
최현호. 2013. “2014~2018 국방중기계획의 핵심 KAMD와 킬체인” 『항공』 통권292호.
통일부. 2015. “2015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함택영. 2014.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미·중 관계와 북한의 안보위협 인식” 『현대북한연구』제17권 2호.
홍성수. 2014. “군사옴부즈만 도입의 필요성”, 『28사단 윤일병 사건 관련 군 인권문제 긴급 토론회』 (저자: 심상정, 이상민, 군인권센터).
OBS. 2015. “병영 생활 전문상담관 무자격자 ‘수두룩’ ” (3월 31일).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9660 (검색일: 2015.11.24.)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동아일보 공동연구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1판1쇄 인쇄 2016년 2월 22일

지은이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평가책임)
구교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책 분야 총괄)
이응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책 분야)
최흥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복지정책 분야 총괄)
윤견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복지정책 분야)
김두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문화정책 분야 총괄)
최상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문화정책 분야)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교안보정책 분야 총괄)
임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교안보정책 분야)

발행인 최윤호
아트디렉터 김 환
디자인 유진민, 전기욱
DTP 김민지
마케팅 김현민, 동아E&D
교정 김현민
인쇄 (주)꽃피는 청춘

펴낸곳 주식회사 동아E&D
주소 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1 동아미디어센터
등록 2008년 2월 18일 101-86-37667
출판사등록 2010년 4월 20일 제300-2009-18호
구입문의 02-2020-1751, 1758

저작권 © 2016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동아일보
편집저작권 © 2016 동아E&D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본사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97257-09-6
값 20,000원